

계간 KIPF 재정동향

제1권 제1호(창간호)

2010년 1월

[목차]

발간사 국내외 재정동향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 수행할 터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축사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큰 역할 해주길 심재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재정정책 뒷받침하는 재정정보 생산 기대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KIPF 재정동향』 발간에 바란다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을 하는 값진 자료 되기를 안종범/한국재정학회 회장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13

I. 재정정책 동향 15

1. 2009회계연도 15

2. 2010회계연도 27

3. 최근 재정상황 35

II. 이슈 및 분석 40

1. 금번 경제위기가 경제·재정에 미친 영향 40

2. 주요국의 세수추계 체계 및 특징 57

3.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64

III. 국내외 보고서 72

1. 주요 보고서 요약 72

2. 보고서 목록 85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107
I. 주요국 동향	109
II. 미국(FY2010: 2009.10~2010.9)	114
III. 일본(FY2009: 2009.4~2010.3)	127
IV. 영국(FY2009: 2009.4~2010.3)	145
V. 프랑스(FY2009: 2009.1~2009.12)	166
VI. 독일(FY2009: 2009.1~2009.12)	181
VII. 캐나다(FY2009-10: 2009.4~2010.3)	198
VIII. 호주(FY2009-10: 2009.7~2010.6)	212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225
I.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227
II. 미국(2009년 10월 기준)	236
III. 일본(2009년 9월 기준)	242
IV. 영국(2009년 10월 기준)	249
V. 프랑스(2009년 9월 기준)	255
VI. 독일(2009년 10월 기준)	260
VII. 캐나다(2009년 9월 기준)	265
VIII. 호주(2009년 9월 기준)	271

국내외 재정동향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 수행할 터



원윤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정부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를 휩쓴 경제위기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재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국내외의 재정정책 및 재정통계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그간 조세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면서 재정정책 및 재정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향후 견실한 경제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번에 국내외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KIPF 재정동향』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KIPF 재정동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 등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현안을 소개하고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정리·분석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대한 국내외 학술논문 및 주요 정책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입, 예산, 분야별 세출 등 재정동향을 소개하여 해외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주요국의 조세수입,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과 같은 재정통계를 수록하여 『KIPF 재정동향』을 통하여 외국의 재정규모 및 재정통계상의 특징 및 최근 추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KIPF 재정동향』이 국내외의 재정정책 및 재정통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큰 역할 해주길



심재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하는 『KIPF 재정동향』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국내외 재정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그동안 국가 조세제도와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 국가들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와 재정건전화화를 위한 각종 연구세미나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미 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KIPF 재정동향』의 발행으로 체계적인 국내외 재정동향 분석을 통한 국가 재정건정성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9년도 국가재정은 총지출 기준 301.8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29.3%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적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체계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등 주요 재정 전망과 실제 결과와의 오차 극복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재정운용 심사 강화가 절실한 이때에 『KIPF 재정동향』의 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 국가 재정정책 연구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모든 국회 가족과 함께 기원하며 창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정책 뒷받침하는 재정정보 생산 기대



이용걸 / 기획재정부 차관

2008년 말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28.4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지난 2/4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연말에는 0.2%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같이 급박한 현실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다양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 대응과 함께 금번 경제위기에 대응한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던 여러 국가·국제기구 관계자와 우리의 위기 대응 재정정책 경험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해의 적극적인 경제·재정정책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G-20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지속시켜 가기 위해서 경제·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료를 모으고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정보 가운데 올바른 정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올해 발간하는 『KIPF 재정동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민간전문가들의 재정정책 분석, 각국 재정정책 현황,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담을 것입니다. 재정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각계각층의 수요자가 재정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재정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신 데 수고하신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KIPF 재정동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을 하는 값진 자료 되기를



안중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어난 지 3년차에 들어선 2010년, 전 세계가 재정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퍼부었던 재정자금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GDP 대비 10%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고, GDP 대비 1000%가 넘는 국가채무를 갖게 된 그리스는 정부파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를 넘기더니 이제는 순채무가 GDP 대비 100%를 초과하는 나라살림이 그야말로 빗더미에 안게 되었습니다. 3월에 끝나는 2009회계연도에 전후 최초로 세수보다 적자국채발행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위기를 빨리 극복했지만 우리나라 재정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정에도 이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우리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은 『KIPF 재정동향』이라는 계

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전 세계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역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우리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을 때 창간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의 재정동향을 통계와 함께 조사해서 보여주는 재정동향이야말로 나라살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정치인, 관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값진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창간한 『KIPF 재정동향』에 바람을 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통계 그리고 다른 자료들과의 연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동안 재정통계는 재정범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별로 일관성이 없었고 또 거시경제통계와의 연계성도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범위와 국가채무범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기초로 여타 자료와의 연계 그리고 자료 자체의 일관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통계라는 1차 자료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작성되고 가공되는 2차 자료들에 대한 수집·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1차적 재정통계를 기초로 각종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산출하는 것이야말로 재정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가공된 재정지표들은 각 국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에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모든 국정운영이 재정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창간된 『KIPF 재정동향』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큼니다. 편집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KIPF 재정동향』이 나라살림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1. 2009회계연도

가. 경제 및 세입 여건

- (경제전망) 2008년 후반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향조정되었으나, 2009년 6월 이후에는 경기회복 가속화로 경제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음
 - 2008년 9월 정부의 2009년 예산안 발표시에는 2009년 성장률 전망치가 5% 내외였으나, 10월 수정예산 편성시에는 4% 내외로, 연말경에는 2~3%로 하락
 - 2009년 들어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로 하향조정되어 -2%대까지 하락
 - 그러나 2009년 6월 이후에는 2/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장 최근에는 0%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표 1-1-1〉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단위: %)

	(전망일자)	정부	KDI	한국은행
2009 정부예산안	(2008. 9.24)	4.8~5.2		
2009 수정예산안	(2008.11. 3)	3.8~4.2		
KDI 경제전망	(2008.11.12)		3.3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8.12.12)			2.0
2009 경제운용방향	(2008.12.16)	3내외		
KDI 경제전망	(2009. 1.31)		0.7	
2009 추경예산안	(2009. 3.24)	-2수준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 4.10)			-2.4
KDI 경제전망	(2009. 5.13)		-2.3	
2009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 6.25)	-1.5내외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 7.10)			-1.6
KDI 경제전망	(2009. 9. 8)		-0.7	
2009 정부예산안	(2009. 9.28)	-1.5내외		
KDI 경제전망	(2009.11.23)		0.2	
2010 경제운용방향	(2009.12.10)	0수준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12.11)			0.2
2010 예산 국회심의	(2009.12.31)	0.2		

□ (세입예산안)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2008. 9. 23, 기획재정부)

○ 2009년 세입은 2008년 전망(166.9조원) 대비 12.7조원(7.6%)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됨

〈표 1-1-2〉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

세 목	'08년		'09예산	'08 예산대비		'08년 전망대비	
	예산	전망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국 세	165.6	166.9	179.6	14.0	(8.5)	12.7	(7.6)
소득세	38.0	36.9	42.9	4.9	(12.8)	5.9	(16.1)
■ 종합소득	6.5	6.3	8.2	1.6	(25.3)	1.9	(29.5)
■ 양도소득	9.0	9.8	9.1	0.1	(1.2)	△0.6	(△6.5)
■ 갑근소득	14.8	13.5	17.3	2.6	(17.3)	3.8	(28.4)
법인세	36.3	38.7	39.3	3.0	(8.2)	0.6	(1.5)
■ 신고분	26.6	31.3	33.6	7.0	(26.4)	2.3	(7.1)
■ 원천분	9.7	7.4	5.7	△4.0	(△41.5)	△1.7	(△22.7)
상속증여세	4.0	3.0	3.3	△0.7	(△17.7)	0.2	(7.7)
부가가치세	43.9	44.3	48.5	4.5	(10.3)	4.2	(9.5)
■ 국내분	12.3	7.9	7.6	△4.7	(△38.1)	△0.3	(△4.0)
■ 수입분	31.7	36.4	40.9	9.2	(29.0)	4.5	(12.4)
교 통 세	12.0	10.7	11.2	△0.9	(△7.2)	0.5	(4.7)
관 세	7.2	8.4	9.1	1.9	(26.4)	0.7	(8.1)
종 부 세	2.9	2.6	1.8	△1.1	(△37.7)	△0.8	(△31.4)

자료: 기획재정부 2008. 9. 23일자 보도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동 기간중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 예상

— 조세부담률을 2007년 22.7% 수준에서 20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1-1-3〉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단위: 조원, %)

	'07	'08 ^e	'09 ^e	'10 ^e	'11 ^e	'12 ^e
〈전망의 전제〉						
• 경상성장률	6.3	6.8	7.4	7.8	8.3	9.0
• 실질성장률	5.0	4.7	5.0	5.4	6.0	6.8
〈전망결과〉						
• 총국세	161.5	166.9	179.6	188.0	199.7	212.4
(증가율)	(17.0)	(3.4)	(7.6)	(4.7)	(6.2)	(6.4)

- (세입예산 수정)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수정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2009년중 국세수입 전망치가 15.6조원이나 감소
- 2008년 11월 수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세수입 규모가 4.2조원(179.6조원 → 175.4조원) 감소
 - 2009년 추경예산에서 11.4조원(175.4조원 → 164.0조원) 추가 감소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중 국세수입 잠정추계치는 164.5조원으로, 추경예산상의 연간세입 164.0조원 대비 0.5조원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남

나. 예산 편성

-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08. 1.31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접수
 - 2008. 3.6~4.16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9년 지출한도 심의
 - 2008. 4.27~28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2008. 4.21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 2008. 5.1 2009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 2008. 5.2 2009년 지출한도 각 부처에 통보(대외비)
 - 2008. 6.30 2009예산안 요구서 접수
 - 2008. 7.3~9.22 2009예산안 종합검토
 - 2008. 9.7 2009예산안 대통령 보고
 - 2008. 9.17 2009예산안 재정정책자문회의

- 2008. 9.30 2009예산안 국무회의
- 2008. 10.2 2009예산안 국회제출
- 2008. 11.4 2009년 수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008. 11.7 2009년 수정예산안 국회제출
- 2008. 12.13 2009예산안 국회의결
- 2008. 12.16 2009예산 국회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의결
2009예산 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 (정부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2008. 9. 24, 기획재정부)

- 예산규모는 2008년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
 - * 2008년 9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포함시 : 2008년 대비 4.8% 증가
 - 〈 재원배분의 중점 〉
 -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008년 대비 7.6% 증가한 295.0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8조원 규모로 편성

(단위: 조원, %)

	2008	2009안	증감률
예 산	195.1 (199.7)	209.2	7.2 (4.8)
총 수 입	274.2	295.0	7.6
총 지 출	257.2 (262.1)	273.8	6.5 (4.5)

주: () 안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규모 및 증가율

-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
 - 재정수지 : GDP 대비 $\Delta 1.1\% \rightarrow \Delta 1.0\%$ 수준
 - 국가채무 : GDP 대비 $32.7\% \rightarrow 32.3\%$ 수준

- 일반회계 국채 : 7.4조원 → 7.3조원
- 2009년 BTL사업 규모는 9개 사업분야 6.5조원 수준
 - 철도·학교·군숙소·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익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중점
 - 민간투자 대상 확대, 사업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예정
- 2009회계연도 정부예산안 분석(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8년 10월호)
 - 재정총적지수가 영(0)에 가까운 음수로 나타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는 사실상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여파 등을 감안할 경우 확장적인 재정으로의 정책기조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리대상수지가 새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등으로 내년도 약 10.4조원의 적자를 보이겠으나, 정부는 향후 재정적자를 축소해나가 2012년에 균형을 달성할 계획
 -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이전 중기계획에 견주어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규모로 판단되지만, 2011년 및 2012년의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의 선순환 효과 및 그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절약·효율·책임”의 추상적인 원칙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표 1-1-4〉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한 재정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지 (단위: 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2.5	9.0	8.0	6.7	7.4	7.3	7.1	7.0	7.0
통합재정수지	5.2	3.5	3.6	33.8	17.1	21.2	23.8	30.5	40.2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1.2	23.6	26.0	30.2	28.1	31.6	33.5	43.7	40.2
공적자금 원금 상환	12.0	12.0	12.0	-	-	-	-	-	-
관리대상 재정수지	-4.0	-8.1	-10.8	3.6	-11.0	-10.4	-9.7	-6.6	0.0
(명목GDP 대비, %)	(-0.5)	(-1.0)	(-1.3)	(0.4)	(-1.1)	(-1.0)	(-0.9)	(-0.5)	(0.0)
총수입	213.1	222.4	235.3	250.6	274.3	295.0	314.7	339.2	367.0
(증가율)	-	(4.4)	(5.8)	(6.5)	(9.5)	(7.6)	(6.7)	(7.8)	(8.2)
재정지출규모 (단위: 조원, %)									
총지출	196.9	209.6	224.1	238.4	257.2	273.8	290.9	308.7	326.7
(증가율)	(-)	(6.4)	(6.9)	(6.4)	(7.9)	(6.5)	(6.2)	(6.1)	(5.8)
일반회계총계 ¹⁾	120.1	134.4	148.9	165.5	182.8	195.0	-	-	-
(증가율)	(2.5)	(11.9)	(10.8)	(11.1)	(10.4)	(6.7)	-	-	-
통합재정	173.5	187.9	205.9	209.8	230.2	-	-	-	-
(증가율)	(5.6)	(8.3)	(9.6)	(1.9)	(9.7)	-	-	-	-
순융자제외	172.1	184.9	200.1	202.7	225.1	-	-	-	-
(증가율)	(3.2)	(7.4)	(8.3)	(1.3)	(11.1)	-	-	-	-
재정충격지수(FI) (단위: 명목GDP 대비, %)									
FI	0.72	0.49	0.40	-1.57	-0.42 ²⁾	-0.05 ⁴⁾	-	-	-
					0.69 ³⁾				

주: 1)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이전 총계

2) '07 예산 대비 '08년 예산 FI

3) '07 예산 대비 '08년 추경 및 교부금포함 FI

4) '08 예산 대비 '09년 FI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연구원 계산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2008년 10월 27일)
 - 정부는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며,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임
 - 200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수정예산안)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2008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
 - 정부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
 - 이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 2008년 10월 2일 기제출한 2009년 예산기금안은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
 - ① 성장률 : (당초) 실질 4.8~5.2%, 경상 7.2~7.6%
(수정) 실질 3.8~4.2%, 경상 6.2~6.6%
 - ② 국세수입 : 당초 전망(179.6조원) 대비 1.9조원 감소한 177.7조원
 - ③ 지출규모 :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 확대(20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단위: 조원, %)

	'08	'09당초 (A)	증가율	'09수정 (B)	증가율	증감 (B-A)
총 지출	257.2(262.1)	273.8	6.5(4.5)	283.8	10.4(8.3)	10.0
• 예산순계	195.1(199.7)	209.2	7.2(4.8)	217.6	11.5(9.0)	8.4
• 기금	74.5 (74.8)	78.8	5.8(5.3)	80.9	8.6(8.2)	2.1

주: () 안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감안

④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GDP(%) : ('08)△1.1 → ('09당초)△1.0 → ('09수정)△2.1
- 적자성 국가채무/GDP(%) : ('08)14.3 → ('09당초)13.4 → ('09수정)14.5
- 일반회계 국채(조원) : ('08)7.4 → ('09당초)7.3 → ('09수정)17.6

⑤ 주요 지출확대 분야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 0.3조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 기획재정부 장관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2008년 11월 19일)

- 정부는 2008년 10월 2일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정책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보다 10조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제출함
 -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의 침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례없는(unprecedented) 일이기 때문에 그 대응책도 전례없이 선제적이고(preemptive) 과감하고(decisive) 충분하게(sufficient)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세계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전례없는 위기극복을 위해 전례없는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의결(2008년 12월 13일)

- 예산순계 규모 :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소한 217.5조원 수준
 - '06 ~ '08예산안 국회조정 규모(예산순계 기준)
 - '06년 △1.1조원, '07년 △1.4조원, '08년 △1.1조원
- 일반회계 국채규모 : 정부안 17.6조원에서 19.7조원으로 확대
 - 추가 감세(2.3조원)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등 반영
 - 서민 민생안정 관련 2.0조원, 중부세 합리화 0.3조원 등
- 주요 세출 증가내용 : 금융지원,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등
 -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1.5조원
 - * 신보 · 기보 0.6조원, 산은 0.4조원, 자산관리공사 0.4조원 등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 +0.8조원
 -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2008. 12. 16, 기획재정부)에 포함된 재정정책 방향

- 2009년 상반기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기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
 - 역대 최고인 60%의 상반기 집행을 목표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 ('07) 56% → ('08) 52% → ('09) 60%
- 지방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법 개정 추진
 -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 지방재정 확충(예비비 1.9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및 포괄보조금 도입(균특을 광역 · 지역발전회계로 개편)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예 : 간판세, 온천수세 등)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보유세제 정상화 지속 추진

다. 추경편성 및 재정집행

□ (추경예산안)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도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 추경규모 : (정부안) 28.9조원 → (국회확정) 28.4조원 (△0.5조원)

-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정부안 유지
- 세출증액 :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소한 17.2조원
- * 국회심의 조정 : (증액 1.5조원, 감액 △2.0조원)

○ 국가채무 : 정부안 대비 0.9조원 감소한 366.0조원

-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 대비 1.5조원 감소한 35.5조원

(단위: 조원, %)

	'08	'09당초	'09추경안(A)	'09확정(B)	B-A
• 총 수입	274.2	291.0	279.8	279.8	-
• 총 지출	262.8	284.5	302.3	301.8	△0.5
• 관리대상수지	△16.6	△24.8	△51.6	△51.0	0.6
(GDP 대비,%)	(△1.7)	(△2.4)	(△5.0)	(△5.0)	
• 국가채무	308.3	349.7	366.9	366.0	△0.9
(GDP 대비,%)	(30.1)	(34.1)	(35.6)	(35.6)	
※ 일반회계 국채(순증)	7.4	19.7	36.9	35.5	△1.5

□ (재정집행) 정부는 2009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전망하에 경제위기 극복과 급락하는 경기보완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추진

○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을 집행하여 연간진도율 64.8%로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 집행

- 2009년 6월말까지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15.1조원 중 4.4조원, 총 171.5조원을 집행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는 52.9조원을 집행, 연간진도율 70.6%로 상반기 집행목표 63.8%(47.8조원)를 6.8%(5.1조원) 초과 집행

〈표 1-1-5〉 2009년 상반기 본예산 집행실적

(단위: 조원, %, 누적)

구 분	'09계획 (A)	'09. 6월				
		계획 (B)	실적 (C)	C-B	집행률 (C/B)	진도율 (C/A)
주요사업비	257.7	156.1	167.1	11.0	107.0	64.8
• 예 산	170.1	102.5	110.9	8.4	108.2	65.2
• 기 금	30.5	19.0	17.9	△1.1	94.2	58.7
• 공기업	57.1	34.6	38.3	3.7	110.7	67.1

- 재정 조기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신속한 사전준비와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 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집행여건 개선과 함께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
 -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각 부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2회 월별 예산집행실적 점검, 집행상 애로요인 및 해소 대책 논의

□ 2009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2009. 6. 25, 기획재정부)에 포함된 재정정책 방향

-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
 -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 및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
 -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 거시정책기조 정상화는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 추진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2009년 10월 국회제출)」을 통해 중장기 재정여건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 강화,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
 - 특수지역연금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2. 2010회계연도

가. 경제 및 세입 여건

- (경제전망) 최근 경기회복세의 가시화로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09년 9월 정부의 2010년 예산안 발표시에는 4% 내외였으나, 최근 5% 내외로 상향조정

〈표 1-1-6〉 201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단위: %)

	(전망일자)	정부	KDI	한국은행
KDI 경제전망	(2008.11.12)		3.3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8.12.12)			4.0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 4.10)			3.5
KDI 경제전망	(2009. 5.13)		3.7	
2009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 6.25)	4 내외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 7.10)			3.6
KDI 경제전망	(2009. 9. 8)		4.2	
2010 정부예산안	(2009. 9.28)	4 내외		
KDI 경제전망	(2009.11.23)		5.5	
2010 경제운용방향	(2009.12.10.)	5 내외		
한국은행 경제전망	(2009.12.11)			4.6
2010 예산 국회심의	(2009.12.31)	5 내외		

- (세입예산안)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2009. 9. 24, 기획재정부)
 - 2010년 국세수입은 2009년 전망 대비 6.5조원 증가한 171.1조원
 - 2009년 전망 : 2009년 예산(164.0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164.6조원

〈표 1-1-7〉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

	'09 예산	'09 전망	'09 예산 대비		'10 예산	'09 예산 대비		'09 전망 대비
■ 총 국 세	164.0	164.6	0.6	(0.4)	171.1 ¹⁾	7.1	(4.3)	6.5 (3.9)
소 득 세	36.3	33.9	△2.3	(△6.4)	37.0	0.7	(2.0)	3.1 (9.0)
- 근로소득세	14.9	13.3	△1.5	(△10.4)	14.2	△0.7	(△4.8)	0.9 (6.2)
- 종합소득세	7.3	5.9	△1.4	(△19.0)	5.9	△1.4	(△19.2)	0.0 (△0.3)
- 양도소득세	6.3	7.3	0.9	(14.9)	8.9	2.6	(40.8)	1.6 (22.5)
법 인 세	32.2	36.1	3.9	(12.1)	35.4	3.2	(9.9)	△0.7 (△2.0)
부가가치세	45.6	46.3	0.7	(1.5)	48.7	3.1	(6.6)	2.4 (5.0)
기타 세목	49.9	48.3	△1.6	(△3.3)	50.0	0.1	(0.2)	1.7 (3.6)

주: 1)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168,6조원

○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

〈표 1-1-8〉 중기 국세 수입전망(2009~2013년)

(단위: 조원, %)

	'08	'09 ^e	'10 ^e	'11 ^e	'12 ^e	'13 ^e
• 국세수입	167.3	164.6	168.6	182.1	199.8	219.5
(증가율)		(△1.6)	(2.4)	(8.0)	(9.7)	(9.8)
• 지방세수입	45.5	47.1	52.6	56.7	61.1	65.9
• 실질성장률	2.2	△1.5	4.0	5.0	5.0	5.0
(경상성장률)	(5.2)	(1.1)	(6.6)	(7.6)	(7.6)	(7.6)
〈조세부담률〉	20.8	20.5	20.1	20.1	20.4	20.8

주: 2010년 이후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를 차감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2009. 9. 24일자 보도자료

- **(세입예산 확정)** 그러나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2010년중 국세수입 전망치가 1.8조 원 증가
 -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2009년 및 2010년 경제전망을 조정함에 따라 약 1.3조원 증가
 - 2009년 경제성장률: 정부안 -1.5% → 국회 확정 0.2%
 - 2010년 경제성장률: 정부안 4.0% → 국회 확정 5.0%
 -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등 정부 세법개정안 조정으로 약 0.6조원 증가

나. 예산 편성

-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09. 1.30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접수
 - 2009. 4.28 2010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 2009. 5.2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2009. 6.22~6.26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공개토론회
 - 2009. 9.28 2009예산안 국무회의
 - 2009. 10.1 2009예산안 국회제출
 - 2009. 12.31 2009예산안 국회의결
 - 2010. 1.4 2010예산 국회중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의결
2010예산 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 **(정부 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2009. 9. 28, 기획재정부)
 -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서
 -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 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 ③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제고 등에 자원배분의 중점
 - * 4.29일 국회 통과한 추경 포함시, 금년 대비 3.3% 감소

- 이를 위해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Delta 1.1\%$ 감소한 287.8조원 전망

(단위: 조원)

	'09 본예산	'10안	증감률(%)
총 수 입	291.0(279.8)	287.8	$\Delta 1.1(2.9)$
총 지 출	284.5(301.8)	291.8	$2.5(\Delta 3.3)$

주: () 안은 추경을 포함한 규모 및 증가율

○ 국가채무는 2009년보다 증가하지만,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09년보다 개선

- 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5.0 \rightarrow \Delta 2.9\%$ 수준
- 국가채무: GDP 대비 35.6 \rightarrow 36.9% 수준
- 일반회계 국채: 35.5 \rightarrow 30.9조원

○ 2010년도 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 3.6조원 수준

- 학교·군 주거시설·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조기 확충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추진
- 자금조달 여건 개선,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 2010년 정부예산안 분석(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9년 10월호)

○ 재정정책의 기초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FI)는 -0.3% 로, 2009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초(본예산 2.2%, 추경 1.7%)에 비하여 2010년도 재정정책은 미미하게 긴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총량들을 함께 살펴보면 여전히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대폭 축소(51조원 \rightarrow 32조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2010년에 비해 개선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임

- G20국가들의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개선 속도는 비슷한 것

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에 대한 충격이 작았기에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세계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한 1.2가 넘는 국세수입의 GDP탄성치 전망은 자연세수의 증가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워, 2010년 이후에도 세원확보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임

〈표 1-1-9〉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한 재정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산)	(결산)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중기계획)		
재정수지 (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8.0	6.7	7.4	19.7	35.5	30.9	29.4	18.8	9.7
(GDP대비, %)	(0.9)	(0.7)	(0.7)	(1.9)	(3.4)	(2.8)	(2.5)	(1.5)	(0.7)
통합재정수지	3.6	33.8	11.9	6.4	-22.0	-4.0	2.9	15.6	26.4
관리대상수지	-10.8	3.6	-15.6	-24.8	-51.9	-32.9	-27.5	-16.1	-6.2
(GDP대비, %)	(-1.3)	(0.4)	(-1.5)	(-2.4)	(-5.0)	(-2.9)	(-2.3)	(-1.3)	(-0.5)
기초 관리대상수지	1.4	17.0	-1.2	-13.5	-39.3	N/A	N/A	N/A	N/A
(GDP대비, %)	(0.1)	(1.7)	(-0.1)	(-1.3)	(-3.8)	-	-	-	-
지출규모 (조원)									
총지출(예산기준)	224.0	238.0	257.0	284.5	301.8	291.8	306.6	322	335.3
(GDP대비,%)	(24.6)	(24.4)	(25.1)	(27.5)	(29.2)	(26.4)	(25.8)	(25.2)	(24.4)
(증가율, %)	(6.7)	(6.3)	(8.0)	(10.7)	(17.4)	(2.6)	(5.1)	(5.0)	(4.1)
일반회계지출	144.8	154.3	175.5	196.9	203.5	200.8	N/A	N/A	N/A
(GDP대비,%)	(15.9)	(15.8)	(17.1)	(19.0)	(19.7)	(18.2)	-	-	-
(증가율, %)	(7.9)	(6.6)	(13.7)	(12.2)	(16.0)	(2.0)	-	-	-
통합재정지출	205.9	209.8	238.8	257.5	275.9	N/A	N/A	N/A	N/A
(GDP대비,%)	(22.7)	(21.5)	(23.3)	(24.9)	(26.7)	-	-	-	-
(증가율, %)	(9.6)	(1.9)	(13.8)	(7.8)	(7.1)	-	-	-	-
순융자	5.7	7.1	5.5	8.9	19.4	N/A	N/A	N/A	N/A
순융자제외	200.2	202.7	233.4	248.7	256.5	N/A	N/A	N/A	N/A
(증가율, %)	(8.3)	(1.3)	(15.1)	(6.6)	(9.9)	-	-	-	-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GDP 대비 %)									
F(관리대상수지)	0.4	-1.6	1.7	2.2	1.7	-0.3	N/A	N/A	N/A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2009년 11월 2일)
 - 정부는 2009년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
 -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 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임
 - 2010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둠
 -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
 - 2010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 2010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하지만 2010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음

- 2010년도 경제운용방향(2009. 12. 10, 기획재정부)에 포함된 재정정책 방향
 - 2010년 경제정책은 경기회복 추세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노력을 집중
 -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 위기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제취약요인 보완과 위기대응능력 제고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지속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 2013~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 * 관리대상수지/GDP(%) : (09)△5.0 → (10)△2.9

〈표 1-1-10〉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예산 대비 비율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분기	26.9(26.9)	29.7(28.3)	26.8(25.6)	27.0(24.4)	24.9(22.7)	29.5(32.5)
2/4분기	28.0(28.1)	29.3(31.1)	25.3(27.4)	28.7(31.6)	27.1(26.9)	31.1(32.2)
상반기	54.8(55.0)	59.0(59.3)	52.0(53.0)	55.7(56.0)	52.0(49.6)	60.6(64.8)

주: () 안은 실적임

□ (예산안 확정)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의결(2009년 12월 31일)

○ 주요 재정총량 수정내용

- 총수입 규모: (정부안) 287.8조원 → (국회확정)290.8조원 (+3.0조원)
 - * 국세(1.8조원), 유가완충준비금(0.7조원) 등
- 총지출 규모: (정부안) 291.8조원 → (국회확정)292.8조원 (+1.0조원)
 -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1.3조원), 유가완충준비금 석유공사 출자 전환(0.7조원), 공자기금 지방채인수(△0.4조원), 국가하천 정비사업(△0.3조원), 환율조정(△0.3조원) 등
- 재정수지: (정부안) △32.0조원 → (국회확정)△30.1조원
- 일반회계 국채: (정부안) 30.9조원 → (국회확정) 29.3조원
- GDP 대비 국가채무: 36.1%(정부안 대비 0.8%p 감소)

〈표 1-1-11〉 2010년 예산 국회수정

(단위: 조원, %)

	'09		'10		증감 (B-A)
	본예산	추경	정부안(A)	최종(B)	
• 총수입	291.0	279.8	287.8	290.8	3.0
• 총지출	284.5	301.8	291.8	292.8	1.0
•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24.8	△51.0	△32.0	△30.1	1.9
(GDP 대비, %)	(△2.4)	(△5.0)	(△2.9)	(△2.7)	
• 일반회계 국채 (순증)	19.7	35.5	30.9	29.3	△1.6
• 국가채무	349.7	366.0	407.1	407.2	0.1
(GDP 대비, %)	(34.1)	(35.6)	(36.9)	(36.1)	

○ 국회의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용

- 저소득·서민생활 지원 확대,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액,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 지역 SOC 및 문화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집행 계획)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통보(2010.1.4, 기획재정부)

-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과 유사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178.3조원)를 상반기에 배정
-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164.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

〈표 1-1-12〉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

(단위: 억원, %)

구분	'10예산	1/4	2/4	3/4	4/4
• 금액	2,553,344	1,097,568	685,943	448,416	321,418
• 누적비율		43.0	69.8	87.4	100.0

○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1월 4일 각 부처에 통보

- 2010년 집행지침은 ①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②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③ 재정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

3. 최근 재정상황

- (통합재정통계) 2009년 10월까지 중앙정부 세입·세출규모(통합재정 기준)는 각각 217.5조원 및 2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16.6조원, 관리대상수지 40.5조원 적자
 - 2009년 10월까지 통합재정수입은 추경예산 대비 85.7%로 지난해(90.7%) 및 과거 5년 평균(87.3%)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월별 진도비를 한국조세연구원의 진도비 점검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추경예산상의 연간세입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8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재정 조기집행 정책 추진 등으로 10월까지 84.9%가 집행되어 진도비가 지난해(83.9%) 및 과거 5년평균(83.0%)에 비해 1~2%p 높음
 - － 월별 진도비 점검에서 추경예산상의 세출목표 달성확률이 24%에 불과하여 초과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의 사상 최고수준의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정책 때문이므로 연간 세출규모는 추경 이내에서 집행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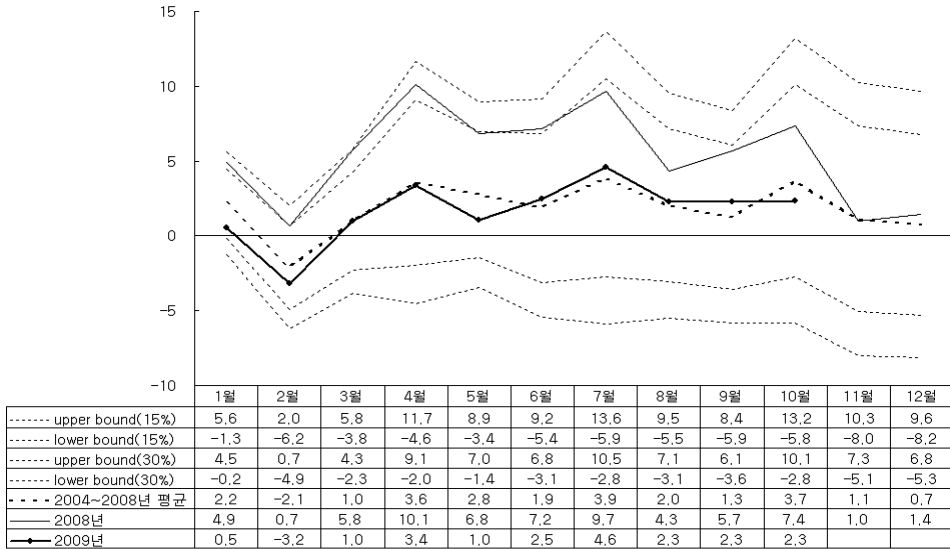
〈표 1-1-13〉 통합재정 추이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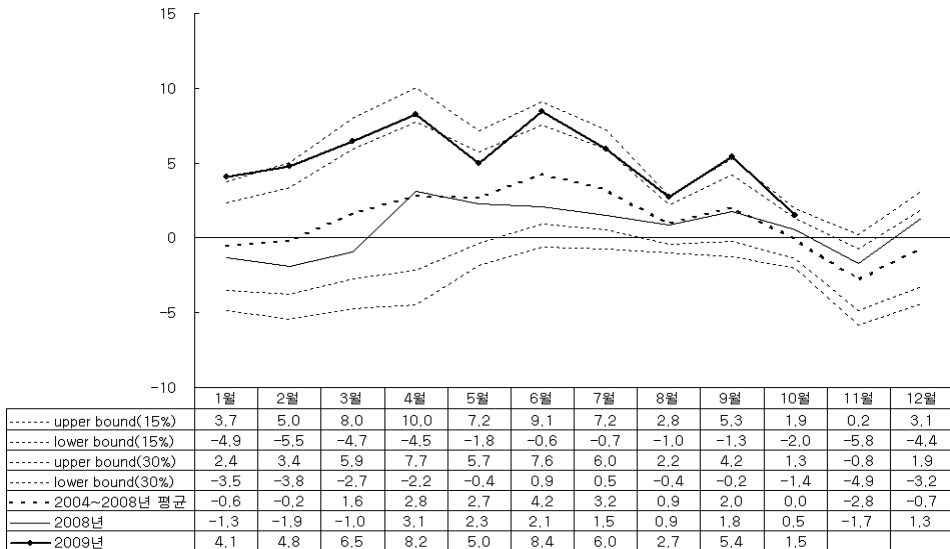
	수입			지출 및 순용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대상 수지	
	소계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소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순용자			
2004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	본예산	263,984	262,171	1,813	257,536	206,582	42,096	8,858	6,449	-24,765
	추경	253,911	251,822	2,088	275,898	211,488	45,011	19,398	-21,987	-51,044
	1월	23,367	23,314	52	31,908	22,721	5,958	3,228	-8,541	-9,457
	2월	35,563	35,271	291	55,202	41,270	9,465	4,466	-19,638	-21,190
	3월	68,582	68,156	427	81,007	62,363	13,832	4,812	-12,425	-21,940
	4월	96,967	96,284	682	107,021	83,069	18,156	5,797	-10,055	-21,209
	5월	108,420	107,161	1,259	128,690	99,470	21,303	7,917	-20,271	-33,436
	6월	133,237	131,538	1,700	161,193	123,570	28,048	9,575	-27,955	-42,659
	7월	159,728	157,923	1,805	177,385	136,729	30,647	10,008	-17,657	-34,544
	8월	175,113	173,233	1,880	191,454	149,225	32,114	10,114	-16,341	-35,304
	9월	196,185	194,135	2,050	221,876	174,632	36,273	10,971	-25,690	-47,906
10월	217,503	215,352	2,151	234,112	184,569	37,765	11,778	-16,609	-40,544	
10월진도비	85.7%	85.5%	103.0%	84.9%	87.3%	83.9%	60.7%	-	-	
(전년도)	90.7%	90.7%	92.9%	83.9%	87.2%	70.2%	61.9%	-	-	
(5년평균)	87.3%	87.3%	80.7%	83.0%	85.4%	74.6%	64.4%	-	-	

[그림 1-1-1]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의 월별 진도비 추이

(수입)



(지출 및 순용자)



주: 월별 진도비에서 매월 균등집행할 경우의 진도비를 차감한 수치임. upper and lower bound는 과거 6년간의 월별 진도비를 바탕으로 계산된 연간목표 달성가능확률이 15% 및 30%에 불과하여 경계하여야 할 월별 진도비를 나타냄.

- (국가채무 통계) 지난 5년(2003년~2008년)간 국가채무는 143.3조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 증가는 72.5조원(전체의 50.6%)
 -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공적자금 국채전환, 일반회계 적자보전, 서민주거 안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

〈표 1-1-14〉 국가채무 현황

(단위: 연말기준, 조원)

	'03년(A)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B)	증감(B-A)
◆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143.3
○ 적자성 채무	60.0	77.6	100.9	120.0	127.1	132.6	72.5
(비중, %)	(36.2)	(38.2)	(40.7)	(42.4)	(42.5)	(42.9)	(50.6)
• 일반회계 적자국채	29.4	31.9	40.9	48.9	55.6	63.0	33.6
• 공적자금 국채전환	14.4	29.4	42.4	53.3	52.7	49.2	34.8
○ 금융성 채무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70.8
(비중, %)	(63.8)	(61.8)	(59.3)	(57.6)	(57.5)	(57.1)	(49.4)
• 외환시장 안정용	33.5	51.3	67.1	78.6	89.7	94.0	60.5
• 서민주거 안정용	36.8	36.7	39.7	43.3	43.6	45.2	8.4

출처: 국가채무관리계획(2009년 10월)

-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국가채무는 과거 5년간(2004년~2008년)보다 큰 184.4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24.4조원(전체의 67.5%) 증가하여 과거 5년간보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비중이 크게 상승
 -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하여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로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표 1-1-15〉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08년(A)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B)	증감(B-A)
◆ 국가채무	309.0	365.1	407.1	446.7	474.7	493.4	184.4
○ 적자성 채무	132.6	168.3	197.9	227.8	247.1	257.0	124.4
(비중, %)	(42.9)	(46.1)	(48.6)	(51.0)	(52.1)	(52.1)	(67.5)
• 일반회계 적자국채	63.0	97.5	128.4	157.8	176.6	186.3	123.3
•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6	48.0	48.0	48.0	48.0	-1.2
○ 금융성 채무	176.4	196.8	209.2	218.9	227.6	236.4	60.0
(비중, %)	(57.1)	(53.9)	(51.4)	(49.0)	(48.0)	(47.9)	(32.5)
• 외환시장 안정용	94.0	109.3	125.7	136.1	145.3	154.5	60.5
• 서민주거 안정용	45.2	49.2	50.3	50.0	50.9	52.0	6.8

출처: 국가채무관리계획(2009년 10월)

II

이슈 및 분석

1. 금번 경제위기가 경제·재정에 미친 영향*

가.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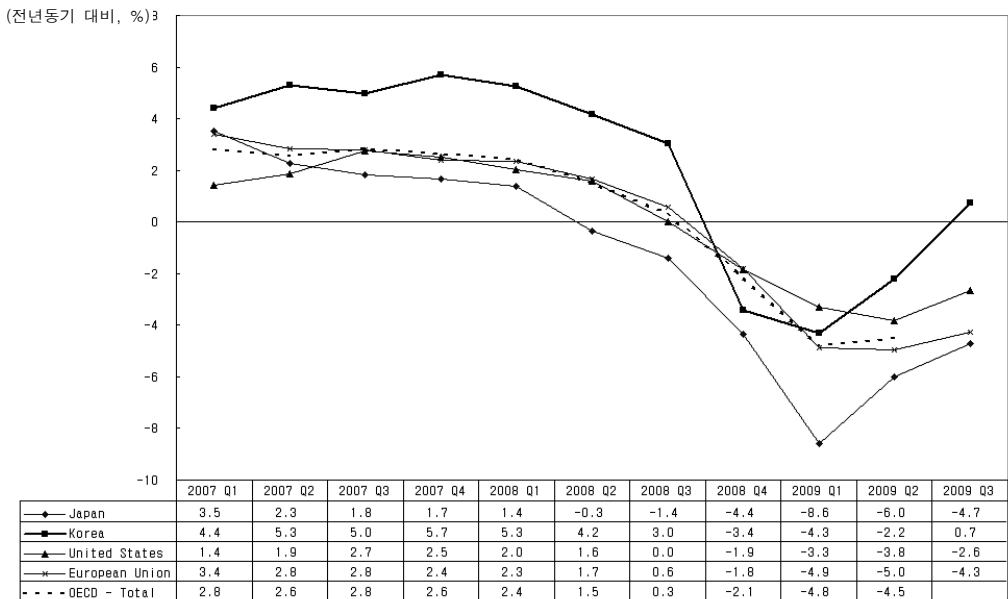
-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으나,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OECD전체로 전년동기 대비 분기성장률이 2007년 연평균 2.7%에서 2008년 0.5%, 2009년(2/4분기까지) ▲4.7%로 급격히 하락
 - 그러나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 ▲4.7%를 저점으로 2/4분기에는 ▲4.5%로 하락세를 멈추었으며, 3/4분기에도 ▲4% 내외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 이전인 2007년 연평균 성장률 및 침체의 골이 가장 깊었던 2009년 1/4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하락폭을 추정해 보면 OECD국가 전체로 ▲7.5%p에 달함
 - 국가별로는 터키의 경기 하락폭이 ▲19.0%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슬로바키아(▲15.4%p), 아일랜드(▲15.0%p)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9.4%p로 30개 OECD 국가들 중에서 10번째 규모
 - EU(▲7.7%p)는 G7(▲7.0%p) 및 OECD전체(▲7.5%p)와 비슷한 규모였으나, 일본(▲10.9%p)의 경기침체 규모가 다소 큰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5.4%p)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 그러나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OECD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전체로 0.9%p(2/4분기~3/4분기 기준)에 달함

- 우리나라는 5.0%p로 29개 OECD국가들(3/4분기 성장률 데이터 입수가 불가능한 호주 제외) 중에서 경기 하락폭이 가장 컸던 터키(10.8%p) 다음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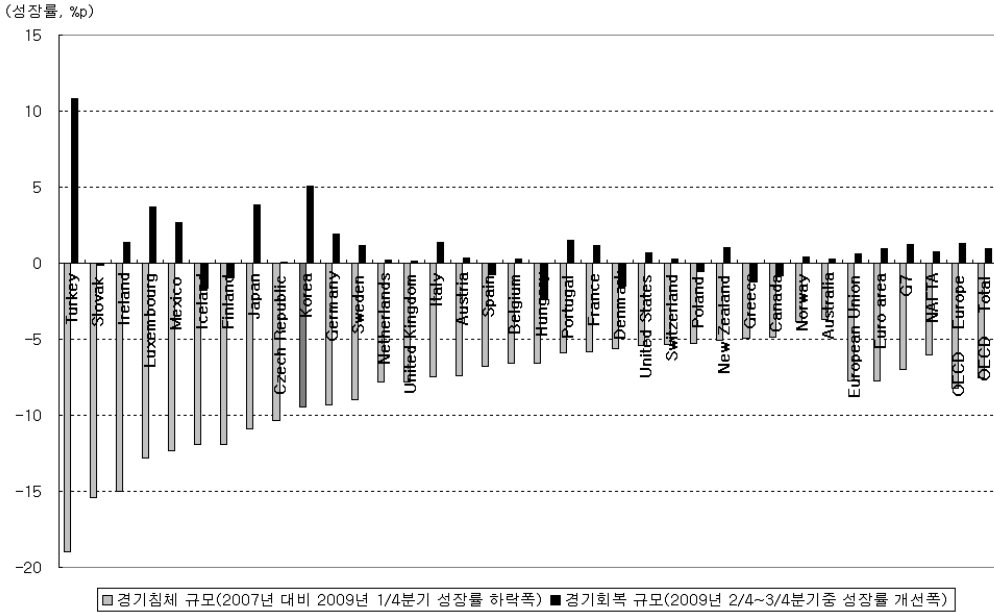
[그림 1-11-1] OECD국가들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 European Union(27개국) 및 OECD-Total(30개국)은 해당국가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GDP(GDP PPPs of 2000)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출처: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그림 1-11-2] OECD국가들의 경기침체 및 경기회복 규모



출처: OECD.StatExtracts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G20의 경우에는 유럽권 국가들 및 우리나라의 경기침체폭이 크고 경기회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 18개 G20 국가(분기별 성장률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사우디 및 EU의장국 제외)의 경우 분기별 성장률(국가별 단순평균)이 2007년 연평균 5.0%에서 2008년 2.9%, 2009년 (3/4분기까지) ▲2.5%로 급격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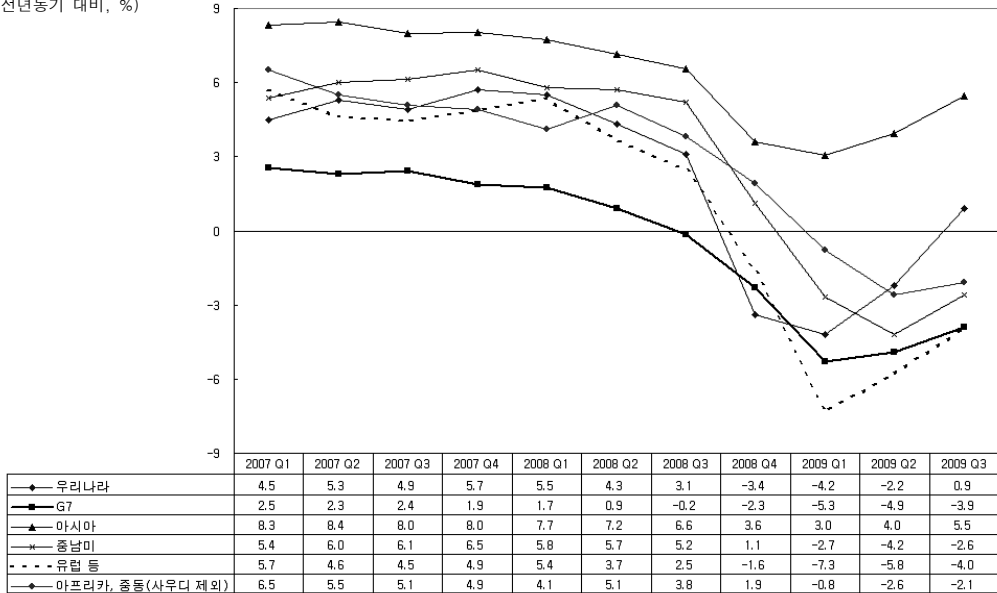
– 그러나 2009년 1/4분기 ▲3.2%를 저점으로 2/4분기에는 ▲2.9%로 하락세를 멈추었으며, 3/4분기에도 ▲1.4%로 성장률이 상승

○ 위기 이전인 2007년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2009년 1/4분기의 경기하락폭을 추정해 보면 터키(▲19.5%p), 러시아(▲17.9%p), 일본(▲11.3%p), 멕시코(▲11.2%p), 한국(▲9.3%p)의 순서로 우리나라가 18개 G20국가들 중에서 5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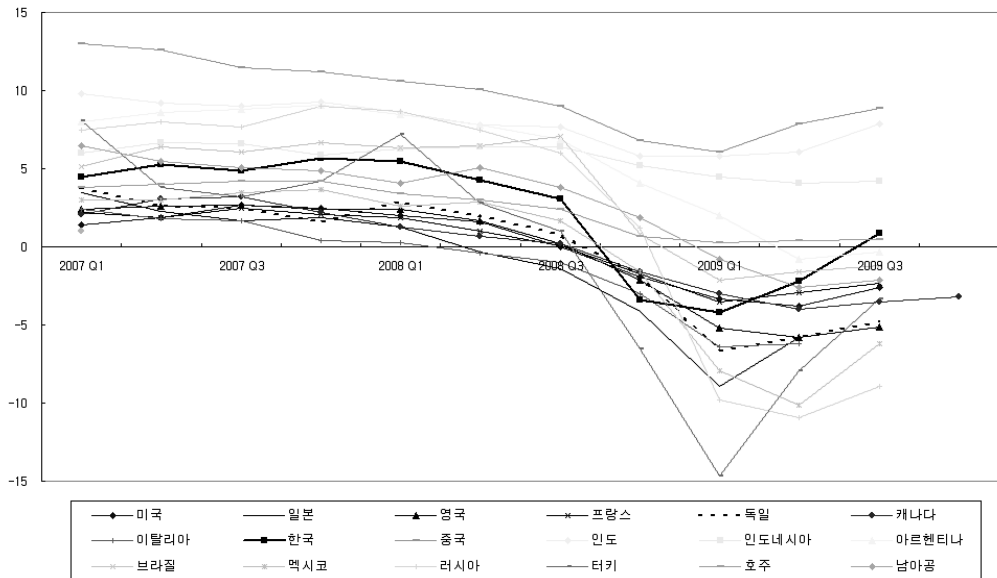
– 그러나 2009년 3/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규모는 5.1%p로 가장 큰 경기하락을 보였던 터키(18.2%p)나 이탈리아(6.4%p) 다음으로 18개 G20국가 중에서 3번째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1-3] G20국가들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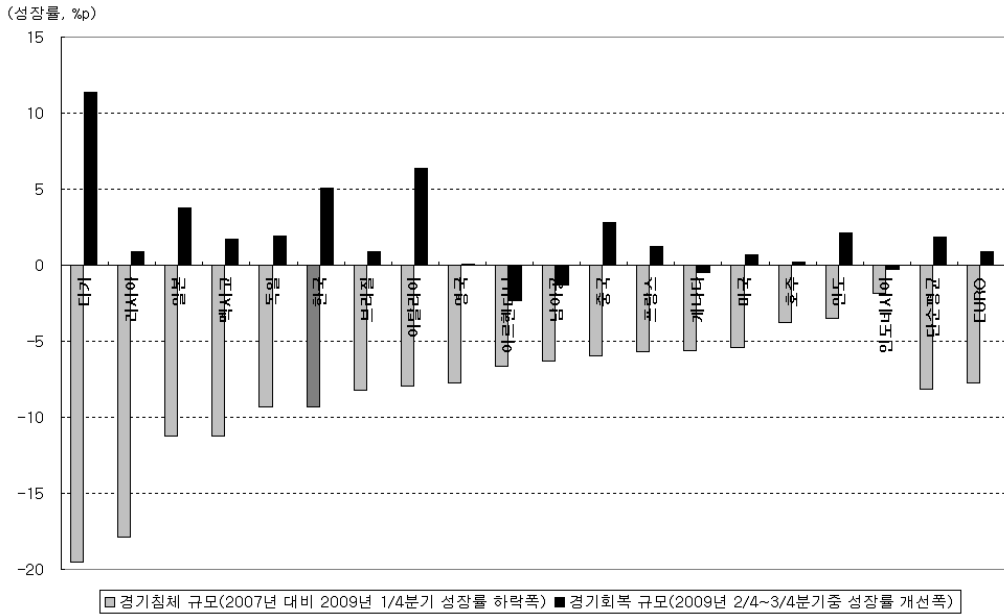


(전년동기 대비, %)



출처: Bloomberg(2010년 1월)

[그림 1-II-4] G20국가들의 경기침체 및 경기회복 규모



출처: Bloomberg(2010년 1월)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전망

□ OECD 및 IMF의 2009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2011년에도 위기 이전인 2007년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등 경기회복이 매우 더딜 것임

○ OECD의 전망에 따르면 OECD국가(단순평균)의 2009년 성장률이 2007년 성장률 대비 ▲7.6%p에서 2010년 ▲2.5%p, 2011년 ▲1.2%p로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2007년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

- 30개 OECD국가들 중에서 9개 국가만 2007년 성장률을 회복
- 우리나라도 2011년 성장률이 2007년보다 0.9%p 낮음

〈표 1-11-1〉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실적 및 전망(%)					2007년 대비 증감(%p)			
	2007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Australia	4.2	2.3	0.8	2.4	3.5	-1.9	-3.5	-1.8	-0.8
Austria	3.4	1.9	-3.8	0.9	2.2	-1.5	-7.2	-2.5	-1.3
Belgium	2.8	0.8	-3.1	0.8	1.7	-2.0	-6.0	-2.0	-1.2
Canada	2.5	0.4	-2.7	2.0	3.0	-2.1	-5.2	-0.6	0.5
Czech	6.1	2.6	-4.4	2.0	2.8	-3.6	-10.6	-4.1	-3.3
Denmark	1.6	-1.2	-4.5	1.3	1.8	-2.8	-6.2	-0.3	0.2
Finland	4.1	0.8	-6.9	0.4	2.4	-3.3	-11.0	-3.7	-1.7
France	2.3	0.3	-2.3	1.4	1.7	-1.9	-4.6	-0.9	-0.6
Germany	2.6	1.0	-4.9	1.4	1.9	-1.6	-7.5	-1.2	-0.7
Greece	4.5	2.0	-1.1	-0.7	1.6	-2.5	-5.5	-5.2	-2.9
Hungary	1.0	0.6	-6.9	-1.0	3.1	-0.3	-7.8	-1.9	2.2
Iceland	5.6	1.3	-7.0	-2.1	2.6	-4.2	-12.6	-7.7	-2.9
Ireland	6.0	-3.0	-7.5	-2.3	1.0	-9.0	-13.5	-8.3	-5.0
Italy	1.5	-1.0	-4.8	1.1	1.5	-2.5	-6.3	-0.4	0.1
Japan	2.3	-0.7	-5.3	1.8	2.0	-3.0	-7.6	-0.6	-0.3
Korea	5.1	2.2	0.1	4.4	4.2	-2.9	-5.0	-0.7	-0.9
Luxembourg	6.5	0.0	-3.9	2.4	3.4	-6.4	-10.4	-4.0	-3.1
Mexico	3.3	1.4	-8.0	2.7	3.9	-1.9	-11.4	-0.6	0.6
Netherlands	3.6	2.0	-4.3	0.7	2.0	-1.6	-7.9	-3.0	-1.6
New Zealand	2.9	-1.1	-0.7	1.5	2.7	-4.0	-3.6	-1.4	-0.1
Norway	3.1	2.1	-1.4	1.3	3.2	-1.0	-4.6	-1.8	0.1
Poland	6.8	5.0	1.4	2.5	3.1	-1.8	-5.4	-4.3	-3.7
Portugal	1.9	0.0	-2.8	0.8	1.5	-1.9	-4.6	-1.1	-0.4
Slovak	10.4	6.4	-5.8	2.0	4.2	-4.0	-16.2	-8.4	-6.2
Spain	3.6	0.9	-3.6	-0.3	0.9	-2.7	-7.1	-3.8	-2.7
Sweden	2.7	-0.4	-4.7	2.0	3.0	-3.1	-7.4	-0.7	0.3
Switzerland	3.6	1.8	-1.9	0.9	1.9	-1.8	-5.5	-2.7	-1.7
Turkey	4.7	0.9	-6.5	3.7	4.6	-3.8	-11.2	-0.9	0.0
United Kingdom	2.6	0.6	-4.7	1.2	2.2	-2.0	-7.2	-1.3	-0.3
United States	2.1	0.4	-2.5	2.5	2.8	-1.7	-4.6	0.3	0.6
OECD 평균	3.8	1.0	-3.8	1.3	2.6	-2.8	-7.6	-2.5	-1.2

출처: OECD Economic Outlook(December 2009)

- IMF의 2009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G20국가(EU의장국을 제외한 19개 국가의 단순평균)의 2009년 성장률이 2007년 성장률 대비 ▲6.9%p에서 2010년 ▲2.1%p, 2011년 ▲1.1%p, 2012년~2014년 ▲0.9%p로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2007년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
 - 19개 G20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국가만 2011년 이후 2007년 성장률을 회복

〈표 1-11-2〉 G20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2007 실적(%)	2007년 대비 증감(%p)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United States	2.1	-1.7	-4.9	-0.6	0.6	0.5	0.4	0.0
Japan	2.3	-3.0	-7.7	-0.7	0.0	0.0	-0.3	-0.5
United Kingdom	2.6	-1.8	-6.9	-1.7	-0.1	0.3	0.3	0.3
France	2.3	-1.9	-4.6	-1.4	-0.5	-0.3	0.0	0.1
Germany	2.5	-1.3	-7.8	-2.2	-1.0	-0.8	-0.7	-0.7
Canada	2.5	-2.1	-5.0	-0.4	1.0	0.7	0.0	-0.4
Italy	1.6	-2.6	-6.7	-1.3	-0.8	-0.2	0.0	0.3
Korea	5.1	-2.9	-6.1	-1.6	0.1	-0.1	-0.5	-0.6
China	13.0	-4.0	-4.5	-4.0	-3.3	-3.2	-3.2	-3.5
India	9.4	-2.0	-4.0	-3.0	-2.1	-1.7	-1.4	-1.3
Indonesia	6.3	-0.2	-2.3	-1.5	-1.3	-0.8	-0.3	0.0
Argentina	8.7	-1.9	-11.2	-7.2	-6.2	-5.7	-5.7	-5.7
Brazil	5.7	-0.6	-6.3	-2.2	-2.2	-2.1	-2.0	-1.9
Mexico	3.3	-2.0	-10.7	-0.1	1.6	2.2	2.0	1.6
Russia	8.1	-2.5	-15.6	-6.6	-5.1	-4.4	-3.9	-3.1
Turkey	4.7	-3.8	-11.2	-1.0	-0.7	-1.2	-1.2	-1.2
Australia	4.0	-1.7	-3.3	-2.1	-0.8	-0.6	-0.8	-1.1
South Africa	5.1	-2.0	-7.3	-3.4	-1.3	-0.8	-0.6	-0.6
Saudi Arabia	3.3	1.1	-4.2	0.7	1.0	1.5	1.6	1.7
단순평균	4.9	-1.9	-6.9	-2.1	-1.1	-0.9	-0.9	-0.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09)

-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OECD 및 G7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이 약 20~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OECD의 전망에 따르면 OECD국가들(우리나라 및 터키를 제외한 28개국 기준)의 2011년 잠재성장률이 1.7%로 위기 이전(2007년, 2.8%)에 비해 1.2%p(41%)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119%), 핀란드(78%), 스페인(77%), 아이슬란드(77%) 순임
 - IMF의 전망에 따르면 G7국가들의 2014년 잠재성장률이 1.5%로 위기 이전(2007년, 1.8%)에 비해 0.3%p(19%)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1-3〉 OECD국가들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p)

	OECD 전망				IMF 전망			
	2007	2011	증감	증감률	2007	2014	증감	증감률
Australia	3.9	3.2	-0.7	-18.1	n.a.	n.a.	n.a.	n.a.
Austria	2.0	1.8	-0.2	-9.3	n.a.	n.a.	n.a.	n.a.
Belgium	2.6	1.7	-0.9	-34.7	n.a.	n.a.	n.a.	n.a.
Canada	2.3	1.9	-0.4	-17.7	2.3	2.0	-0.4	-15.4
Czech	4.2	3.7	-0.5	-12.6	n.a.	n.a.	n.a.	n.a.
Denmark	1.7	0.7	-0.9	-55.4	n.a.	n.a.	n.a.	n.a.
Finland	3.4	0.8	-2.7	-78.0	n.a.	n.a.	n.a.	n.a.
France	1.6	1.4	-0.3	-16.2	2.1	1.3	-0.7	-35.1
Germany	1.1	0.8	-0.3	-27.6	1.2	1.2	0.0	3.3
Greece	4.1	2.3	-1.8	-44.7	n.a.	n.a.	n.a.	n.a.
Hungary	2.2	2.4	0.2	8.7	n.a.	n.a.	n.a.	n.a.
Iceland	5.0	1.1	-3.9	-77.1	n.a.	n.a.	n.a.	n.a.
Ireland	4.2	-0.8	-5.0	-119.3	n.a.	n.a.	n.a.	n.a.
Italy	0.9	0.4	-0.5	-58.7	0.7	0.7	-0.1	-13.2
Japan	0.6	0.8	0.2	34.7	1.7	1.2	-0.5	-31.5
Luxembourg	3.6	2.3	-1.4	-37.9	n.a.	n.a.	n.a.	n.a.
Mexico	2.2	2.4	0.2	9.2	n.a.	n.a.	n.a.	n.a.
Netherlands	2.0	1.3	-0.7	-35.9	n.a.	n.a.	n.a.	n.a.
New Zealand	2.5	1.5	-1.0	-39.4	n.a.	n.a.	n.a.	n.a.
Norway	4.3	2.2	-2.1	-49.5	n.a.	n.a.	n.a.	n.a.
Poland	4.9	3.2	-1.7	-34.9	n.a.	n.a.	n.a.	n.a.
Portugal	0.8	0.4	-0.4	-52.1	n.a.	n.a.	n.a.	n.a.
Slovak	5.4	4.0	-1.4	-25.9	n.a.	n.a.	n.a.	n.a.
Spain	3.4	0.8	-2.6	-77.2	n.a.	n.a.	n.a.	n.a.
Sweden	2.9	1.1	-1.7	-60.0	n.a.	n.a.	n.a.	n.a.
Switzerland	2.3	2.0	-0.3	-14.3	n.a.	n.a.	n.a.	n.a.
United Kingdom	2.3	1.4	-0.9	-37.9	2.1	1.8	-0.3	-13.7
UnitedStates	2.3	1.6	-0.7	-30.0	2.4	2.0	-0.4	-16.2
OECD 평균	2.8	1.7	-1.2	-41.2	1.8	1.5	-0.3	-18.8

출처: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2009)

나. 재정 동향 및 전망

-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
 - OECD전체로 2007년 대비 일반정부의 총수입/GDP 비율 감소폭이 2008년 ▲0.7%p, 2009년 ▲1.9%p에 달한 반면, 총지출/GDP 비율은 1.4%p 및 4.9%p 증가
 - 우리나라는 총수입/GDP 비율 감소폭(0.0%p, ▲1.4%p)은 다소 작은 반면, 총지출/GDP 비율 증가폭(1.3%p, 5.1%p)은 비슷한 규모
 - 이는 누진적인 조세제도에 의한 GDP 감소보다 큰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및 대규모 지출확대 정책에 기인
 - 경기적 요인에 의한 재정수지 악화(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1.6%에 달함
 - 이에 따라 2008년 및 2009년 OECD전체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07년 대비 각각 2.1%p 및 6.8%p나 악화됨
 - 우리나라는 각각 1.3%p 및 6.5%p 악화
 - OECD전체로는 2009년말 GDP 대비 총금융부채가 2007년말 대비 16.9%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7.5%p 증가에 그침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8년 및 2009년 G7국가들의 평균 재정수지 악화규모는 각각 1.7%p 및 6.4%p

-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는 향후에도 경기침체의 지연효과와 더불어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OECD의 2009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2011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7.6%(2007년 대비 6.3%p 악화)에 달할 전망
 -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대비 재정수지 악화규모가 3.5%p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대비 G7국가들의 평균 재정수지 악화규모는 2009년 ▲6.4%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14년에도 ▲2.9%p

에 달할 것임

- 이에 따라 2011년말 국가채무비율도 103.5%(2007년 대비 30.4%p 증가)
 -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40.7%(2007년 대비 15.1%p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전망에 따르더라도 2011년말 G7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증가규모는 29.4%p이며, 2014년말 기준으로는 34.7%p로 더 커짐

〈표 1-11-4〉 OECD국가들의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

	실적 및 전망					2007년 대비 증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OECD전체									
총수입	38.6	37.9	36.7	36.6	36.8	-0.7	-1.9	-2.0	-1.8
총지출	39.9	41.4	44.8	44.8	44.4	1.4	4.9	4.9	4.5
재정수지	-1.3	-3.5	-8.2	-8.3	-7.6	-2.1	-6.8	-6.9	-6.3
(경기적 요인)	(1.0)	(0.5)	(-1.6)	(-1.6)	(-1.2)	(-0.5)	(-2.6)	(-2.6)	(-2.2)
총금융부채	73.1	78.4	90.0	97.4	103.5	5.3	16.9	24.3	30.4
순금융부채	38.8	41.9	50.2	57.6	63.7	3.2	11.4	18.8	24.9
GDP gap	1.8	0.3	-4.6	-4.1	-3.2	-	-	-	-
우리나라									
총수입	33.3	33.3	31.9	31.7	32.0	0.0	-1.4	-1.6	-1.3
총지출	28.7	30.0	33.8	31.3	30.9	1.3	5.1	2.6	2.2
재정수지	4.7	3.3	-1.8	0.4	1.1	-1.3	-6.5	-4.2	-3.5
(경기적 요인)	n.a.	n.a.	n.a.	n.a.	n.a.	n.a.	n.a.	n.a.	n.a.
총금융부채	25.7	26.8	33.2	36.8	40.7	1.2	7.5	11.1	15.1
순금융부채	-35.8	-37.4	-34.5	-33.4	-32.6	-1.6	1.3	2.5	3.3
GDP gap	n.a.	n.a.	n.a.	n.a.	n.a.	-	-	-	-

주: 국민계정(일반정부) 기준이며, OECD전체(30개국)는 해당국가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GDP(GDP PPPs of 2000)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출처: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1-II-5〉 G7국가들의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

	실적	2007년 대비 증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지								
United States	-2.8	-3.0	-9.6	-7.1	-4.7	-3.4	-3.8	-3.9
Japan	-2.5	-3.3	-7.9	-7.7	-5.5	-5.0	-5.3	-5.5
United Kingdom	-2.6	-2.5	-8.9	-10.6	-8.7	-6.7	-5.2	-4.1
France	-2.7	-0.7	-4.3	-4.4	-4.0	-3.4	-2.7	-2.0
Germany	-0.5	0.3	-3.7	-4.2	-3.1	-1.7	-0.8	0.5
Canada	1.6	-1.5	-6.5	-5.7	-3.8	-2.8	-2.3	-1.5
Italy	-1.5	-1.2	-4.1	-4.1	-4.0	-4.0	-3.9	-3.8
G7 단순평균	-1.6	-1.7	-6.4	-6.3	-4.8	-3.9	-3.4	-2.9
국가채무								
United States	61.9	8.5	22.9	31.7	35.8	39.0	42.4	46.4
Japan	187.7	8.8	30.9	39.3	44.2	49.5	54.1	57.8
United Kingdom	44.1	7.9	24.6	37.6	45.2	50.0	52.8	54.2
France	63.8	3.7	12.9	18.8	22.9	25.9	27.8	28.8
Germany	63.4	3.7	15.3	21.1	24.4	26.2	26.6	25.9
Canada	64.2	-1.4	14.0	15.1	13.1	10.4	7.7	4.7
Italy	103.5	2.2	12.3	16.6	20.0	22.5	24.4	25.0
G7 단순평균	84.1	4.8	19.0	25.8	29.4	31.9	33.7	34.7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2009)

□ 한편 이와 같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악화 양상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향후에도 양호할 전망

○ 2007년 대비 2009년 재정수지 악화규모는 우리나라가 28개 OECD국가(터키와 멕시코 제외) 중에서 10번째로 경기침체 규모의 순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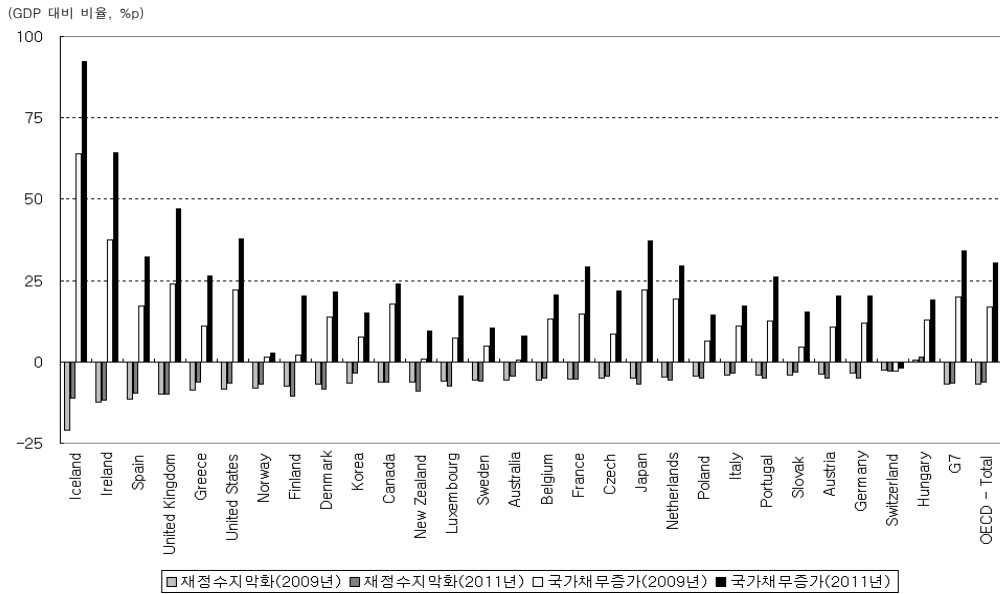
– 2011년 기준으로는 25번째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양호할 전망

○ 국가채무비율 증가 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2009년말 기준으로는 19번째, 2011년말 기준으로도 22번째로 상대적으로 양호

○ OECD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의 재정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편

– G7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재정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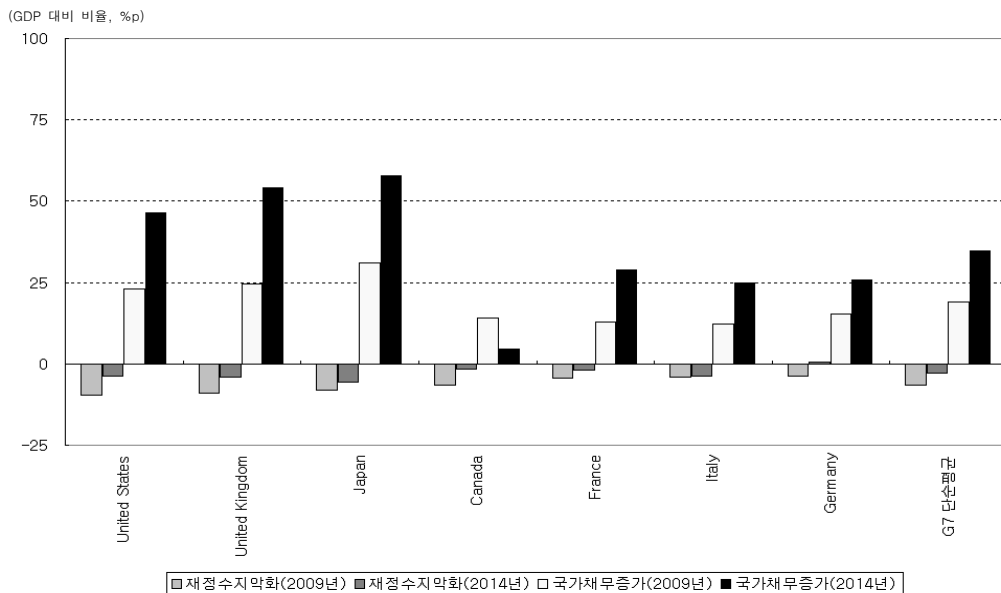
[그림 1-11-5] OECD국가들의 재정지표 악화 규모



주: 국민계정(일반정부) 기준이며, G7 및 OECD전체(28개국)는 해당국가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GDP(GDP PPPs of 2000)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출처: OECD.StatExtracts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11-6] G7국가들의 재정지표 악화 규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재정충격의 장기영향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경제위기는 1차 및 2차 오일쇼크보다는 경기침체의 지속기간은 짧은 대신 침체의 골이 더 깊은 양상이며,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1970년대 3.3%에 달하던 OECD전체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3.0%, 1990년대 2.6%, 2000년대 2.0%로 지속적으로 하락

– 특히 금번 경제위기 이전에 1.8%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후 1.3%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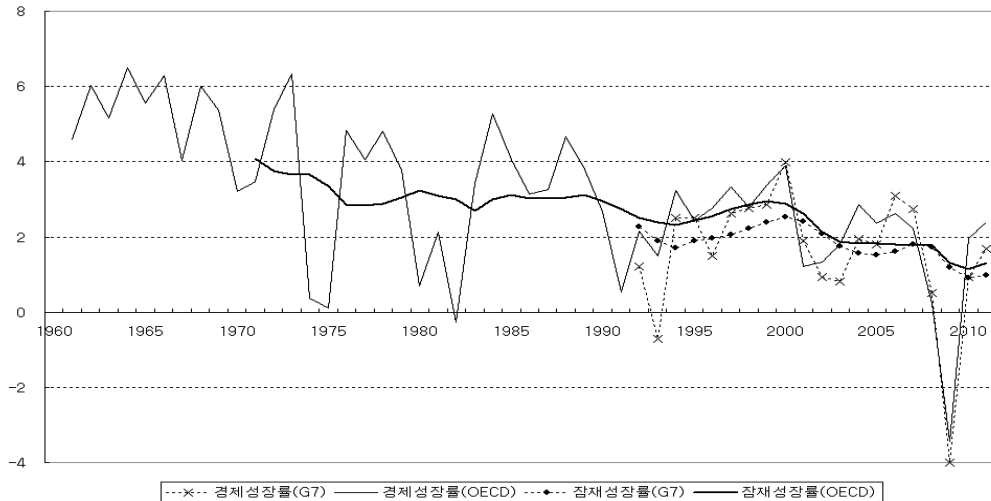
○ 2008~2009년 성장률이 2007년 대비 연평균 3.8%p 하락하고, 특히 금번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 OECD전체의 경제성장률이 -3.4%로 1960년 이래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차 오일쇼크가 정점에 달했던 1974년 0.4%, 1975년 0.1% 등 2년 연속 1973년 성장률 대비 6%p 정도 하락

– 2차 오일쇼크가 정점에 달했던 1980년 0.7%, 1981년 2.1%, 1982년 -0.3% 등 3년평균 1978년 성장률 대비 4%p 정도 하락

[그림 1-11-7] OECD국가들의 잠재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장기추이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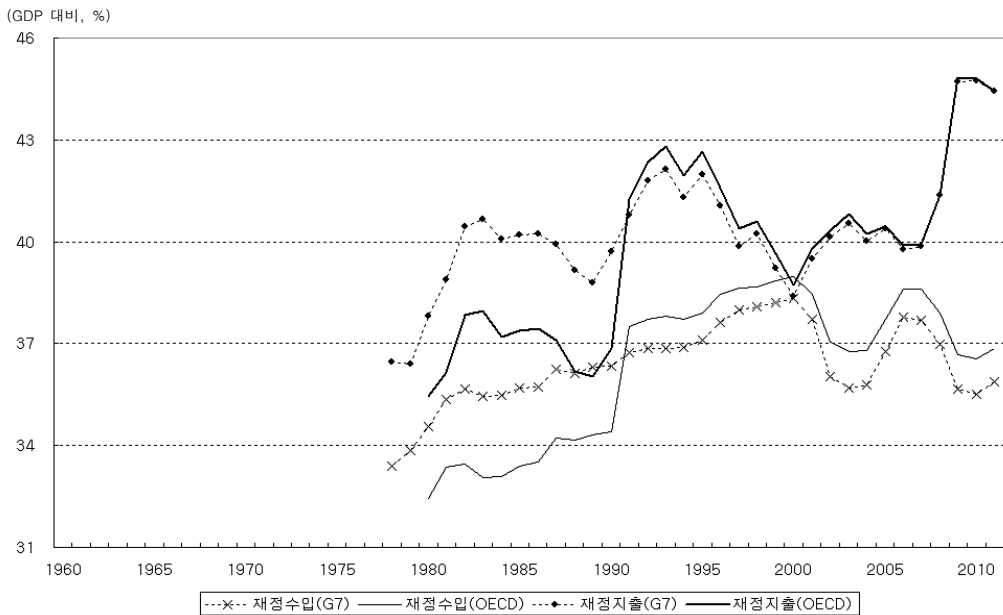


출처: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OECD국가와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
 - 재정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OECD전체의 재정지출이 통계자료 입수가 가능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4%를 초과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8%를 초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09년 적자규모 추정치 5.0%도 관리대상수지 통계가 이용가능한 1988년 이래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5.1%) 한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
 - 이러한 대규모 재정적자로 OECD전체의 국가채무비율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5.6%의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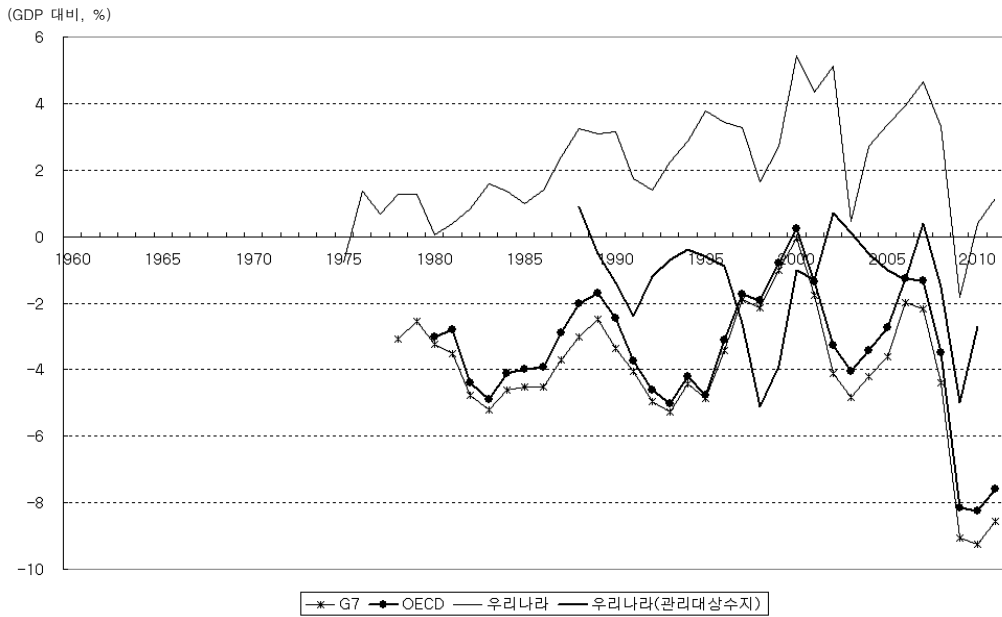
[그림 1-11-8] OECD국가들의 장기재정 추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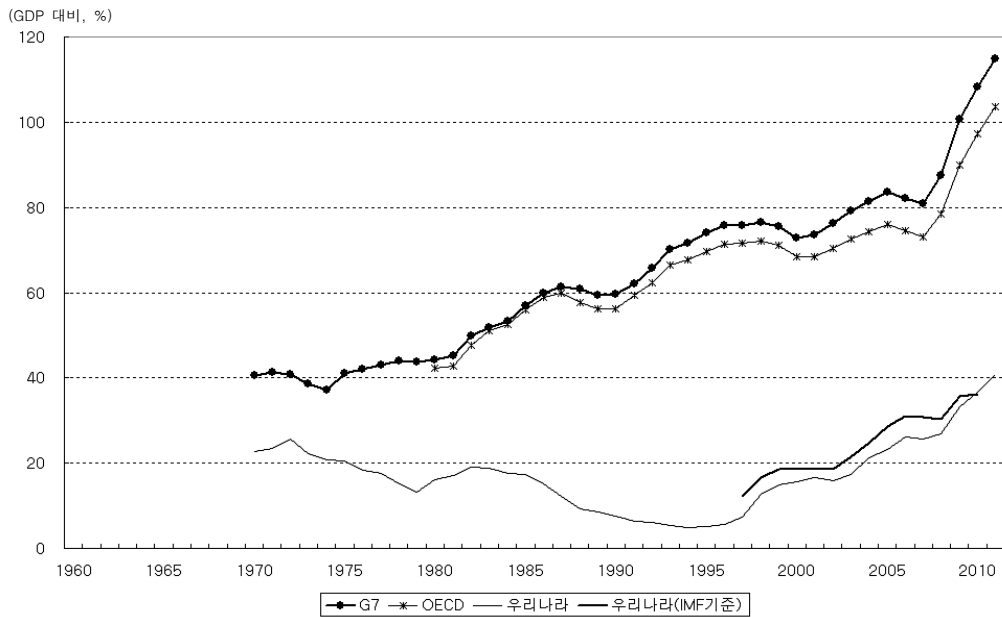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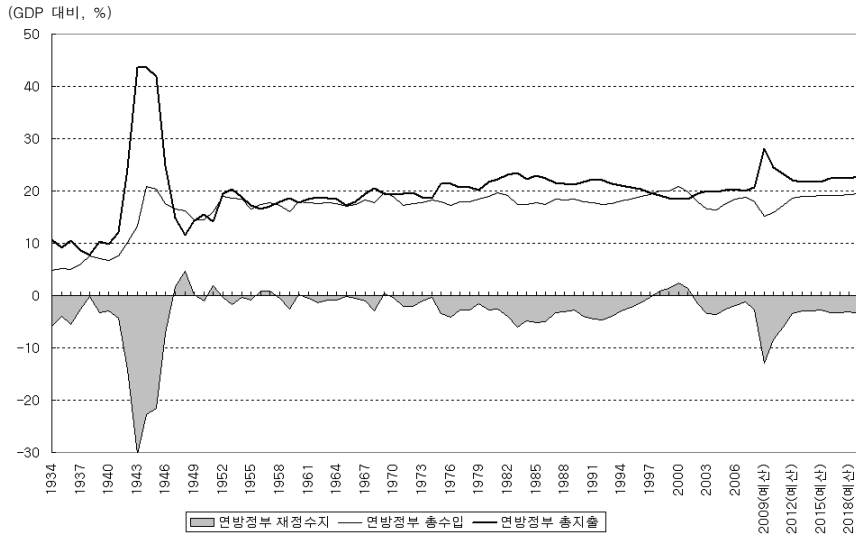
(국가채무)



출처: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규모(2009~2011년 3년간 평균 9.1%)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1942~2046년 5년간 평균 19.2%)나 1970·1980년대 만성적 재정적자 시기(1975~1994년 20년간 평균 3.7%)에 비견될 정도
 - 이들 3개 기간중 민간보유국채 증가규모는 각각 GDP 대비 32.1%, 66.3%, 25.4%임

[그림 1-11-9]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재정 추이



출처: 2009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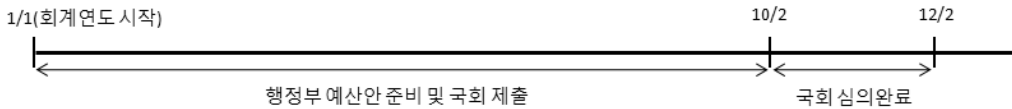
2. 주요국의 세수추계 체계 및 특징*

가. 주요국의 세수추계 체계

□ 우리나라

- 행정부의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수행
 - 정부 세입안은 9월말까지 확정되며 10월 2일까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됨
- 국회의 세수추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정책처(NABO)에서 수행
 - NABO의 세입추계치를 정부 추계치와 비교하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며 12월 2일까지 심의 확정
 -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2개월

[그림 1-11-10] 우리나라 예산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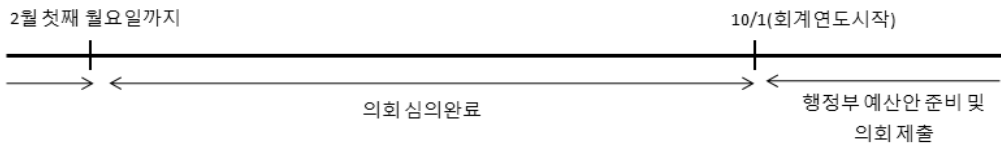
□ 미국

- 행정부의 세수추계는 OMB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예산안(President's Budget)에 반영
 - US Code 제31장 제11절에 대통령예산안은 매년 1월 첫째 월요일에서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함이 명기됨. 일반적으로 2월 첫째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정권교체기에는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국회의 세수추계는 실질적으로 의회예산실(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수행
 - CBO는 Baseline 세입·세출추계와 대통령예산안에 따른 세입·세출추계를 수행하여 제시

*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ong@kipf.re.kr)

- Baseline 추계는 현재의 조세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의 전망이며, 대통령예산안에 따른 추계(CBO's Estimate of President's Budget)는 대통령예산안에서 제시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전망임
-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대략 8개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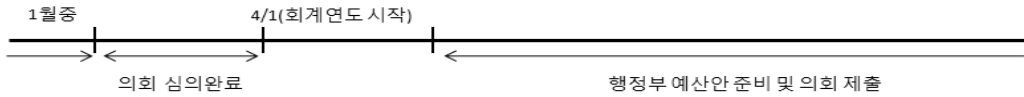
[그림 1-II-11] 미국의 예산순기



□ 일본 및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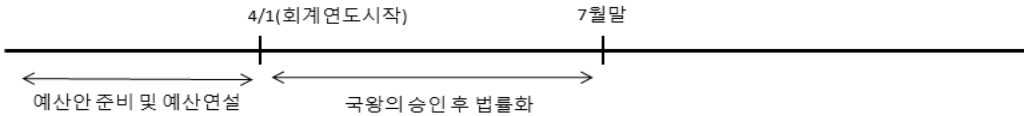
- 행정부에서만 세수추계를 수행하고 의회에서는 별도의 세수추계를 하지 않음
 - 의회는 예산안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만 결정할 뿐,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하지는 않음. 이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내각과 의회의 협의 절차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은 사전에 수용하기 때문임
 - 일본의 예산심의 기간은 1월 19일~3월 27일로 2개월 남짓인 반면, 영국의 경우는 봄(spring)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고 7월말에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얻어 예산이 법률로 성립됨
 - 영국의 경우 대개 4월 1일 이전에 예산연설(Budget Speech)이 이루어지고 이후 예산연설에 담긴 세입안은 그대로 세입법(Finance Bill)으로 전환되며, 세출안은 의회에서 심의되어 7월말에 세출법(Appropriation Act) 형식으로 통과됨. 회계연도 시작시점(4월 1일)부터 세출법 통과 사이의 지출은 겨울 추경(winter Supplementary Estimates) 및 잠정예산(Vote on Account)으로 조정됨

[그림 1-11-12] 일본 예산순기



출처: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index.htm>

[그림 1-11-13] 영국 예산순기



출처: 영국 재무성 예산관련, <http://budget.treasury.gov.uk/>

나. 세수추계 행태의 특징

- 이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서로 비슷한 세수추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세수추계 행태의 특징을 보고자 함

□ 우리나라

- NABO의 예산연도 성장률 전망치는 경상 및 실질 모두 행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 NABO가 작성한 최근 5년간 예산관련 분석자료를 보면 NABO의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행정부에 비해 항상 0.2%p~1.3%p 낮음
 - 2005년 예산은 시나리오별로 전망되어서 행정부와 비교 불가능
 -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행정부에 비해 0.2%p~0.9%p 낮음
- 최근 5년간 NABO 국세수입 전망치는 정부 세입전망치에 비해 0.7조~1.3조원 낮음
 - 이러한 세입전망의 차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 차이에 주로 기인
 -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전망치가 행정부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주세, 관세, 증권거래세는 행정부보다 높은 경향
 - 한편, 2005년 세입예산은 시나리오별로 정부 전망치보다 0.9조~2.0조원 낮았음

〈표 1-11-6〉 행정부와 NABO의 예산연도 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

예산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질성장률	행정부 (A)	5%대	5.0	4.6	5.0	5.0	4.0	
	NABO (B)	1안	4.5	4.7	4.3	4.8	3.7	3.8
		2안	4.9					
		3안	5.4					
	차이 (C=A-B)		-	0.3	0.3	0.2	1.3	0.2
경상성장률	행정부 (A)	8% 수준	7.5	6.7	7.3	7.4	6.6	
	NABO (B)	1안	7.3	7.1	5.8	6.6	6.6	6.4
		2안	7.7					
		3안	8.2					
	차이 (C=A-B)		-	0.4	0.9	0.7	0.8	0.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기획재정부,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

〈표 1-11-7〉 행정부와 NABO의 세입예산 비교

(단위: 조원)

예산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행정부(A)		130.6	136.0	148.1	165.6	179.6	168.6
NABO(B)	1안	128.6	135.0	147.0	164.9	178.3	167.5
	2안	129.1					
	3안	129.7					
차이(A-B)	1안	2.0	1.0	1.2	0.7	1.3	1.1
	2안	1.5					
	3안	0.9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기획재정부,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

〈표 1-11-8〉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예산 전망 - 세목별 비교

2005년도 전망				2006년도 전망			2007년도 전망		
	행정부 (A)	NABO (B)1)	차이 (A-B)	행정부 (A)	NABO (B)	차이 (A-B)	행정부 (A)	NABO (B)	차이 (A-B)
총국세	130.6	129.7	0.89	136.0	135.0	1.05	148.1	147.0	1.15
소득세	25.5	24.8	0.71	27.7	26.4	1.23	33.0	31.2	1.80
법인세	26.3	25.7	0.67	26.9	27.7	-0.80	30.8	30.2	0.57
상속증여세	2.0	1.7	0.30	2.2	2.0	0.22	2.6	2.1	0.52
부가가치세	39.0	39.6	-0.57	41.4	40.3	1.11	41.3	41.1	0.27
개별소비세	5.1	4.7	0.44	4.5	4.9	-0.34	5.2	5.4	-0.23
증권거래세	1.6	1.9	-0.26	1.8	2.1	-0.26	2.3	3.2	-0.88
인지세	0.5	0.6	-0.08	0.5	0.5	0.01	0.6	0.5	0.07
과년도수입	1.8	1.8	-0.05	2.3	2.2	0.11	2.4	2.5	-0.11
교통에너지환경세	11.5	11.1	0.40	11.8	11.8	0.07	11.4	11.8	-0.40
관세	7.7	8.1	-0.45	6.5	7.0	-0.45	7.1	7.3	-0.17
교육세	4.0	4.4	-0.39	3.8	3.9	-0.11	3.8	3.7	0.04
종합부동산세	-	-	-	1.0	1.0	0.00	1.9	1.7	0.18
주세	2.9	3.1	-0.17	2.9	3.1	-0.20	2.4	2.8	-0.41
농어촌특별세	2.6	2.3	0.34	2.7	2.3	0.45	3.3	3.4	-0.11
2008년도 전망				2009년도 전망			2010년도 전망		
총국세	165.6	164.9	0.72	179.6	178.3	1.26	168.6	167.5	1.14
소득세	37.8	37.7	0.12	42.9	42.8	0.13	37.0	36.1	0.86
법인세	36.1	34.8	1.26	39.3	38.7	0.55	35.4	34.6	0.78
상속증여세	4.0	3.1	0.89	3.3	2.7	0.59	2.7	3.3	-0.62
부가가치세	44.0	44.3	-0.30	48.5	49.1	-0.60	46.2	46.3	-0.07
개별소비세	4.7	5.0	-0.32	4.6	4.7	-0.05	4.9	3.9	0.93
증권거래세	3.3	3.5	-0.19	3.3	3.3	-0.02	3.7	3.3	0.41
인지세	0.6	0.6	0.06	0.6	0.6	0.01	0.6	0.6	-0.03
과년도수입	2.6	3.1	-0.49	4.2	3.8	0.36	4.1	4.3	-0.22
교통에너지환경세	12.0	11.9	0.14	11.2	11.0	0.16	11.7	12.9	-1.23
관세	7.2	7.5	-0.34	9.1	8.7	0.45	9.8	10.1	-0.37
교육세	4.1	3.6	0.52	4.2	4.1	0.15	4.5	4.3	0.26
종합부동산세	3.1	3.1	0.00	1.8	1.8	0.00	1.0	1.0	0.00
주세	2.5	2.6	-0.07	2.6	2.7	-0.08	2.9	3.5	-0.66
농어촌특별세	3.7	4.3	-0.58	4.2	4.6	-0.40	4.1	3.0	1.09

주: 1) NABO는 2005 예산연도 전망시 거시경제 여건을 세 가지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인 "시나리오 3안"과 행정부 예산(안)을 비교

2) 음영부분은 NABO 전망치가 행정부보다 낮은 세목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기획재정부,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

□ 미국

- 실질성장률의 경우 CBO 전망치는 행정부 전망치보다 높거나 낮은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음
 - 최근 5년간 예산자료를 보면 CBO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행정부에 비해 -0.7%p ~ 0.2%p의 차이를 보임
- 경상성장률의 경우 CBO 전망치는 행정부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O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행정부에 비해 0.2%p ~ 1.0%p 낮은 경향을 보임
- CBO 세입전망치는 행정부에 비해 꾸준히 높거나 낮은 경향을 찾기는 어려움
 - 행정부에 비해 낮은 경상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CBO 세입전망치가 행정부에 비해 높은 경우(FY2006, FY2007, FY2008)도 있고, 낮은 경우(FY2009, FY2010)도 있음
 - 이는 경상성장률 이외의 거시변수 및 도입되는 정책의 세수 효과에 대한 행정부와 CBO의 전망의 차이에 주로 기인

〈표 1-11-9〉 행정부와 CBO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단위: %)

		FY 2006 Budget		FY 2007 Budget		FY 2008 Budget		FY 2009 Budget		FY 2010 Budget ¹⁾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실질 성장률	Administration (A)	3.6	3.5	3.4	3.3	2.7	3.0	2.7	3.0	-1.2	3.2
	CBO (B)	3.8	3.7	3.6	3.4	2.3	3.0	1.9	2.3	-3.0	2.9
	차이 (C=A-B)	-0.2	-0.2	-0.2	-0.1	0.4	0.0	0.8	0.7	1.8	0.3
	연도감안 차이 조정 (C')	-0.2		-0.1		0.1		0.7		0.7	
경상 성장률	Administration (A)	5.6	5.6	5.8	5.6	5.3	5.5	4.6	5.1	0.1	4.3
	CBO (B)	5.7	5.3	6.1	5.3	4.3	4.8	3.7	4.1	-1.5	3.8
	차이 (C=A-B)	-0.1	0.3	-0.3	0.3	1.0	0.7	0.9	1.0	1.6	0.5
	연도감안 차이 조정 (C')	0.2		0.1		0.8		1.0		0.8	

주: 1) FY 2010 Budget의 거시경제 전망은 2월에 발표한 전망치임

1. 거시경제 전망은 Calendar Year 기준임

2. 연도감안 차이 조정(C')은 t+1 회계연도 차이는 1년도 차이에 0.25, t+1년도 차이에 0.75의 가중치를 주어 저자가 산출

〈표 1-II-10〉 행정부와 CBO의 예산연도 재정수입 전망 비교

(단위: 십억달러)

	FY 2006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FY 2010 (Updated)
Administration (A)	2,178	2,416	2,662	2,700	2,381	2,333
CBO (B)	2,210	2,431	2,679	2,699	2,289	2,263
차이 (A-B)	-32	-15	-17	1	92	70

출처: CBO의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Budgetary Proposals 및 OMB의 The President's Budget 각 연도

3.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재정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Quality of Public Finance; QPF)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유럽연합은 기존의 각 회원국 및 회원가입 신청국들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각국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오고 있음
 - 최근의 경제위기뿐 아니라,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중장기적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가 여러 회원국들에게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 비중 및 조세 부담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추가적인 재정 재원의 마련이 아닌, 기존 자원 사용에 효율성 증대라는 재정(지출)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
 - 2000년부터 유럽연합은 (준)회원국들의 매년 재정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Public Finances in EMU”를 발간해 오고 있음
 - 기존의 Maastricht 조약의 정량적 기준에 기초한 분석에 추가하여, 2008년부터는 새로이 정량적 측면을 포함한 QPF 개념을 도입하여 각국의 재정상황의 감독 및 비교 분석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
 -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OECD에서도 2004년에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산하에 작업반(Working Group on Quality of Public Finances)을 설치하여 여러 관련 이슈들을 논의
 - 특히, 2006년에는 유럽연합의 경제재무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Economics and Finance Ministers; ECOFIN Council)가 주관하여 OECD의 EPC와 European Commission이 함께 QPF와 관련 재정지출 측면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COFOG(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database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의 분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재정관련 기구 및 예산 관리의 현대화나 관련 보조 제도들의 신설, 중장기적 경제성장 관련 지출의 확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 등 정부(재정)의

*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hhong@kipf.re.kr)

‘규모’에 추가하여 재정관련 재원·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재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방법으로서의 QPF는 하나로 명확히 정의되기보다는 재정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 a broad concept which refers to the conduct and organization of budgetary policy and its potential impact on long-term growth of economy ...” OECD Economic Policy Committee note(2007)

○ “(QPF) can be viewed as encompassing all arrangements and operations of fiscal policy that support the macroeconomic goals of fiscal policy...” Barrios & Schaechter (2008), European Commission(2008)

○ “... the level and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and its financing via revenue and deficits ...” Afonso, Ebert, Schuknecht, & Thöne(2005)

○ 개념의 도입 초기에는 재정지출 측면, 특히 지출 수준과 그 구성이 주된 관심사였으나(Afonso et al., 2005), 점차 재정수입이나 여러 재정관련 제도 등 재정의 다른 부분들을 포함(European Commission, 2008)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

□ QPF의 다면적인 개념을 각각의 측면에 있어 구체적 지표·지수들을 선정하여 국가 간 및 시점 간 비교분석에 이용

○ QPF와 관련된 재정의 여러 주요 측면들로 지목되는 것으로는 정부의 규모, 재정 수지·부채, 재정 지출의 구성 및 효율성, 재정 수입의 구조 및 효율성, 재정 제도, 경제 관련 재정정책 등이 열거되고 있음

○ 각 부문에 있어서 구체적 지표를 통해 수치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 간 혹은 동일 국가의 서로 다른 시점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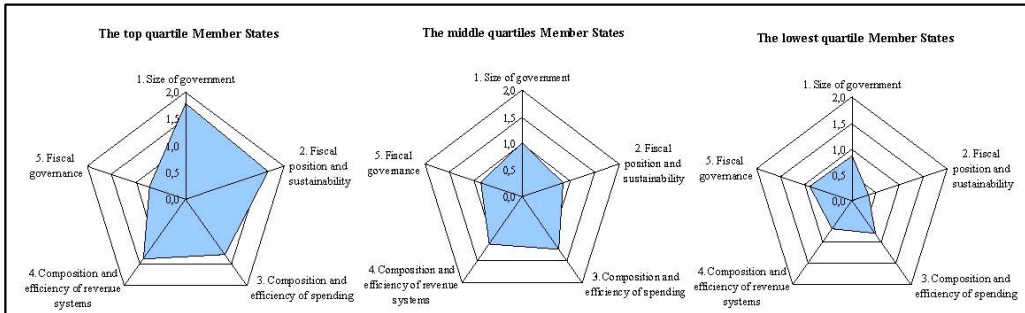
– 예를 들어, European Commission(2009)의 경우 QPF와 관련하여 재정의 5개 부문을 선정하고, 그 아래에 총 81개의 하위 지표들을 선정

– 5개 부문(81개 지표)은 각각 (1) 정부의 규모(1개 지표), (2)재정 수지와 지속가능성 [6개 지표], (3)재정 지출의 구성 및 효율성(47개 지표), (4)재정 수입의 구조 및 효율

성[21개 지표], (5) 재정 관리[6개 지표] 들로 이루어져 있음

- 각 부문의 하위 지표들의 선택 기준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밀접한 관련
 - 예를 들면, 정부의 규모(GDP대비 재정지출규모)는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Arpaia & Turrini, 2008)
 -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클수록 성장률은 줄어드는 경향(Fatas & Mihov, 2003)
 - 법인세율은 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Lee & Gordon, 2005)
- [그림 1- II -14]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 지표들을 부문별로 종합하여 5개 부문에서 각 국가들의 수준을 수치화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의 방향을 살펴볼 수도 있음

[그림 1- II -14] 단순 종합지표를 사용한 국가 간 비교 예



□ 그러나 비교분석 수단으로서의 QPF는 편리하고 직관적인 방법인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 분석을 위한 각 지표들의 선정 및 수치화 방법에 있어 합의가 필요

- 일단 지표가 선정되고 수치화되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대 비교가 용이하고,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쉬움

- 또한, 지표를 이용한 비교 분석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식별이 용이하여 정책 개선 목표 설정이 명확

○ 한편, 각 국가 특유의 정성적(qualitative) 측면을 비교가능한 정량적(quantitative) 자료

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교대상 국가들 간의 합의가 필요

- European Commission(2009)의 경우, OECD(2008)에서 발행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작성을 위한 지침서에 따라 각 5개의 부문들에 있어서 종합지수의 생성방식을 논의하고 있음
- 종합지수의 작성방식이 다양하고 각각의 방법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종합지수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시에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지수들의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민감도 분석도 필요
- 재정지출이나 조세제도의 효율성 등 몇몇 주요 개념들에 있어서 수치화(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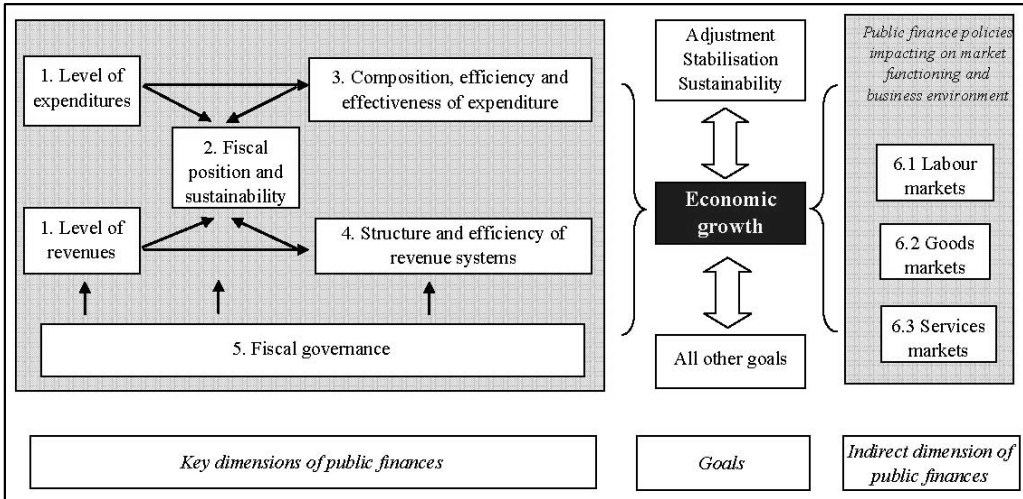
○ 국가간 재정상황 비교시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확보가 큰 관건

- 최근 들어 설립된 COFOG(-II) dataset을 통해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이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해 분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QPF개념의 활용에 있어 주로 거시경제적 지표, 특히 경제성장과 QPF 간의 관계에 많은 관심

○ Barrios & Schaechter (2008)의 경우,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그림 1- II -15]에 나타난 6개의 재정관련 주요 부문들에 주목

[그림 1-11-15]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경우의 QPF의 여러 측면 Barrios & Schaechter(2008)



- 경제성장과 6개 측면에서 본 QPF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친 분석 방법을 사용
 - 우선 첫번째로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방법을 통해, 재정의 각 부문들의 노동,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의 기여도를 추정하고
 -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본 요소들을 바탕으로 성장회계 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을 통해, 재정의 각 부문들의 경제성장에서의 기여도를 분석
- 재정(의 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경로들 중 명확하게 그 영향이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음
- Barrios & Schaechter (2008)를 통해 밝혀진 몇몇 관계들을 살펴보면
 - 낮은 부채수준을 포함한 탄탄한 재정건전성은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QPF 관련 다른 측면에서의 개선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재정 비중이 너무 커지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채/적자 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 반면, 다른 측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재정 비중이 경제성장과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

- 어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종류 자체 보다는 시장실패의 교정이나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정도에 크게 의존
- 재정수입은 시장왜곡이 적을수록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조세 제도 등은 소득재분배 등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 재정규율(fiscal rule)이나 예산제도, 중기재정 등 '재정관리'와 관련된 강력한 제도들이 QPF에 고려되는 여러 측면의 개선을 쉽게 만드는 경향. 특히, 각 국가에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을 통해 정책적 목표 달성이 용이

○ European Commission(2008 및 2009)의 경우는 Barrios & Schaechter(2008)에 비해 한 가지 적은 다섯 가지 부문에서의 영향을 연구

- 각 부문에 있어 하위지표들을 바탕으로 종합지수를 생성하여 회원 국가간 상대 비교 및 각 국가에서 재정상황 개선 정도의 판단을 가능케 함
- 다양한 종합지수 작성방식으로 인해 결과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 <표 1-Ⅱ-6>은 3가지 방식에 따른 복합지수의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결과들의 단순 상관계수와 rank 상관계수 모두 높은 수치를 보여 결과의 robustness를 보여줌
- 종합지수 작성결과를 보면, 어떤 국가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몇 국가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헝가리(HU)와 이탈리아(IT)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수지/지속 가능성, 재정 지출/수입의 구조나 효율성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모습을 보임
 - 룩셈부르크(LU)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음

〈표 1-11-6〉 3가지 weighting 방법에 따른 종합지수 작성결과

Country	QPF1. Size of government	QPF2. Fiscal position and sustainability			QPF3. Compositi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penditure 3/			QPF4. Structure and efficiency of revenue systems			QPF5. Fiscal governance		
	Average	Average	Factor	Random	Average	Factor	Random	Average	Factor	Random	Average	Factor	Random
BE	-0.6	-2.0	-2.1	0.0	0.0	-1.7	0.0	-5.7	-11.4	-5.6	3.4	-2.3	-3.4
BG	14.2	2.9	2.9	2.4	-14.9	-13.8	-14.9	8.0	9.5	7.3	-21.0	-21.0	-21.0
CZ	5.9	-8.1	-8.5	-3.9	-4.0	-3.0	-4.1	3.7	2.5	3.6	-2.3	-1.0	-2.2
DK	-9.1	8.3	8.6	5.0	4.0	4.6	4.1	-4.4	0.1	-3.7	6.4	6.2	6.5
DE	3.1	-0.5	-0.5	-0.5	1.5	1.4	1.4	-4.2	-8.5	-4.2	0.3	2.1	0.4
EE	21.7	7.6	7.8	1.6	-3.4	-4.4	-3.4	3.4	-1.3	2.8	-0.1	-2.5	-0.2
IE	16.8	1.1	1.0	0.0	0.5	0.4	0.5	7.8	18.8	8.3	-2.8	-8.9	-3.1
EL	4.2	-3.2	-3.2	-2.8	-7.3	-7.7	-7.4	6.0	1.7	5.5	-6.7	14.2	-7.2
ES	12.4	0.4	0.3	1.3	-4.5	-3.8	-4.5	3.3	3.7	2.9	0.9	4.3	1.0
FR	-12.7	-4.8	-4.9	-2.5	1.2	0.8	1.2	-1.7	-4.9	-2.1	-3.0	-3.5	-3.1
IT	-5.3	-2.1	-2.1	-1.4	-6.7	-6.8	-6.8	2.2	-1.5	1.9	-6.5	-6.1	-6.5
CY	3.1	1.3	1.5	2.2	-1.7	-2.3	-1.8	13.1	22.1	12.4	-9.1	-18.0	-9.7
LV	13.9	1.5	1.5	-2.1	-7.1	-9.1	-7.1	-4.4	-6.1	-5.2	1.5	-12.1	0.7
LT	18.3	0.8	0.7	-2.3	-6.4	-7.6	-6.4	-0.1	-3.5	-0.7	-6.2	-6.8	-6.4
LU	14.8	-1.1	-1.3	0.6	1.6	-0.4	1.5	-0.3	3.3	-0.1	-3.4	-8.0	-3.3
HU	-8.2	-7.9	-8.3	-4.1	-6.7	-8.0	-6.7	-2.6	-7.5	-3.3	-11.8	-16.5	-12.2
MT	5.7	0.6	0.5	-1.5	-4.8	-3.9	-4.7	9.5	17.1	9.1	-1.9	-0.4	-1.8
NL	-0.5	-2.2	-2.3	-1.1	2.5	2.5	2.5	-3	-1.5	-2.8	6.9	8.9	7.1
AT	-4.7	-0.1	-0.1	-0.8	3.1	2.2	3.1	-0.2	-4.6	-0.5	-0.3	-3.2	-3.0
PL	5.9	2.3	2.3	-2.5	-9.4	-8.1	-9.5	0.5	3.9	1.0	-6.9	-6.5	-6.8
PT	-0.3	-3.3	-3.5	-2.8	-3.5	-4.3	-3.4	2.7	3.7	2.0	-9.0	-11.1	-9.3
RO	15.9	-1.4	-1.5	-3.5	-12.3	12.0	-12.4	1.5	0.6	1.0	-14.1	-14.1	-14.1
SI	4.2	-4.7	-4.9	-2.2	-1.6	-1.9	-1.6	-6.3	-5.6	-6.1	-2.3	0.0	-2.3
SK	15.9	-3.7	-3.9	-3.4	-9.4	-7.0	-9.4	7.9	7.1	7.7	-5.4	-2.9	-5.5
FI	-3.4	8.0	8.3	6.7	5.3	4.8	5.2	-3.0	-2.6	-2.8	1.9	3.5	1.9
SE	-12.7	8.6	8.8	5.2	3.7	4.9	3.7	-3.8	-5.2	-3.8	9.3	12.2	9.4
UK	3.5	-9.1	-9.2	-10.8	-1.1	1.8	-1.1	4.1	8.6	4.6	4.3	9.1	4.6
Average	4.3	-0.4	-0.4	-0.9	-0.3	-3.1	-3.0	1.3	1.4	1.1	-3.2	-4.2	-3.3
Std.dev.	10.0	4.7	4.9	3.5	5.2	5.1	5.2	5.1	8.3	5.0	6.6	8.6	6.7

□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방법에 관한 참고문헌

- Afonso, A., W. Ebert, L. Schuknecht, and M. Thöne(2005), “Quality of Public Finances and Growth,” ECB Working Paper Series, No. 438
- Arpaia, A. and A. Turrini(2008),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 Long-run Tendencies and Short-run Adjustments,” European Economy - Economy Paper No.300(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Barrios, S. and A. Schaechter(2008), “The Quality of Public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European Economy - Economy Papers, No. 337
- Fatas, A. and I. Mihov(2003), “The Case for REstricting Fiscal Policy Discre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1419~1447
- Deroose, S. and C. Kastrop(2008), “The Quality of Public Finances: Findings of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 - Working Group(2004-2007),” European Economy - Occasional Papers, No. 37
- European Commission(2008), *Public Finances in EMU - 2008*, European Economy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2009), *Public Finances in EMU - 2009*, European Economy (Brussels)
- Lee, Y. and R.H. Gordon(2005), “Tax Structure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pp.1027~1043
- OECD(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Paris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OECD Economic Outlook(2009년 11월) 중 재정정책 관련

- 2010~2011년 OECD 국가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정부부채 증가 속도로 보았을 때 현재 재정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2010년 OECD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5%로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기적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으로도 위기 이전(2007년)과 비교했을 때 4%p 이상 악화
 - 2011년에도 재정적자는 8% 혹은 그 이상(일본, 미국, 영국 등)을 유지할 전망
 -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유로지역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2011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예정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OECD 전 국가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GDP의 100%를 초과할 전망(위기 이전 대비 30%p 증가)
- 재정건전화 속도는 여러 변수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가 나겠지만 견고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함
 - 재정건전화 속도는 각국의 경제상황, 추가적 확장 통화정책 여력, 재정불균형, 국가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회복세가 약하고 위험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 2010년 신중한 확장재정기조 유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1년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로 보임

- 북유럽, 한국 및 스위스에서는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음
- 반면, 미국, 영국,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채무 수준이 현재보다도 더 증가할 위험이 있음

□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공표하고 특히 세입보다는 세출 조절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신뢰성 있는 중기재정정책 발표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고 달성목표, 적자 감축 일정, 관련 세입 및 지출 조정 항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Guichard et al.(2007)의 실증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서는 세입 증대보다 세출(정부소비 및 이전지출) 감소가 더욱 효과적임
 - 지출삭감의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성격의 세출(공공 R&D, 기반시설 건설 및 보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출)은 삭감하지 말아야 함
 - 세수증대가 필요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 인상보다는 부동산세 및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이 인센티브 왜곡을 통한 경제성장 저해 효과를 줄일 수 있음(Johansson et al., 2008).
 -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조세개혁, 일반세출 삭감, 세금탈루 방지,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세입기반 확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의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2009-2011년까지는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되 그 규모를 점차 감소시켜 재정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함

- 한국은 원화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와 강력한 확장 재정정책의 실시로 OECD 국가들 중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에 성공하였음
 - GDP 대비 6%에 달하는 지출을 직접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과 이전지출의 확대
 - 경기가 안정화됨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감소시켜야 함
 -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의 경우 원화 강세나 세계경기 악화시 더블딥(double-dip recession)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나.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9년 11월) 중 재정정책 관련

-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실시로 당분간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책 및 재정적자 규모가 차츰 감소할 전망
 -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선·후진국 모두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통화정책 대신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
 - G20국가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GDP의 2%, 2010년 GDP의 1.5%에 해당하는 재량적 경기부양 지출 감행
 - 우선적으로 세금감면(tax breaks)과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등 파급효과는 작지만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확장 재정정책들이 취해졌음
 - 2009년 하반기에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 특히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가 더 컸는데, 이는 정부규모가 크고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s)의 역할이 크기 때문
 -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시로 위기 이전(2007년)에 비해 2009~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10년 재정적자는 2009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는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
-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추가 실시하기보다는 이전 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미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등 관망기조(wait-and-see approach)로 전환
 -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경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속해야 하며 경기침체의 우려가 발생했을 때 재정지출을 확대 실시하는 상황도 검토
 -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80% 수준이었던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2014년까지 GDP 대비 1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선진국에서는 2015년 이후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2060년까지 EU지역에서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GDP의 약 5%, 미국에서는 약 4~6% 증가)
 -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 이자율 상승을 유발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국채와 같이 안정적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감소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신축성(flexibility)과 규율(discipline)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사회복지지출 증가 및 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등은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국가들은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준칙과 강력한 실행 기제를 마련해야 함

다. IMF의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2009.11.3)

- 재정수지, 정부부채 등 각국의 재정상황 추이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들을 보임
 -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이는 경향
 - 이는 대부분 국가가 금번의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재정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번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
 - 선진국들에 비해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음
 - G-20국가들 중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평균은 내년에 긴축정책을 편다고 해도 2014년에는 GDP 대비 118%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G-20의 개도국 평균은 2014년 36.2%에 머물 전망이다
 - 한국은 2014년에 GDP 대비 부채수준이 35.4%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고 개도국들 중에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G-20국가 전체를 살펴봤을 때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6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
 - 각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G-20 선진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평균은 2009년 9.7%, 2010년 8.7%로, 이의 큰 부분이 금융권 관련 지원이 차지. 이 금융지원 부분을 제외하면, 적자 평균은 2009년에 8.2%, 2010년에는 8.4%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의 경우, 2010년에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종료 및 추가적 재정건전화 정책,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재정수지의 뚜렷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2010년 4.1%, 2014년 1.3%)
 - 한국의 경우 2009년 2.8%, 2010년 2.7% 적자에서 2014년 2.6%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 7월의 전망(2009년 △3.2%, 2010년 △4.3%, 2014년 2.1%)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로서, 최근의 경제성장률의 전망 개선에 기인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평가
 - 최근 IMF-UK Treasury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에 계획한대로 확장

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구체적 집행 수준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 한국, 미국,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체적 수치조차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보다는 이전지출이나 총수입 측면에서의 정책¹⁾이 더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경향
- 한국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 살펴본 결과 본예산과 추경의 약 60%가량이 집행되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약 37%, 수입 측면에서는 약 34%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자본투자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높은 편(6월까지 약 54% 집행)

○ 경기확장적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한시적 정책들을 중단함으로써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각국의 정책들을 보면 지출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조세 측면의 정책들의 절반가량(금액기준)이 지속성을 가지는 경향(선진국의 경우 수입 측면 정책들의 86%, 전체 정책들을 보면 25%가량)
- 개도국의 경우 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중기적으로 유지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지난 해 말의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수단들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정책들은 경기 회복과 함께 중단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중단 조치들만으로는 불충분

○ 위기 이전의 부채수준으로의 회복 또한 충분치 못할 것으로 평가됨

- 대개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위기 이전에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제적 충격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

1) IMF는 각국의 경기 확장 정책 수단을 다음의 6가지로 구분: (1) 공공소비와 이전지출, (2) 투자지출, (3) 임금소득세 감면, (4) 소비세 감면, (5) 자본소득세 감면, (6) 기타 재정수입 관련 정책

- 높은 부채 수준은 실질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신연구를 보면 GDP대비 부채수준의 1%p 증가는 장기 이자율의 0.1~0.6%p 상승을 초래
-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2008~2014년의 선진국에서의 40% 부채 증가는 약 2%가량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노령화 진전속도나 초기 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출구전략은 단순히 기존의 한시적 확장정책의 철회나 위기 전 부채 수준으로 복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부채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총합으로 보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수 선진국들에서 구조적 재정수지의 “급격한” 조정이 필요. 예를 들어, 선진국들 평균의 경우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수준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2010년~2020년의 10년간에 약 8% 정도의 구조적 기초수지의 개선($\Delta 3.5\% \rightarrow 4.3\%$)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4.3% 수준의 흑자를 꾸준히 유지해야만 가능
 - 일부가 주장하는 물가상승을 통한 부채의 실질가치 감소는 다른 부수적 폐해를 고려하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 급격한 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준칙, 특히 지출측면의 정책이 큰 역할을 하는 편

라. IMF의 “Countering the Cycle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2009. 11.)

- 동 보고서는 한국에 맞게 조정된 IMF의 GIMF(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을 사용해 한국의 재정승수의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한국과 같이 높은 개방도를 가진 국가에서 경기안정화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 공공부분의 투자와 소비 증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한국의 경우 다른 재정정책들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GDP대비 1% 정도 증가시킬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정책 실시 첫 해에 0.8%p 정도 성장에

- 기여할 것으로 계산됨
- 특히 정부투자의 증대는 민간부분의 소득과 부(wealth)의 증가를 가져와 가계의 소비 증진에 기여
- 이전지출과 세금감면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특정계층에 초점을 두거나(targeted) 지속적으로 행해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전지출의 경우 유동성이 제약된 가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될수록 가계의 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큼
 - 일시적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비교적 작은 효과(0.1~0.15%)를 가지지만, 이전지출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주요 감면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법인세 감면은 민간부분의 투자를 증대시켜 소득세 인하에 비해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짐
 - 부가가치세(VAT) 감면은 다른 세금 감면에 비해 더 큰 일시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짐(0.33%)
- 한국의 경우 재정승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이는 높은 대외 개방도에 의한 수입유발 등 누출이 크기 때문
- 재정정책은 내·외부의 정책시차(time lag)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게 행해져야 하고, 대상과 수단, 지속성 여부 등을 잘 설정해 가장 효과적으로 총수요에 충격을 주도록 해야 함
- 한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09년중 GDP 대비 3.6%에 달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여 2009년 성장률을 1~1.5%p 정도 높였는데, 이는 시기(timely), 규모(significant in size) 등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제외한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가 GDP 대비 2.75%에 달해 G20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큰 편
- 한국의 경우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가 작고 최근의 경기침체 규모를 감안해 보면 재량적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경기부양정책의 대부분이 즉각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투자나 유동성이 제

약된 가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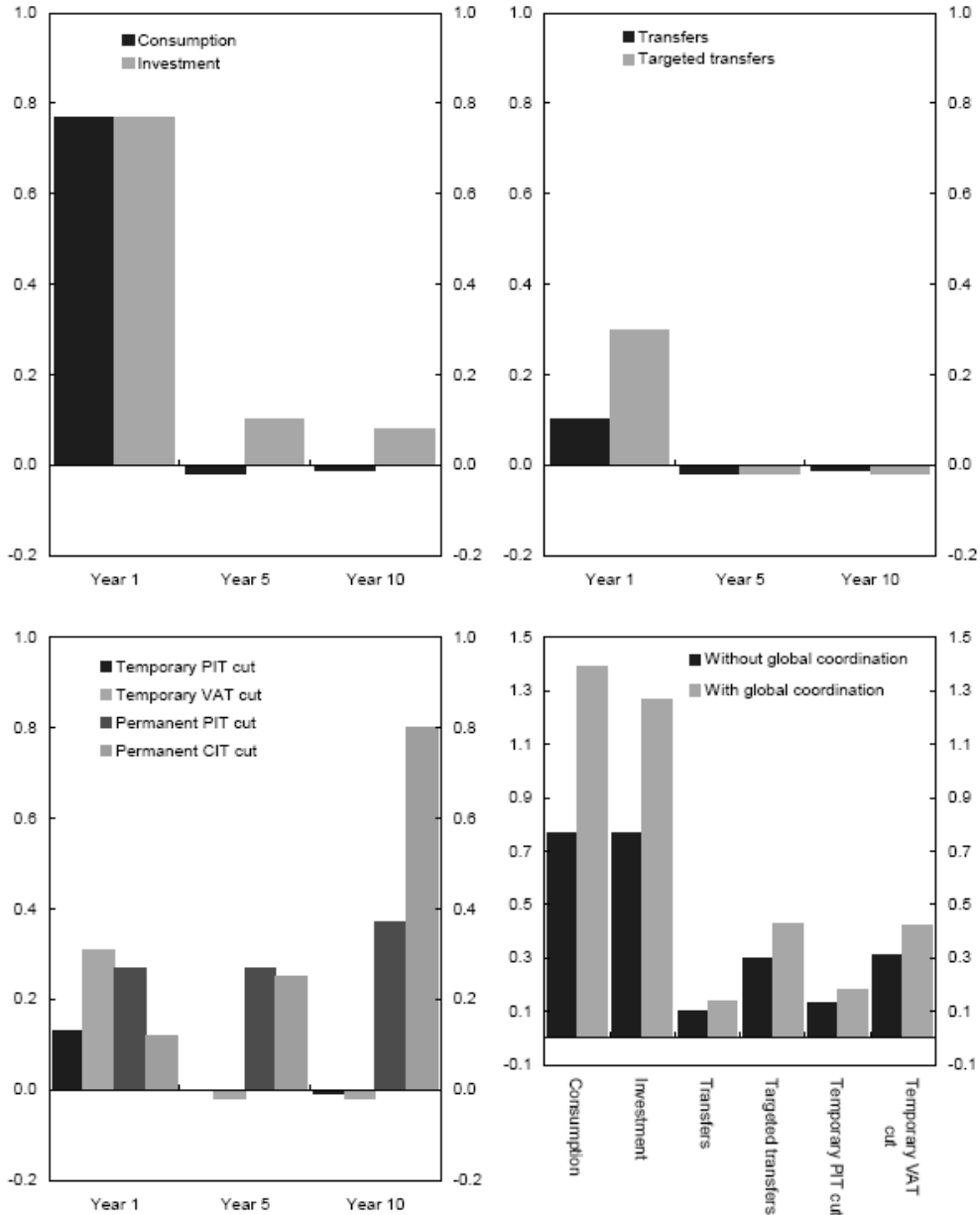
- 다만 항구적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시적(temporary)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다소 벗어남

○ 또한 신속한 재정확장 정책의 실시로 정책시차를 줄임으로써 2009년 상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징후가 확인될 때까지는 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

[그림 1-III-1] Cumulative Fiscal Multipliers in the Base Case
 (Impact on real GDP from 1 percent of GDP stimulus in year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마. 자유기업원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과 과제”(2010. 1. 1.)

- 재정관리 = 거시재정(재정총량규모와 재정분야별 규모를 선택·조정) + 미시재정(재정분야 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위사업을 선택·조정)
 - 재정개혁의 목표 = 거시재정(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 + 미시재정(단위사업의 효율성 제고 유인구조 정렬)

- 거시재정 개혁
 - 목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확립 → 상향식 할당, 하향식 취합 과정에서 투명성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발휘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편법적 수단을 차단
 - 개혁내용
 - 상향식 과정 개혁: 재정총량 및 재정준칙 설정 -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지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 확립. 국회에 의한 해명책임(Accountability) 추궁
 - 하향식 과정 개혁: 단위사업에 대한 정부회계정보를 개선, 다양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충분한 회계정보가 산출되어야 함

- 미시재정 개혁
 - 목표: 효율성 제고 유인구조 정렬 → 자기책임 강화 및 보상원리 작동
 - 개혁내용
 - 산출과 예산의 연계 → 보상 체계 구축
 - 성과협약(Performance Agreement): ‘국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간의 협약
 - 원칙: 산출물 규정의 명확성, 예산 집행의 재량권-총액 기준의 예산 설정, 파산의 치유력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의 규정
 - 향후 경쟁구도로의 전환: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

-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 이명박 정부는 현재 이전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한 거시, 미시재정 운용

틀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미

-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결론 도출에 주력해야 함에도 정권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고 재정당국은 문제인식을 거부
- 민영화를 제외한 재정개혁 핵심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통제와 명령을 통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
- 민영화 역시 성과협약 및 성과계약의 개념에 입각하면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음

바.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2010. 1. 12.)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28.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09년 2월과 4월에 세제개편(세제감면, 세제지원)을 실시해 민간부분의 투자, 소비, 고용의 촉진을 도모함
 - 2009년 세계 주요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감면과 SOC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세계 GDP의 1.4%),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GDP 대비 재정투입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통화·금융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재정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
 -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시로 정부의 수입 감소, 지출 증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됨
 -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추정 결과 재정승수가 1보다 작아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 규모 이상의 GDP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s)을 통해 추정한 재정승수(2000. 1/4~2009. 2/4)는 조세는 0.47~0.81이며 지출은 0.62~0.1.24로 나타남

1인당 GDP 효과 ¹⁾	조세(정부수입)	정부지출
평균 ²⁾	0.605	0.876
최소 ²⁾	0.465	0.615
최대 ²⁾	0.808	1.242

주: 1) 선형추세를 제거한 로그 차분변수 및 4분기 시차를 적정시차로 사용했으며, 변수는 미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정부수입, 1인당 정부지출, 1인당 GDP

2) 표본기간 중 정부수입은 GDP 대비 평균 23.0%(최소 17.2%, 최대 29.9%), 정부지출은 평균 21.1%(최소 14.9%, 최대 30.1%)

-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됨

□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치를 초과함
 - 당초 계획치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2.4%, 국가채무/GDP 비율 34.1%
 - 실적 전망치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5.0%, 국가채무/GDP 비율 35.6%
-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재정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채무 증가는 한번 증가하면 감소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더블딥(double-dip)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초는 유지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를 개편해 세수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2009년 1월 이후)

1. Monetary and Fiscal Rules in an Emerging Small Open Economy, Working Paper No. 09/22 (January 1, 2009)
2. The Role for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Singapore, Working Paper No. 09/8 (January 1, 2009)
3.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Staff Position Note No. 2008/01 (January 7, 2009)
4. Fiscal Risks: Sources, Disclosure, and Management, Departmental Paper No. 09/01 (January 29, 2009)
5. Fiscal and Monetary Policy During Downturns: Evidence from the G7, Working Paper No. 09/50 (March 1, 2009)
6. A Primer on Fiscal Analysis in Oil-Produc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09/56 (March 1, 2009)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Options for Dealing with External Shocks: Insights from the GIMF for Colombia, Working Paper No. 09/59 (March 1, 2009)
8. The Case for Global Fiscal Stimulus, Staff Position Note No. 2009/03 (March 6, 2009)
9. Simple, Implementable Fiscal Policy Rules, Working Paper No. 09/76 (April 1, 2009)
10. Accrual Budgeting and Fiscal Policy, Working Paper No. 09/84 (April 1, 2009)
11. Chile's Structural Fiscal Surplus Rule: A Model-Based Evaluation, Working Paper No. 09/88 (April 1, 2009)
12. Fiscal Stimulus with Spending Reversals, Working Paper No. 09/106 (May 1, 2009)
13. Fiscal Multipliers, Staff Position Note No. 2009/11 (May 20, 2009)
14. Fiscal Incentive Effects of the German Equalization System, Working Paper No. 09/124 (June 1, 2009)
15. Fiscal Policy Rules for Oil-Producing Countries: A Welfare-Based Assessment, Working

- Paper No. 09/126 (June 1, 2009)
16. 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Staff Position Note No. 2009/13 (June 9, 2009)
 17. Optimal Monetary and Fiscal Policy with Limited Asset Market Participation, Working Paper No. 09/137 (July 1, 2009)
 18. How Effective is Fiscal Policy Response in Systemic Banking Crises?, Working Paper No. 09/160 (July 1, 2009)
 19. Disclosing Fiscal Risks in the Post-Crisis World, Staff Position Note No. 2009/18 (July 16, 2009)
 20.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A Cross-Country Fiscal Monitor, Staff Position Note No. 2009/21 (July 30, 2009)
 21. Fiscal Vulner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Oil-Producing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orking Paper No. 09/174 (August 1, 2009)
 22. India's Experience with Fiscal Rules: An Evaluation and The Way Forward, Working Paper No. 09/175 (August 1, 2009)
 23. Fiscal Sustainability in Remittance-Dependent Economies, Working Paper No. 09/190 (September 1, 2009)
 24. A Strategy for Renormalizing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Staff Position Note No. 2009/22 (September 22, 2009)
 25.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Staff Position Note No. 2009/23 (September 28, 2009)
 26. Analyzing Fiscal Space Using the MAMS Model: An Application to Burkina Faso, Working Paper No. 09/227 (October 1, 2009)
 27. Fiscal Deficits and Current Account Deficits, Working Paper No. 09/237 (October 1, 2009)
 28. Top-Down Budgeting - An Instrument to Strengthen Budget Management, Working Paper No. 09/243 (November 1, 2009)
 29. Countering the Cycle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Working Paper No. 09/249 (November 1, 2009)

30. Fiscal Stimulus to the Rescue? Short-Run Benefits and Potential Long-Run Costs of Fiscal Deficits, Working Paper No. 09/255 (November 1, 2009)
31. How Does Public External Debt Affect Corporate Borrowing Costs In Emerging Markets?, Working Paper No. 09/266 (December 1, 2009)
32. Cyclical Patterns of Government Expenditures in Sub-Saharan Africa: Facts and Factors, Working Paper No. 09/274 (December 1, 2009)
33. Jointly Optimal Monetary and Fiscal Policy Rules under Borrowing Constraints, Working Paper No. 09/286 (December 1, 2009)

□ OECD (2009년 1월 이후)

1. Tax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Taxation, Volume 2010, No. 1 (Jan 2010)
2. Fiscal Convergence, Business Cycle Volatility and Growth, WP No. 674 (Feb 2009)
3. Reforming the Tax System in Korea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Cope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WP No. 671 (Feb 2009)
4. Financial Crises: Past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WP No. 668 (Feb 2009)
5. Long-Run GDP Growth Framework and Scenarios for the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663 (Feb 2009)
6. Barry Anderson, The Changing Role of Parliament in the Budget Proces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1, p. 37-48 (Apr 2009)
7.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Relevance of Budget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1, p. 49-74 (Apr 2009)
8. Accrual Budgeting and Fiscal Polic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1, p. 75-104 (Apr 2009)
9. Building Transparent Tax Compliance by Banks,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2 (Jul 2009)
10.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Taxation-Disaggregate Data, WP No. 715 (Jul 2009)
11.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Taxation-Aggregate Data, WP No. 714 (Jul 2009)
12.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Taxation-Theory, WP No. 713 (Jul 2009)

13. Taxes or Grants: What Revenue Source for Sub-Central Governments?, WP No. 706 (Jul 2009)
14. Tax Co-operation 2009: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2009 Assessment by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4 (Aug 2009)
15.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09,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3 (Aug 2009)
16. Engaging with High Net Worth Individuals on Tax Compliance,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6 (Sep 2009)
17. Money Laundering Awareness Handbook for Tax Examiners and Tax Auditors,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8 (Oct 2009)
18. Taxation of SMEs: Key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Tax Policy Studies, Volume 2009, No. 5 (Oct 2009)
19. Beyond the Crisis: Medium-Term Challenges Relating to Potential Output, Unemployment and Fiscal Positions,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09, No. 1, pp. 211-241
20. Budgeting for fiscal Space,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 7-24. (Dec 2009)
21. Budgeting for Entitlement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 25-38 (Dec 2009)
22. The Challenge of Decremental Budget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39-48 (Dec 2009)
23. Budget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Results from the 2008 Open Budget Surve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 81-98 (Dec 2009)
24. Fixing Fair Value Account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 99-106 (Dec 2009)
25. Dynamic Scor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09, Issue 2, p. 107-132 (Dec 2009)

26. Improving Public Spending Efficienc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Volume 2009, No. 1, pp. 81-110
27. Dating Rules for Turning Points of Growth Cycles in Korea, OECD Journal of Business Cycle Measurement and Analysis, Volume 2009/1, pp. 71-82
28. OECD Bribery Awareness Handbook for Tax Examiners 2009, OECD Taxation, Volume 2009, No. 9, pp. 1-42 (Dec 2009)

□ World Bank (2009년 1월 이후)

1. 2008 annual report: helping to eliminate poverty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Jan 2009)
2. Paying Taxes 2009: the global picture, WB Brief No. 47087 (Jan 2009)
3. Tax stimulus as crisis response, WB Brief No. 50321 (Jan 2009)
4. Linking business tax reform with governance: how to measure success, WB Brief, No. 48314 (Feb 2009)
5. Small business taxation: reform to encourage formality and firm growth, WB Brief, No. 48313 (Feb 2009)
6. On the marriage between public spending an growth: what else do we know?, Wb Brief (Mar 2009)
7. What drives private sector exit from infrastructure?: Economic crises and other factors in the cancellation of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WB Brief, No. 47884 (Mar 2009)
8. Achieving WOT compliance for special economic zones in developing countries, WB Brife, No. 48379 (Apr 2009)
9. Implication of WTO disciplines for special economic zon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loicy Research Working pager (Apr, 2009)
10. Introducing the value-added tax: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 WB Brief, No. 48315 (Apr 2009)
11. Tackling corruption through: tax administration reform, WB Brief, No. 48312 (Apr

2009)

12. Local taxes, regulation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finding the right balance, WB Brief, No. 48316 (Apr 2009)
13. An energy subsidy clinic: hot to design and improve access subsidies, No. 52165 WB Brief (Jun 2009)
14. Taxing business, WB Brief, No. 51628 (Jun 2009)
15. Taxing consumption, WB Brief, No. 51626 (Jun 2009)
16. The personal income tax, WB Brief, No. 51627 (Jun 2009)
17. Managing East Asia's macroeconomic volatility, WB Policy Research WPS4988, (Jul 2009)
18.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racking resources for better results, WB Brief, No. 51969 (Oct 2009)

□ ADB

1.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Incentives, and Pro-Poor Outcomes: Evidence from Viet Nam, ADB WP No. 168 (Jul 2009)
2. Macroeconomic Uncertainties, Oil Subsidies,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Asia, ADB WP No. 150 (Mar 2009)

□ EU (2009년 1월 이후)

1. Fiscal policy with credit constrained households,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357 (Jan. 2009)
2. Economic Forecast Spring 2009 (Mar. 2009)
3. The quality of public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Proceedings to the annual Workshop on public finances(28 November 2008), European Economy. Occasional Papers No. 45 (Mar. 2009)
4. The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2008-2060), European Economy 2 (Apr. 2009)

5. Monitoring revenue trends and tax reforms in Member States - Joint EC-EPC 2008 Report, European Economy 4 (Apr. 2009)
6. Setting targets for government budgets in the pursuit of intergenerational equity,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358 (Apr. 2009)
7. Public Finances in EMU 2009 (Jun. 2009)
8. Economic crisis in Europe: cause, consequences and responses, European Economy 7 (Sep. 2009)
9. A model-based analysis of the impact of Cohesion Policy expenditure 2000-06: simulations with the QUEST III endogenous R&D model,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387 (Oct. 2009)
10.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09 (Nov. 2009)
11. Determinants of Intra-euro area government bond spread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388 (Nov. 2009)
12. Study 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390 (Nov. 2009)

□ ECB (2009년 1월 이후)

1. Fiscal policy, housing and stock pric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990 (Jan. 2009)
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991 (Jan. 2009)
3. Fiscal sustainabilit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uro area,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994 (Jan. 2009)
4. The role of fiscal transfers for regional economic convergence in Europe,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29 (Mar. 2009)
5. Fiscal competition over taxes and public inputs-theory and evidence,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33 (Mar. 2009)
6. The determinants of public deficit volatilit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 No. 1042 (Apr. 2009)
7. Fiscal behaviour in the European Union: rule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indebtednes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54 (May. 2009)
 8.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on budget balances and implications for fiscal polic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55 (May. 2009)
 9.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s consumption-expenditure budget shar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61. (Jun. 2009)
 10. New Keynesian versus old Keynesian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90 (Sep. 2009)
 11. Determinants of government bond spreads in new EU countri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93 (Sep. 2009)
 12. Monetary and fiscal policy aspects of indirect tax changes in a monetary union,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097 (Oct. 2009)
 13.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over the Cycle: New Evidence based on the ESCB Disaggregated Approach,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118 (Nov. 2009)
 14. Explaining government revenue windfalls and shortfalls: an analysis for selected EU countri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114 (Nov. 2009)
 15. Fiscal policy shocks in the euro area and the US: an empirical assessment,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133 (Dec. 2009)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연구』 제2권 제1호(2009년 2월)

1.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별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 배준호
2. 10분위 기준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불평등 시계열 분석과 개선효과
/김준영, 강성호, 이광호
3. SOC 수요함수의 추정/ 박환재
4.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박완규
5. 시군 지방소득세 도입의 재정효과 분석/ 이순배
6.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Neutrality of Profit taxes/ 채수찬
7.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최광

『재정학연구』 제2권 제2호(2009년 6월)

1. 우리나라 가구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소득세를 고려한 조건부 로짓모형
(conditional logit model)/ 김현숙
2. 목적세의 도입과 폐지 :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이해/ 박상원
3. 민영화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효과 분석/ 민희철
4.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 준자연적 실험으로 부터의 증거
/우석진, 전병힐
5.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주만수

『재정학연구』 제2권 제3호(2009년 9월)

1. 장기요양제도의 재정부담귀착/ 전영준
2.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류덕현, 우석진
3. 형제·자매 자료를 이용한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김홍균, 조정현
4. 고령화와 자산수요변화/ 강석훈

5. 국민연금 수급가능급여가 수급이전기의 성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선주

『재정학연구』 제2권 제4호(2009년 11월)

1.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 이주석, 유승훈, 임상오
2. 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손원익
3. 고령자 세대의 소득분포 및 소득이동/ 석상훈
4. 공공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 반응의 식별과 보정 / 엄영숙, 홍종호
5. 의료서비스특성을 감안한 고령자가구의 의료비지출 분석/ 윤형호, 임병인
6. 외환시장 개입의 재정비용/ 전주성

정책세미나

1.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재정확대와 건전재정의 조화(2009.01.22)
경제위기 속 재정 및 조세정책의 과제/ 현진권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과제/ 옥동석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추경예산의 편성방향(2009.03.27)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의 적정규모와 편성방향/ 박종규
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과 개혁과제(2009.04.1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이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 박경서
경제위기 진단과 재정, 금융 정책조합/ 강석훈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09.02.12)

1.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의 편익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상겸
2.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우석진, 전병힐
3. 국민연금 수급가능급여가 수급이전기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선주

4.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변화와 공적연금의 역할/ 강성호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2009.03.27)

1.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최광
2. 정치구조와 재정건전성/ 이인실, 박승준
3.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재정측면에서 고찰/ 최준욱
4.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김승래
5. 과세단위 유형과 세부담/ 전승훈, 김동준
6. 거주지 효과를 고려한 상위대학 진학률 요인분석/ 윤형호, 강민정
7.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추정/ 최성은
8. 부의 대물림?: 가계소득과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 윤형호
9. 지역정부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 상관관계-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이충렬, 왕지훈
10.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자료를 이용한 주택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김원년, 양현석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2009.10.23)

1. 비영리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주
2.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 주만수
3. 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 자치구의 경우에 대한 적용/ 최병호,
정종필, 이근재
4.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건국 60년의 평가와 과제/ 옥동석
5. The Effect of Energy Price Upsurge in 2008 on Energy Expenditure Ratio of Korean
Households/ 윤형호, 임병인
6.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김태일
7. The Exante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이철인
8.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강철승

9.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국내금융시장의 변화추세와 정책방안/ 김경아
10. 고령화 및 공적연금이 사적저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강성호, 홍성우
11. 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비용 추계(1970-2006)/ 표학길, 김우철, 전은경
12. 재정지출과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성순
13. 정부부문과 경제성장/ 김병우
14. 분권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심혜정
15.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 격차: 국민연금패널을 활용한 분석/ 석상훈
16.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승훈, 신영임
17. MARKAL 모형을 통한 철강산업의 감축잠재량 분석/ 안윤기, 진운정, 허재용, 이성희
18.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성태, 김명규
1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황남희, 정주연
20.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최병호, 황혜영
21. 재정운영성과와 지방선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 김민경
22.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백웅기
2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Debt Management/ Takero Doi
24. An Empirical Test of Migration and Fiscal Externality:The Swedish Case/ Tomoya Ida
25. The Benefit Principal of Taxation and Tax Payers' Political Support/ Sangwon Park
26. 지방정부 사업예산의 분절화와 영향요인분석/ 오영민
27. 경제범죄에 대한 실증분석/ 박기백, 박훈
28.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정지은
29. Bribery vs. Extortion: allowing the lesser of two evils/ 윤성호
30. Bargaining Power within the Family in South Korea/ 송헌재
31. The Virtues and Vices of School District Consolidation:Evidence from U.S. Cities, 1880-1912/ 고선
32. Optimal Public Investment and Taxation for Green Growth/ 김승래

2009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2009.12.5)

1.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1호(2009년)

1. 본인부담경감이 암 환자의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영향/이용재
2. 기대수익률의 추정에 의한 최적자산배분에 관한 연구-평균-분산 모형과 평균-VAR 모형을 중심으로-/ 황승규, 임형준, 유시용
3.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병근, 하종원
4.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증/ 박승준, 권오성
5. 균형발전정책의 차등적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이순배
6. 유산증여동기와 재정적자의 장기적 결과/ 윤영득
7. 경쟁 개념과 한국의 공정거래법/ 김영용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2호(2009년)

1. 주택분 재산세 부담 불형평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유태현, 한재명
2. 공공임대주택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 양현석, 김원년
3. 재정지출의 크기 및 구성에 대한 천연자본의 영향/ 황진영, 임웅순
4. 재정연방주의론과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소고/ 우명동
5.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택규모선택에 대한 연구/ 조무상, 정균오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1호(2009년 4월)

1. 지방정부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적용/ 김중구
2. 보통교부세의 유효조정비율과 이전재원의 재정형평성 효과/ 주만수

3.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
4. 복지서비스 공급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소고: 분권교부세가 복지서비스공급의 차별성에 미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우명동
5. 주민세 소득할의 차등적 비례세화의 방향과 과제/ 이재은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2호(2009년 8월)

1. 자치단체 사이의 경제적 연관성 분석을 통한 광역적 세출 운용의 가능성 탐구: 전남과 타 시·도 사이의 분석을 중심으로/ 오병기
2.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유태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광민
4. 서울특별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 나재암·정윤수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7권 제2호(2009년)

연방경제의 재정정책,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박현

『경제학연구』 제57권 제3호(2009년)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주만수

『경제학연구』 제57권 제4호(2009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박기백

□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 (<http://www.kif.re.kr/>)

『한국경제의 분석』 15권 2호(2009)

우리나라 국고금 조달운용체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국고자금관리 도입 방안 / 姜京勳,
李竣瑞

『한국경제의 분석』 15권 1호(2009)

실업보험급여의 적정 구조에 대한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全瑛俊

다. 국내 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연구보고서

1.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성명재, 강신욱, 이철인)
2.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김정훈, 김현아)
3. 무역자유화(FTA) 확대에 따른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김종면, 김승래,
손원익, 송호신, 이명헌)
4.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 외)
5.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박노욱 외)
6.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 김종면, 전병철, 우석진)
7.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8.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9.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김지영, 박상원)

월간 『재정포럼』

1.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1월호, 김현아)

2.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월호, 송호신)
3.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3월호, 김진)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7월호, 박노욱)
5.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서울시와 세계의 대도시 (7월호, 김현아)
6.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8월호, 최준욱)
7. 확률적인 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전망 (9월호, 송호신)
8.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삭감 분석 (12월호, 박상원)

재정분석센터 보고서

1. 주요국 예산안 2009 (2009년 2월, 정책분석 09-02)
2.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2009년 6월, 정책분석 09-03)
3.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비교 및 분석 (2009년 6월, 정책분석 09-04)
4. OECD국가들의 예산제도 비교 (2009년 9월, 정책분석 09-05)

기타 보고서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2009년 2월, 전병목 외)
2. 「국가발전 전략에서의 재정운용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회의 (2009.4.6~10)
3. 재정용자제도 개선방안 (2009년 6월, 박상원, 박정수, 안중범, 이원희)
4. 「글로벌 위기속의 재정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2009.7.1~2)
5.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박명호, 전병힐), 성공적인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2009. 7. 10)
6. 경제위기와 지방공공지출에 관한 OECD Experts Meeting (2009.11.19~20)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02.26

2. [예산현안분석 제25호] 2009년 예산부수법 분석/ 2009.03.03
3. [전문가간담회 결과보고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2009.03.20
4. [예산현안분석 제26호]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2009.04.10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04.13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04.17
7.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04.21
8. 2008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2009.05.04
9. 대한민국 재정 2009/ 2009.06.05
10. [예산현안분석 제27호]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
- 제18대 국회 통과 법률을 중심으로 - / 2009.06.08
11.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2009.06.10
12. 통계로 보는 재정 2009/ 2009.06.15
13.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09.07.06
14.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편: 시정·제도개선 제안]/ 2009.07.06
15.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중점분석]/ 2009.07.06
16.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기획재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국토해양]/
2009.07.06
17.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 2009.07.06
18.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법제사법·정무·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
2009.07.06
19. [예산현안분석 제28호]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 2009.09.03
20.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2009.09.14
21.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4호]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09.22
22.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5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
관부처 의견」 검토/ 2009.09.23
23. [예산현안분석 제29호] 2008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2009.09.24

24.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6호]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09.10.05
25. [예산현안분석 제30호]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 2009.10.13
26.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7호]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2009.10.16
27.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2009.10.20
28.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09.11.20
2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09.11.02
30.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 (총량분석)/ 2009.11.02
31.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 (중점분석)/ 2009.11.02
32.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기획재정 · 농림수산식품 · 지식경제 · 국토해양)/ 2009.11.02
33.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교육과학기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보건복지가족 · 환경노동 · 여성)/ 2009.11.02
34. 2010년도 예산안 분석 V (법제사법 · 정부 · 외교통상통일 · 국방 · 행정안전)/ 2009.11.02
35.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 · 도별 재정영향 분석/ 2009.12.03
3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 통합안을 중심으로/ 2009.12.15
37.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2009.12.01

기타보고서

1.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8회]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주요국 정책대응과 시사점/ 2009.01.13
2.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11회] 빈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2009.01.21
3.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13회] 경기침체국면 특징 비교와 시사점/ 2009.01.30
4.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14회]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 공급 확대방안/ 2009.02.06

5. [포] 2009년 주요 경제·재정지표/ 2009.02.09
6.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18호]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 2009.03.02
7. 2008 연차보고서/ 2009.03.06
8.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23호] 경기침체기의 부동산 대책 및 과제/ 2009.03.13
9. [포] 2009년 주요 고용지표 및 사회예산/ 2009.04.01
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1호]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분석/ 2009.09.14
11.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연구 제2호]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09.09.21
12.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연구 제3호]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2009.10.01
13.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제4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2009.10.15
14. 2009 공공기관 편람 II - 공공기관별 현황-/ 2009.10.14
15.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제5호]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2009.10.30
16.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제6호]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9.12.03
1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조성 방안/ 2009.12.10
18.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2009.12.11
19.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2009.12.14

포럼/간담회

1. 연쇄 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추계방법/ 2009.01.13
2. 2009년 우리나라 SOC 투자의 내용과 거시경제적 영향(효과)/ 2009.01.16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출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9.01.16
4.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09.03.17

5. 국채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향/ 2009.03.24
6.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의 녹색뉴딜 정책과제/ 2009.03.26
7. 2009년 경제전망/ 2009.08.20
8. 재정지출의 합리적 경감 방안/ 2009.11.19
9. 재정전망모형 구축/ 2009.11.26
10. 선행성지표 활용기법의 평가/ 2009.11.06
11. 사회복지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2009.12.01

□ KDI (www.kdi.re.kr)

보고서

1. 연구보고서: 금융위기 1년 평가와 위기 이후 과제 - 비상경제정부 1년 성과를 중심으로/ 2009.12.30
2. KDI 경제전망: 2부 3장 정책방향, 제 26권 제 2호, KDI/ 2009.11.23
3.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KDI 포커스, 통권 제 1호/ 2009.07.21
4. KDI 경제전망: 2부 3장 정책방향, 제 26권 제 1호, KDI/ 2009.05.13
5. 2008 Annual Report: 4. Fiscal Efficacy, KDI/ 2009.02.24
6. KDI 경제동향: 10. 재정, KDI/ 2009.01.07~2010.01.08

세미나

1. [제 6회 산업기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도 (KDI)/ 2009.12.03, KDI
2. [제 5회 산업기업포럼]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상의 쟁점과 정부의 정책과제(KDI)/ 2009.11.16
3.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기획재정부, KDI)/ 2009.06.19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정보 제2009-5호: 일본의 2009년도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해외조사

- 실 아주경제팀(2009. 1. 9.)
2. 해외경제정보 제2009-14호: 선진국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2009. 2. 18.)
 3. 해외경제정보 제2009-29호: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2009. 4. 14.)
 4. 한은조사연구 2009-9: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2009. 8.)
 5. 금융경제연구 제400호: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 금융경제연구원(2009. 9.)
 6. 해외경제정보 제2009-74호: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2009. 12. 23)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1.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09.02.11)
2.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도건우 외, CEO 인포메이션(2009.02.11)
3.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긴급제언/ 김용기 외, CEO 인포메이션(2009.02.18)
4.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강성원, SERI 경제포커스(2009.03.03)
5.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강성원 외, CEO 인포메이션(2009.04.01)
6. 2009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09.06.03)
7. 6대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황인성 외, CEO 인포메이션(2009.07.08)
8. 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박현수, 김화년, 연구보고서 (2009.07.13)
9.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09.09.16)
10. 2010년 예산안 분석/ 강성원, SERI 경제포커스(2009.10.13)
11.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09.11.26)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1. LGERI 리포트 : 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실, 금융연구실

(2009.06.24)

2. ChinaInsight 25호 :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향후 정책 전망 外/ 경제연구실

(2009.09.16)

3. LGERI 리포트 :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실, 금융연구실(2009.09.23)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 정책연구: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2009.01.09)

2. 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전략(2009.01.19)

3. 연구보고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법인세를 중심으로(2009.04.08)

4.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과제(2009.06.30)

5. 연구보고서: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2009.07.17)

6. 연구보고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2009.11.10)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1.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무엇이 왜 문제인가?/ 최광(2009.04.24)

2. 재정준칙을 넘어 재정정책위원회 설립까지/ 이성규(2009.05.21)

3.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조동근(2009.08.07)

4.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호(2009.08.21)

5.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 주만수(2009.11.13)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제633회]우리 경제의 상황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 윤증현

2. [제643회]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현오석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II. 미국(FY2010: 2009.10~2010.9)

III. 일본(FY2009: 2009.4~2010.3)

IV. 영국(FY2009: 2009.4~2010.3)

V. 프랑스(FY2009: 2009~2009.12)

VI. 독일(FY2009: 2009~2009.10)

VII. 캐나다(FY2009-10: 2009.4~2010.3)

VIII. 호주(FY2009-10: 2009.7~2010.6)

I

주요국 동향*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조사대상 7개국 모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
 - 수요 진작을 위해 가계 및 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하였는데 특히 경기침체의 타격이 큰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
 - 영국을 제외한 6개국은 가계의 소득세를 인하해 주었으며, 영국은 부가가치세 인하 및 주택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해 가계에 세제지원
 - 독일을 제외한 6개국은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은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인하 및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취약계층(실업자, 고령자, 근로자,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펼침
 - 특히 일본에서는 서민생활 보호 및 고용창출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긴급고용 대책을 마련
 -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혜택 확대(실업연금 및 보험, 교육지원 등)
 - 일본을 제외한 6개국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유동성 확대, 지급보증, 재원조달 등)
- 특히 영국에서는 금융산업 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고소득 금융업계 종사자의 보너스에 대한 50% 원천세 부과)
- 이러한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함
 - 파급효과가 크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고용 증진
 - 기업투자자와 혁신 및 교육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음
 - 친환경 자동차,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주택,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동시에 경기악화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세출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 7개국 모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위한 세원 확보
 - 영국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미국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 호주는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 증대를 꾀함
 -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에서는 세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탈루를 통한 세원 낭비 감소
 - 세출 감축을 위한 노력
 -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세출 감소 효과 기대
 - 미국은 의료보험 개혁, 호주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세출 감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
- 세수 증대 및 세출 감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의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은 2009년 재정적자 및 총부채 규모를 크게 증가시킴

-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 대비 12.9%, 12.6%에 달하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8.3%, 7.4%로 중간 규모의 적자, 호주 4.5%, 캐나다와 독일이 3.7%로 비교적 재정부담이 낮은편
 - 총부채는 2009년 현재 일본이 GDP 대비 189.3%로 가장 높고, 프랑스 84.5%, 캐나다 82.8%, 미국 81.8%, 독일 77.4% 수준이고 영국이 71.0%, 호주가 15.9%로 가장 낮음 (OECD Economic Outlook 통계)
- 그러나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당분간(적어도 2010년까지는)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
- 미국은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독일은 고용 및 경기안정 협약(Pact for Employment and Stability)을 제정하여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
 - 내수진작을 위해 기반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실업자 보호 정책의 확대 실시, 고용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유럽 3개국(영국, 독일, 프랑스)은 건강보험, 실업보조, 자녀수당 등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한편 고용증진, 기업의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2010년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
 - 영국과 독일은 취약계층 지원 및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프랑스는 건설과 자동차 산업 등 경제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에 대해 중점적 지원
 - 일본은 민주당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확대
 - 캐나다는 2009~2010년에 걸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출이 경기부양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데 반해 호주는 같은 기간에 걸쳐 교육·혁신에의 투자를 위한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경기회복이 확실시되는 2011년 혹은 그 이후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특히 조사대상 7개국 중 영국과 독일은 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를 보이고, 미국, 프랑스, 호주는 지출통제 방

식을 이용하였으며, 일본은 매우 소극적인 노력을, 캐나다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중기재정 정책목표는 수정하지 않아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안정화 의지를 보임
 - 장기 재정목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필요시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울 수 있는 유연한 재정운영 요구
 -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정구조 전체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책임제 강화
- 독일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한 재정적자 및 부채 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 제시
 - 2011년부터 GDP 대비 부채비율을 매년 0.25%씩 감소시켜 2013년까지 EU의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합의된 목표치(재정수지 GDP 대비 3%, 부채비율 GDP 대비 60%)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 수립
- 미국은 해외세금 탈루방지 법안을 통과시켜 세원 확보를 꾀하고 PAYGO 원칙을 부활시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함
 - 탈세 방지, 세제혜택 종료,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통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2.9%로 축소할 계획
- 프랑스는 2009~2012년 프로그램 예산법에 따라 엄격한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 지속
 - 균형재정수지를 목표로 연간 정부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대비 0.1%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
 - 그러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재정건전화의 의지를 약화시킴
- 호주는 FY2011-12부터는 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FY2015-16에는 재정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원론적인 계획을 제시
 - 세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채무 안정 및 기초재정

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함

-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특별하게 재정건전화 정책을 제시하지 않음
 - 캐나다의 재정적자(GDP 대비 3.7%) 및 부채수준(GDP 대비 34%)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

II

미국 (FY2010: 2009. 10~2010. 9)

1. 세제개편

※ 이후 제시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규모는 10년(FY2010~19) 동안의 비용

가. 감세정책

□ (감세정책) 개인과 기업에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세금감면 제안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 연장

- '10.12월 만료되는 2001, 20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 연장 적용할 것을 제안

*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종료

- 동 방안은 다른 조세조항에 있는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구간, 자녀세액공제, 매리지 패널티(marriage penalty)* 구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10년간 약 2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누진과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현상

○ 유산세(estate tax)를 2009년 수준으로 동결(10년간 1,711억달러 규모)

- '01년 감세법으로 유산세는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이 점차 감소되어 '10년 폐지되거나, 일몰규정 만료('10.12월) 후 '11년 고율로 전환
- 이번 예산안에서는 유산세를 '09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

〈표 2-11-1〉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면세한도	1	1	1.5	1.5	2	2	2	3.5	- ¹⁾	1
최고세율	50	49	48	47	46	45	45	45	0	55

주: 1) 유산세 폐지

-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에서 제시된 조세조항 연장
 -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 연장(독신: 400달러, 부부: 800달러)
 - * 10년간 5,350억달러의 세수감소 효과 전망
 - * 동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시행으로 얻어지는 경매수입으로 상쇄할 계획
 - EITC제도 확대 시행(214억달러) 및 기존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공(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485억달러)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정책 제안
 -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58억달러),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R&E credit) 연장(745억달러) 추진
 - 보너스 감가상각 같은 정기적으로 만료되는 조세조항 연장(172억달러)

나. 세수증대 방안

- (세수증대 방안)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행위 방지와 세제혜택 종료를 제안
 - 향후 10년(FY2010~19) 동안 총 9,667억달러의 세수증대 전망

〈표 2-II-2〉 FY2010 예산안에서 제시된 세수증대 방안

(단위: 억달러)

방 안	내 용	세수증대 규모 ¹⁾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s) 부활	1995년 만료된 수퍼펀드는 오염이 심각한 산업부지의 정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및 제조업체에 부과	167.6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	*services partnership interest*로 지정된 파트너십 지분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234.8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원칙의 체계적 분류	세법상 경제적 실질 원칙을 명확히 정리	47.3
LIFO(후입선출) 회계기법 폐지	LIFO기법을 FIFO기법으로 대체 ²⁾	610.5
국제조세체계 개혁	해외에서 활동하는 美 기업들에 대한 세금특혜 중단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지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분류 규정 개혁,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유입 시킬 때까지 각종 경비의 세액공제 혜택 유보 등 ³⁾	2,099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국내외 원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314.9
임대자산 비용지급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화	배관공, 회계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6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임대소득자는 지급조서를 IRS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부	30.4
Advanced EITC 폐지	EITC제도를 확대 개편 하면서 Advanced EITC제도 폐지	8.72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연소득 20만달러(독신)/25만달러(부부합산) 이상 소득자에 대한 일몰 종료 등	6,153.8

주: 1) 향후 10년(FY2010~19)간의 규모

2) LIFO(last-in, first-out), FIFO(first-in, first-out)

3)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에 대해 무기한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수익을 미국 내로 가져올 경우에만 과세. 반면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 등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서류상으로 경비지출 내역을 역외로 돌려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

자료: Analytic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0, OMB, '09.5월

다. 기후변화 및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준비기금 마련

- (준비기금) FY2010 예산안에서는 기후변화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두 개의 준비기금을 제안하여 향후 10년간 9,495억달러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전망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향후 10년간 6,240억달러 규모로 전망
 - 동 수익금은 청정에너지 분야 R&D, 기후과학, 근로연계 세액공제로 인한 세입감 소분 상쇄 등에 사용할 계획
 - 이후 잉여분은 취약계층 및 에너지 비용 상승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기업에 지원
 - (의료보험 개혁) 세제정책을 통한 의료보험 개혁 준비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3,256억 달러 마련
 -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한해 공제비용의 28%로 항목별 공제한도 설정(10년간 2,667억달러)
 - 생명보험 계약, 기업에 대한 지출, 정부기관에 대한 지출에 관한 정보보고 확대 등 세금미수 감소 노력 제고(10년간 107억달러)
 -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세무회계 기법, 유산세 및 증여세 과세 분야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지(10년간 475억달러)
 - 종이업체의 대체연료 혼합 공제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제도 수정(10년간 7억 200만달러)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0 연방정부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작성

* FY2010 예산안은 2월에 개략적인 세계개편안, 법정지출 계획, 기관별 지출총액 등을 제시하고, 5월 세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이후 내용은 5월 예산안 기준)

〈표 2-II-3〉 FY2010 예산안 재정수지 전망('09.5월)

(단위: 십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입	2,157	2,333	2,685	3,075	3,305	3,480	3,662	3,841	4,021	4,218	4,429
재정지출	3,998	3,591	3,615	3,633	3,817	4,016	4,190	4,487	4,696	4,905	5,207
재정수지	1,841	1,258	929	557	512	536	528	645	675	688	779
GDP대비 (%)	12.9	8.5	6.0	3.4	2.9	2.9	2.7	3.2	3.2	3.1	3.4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Updated Summary Tables), OMB, '09.5월

□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인프라투자, 실업급여 확대, 중산층 세금감면 등을 포함하는 경기부양법(ARRA)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자금을 의회에 요청

○ 경기회복을 위해 신용경색 해소, 주택시장 안정, 수요진작에 중점

- (신용경색 해소) 최고 7,000억달러까지 자본을 공급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TARP) 시행
- (주택시장 안정) 연방주택청(FHA)의 총대출 보증한도 상향조정 등 제안
- (수요진작) 경기부양법(ARRA)을 반영하여 중산층 세금감면, 실업급여 확대, 인프라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

□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 미래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의료보험 개혁 및 교육, 에너지 분야에 투자

- (의료보험 개혁)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의료보험 준비기금 (Health Reform Reserve Fund)’ 도입
 - (교육) 2010년에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학금의 최대 수혜액을 5,550달러로 상향조정
 - (에너지) 해외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청정·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및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 도입
- **(재정건전성 확보)** 경기부양책 등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FY2013까지 대폭 축소
- FY2009의 재정적자 1조 8,410억달러(GDP의 12.9%)를 FY2013까지 5,120억달러(GDP의 2.9%)로 축소하는 계획을 제시
 - (지출측면) 비효율적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종료 또는 삭감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사업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 (수입측면) 세무상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지, 연 25만달러(부부)/20만달러(독신)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10.12월 종료되는 부시행정부의 감세법 만료 등

나. 추경

- FY2009 추경예산은 경기부양법(ARRA)*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신중플루에 대한 추경’을 의회에서 의결
- * 경기부양책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신중플루에 대한 추경에 대해 논의
- '09.6월 미 의회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신중플루에 대한 1,059억달러의 추경예산을 의결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방부 및 정보활동에 799억달러
 -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 대외정책 및 안정화 활동에 104억달러
 -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라크 지원활동, 식량원조/난민/자연재해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 평화유지 활동 등에 지원

- 신종플루 대응에 77억달러, 국내 및 국제사회의 질병관리 노력 지원
 - 백신의 개발/구매/투약, 항바이러스 약품 및 마스크,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구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보충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그 외 핵확산금지, 법무부 등에 79억달러 배정

다. 결산

- '09.10월 美 재무부와 OMB는 FY2009(2008.10~2009.9) 결산을 발표
 - FY2009 연방정부 적자규모는 1조 4,17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1,630억달러 낮은 수준임
 - 전망보다 적자가 감소한 원인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낮았고, 세입이 전망보다 증가한 것에 기인
 - FY2009 재정적자는 GDP의 10%가 될 것으로 전망

〈표 2-II-4〉 2009회계연도 결산

(단위: 십억달러)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2008회계연도	2,524	2,978	-455
2009회계연도 전망			
2009 Budget('09. 5월)	2,157	3,998	-1,841
2009 Mid-Session Review('09. 8월)	2,074	3,653	-1,580
2009회계연도 결산	2,105	3,522	-1,417

- 재정수입은 FY2008에 GDP 대비 17.5%에서 14.8%로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및 기업수익 감소,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세제혜택 등에 기인
- FY2009 재정지출은 FY2008의 GDP 대비 20.6%에서 24.8%로 증가
 - TARP, 경기부양정책, 자동안정화장치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 증가
- 적자보전 채무는 FY2009 동안 1조 4,170억달러가 증가하여, 6조 7,110억달러(GDP의 47.2%) 기록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 '09.2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법(ARRA) 제정

○ 총 7,872억달러 규모의 동 법안은 근로연계 세액공제, 인프라투자, 취약계층 보호(푸드스탬프*, 실업급여 확대 등) 등에 지원**

– 재정지출 4,990억달러, 세액공제 2,880억달러로 구성

* 푸드스탬프(food stamp)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보조 프로그램

** 경기부양법의 주요 지원분야 : ① 청정·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② 과학기술 지원 ③ 도로·교량·대중교통·수로시설 개선 ④ 교육분야 지원 ⑤ 세액공제 ⑥ 보건·의료비용의 합리화 ⑦ 취약계층 지원 ⑧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및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표 2-II-5〉 경기부양법(ARRA) 주요 내용

(단위: 십억달러)

분야	세부분야	내 용	금액
인프라 투자	사회기반시설 개선	• 광대역(broadband) 보급	7.2
		• 재향군인 병원 건설 및 의료시설 개선 등	1.2
		• 국방부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4.2
인프라 투자	교통	•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27.5
		• 대중교통 시설 건설, 보수·개선, 버스와 같은 시설의 구매지원 등	8.4
		• 고속철도 등	8.0
	환경정화/수자원 관리	• 깨끗한 물, 치수, 前 무기생산지 및 에너지 연구 현장의 환경정화	18.8
교육	교육	•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인상	15.6
		• 특수교육	12.2
	직업훈련	• 직업훈련	3.95
과학기술		• NASA-기후변화 연구인력 투입, 심화 탐사 활동 등	1.0
		• 국립과학재단(NSF)-기초과학 및 공학분야 고용기회 확대, 연구시설 구축·개선, 과학·수학·공학분야 교육 향상 등	3.0
		• 에너지부(DOE)-물리학 기초연구(고에너지 물리학, 핵물리학, 핵융합 에너지), 연구실 및 실험시설 개선 등	2.0
보건·의료		• 의료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19.0
		• 생의학 분야 연구(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줄기세포) 지원	10.0
에너지		• 연방건물 보수(그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증진 목적)	4.5
		• 화석 에너지 연구·개발	3.4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관련 활동	11.0
		•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연구	2.5
취약계층지원		• 푸드스탬프	19.9
		•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2.0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및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 주/지방 법집행 지원	4.0
		• 소방서 신축, 개조, 개선	0.21
		• 화물철도, 철도(Amtrak), 페리 등 주요 운송시설 보호	0.15
		• 주요 항만시설 보호	0.15
세액공제		• 근로연계 세액공제	116.2
		• AMT	69.8
		• 법인세 감면	6.2

나. 재정건전화 정책

- FY2010 예산안에서는 지출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낭비적 요인을 검토
 - '09.5월 재정건전화를 위해 비효율적 사업, 목표 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121개의 재정사업 종료, 삭감, 기타 예산절감 분야를 선정하여 FY2010에만 약 170억달러 절감 예상
 - 연방정부의 재정건전화는 다년도에 걸쳐 중기적 시계로 시행될 계획

- FY2010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FY2019까지 약 500억달러 ('09.5월 업데이트)에 달하는 예산절감 및 추가세수 창출을 제안
 - (사회보장) 장애보험 및 현금보조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재심사 등을 강화하여 부적합한 급여지급을 차단
 - FY2010년 SSA(사회보장국)에 추가로 4억 8,500만달러를 배정하고 향후 5년간 43억달러를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의료비용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FY2010년 HHS(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에 3억 1,100만달러를 추가 배정하고, 5년 동안 17억달러를 지원
 - (납세 성실성 제고) 기업 및 개인의 미납입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선 행정 강화 및 절차 개선
 - IRS(국세청)에 FY2010년 8억 9,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향후 5년 동안 72억달러를 지원
 - (실업급여) 재고용 서비스, 자격평가, 부당급여 재심사 등 지원
 - FY2010년 주정부 및 노동부에 추가적으로 5,000만달러를 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3억달러 지원

4. 기타 정책이슈

가. 의료보험 개혁

□ '09.12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하원과의 법안 절충작업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 놓은 상황

○ 논란이 되어 온 공공보험(public option)은 상원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음

〈표 2-11-6〉 의료보험 개혁법안 상하원 비교

	하원	상원
법안명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소요비용	향후 10년간 1조 500억달러	향후 10년간 8,710억달러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5.4%의 부가세 부과 *연간 개인소득 50만달러, 부부합산 100만달러 이상 2013년 이후 개인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기업은 보험제공 의무화 - 위반시 개인은 소득의 2.5%, 기업은 임금 지불액의 8% 벌금 부과 의료기구에 대한 2.5%의 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40%의 소비세 부과 메디케어세 0.9%p 인상 -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 대상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 가구의 개인당 최대 750달러, 또는 가계 소득의 2% 지불 * 벌금부과 단계(인당, \$): ('14)95 → ('15)495 → (16년부터)750 실내 태닝(tanning)에 대한 10%의 세금 부과 의료기구, 제약회사 및 수입회사, 의료보험회사에 수수료 부과
보험 보급률	65세 이하 합법적 미국 거주자의 96%	65세 이하 합법적 미국 거주자의 94%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한도 설정 - 연방빈곤선의 133~40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의 1.5~12%까지 보험료 제한 보조금은 연방빈곤선 133~400%까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한도 설정 - 연방빈곤선의 133~40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의 2.8~9.8%까지 보험료 제한 * 연방빈곤선의 100~133%는 소득의 2% 보조금은 연방빈곤선의 100~200%까지 제공
메디케이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빈곤선의 150%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확대
재정수지 기여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2019) 1,380억달러의 적자 감소 효과 전망 (2019~2029) 최대 GDP의 0.25%까지 적자 감소 효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2019) 1,320억달러의 적자 감소 효과 전망 (2019~2029) 최대 GDP의 0.5%까지 적자 감소 효과 전망

자료: 상하원 및 CBO

나. 에너지정책

- '09.6월 하원에서는 미국 청정에너지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 통과
 -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2020년까지 전력생산업체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회사가 공급하는 전력수요의 20%를 충족
 - 2025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900억달러), 탄소포집 및 격리 기술(600억달러), 전기 및 기타 첨단 기술 자동차(200억달러), 기초과학* R&D(200억달러) 등에 투자
 -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 신규 건물 및 전기제품에 에너지 절약 기준 마련
 - 2012년부터 전력생산업체, 정유회사 등 온실가스 다량배출원에 대해 연간 탄소배출량 한도 설정
 -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주요 배출원에서의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경감

다. 조세정책

- '09.10월 미 하원은 해외 세금탈루 방지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10년간 85억달러 상당의 세금탈루 감소 전망
 - 이번에 공개된 외국계좌 세금 준수 법안(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은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기업 등이 미국인 계좌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또한 5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 등은 이를 세금신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외계좌 설립을 도운 이들도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

라. PAYGO 원칙 부활

□ '09.7월 하원은 2002년 만료된 PAYGO 원칙*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BEA(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에서 최초로 도입된 PAYGO 원칙은 법정지출 및 세입에 영향을 주는 신규입법이 예산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

○ 행정부의 제안이 상당부분 포함된 동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24표를 끌어들이 큰 차이로 통과(찬성 265-반대 166)

○ 하원안에 따르면, OMB는 연말에 입법된 법률의 효과를 계산하여 5~10년 시계에서 목표수지와 비교, 목표수지에서 벗어나면 지출의 일률 삭감(sequestration)

○ 재량지출 및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등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지출의 상당수에 대해서는 PAYGO 적용을 면제

○ 세입 측면에서는 AMT의 연간 확정, 유산세를 2009년 수준(면세한도: 350만달러, 최고세율: 45%)으로 연장, 중산층에 대한 2001, 2003년 감세법 연장은 특별 면제

○ 다만,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Kent Conrad의 지지 부족으로 법안의 상원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Ⅲ

일본 (FY2009: 2009. 4~2010. 3)

1. 세제개편

- 경기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한 감세정책과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면적인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2008.12.19)
 - 소비확대를 위한 감세정책 : 2009~11년 신규주택 입주에 따른 자금대출, 에너지 절약 및 장애인 시설 개보수 비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투자자의 배당 및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연장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경감, 비상장기업 경영승계에 따른 상속세액 일부 납부 유예,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 후 사업용 부동산 구입시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 기한 연장
 - 기타 성장력 확충 등을 위한 감세정책 : 성장력 강화, 에너지 절약 또는 신에너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즉시상각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장치,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시 전액 손금 인정, 해외자회사가 송금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경과 : 각료회의 결정(2009.1.23), 국회 의결(2009.3.27)
 - 2009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총 세수감소 규모는 0.4조엔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법인세 수 감소가 75%(0.3조엔)를 차지

- 신정부는 「공정·투명·설득」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세제개정 구조 및 주요 세제개혁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세제개편안 발표(2009.12.25)
 - 과거 여당 및 정부 세제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부 책임하에서 세제개정 논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조사회’를 신설
 - 세제의 기득권을 일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의 정책세제조치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실시

- 조세특별조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조특투명화법(가칭)’ 제정 및 지방세법 정비
-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총 세수감소 규모는 382억엔 정도로 추정(소득세, 조세특별조치 폐지·감액 등 1,550억엔 증가, 소비세 및 법인세 등 1,932억엔 감소)

〈표 2-III-1〉 2009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택 구입 및 개보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대출 세액공제 : 10년간, 장기우량 600만엔, 일반 500만엔 한도 - 장기우량주택의 투자형 감세 : 장기우량주택 신축시 일반주택 대비 추가된 건축비용(최대 1천만엔)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 - 개보수 촉진용 감세 : 에너지절약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보수 공사비의 10%를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 구입시의 비용절감 :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기 자동차: 취득세 및 종량세 3년간 전액 면제, 기타 친환경 자동차 : 연비 등의 성능에 따라 세액의 75% 또는 50% 경감
주식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우대세제 적용기한의 연장 : 개인투자자의 주식 배당 및 순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 10%(원칙20%)의 적용기한 2009년 3월말 → 2011년 12월말 연장 - 소액투자 촉진 : 2012년 이후 연간 100만엔 한도로 최장 5년간 총 500만엔 한도의 ‘특별 비과세 계좌’ 도입 검토
중소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경감세율의 추가인하(2009년 4월 1일부터 2년간) : 법인세율 22%(법정 30%) → 18%로 인하 - 적자조정 환급제도의 범위확대와 조건 완화 : 적자발생 중소기업에 과거 납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는 적자조정, 환급대상 기업에 대기업 자회사도 포함하고 설립 후 5년이내 조건도 폐지 - 비상장 중소기업경영인이 회사주식을 상속시켰을 경우 경영승계 : 상속인의 상속주식(의결권의 2/3까지) 과세액의 80%를 유예 - 사업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동산양도차익의 압축기장 기한연장 : 장기 보유 부동산을 처분 후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압축하여 20% 금액만 기장을 인정하는 시한을 2008년말 → 2011년말 연장
기타 성장력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력 강화나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시 투자 전액 상각 허용 - 태양광발전장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시 전액 손금 인정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을 분사 익금에 불산입 : 해외 수익금의 국내 환류 촉진을 유도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08. 12. 19.

〈표 2-III-2〉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납세환경정비	- 탈세범 징역 상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조세특례조치의 검토 등	- 국가(241개 항목) 및 지역정책세제조치(241개 항목) 중 1/3 항목의 재검토, 이 중 1/2 항목의 폐지 또는 감축
조특투명화법 (가칭) 등	- 조세특별조치 재검토 후 조특투명화법(가칭) 제정 - 지방세 경감 적용 투명화 및 재검토 후 국회보고
개인소득세	- 소득공제시 15세 이하 자녀(38만엔) 및 고교 무료화에 따른 16~18세 부양공제(25만엔) 폐지 - 세제 일관성을 위해 개인주민세도 동일구간내 부양공제 폐지
법인세	- 100% 그룹내 내국법인간 발생한 양도손익 등에 대한 세제정비 - '1인 소유 회사과세 제도' 폐지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 불균형 시정 - 「이중공제」문제는 2011년도 개정에 반영
국제과세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 자회사 합산 세금 검토 및 일정한 재산성 수입을 합산 과세 대상으로 하여 소위 '트리거세율'을 20%이하로 인하 - 해외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정보체계 구축 등
재산세	- 주택취득 등 자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조치에 대하여 소득제한(2천만엔) 신설,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엔에서 2010년 1.5천만엔, 2011년 1천만엔으로 인상
소비세	-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세제의 재검토 실시 - 연료과세 및 자동차증량세 등에 대하여 현행 10년간 잠정세율 폐지, 당분간 현 세율수준 유지 - 자동차증량세의 경우 잠정세율에 의한 추가 세수 국고분의 1/2 규모의 세부담 경감 - 담배 1개피당 3.5엔에서 5엔 정도로 담배세 인상
시민공익세 (기부금 등)	- 인증 NPO법인제도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 소득세 기부금공제 신청액을 현 5천엔에서 2천엔으로 인하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09. 12. 22.

2. 예산 및 결산

가. FY2009 예산

- 일본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서 「단기적 경기대책」, 「중기적 재정재건」, 「중장기적 개혁에 의한 경제성장」의 3단계 경제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Y2009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2009.1.19)
 - 예산규모는 88.5조엔(일반회계 기준)
 - 세부 예산기조는 지속적인 경기대책 추진, 서민생활 보호, 경제수호 및 미래 성장력 강화, 예산배분의 중점화,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 프로그램」 및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 예산 효율화 등에 중점
 - ⇒ 경과: 국회심의 개시(2009.1.28), 예산성립(2009.3.27)

- **(세입내역)**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개정으로 전년 대비 2.5조엔(4.3%) 감소한 55.3조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7.7조엔(14.3%) 감소한 45.9조엔 수준으로 전망
 - 그러나 2009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등 0.4조엔 감소, 휘발류세의 일반회계 편입 0.6조엔 증가를 반영할 경우 전년 대비 0.2조엔 증가한 46.1조엔 수준이 될 전망
 - 기타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5.0조엔(120%) 증가한 9.2조엔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용자 자금계산으로부터의 4.2조엔이 포함된 데 기인
 - 세입부족분 33.3조엔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달

- **(세출내역)**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 강화로 인해 FY2009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5.5조엔(6.6%) 증가한 88.6조엔 수준
 - 일반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51.7조엔 수준으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인상 및 도로특정재원 일반화 등에 의해 전년 예산에 비해 4.4조엔 증가

- 사회보장관련비는 24.8조엔으로 세출내역 중 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대응책 실시로 인해 전년 대비 14% 증가

○ 지방교부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조엔 정도 증가한 16.6조엔 규모

○ 국채비는 전년 대비 805억엔(0.4%) 증가한 20.2조엔 규모

□ (국가채무) FY2009 국채발행액 증가(전년 대비 31.3% 증가한 33.3조엔 규모)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신규 발행을 증가하였기 때문

〈표 2-III-3〉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 십억엔, %)

구 분	추정(A)	전망(B)	비교증감액	증감률
	FY2008	FY2009	(B-A)	(%)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53,554.0	46,103.0	△7,451.0	△13.9
기타 수입	4,159.3	9,151.0	4,991.7	120.0
국채발행	25,348.0	33,294.0	7,946.0	31.3
계	83,061.3	88,548.0	5,486.7	6.6
세 출				
국채비	20,163.2	20,243.7	80.5	0.4
지방교부세부금 등	15,613.6	16,573.3	959.7	6.1
일반세출	47,284.5	51,731.0	4,446.5	9.4
계	83,061.3	88,548.0	5,486.6	6.6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予算の説明」, 2009. 1. 28

나. FY2010 예산안(FY2010: 2010.4~2011.3)

□ 재정제도심의회, 「FY2010 예산안 편성의 기본적 사고」 발표(2009.6.3)

○ 2008년 하반기 이후 일련의 경기대응책에 대한 효과 검증 및 관련예산의 효율적 집행 요구

- FY2010 예산 편성시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채권 의존도가 크게 상승할 전망에 따라 「기본방침 2006」에 입각한 세출개혁을 지속할 방침

-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기 프로그램」 및 「기본방침 2006」에 따른 세출·세입 일체개혁을 지속
- 각료회의, 「FY2010 예산요구에 대한 기본적 방침」양해(2009.7.1)
 - FY2010 예산은 「기본방침 2009」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목표로 함
 - 동시에 「기본방침 2006」에 따라 예산낭비 근절 등 세출개혁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필요한 지원 실시
 - 이에 따라 향후 행정개혁 지속, 세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필요에 따른 재원의 중점 배분,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신규 국채 발행 억제를 추진
- 민주당 신정부 출범 이후 각료회의에서 정책공약(manifesto)에 따른 새로운 「FY2010 예산안 편성 방침」 결정(2009.9.29)
 - FY2010 예산은 연내에 편성하며, 「3당 정권연립 합의서」를 포함한 정책공약(manifesto)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 수립
 - 현행 「FY2010 예산요구에 대한 기본적 방침」(2009.7.1) 폐지
 - 기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 감액 실시
 - 10월 15일까지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예산요구 제출
 - 매니페스토에 따른 새로운 시책을 위해 모든 예산의 재편성, 신규 재원 창출 및 이에 따른 재정규율 준수, 국채시장의 신용 확보
- 재무성, 정책공약(manifesto)에 근거한 FY2010 소관별 예산 요구액 발표(2009.10.16)
 - 「3당 정권연립 합의서」를 포함한 정책공약을 근거로 작성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6.5조엔(7.3%) 증가한 95.0조엔 규모
 - 소관별 예산요구액 중 당초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후생방위성으로 3.7조엔 증가한 28.9조엔 수준이며 전체의 30.4%를 차지
 -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국토교통성으로 0.17조엔 정도 감소

○ 국채비(채무 상환비, 이자급할인료 등)은, 21.8조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조엔(8.2%) 증가

⇒ 경과 : 각 부성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조서 발표(11.26)

〈표 2-III-4〉 정책공약(manifesto)에 근거한 FY2010 예산요구액

(단위: 십억엔, %)

구 분	당초(A)	예산요구(B)	비교증감액	증감률
	FY2009	FY2010	(B-A)	(%)
예산요구액(합계)	66,954.2	72,076.6	5,122.3	7.7
예비비	350.0	350.0	-	-
경제긴급대응예비비	1,000.0	-	△1,000.0	△100.0
국채비	20,243.7	21,893.3	1,649.6	8.2
'08년도결산 적자보전	-	718.2	718.2	-
합 계	88,548.0	95,038.1	6,490.1	7.3

자료: 재무성, 「マニフェスト(「三堂連立政権合意書」を含む)を踏まえた平成22年度一般 會計概算要求額」, 2009.10.16

□ 각료회의, ‘국민 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국민생활 보호 및 신성장전략 마련, 예산편성과정의 개혁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결정(2009. 12. 15)

○ 이에 따라 FY2010 예산안은 자녀양육, 고용, 환경, 과학·기술, 정책공약(manifesto)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할 방침이며 이와 연계한 아시아적 관점의 신(新)성장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

○ FY2010 및 향후 예산안 수립시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事業仕分け)」결과 반영에 따른 세출 삭감, 세수감소에 따른 신규 국채발행 억제, 중장기적 예산의 효율화, 재정건전화의 기본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과정 개혁 추진

- FY2010 예산의 경우 국채발행규모를 약 44조엔 이내로 억제할 방침

- 2010년중 중장기적 재정 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

□ 민주당 신정부, 총선 당시 내세운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둔 FY2010 예산안 발표(2009.12.25)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FY2009 예산안 대비 4.2% 증가한 92.3조원으로 예산안 규모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 FY2010 예산안은 ‘국민생활 보호(to protect people’s daily lives)’라는 예산기조 아래 예산편성의 3대 개혁²⁾, 주요 정책공약 이행, 탄력적인 경기 대응, 중장기 재정전략 마련 등에 중점
- (세입내역) FY2010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7.3조엔(13.1%) 감소한 48.0조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은 법인세 감소(4.6조엔) 및 소득세 감소(3.0조엔) 등으로 전년 대비 8.7조엔(18.9%) 감소한 37.4조엔 수준으로 전망
 - 반면 기타 수입의 경우 외환자금 특별회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잉여금 7.7조엔 등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전년대비 1.4조엔(15.8%) 증가한 10.6조엔 규모로 추정
 - 세입부족분 44.3조엔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
- (세출내역) FY2010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정책공약(manifesto)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 및 공공사업비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3.8조엔(4.2%) 증가한 92.3조엔 수준
 - 일반세출 규모는 사회보장관련비 증가, 공공사업비 감소, 경제위기대응 및 지역 활성화 예비비(1조엔)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엔(3.3%) 증가한 53.5조엔 수준
 - 정책공약³⁾에 따라 총 3.1조엔 규모의 사업신설로 사회보장관련비는 전년대비 9.8%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사업관련비는 전년 대비 18.3% 감소
 - 국채비는 전년 대비 405억엔(2.0%) 증가한 20.6조엔 규모
- (국가채무) FY2010말 국가채무 수준은 국채발행액 증가(전년 대비 33.1% 증가한 44.3조엔 규모)로 862조엔(2008년 GDP 대비 18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이 조세수입을 초과한 경우는 FY1946 이래로 처음이며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임

2) 3대 개혁은 ①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이념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 ② 내각(국가전략실)주도의 예산 편성 실시 ③ 행정쇄신회의 「사업구분」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투명화를 골자로 함

3) 정책공약(manifesto)상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13년까지 총 16.8조엔 규모로 이중 FY2010 일반회계 집행규모는 3.1조엔(아동수당 지급 1.7조엔, 농가소득 보상 0.6조엔, 고교 수업료 무상화 0.4조엔 등) 수준

〈표 2-III-5〉 FY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 십억엔, %)

구 분	추정(A)	전망(B)	비교증감액	증감률
	FY2009	FY2010	(B-A)	(%)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6,103	37,396	△ 8,707.0	△ 18.9
기타 수입	9,151	10,600	1,449.2	15.8
국채발행	33,294	44,303	11,009.0	33.1
계	88,548	92,299	3,751.2	4.2
세 출				
국채비	20,244	20,649	405.3	2.0
지방교부세부금 등	16,573	17,478	904.4	5.5
일반세출	51,731	53,454	1,723.3	3.3
계	88,548	92,299	3,751.2	4.2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2009. 12. 25

〈참고〉 행정쇄신회의 「사업별심사(事業仕分け)」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변화

○ 기존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예산요구단계에서 적극적 감액 실시
⇒ “FY2010 예산 편성 방침”(2009.9.19, 각의 결정)



○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사업심사를 전면 공개로 진행



○ 사업심사 결과 및 그 반영 현황을 공표함으로써 세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횡단적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 실시
⇒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2009.12.15, 각의 결정)

다. FY2008 결산(FY2008~09: 2008.4~2009.3)

- FY2008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89.2조엔, 세출 84.7조엔, 결산상 잉여금 4.5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2009.7.31)
- (세입결산) FY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2.5조엔 감소한 89.2조엔 수준임
 - 이는 주로 법인세 및 소득세 1.7조엔, 세외수입 중 일본은행 납부금 0.4조엔 감소에 기인
 - 기타 특별회계 및 정부관계기관 세입결산 규모는 각각 387.7조엔, 1.8조엔
- (세출결산) FY2008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84.7조엔이며 이 중 불용액은 1.8조엔임
 - 이는 주로 국채비 0.8조엔, 예비비 0.2조엔, 재해복구사업비 0.1조엔 등에 기인
 - 기타 특별회계 및 정부관계기관 세출결산 규모는 각각 359.2조엔, 1.8조엔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부족액 0.7조엔은 전액 결산조정자금으로 편입하고 전액 국채정리기금으로 충당
 - ⇒ 경과: 국회 제출(2009.11.24)

라. FY2009 1차 추경

- 재무성, 2009년 4월 10일에 발표된 「경제위기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14.7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을 국회 제출 및 심의 개시(2009.4.27)
 - 추경 재원은 10.8조엔의 신규 국채발행,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적립금 3.1조엔, 경제대응예비비 0.85조엔으로 구성
 - 추경 내용은 주로 경제위기 대응관련 비용이며 이 중 금융대책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방공공단체 지원 등의 금액이 각각 3.0조엔, 2.6조엔, 2.4조엔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54.4%를 차지

- 「경제위기대책」을 위해 필요한 총 재정규모는 15.4조엔이나 고용지원금 0.6조엔(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충당) 및 증여세 감세가 0.1조엔 계획되어 최종 추경예산은 14.7조엔으로 편성
- ⇒ 경과 : 추경예산 성립(2009.5.29)

〈표 2-III-6〉 FY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경제위기 대응관련	14,698.7	세외수입	3,106.6
- 고용대책	1,269.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3,100.0
- 금융대책	2,965.9	- 기타	6.6
- 저탄소혁명	1,577.5		
- 건강·육아 등	2,022.1	국채금	10,819.0
- 미래성장동력 확충	2,577.5	- 건설국채	7,332.0
- 지역활성화 등	198.1	- 특례국채	3,487.0
- 안전·안심확보 등	1,708.9		
- 지방공공단체	2,379.0		
국채조정기금특별회계	76.8		
경제대응예비비 감액	△ 850.0		
계	13,925.6		13,925.6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補正予算等の説明」, 2009. 4. 27.

□ 각료회의, FY2009 제1차 추경예산 집행 재검토 결정(2009.10.16)

- FY2009 제1차 추경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별 예산을 목표로 집행 정지 또는 교부가 예정된 법인 등에 대한 교부 거절 혹은 자체 반납 요청 등을 재검토
 - 동 내용은 FY2009 제2차 추경예산 또는 FY2010 예산에 반영할 예정
- 따라서 발급 거부 또는 자체 반납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에 즉시 착수하도록 함
- 이러한 집행재고사업은 16개 정부기관, 357개이며 대략 2.8조엔에 달함

마. FY2009 2차 추경

- 2009년 12월 8일에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경비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7.2조엔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발표(2009.12.15)
 - 「긴급경제대책」에 따라 고용안정(0.6조엔), 환경대책(0.8조엔), 경기대책(1.6조엔), 생활안정(0.8조엔), 지방지원(3.5조엔)에 중점
 - 추경 재원은 1차 추경 집행 동결분 2.7조엔,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분 1.2조엔, 국채발행 3.0조엔 등을 활용
 - 한편, FY2009 세수는 당초 예산(46.1조엔)에 비해 9.2조엔 감소한 36.9조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세수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충당시 FY2009 총국채발행 규모는 53.5조엔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전망

〈표 2-III-7〉 FY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긴급경제대책」 관련	7,201.3	조세 및 인지수입	△9,242.0
- 고용대책	614.0		
- 환경대책	776.8		
- 경기대책	1,574.2		
- 생활안정	784.9		
- 지방지원	3,451.5		
기타경비	227.4	세외수입	△15.4
기본경비 감액	△7,344.1	국채금	
- 1차추경 집행동결	△2,696.9	- 건설국채	9,342.0
- 지방교부금 ¹⁾	△2,951.5	- 특례국채	100.0
- 경제위기대응예비비	△150.0		
- 예비비	△100.0		
- 기타 기본경비 불용액	△1,445.7		
계	84.6		84.6

주: 1)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액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補正予算(第2号)」, 2009.12.15.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기위기 대응 재정정책

- 1차 경기대책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발표(2008.8.29)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불황 타개를 위해 총 11.5조엔(재정지출 2조엔)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
 - 국민생활 안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변혁 가속,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시책 제시

- 추가 경기부양책으로서 「생활대책」 발표(2008.10.30)
 - 세계 경제위기 침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총 26.9조엔(재정지출 5조엔)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
 - 서민생활 안정, 금융 및 경제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대책을 마련

- 경제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2008.12.19)
 -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총 37조엔(재정지출 10조엔)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
 - 고용창출,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신설, 및 기업자금 조달, 주택·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

-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자금사정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발표(2009.1.27)
 -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민간기업 금융이 크게 위축되자 1.5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
 - 자금조달 곤란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고용 흡수력이 큰 기업 등에 대해 2009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201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 「생활대책」에 따른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 지급 결정(2009.3.5)
 -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목적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2,000엔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인 경우 8,000엔을 추가로 지급

-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대책」 발표(2009.4.10)
 - 단기적인 경제위기 심화 및 세계경제 재조정 국면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책으로서, 즉 경기침체 완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56.8조엔(재정지출 15.4조엔) 규모의 동 대책 발표
 - 기존 경기부양책에 비해 고용 및 금융안정, 미래성장전략, 세제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분야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둠

- 고용악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긴급고용대책본부’ 신설(2009.10.16)
 - 본부장이 고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래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본부장: 총리, 본부장대행: 부총리
 - 부분부장: 내각관저장관외 각 성 장관, 내각부특명장관(금융, 저출산대책)
 - 사무국장: 본부장이 지명한 후생노동차관

- 고용악화 타개를 위한 「긴급고용대책」 발표(2009.10.23)
 -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고용안정 및 향후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내각부 산하 긴급고용대책본부에서 동 대책을 발표
 -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빈곤층 및 신규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창출의 본격화 등의 3대 분야에 중점
 - 기대효과: 빈곤층 고용 최우선 지원, 미래성장분야에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만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에 대응하고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2009.12.8)
 - 고용악화, 디플레이션 압력 및 엔고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 총 24.4조엔(재정 지출 7.2조엔)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
 - 고용촉진, 지구 온난화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환경대책,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기 대책,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지원 등에 중점

나. 재정건전화 정책

-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의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본방침 2006」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정달성을 위해 재정 개혁 추진(2009.1.16)
 - 일본의 재정건전화 관련 정책은 크게 세출개혁을 위한 “기본방침”과 세입개혁을 위한 “중기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기본방침 2006」에 의한 5개년 세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본방침 2007」, 「기본방침 2008」에 따라 최대한의 지출삭감을 도모
 - 「기본방침 2008」에 포함된 성장력 강화, 저탄소 사회 구축, 국민 본위의 재무행정 개혁,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양질의 국민생활 구축을 위한 안심사회 실현에 필요한 예산투입 등을 포함해 예산배분의 중점화 및 효율화를 실시
 - 한편,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 있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후평가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그 필요성·효율성·유효성 등을 검토함
 - 「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구
 -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3년 이내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안심 강화와 양질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
 -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세입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채무비율 안정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함

- 위기극복, 성장력 강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2009」 및 「중기 프로그램」의 일부개정안 발표(2009.6.23)
 -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이하 ‘기본방침 2009’)는 위기극복, 성장력 강화,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향후 재정운영 방침 제시
 - － FY2010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방침 2006」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세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추구
 - －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중기적으로 책임있게’라는 방침 아래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중기 프로그램」에서는 후속 경기대책 내용 추가 및 2009년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 내용 반영
 - － 「경제위기대책」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일시적으로 강구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내용 추가
 - －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의 관점에서 「기본방침 2009」상에 제시된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확보 내용과 함께 검토 내용 추가

4. 기타 정책이슈

- 민주당은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54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2009.8.30)
 - 민주당은 이번 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정원 480석 중 308석(기존 115석)을 차지하면서 자민당(119석)에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 이는 자민당 장기집권에 따른 낡은 정치문화, 도농간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한 민심 이탈과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재정적자 확대, 최근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불안 지속에 기인
 - 한편, 신정부는 국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결정을 위해 국가전략국, 행정쇄신회의, 분야별 각료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할 계획

- 민주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의 연립정권 수립 및 주요 정책합의 내용을 담은 「3당 연립정권 합의서」 서명(2009.9.9)
 - 3당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으로 합의하고 향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기본정책을 각료위원회에서 논의 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합의
 - 정책합의 내용: 1) 신속한 신종플루·재해·긴급고용대책, 2) 소비세율의 현행 유지, 3) 우정사업 전면 재검토, 4) 육아지원, 5)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 6) 노동자 파견법 근본개정, 7) 지역 활성화, 8)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9) 자립외교 및 세계공헌, 10) 헌법의 ‘평화주의’ 준수 등

- 세제 및 재정, 외교의 기본 방향 등 기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전략실’ 신설(2009.9.18)
 - 국가전략실은 세제 및 재정의 기본 구조 및 경제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신성장전략 마련, 외교 등 향후 기타 주요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수장직속기관으로 설치
 - 동 전략실은 국가전략담당장관, 총리보좌관(국가전략담당), 국가전략실장, 장관정무관(국가전략담당)으로 구성

-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행정쇄신회의’ 신설 및 ‘사업구분(事業仕分け)’ 실시(2009.9.18)
 - 민주당 신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제도, 기타 중앙정부 행정 전반에 대한 쇄신과 함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해 ‘행정쇄신회의’를 신설
 - 사업구분(事業仕分け)은 민간 싱크탱크인 「구상일본」이 낭비성 예산을 삭감시키는 기법으로 개발되었으며, 2002년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지자체 예산 효율화에 공헌
 - FY2010 및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사업구분 결과 및 해당 반영 현황을 공표함으로써 세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복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 실시
 - 이에 따라 「행정쇄신회의」는 FY2010년도 예산요구액 95조엔 중 약 3조엔 삭감을 목표로 전체 447개 사업을 약 200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사업구분(事業仕分け)을 실시할 계획

IV

영국 (FY2009: 2009. 4~2010. 3)

1. 세제개편

가. 세제개편 과정

- 예산 발표 후, 예산안상 세제변동은 연간 Finance Bill(Budget Day 혹은 4월 6일 기점)로 입법화 됨
 - 2009년에는 예산안이 통상보다 늦은 4월 22일(Budget Day)에 발표됨
 - 4월 30일에 Finance Bill 의회 제출

- Finance Bill 과정은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에 수정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법안 내용에 큰 변화 없음
 - 7월 21일 국왕의 재가를 통해 법률로 승인됨

나. Finance Bill 2009(2009. 04. 30.) 주요내용

- 세입증대 및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및 소득세율 증가
 - 2010년 4월부터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65세 미만 대상)
 - 2010년 4월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세율 신설
 -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50% 세율 적용
 -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 중 배당금은 42.5% 세율 적용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금기여금 소득공제율을 20%까지 제한(18만파운드 이상 소득자 공제율 20% 적용)

- 경제위기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
 - 법인세율을 22%로 인상하는 시점을 2010년 4월로 연기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21%) 유지
 - 2010년 11월까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2009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초기(first-year) 자본공제율을 40%로 확대
 - 2009년 7월 1일부터 해외배당 과세면세제도 도입

- 2009년 12월 말까지 가계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인하를 유지하고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를 면제
 - 가계지원정책으로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인 VAT 인하(2.5%p)를 종료하고 2010년 1월부터 기준세율 17.5%로 적용
 - 2009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가 175,000파운드(현재 125,000파운드) 이하 주택에 대해 인지세 면제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연료세(fuel duty) 등을 강화하고, 저탄소차량의 생산 및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개혁
 - 2009년 9월부터 연료세를 리터당 2펜스 인상하고 2013년까지 매년 4월 1일 리터당 1페니(1파운드=100페니) 인상
 - 쓰레기매입세(landfill tax)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톤당 8파운드 인상
 - 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자동차소비세 구간을 7개에서 13개로 확대
 - 2010년 4월부터 신규차량에 대해 차별화된 초년도(first-year) 세율을 적용하고 13개 구간의 세율차이를 확대할 예정

다. Pre-budget 2009 (2009. 12. 9.) 주요 세제개편 내용

- (거시 안정성 유지) 경기회복을 공고히하기 위한 가계, 기업 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개편

- (소득세) FY2012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현행(37,400파운드 이하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 20% 유지)으로 동결
 - 2009년 Finance Bill의 최고구간세율(50%) 신설은 예정대로 시행
 - 생산자물가지수(RPI) 하락 예상으로 FY2010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는 현행으로 동결
-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모두 기여율을 0.5%p 추가 인상하여 재정안정을 기함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의 납부면제기준 상향조정(연 20,000파운드 이하)
- (금융시장개혁) 금융산업의 과도한 위험감수 방지 등을 위한 정부조치 발표
 - (보너스 과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업계의 25,000파운드 이상 연말보너스에 대해 50%의 원천세 부과
- (기업·성장 지원) 경기회복 조치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마련
 - Pre-Budget 2008에서 발표한 소규모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연기시한을 FY2009년에서 FY2010년까지 연장
 - 납세연기서비스 유지, ‘공자산율경감제(empty property rate relief)’ 한시적 확대
 -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특허를 통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감면(Patent Box) 도입
-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확보)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보조와 세수증대를 위한 고소득자 부담 증대, 조세회피 방지 등을 함께 추진
 - (세액공제 및 아동급여) 2010년 4월부터 자녀세액공제를 20파운드 인상하고 아동급여, 장애생활수당, 간병인(carers) 수당, 장애급여 등을 포함한 급여와 기타세액공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1.5% 인상
 - (상속세) FY2010년 상속세 공제를 현행 325,000파운드로 동결
 - (조세회피방지) 해외탈루 적발시 탈세액의 200%까지 가산세 부과 등 조세회피방지를

강화해 연간 50억파운드 확보 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세혜택

○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의 경우 회사차량에 대한 과세 면제, 전기자동차 초년도 공제 (first-year allowance) 100% 적용

□ **(부가가치세)**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VAT 세율을 예정대로 2010년 1월부터 17.5%로 환원

2. 예산 및 결산

가. 2009년 예산안

- 2009년 4월 22일에 발표된 FY2009년 예산안(Budget 2009)은 Pre-Budget 2008에 의거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지원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안을 둠
 - 예산안은 경제·재정전략보고서(Economic and Fiscal Strategy Report: EFSR)와 재정현황·예산보고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FSBR)로 구성
 - 2007 증기재정계획(Comprehensive SR: CSR)의 정책목표인 재정건전성과 세대간·세대내 납세와 지출의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 및 통화정책 지원을 목표로 함
 - 2009년 예산안은 통상 예산발표시기(3월)보다 다소 늦게 발표됨

1) 재정현황·예산보고서(FSBR)

- 2009년 GDP 성장률은 크게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인 회복 전망
 - 2009년 GDP 성장률은 Pre-Budget에서 예측한 -1.25~0.75%보다 크게 악화된 -3.5%로 전망
 -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 1.25%, 2011년 3.5%로 전망
 -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 Index; CPI)는 2009년 1%, 2010년 1%, 2011년 2.25%로 예측
- Pre-Budget 전망보다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FY2009년 경상세입은 4,961억파운드(GDP 대비 35.1%)로 Pre-Budget 2008의 전망보다도 394억파운드(GDP 대비 0.9%p) 감소함
 - 특히 노동시장 침체로 인한 소득세 감소, 금융상황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에 기인
 - 총관리지출액(Total Managed Expenditure: TME⁴⁾)은 6,714억파운드로 Pre-Budget 2008 전망치보다 177억파운드 증가

- 이는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Managed Expenditure: DEL)의 증가(67억파운드)와 연간관리지출(Annual Managed Expenditure: AME) 중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기인

- 공공부문 순차입은 감소, 순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09년 1,750억파운드(GDP 대비 12.4%),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730억파운드(11.9%), 1,400억파운드(9.1%), 1,180억파운드(7.2%), 970억파운드(5.5%)로 예측
 - 순부채(은행안정화 비용 포함)는 2009년 GDP 대비 59%, 2010년 68%, 2011~12년 74%, 2013~2014년에 78%~79%로 전망

2) 경제·재정전략보고서(EFSR)

- 거시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율인상과 공공부문 효율화 등의 정책 추진
 -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해 추가세율 신설 등 고소득층 세제혜택 감소
 - 공공부문 효율화(efficiency savings)로 FY2010년 추가 50억파운드의 예산절감 계획
 - FY2011년부터 FY2013년까지 90억파운드 초과 전망
 - 재정지출 연평균 0.7% 증가, 공공부문 순투자는 FY2013년 GDP 대비 1.25%로 전망하고, 2013~14년까지 매년 GDP의 0.8%를 긴축하여 이후 4년간 재정적자를 절반 정도 낮출 계획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 등을 조치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표적 조치, 은행자금 강화 등 포괄적 조치,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국제적 규제체계 등 금융규제 강화 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 강화

4)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AME와 DEL의 합으로 이루어짐.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항목별로 상한이 정해지며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성격의 지출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납세지원 서비스 확대, 신규투자에 대한 비용공제(capital allowances) 1년간 40%로 확대, 전략적 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에서 저탄소 프로젝트에 7억 5천만파운드 투자 등
 - 실업대책으로 Pre-Budget에서 발표한 고용지원사업(Job Centre Plus, the New Deal)의 13억파운드에 추가로 17억파운드 지원
 - 가계지원 정책으로 인지세 면제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겨울난방급여(Winter Fuel Payment)를 가구당 80세 이상은 100파운드, 60세 이상은 50파운드를 추가 지급
 - 비과세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s; ISAs) 가입한도 인상을 통해 가계자금 운영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강화
-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4%까지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성 강화에 4억 3,500만파운드를 추가 지원
 - 저탄소산업 및 녹색업종에 추가 10억파운드 지원 등

3) 2009년 본세출 예산안

- FY2009년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2009. 06. 18.)에서는 부처별세출예산 합계를 순자원요구액(net resource requirement) 4,843억파운드, 순현금소요액(net cash requirement) 4,860억파운드로 집계
- FY2008년 전망치에 비해 FY2009년에 자원요구액은 234억파운드, 현금소요액은 370억파운드 적게 편성
- 2009년 7월 21일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으로 확정됨
- 본세출예산안을 통상 회계연도 초에 의회에 제출하나 예산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여름추경시기에 의회에 제출됨
 - 총액 변동사항 없음

나. 추경(Supplementary Estimates)⁵⁾

1) FY2008 2월(Spring) 추경(2009. 2. 12.)

- 총자원요구액(total resource requirement) 4,924억파운드, 총현금소용액(total cash requirement) 5,164억파운드로 증가
 - DEL은 경상지출 22억파운드, 자본지출 14억파운드 증액하고, AME는 경상지출 237억 파운드, 자본지출 36억파운드 증가
 - 기존 지출은 경상지출 364억파운드, 자본지출 111억파운드 증액됨
 - 재무부의 RfR1(Request for Resource 1- 지속적 경제성장 촉진 등)에 201억파운드, 현금 41억파운드 추가
 - 노동·연금부의 RfR2(고용촉진), RfR3(빈곤대책 등)에 각각 10억파운드, 14억파운드 증액, 현금 18억파운드 추가 등
 - 경상지출 21억파운드, 자본지출 2억파운드 감축
 - 경영·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의 RfR1(경쟁력강화)에 19억파운드, 현금 20억파운드 삭감 등
 -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의 RfR1(저탄소 성장촉진 등)에 28억파운드, 현금 31억파운드 신규 증액
- 2월 추경 수정안(2009. 2. 23.)에서 FY2008년 총자원요구액 4,932억파운드, 총현금소용액 5,164억파운드로 수정함
 - TME는 DEL에서 자본지출 500만 파운드, AME에서 경상지출 8억파운드 증액
- 추경 세출예산법(2009. 3. 12.) 승인
 - FY2008년 11월(winter), 2월 추경예산 증액분 경상지출 453억파운드, 자본지출 442억 파운드를 함께 승인

5) 예산안 추경은 필요시 연간 3차례(6월-Summer, 11월-Winter, 2월-Spring) 편성이 가능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으로 확정됨. 의회 회기 중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편성(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가능

2) FY2009년 11월(Winter) 추경(2009. 11. 24.)

- 경상지출 66억파운드, 자본지출 240억파운드 증액하였으나 증가분을 지출 절감분 (efficiency savings)으로 상쇄하여 총지출에는 변화 없음
 - DEL에서 경상지출 약 10억파운드, 자본지출 3,700만파운드 증액, AME에서 경상지출 11억파운드 삭감, 자본지출 181억파운드 증액
 - 증액분 중 DEL 예비비(Reserve) 3억 1,800만파운드(경상지출 2억 1,600만파운드, 자본지출 1억 200만파운드), AME 부처별 프로그램에 20억파운드 증액 요구
 - 차년도 이월금(End Year Flexibility)으로 8억 8,600만파운드 요구

다. FY2008 결산(End of year fiscal report 2009⁶⁾)

-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의 재량적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인해 FY2008년 예산안 전망보다 순부채, 순차입, 재정적자 규모 증가
 - 공공부문 순부채의 GDP 비중은 예산안 전망치보다 4.7%p 상승한 43.2%에 달함
 - 순차입규모 역시 예산안 전망치보다 3.0%p 증가한 5.9%, FY2008년 재정적자 규모는 2.8%p 증가한 3.4%를 기록
 - 경기변동을 조정한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예산안 전망치(2.8%)보다 2.2%p, 재정적자는 예산안 전망(0.5%)보다 2.0%p 상승
- FY2008년 총세입은 FY2007년 실적치보다 약 153억파운드, 예산안 전망치보다 421억파운드 감소
 - FY2007년 총세입은 5,484억파운드로 GDP 대비 38.7%였으나, FY2008년은 5,331억파운드로 GDP 대비 37.2%임
 - 경기후퇴의 여파로 임금 및 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요인이 예산안 전망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거의 모든 세입항목에서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낮음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계는 예산안 전망치보다 145억 파운드 적음

6) Pre-Budget(2009.12.9) 발표시 함께 발표함. 경제상황 및 재정준칙(fiscal rules) 이행 요약, 2개연도 (Budget 2007, Budget 2008) 예·결산 비교

- 2008년 5월에 발표한 FY2008년도 개인소득 인적공제액을 추가로 1인당 600파운드 증액하여 소득세가 24억파운드 감소
 -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인해 자진신고세(self assessment receipt)는 전망치보다 14억파운드 감소
 - 비북해(Non-North Sea) 법인세는 전망치보다 104억파운드 적은 반면 북해 법인세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22억파운드 증가
 - 기업수익 감소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47억파운드의 법인세 감소, 이 중 금융수익 부문에서 28억파운드 감소
 - 인지세 수입은 전망치보다 55억파운드 감소 : 주택거래량 자체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2008년 9월에 발표한 17만 5천파운드 이하 주택 인지세 면제조치의 영향
 - VAT는 예산안 전망치보다 53억파운드 적은 784억파운드에 해당
 - VAT의 한시적 인하와 납세지원서비스 조치로 인해 15억파운드 감소(발생주의 기준으로는 23억파운드 감소),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 20억파운드 등
- FY2008년 TME는 FY2007년보다 약 361억파운드, 예산안 전망치보다 3억파운드(GDP대비 0.1% 미만) 증가
- FY2007년 TME는 5,820억파운드로 GDP의 41.0%, FY2008년 TME는 6,181억파운드로 GDP의 43.1%였음
 -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실적치가 다소 상승한 이유는 DEL의 계획적인 지출억제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등 AME 증가로 상쇄되었기 때문임
 - 총 DEL은 예산안 전망보다 32억파운드 절감한 3,577억파운드임
 - 경상지출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잉여분으로 인한 보건부의 계획적인 지출절감으로 31억파운드 감소
 - 자본지출은 계획된 것보다 크게 감소한 아동학교가족부의 자본프로그램(capital programme)으로 인해 예산안 전망치에서 변동 없음
 - Pre-Budget 2008에서 경기부양조치로 발표한 FY2010년 예산의 조기집행액(자본지출 30억파운드) 중 FY2008년에 할당된 4억파운드를 모두 지출함

- 총 AME는 예산안 전망보다 35억파운드(GDP의 0.2%) 증가
 - 경기침체, 구직수당 및 주택급여 증가, 아동급여 인상과 추가 모기지 지원 등 사회보장지출이 예산안 전망보다 34억파운드 증가
- 공공부문 순투자는 FY2007, FY2008 모두 25% 이상 증가
 - FY2008년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예산안 전망보다 26억파운드 감소, 공공부문 순투자는 28억파운드 증가

라. Pre-Budget 2009 (2009. 12. 9)

- 공공부문 차입규모와 순부채(GDP 대비 60.2%, 11월 말 기준)규모 증가 등 2009년 경제위기 대응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2009년 GDP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악화된 -4.75%로 수정하고, 2010년부터 플러스 성장(1~1.5%)으로 전환, 2011년에는 3.25~3.5%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재정전망)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FY2009년(회계연도 말 기준) 공공부문의 순차입규모는 1,776억 파운드(GDP의 12.6%), 순부채규모는 7,989억파운드(GDP의 55.6%)로 추정
 - 경기회복과 투자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순차입규모는 FY2010년에 GDP의 12.0%에서 FY2014년 GDP의 4.4%까지 줄어들고, 순부채규모는 FY2010년 GDP의 65.4%에서 FY2013~2014년 77.1%로 지속적인 증가 전망
- FY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부처별 지출총량에는 계획 변경이 없으며, FY2011~2014년까지 공공지출의 실질증가율은 평균 0.8%까지 예상
 - “경기회복의 공고화 : 성장과 기회”(Securing the recovery: growth and opportunity)이라는 기조아래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금융시장개혁 ③ 기업·성장 지원 ④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확보 ⑤ 공공서비스 유지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 6가지 세부 재정 목표 제시
 - Pre-Budget 정책목표별 주요 세제변화는 1장 세제개편의 ‘다. Pre-budget 2009 주요 세제개편 내용’ 참고

- FY2010년 세입은 전년 대비 6.4%, 세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 FY2010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303억파운드로 2009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18억파운드 증가
 - FY2010년 경상세입의 GDP 비중은 36.0%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던 FY2008년에 비해 1.1%p 감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FY2009년에 비해서는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출) FY2010년 TME는 예산안 전망치보다 49억파운드 증가한 7,066억파운드임
 - AME는 3,13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8.3% 증가
 - FY2009 예산안보다 높게 가정한 인플레이션과 정부채수익률(gilt rate) 변화로 법정지출이 예산안 전망보다 27억파운드 증가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2,936억파운드로 FY2009년보다 증가세(9.3%)가 완화
 - DEL⁷⁾은 3,927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8% 증가
 - FY2010년은 중기재정(CSR2007)의 마지막 기간으로 제한한 범위 내에서 부처별 지출을 계획
 - 보건부(Health) 지출상한은 대부분 NHS 지출로 경상지출 1,040억파운드(전년 대비 약 3.9% 증가), 자본지출 47억파운드(전년 대비 약 13% 감소) 규모

7) FY2008년에 예산안 전망보다 30억파운드 낮은 실적치를 기록, FY2010년은 중기재정(CSR2007)의 마지막 기간으로 제한한 범위 내에서 부처별 지출상한 설정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 Pre-Budget 2008에서 공공건설사업 조기착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 등 포괄적 경기부양책 발표
 -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공공부문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40억파운드 규모(GDP대비 0.3%)의 경기부양책을 발표(2008. 10. 20)
 - 재무부는 공공건설사업에 정부지출 우선권을 두어 재정을 투입하고자 함
 - 경기부양책에 대한 재원은 FY2010, FY2011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시행할 방침
 - 2008~10년에 걸쳐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이 포함된 200억파운드(약 45조원) 규모(경상GDP의 1.4%)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2008. 11. 24)

- 2009년 예산안에서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미래성장 전략을 통한 경기부양책 제시
 - 고용지원 강화(17억 파운드 추가 지원), 16-17세 직업훈련 지원(FY2009년에 2억 5,100만파운드, FY2010년에 4,040만파운드), 사회기금(Social Fund)에서 취약계층 무이자 대출 유지(2억 7천만파운드), 연금수급자에 대해 겨울난방급여 추가 지원
 - 주택구입지원 6개월 연장, 모기지대출규모 확대(200억파운드 규모), 자동차 산업 지원(신차구매 시 2,000파운드 할인)
 - FY2010년 예산에서 총 7,750만파운드를 FY2008년과 FY2009년에 걸쳐 주거·환경친화개발(housing and regeneration) 투자에 할당하고, 도로와 학교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FY2010년 예산을 조기집행함
 - 전략적 투자기금에서 7억 5천만파운드(저탄소 투자 2억 5천만파운드 포함)를 신규지원하고, 저탄소분야 추가 5억파운드 지원을 포함한 녹색성장사업에 총 14억파운드를 지원.
 - 주택건설산업에 6억파운드 규모 지원

- 370억파운드 규모의 1차 금융구제안(2008년 10월)을 내놓았던 영국정부가 2차 금융구제안 발표(2009.01.19.)
 - 매입규모 500억파운드 이내의 정부가 지급 보증한 자산에 대한 민간자산 매입제도 (Asset purchase facility) 신설
 - 영란은행의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Liquidity facilities) 개편
 - 2009년 1월 30일로 특별유동성 공급제도를 종료하고, 현행 할인제도(discount window facility⁸⁾)를 활용하여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지원
 - 정부의 은행자산 보호제도(Asset protection scheme) 신설, 은행채 등의 지급보증제도 시한 연장
 - 모기지대출, 기업 및 가계대출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AAA 등급)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신설
 - 정부가 보유중인 Royal Bank of Scotland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기업 및 가계에 60억파운드 추가 대출 가능

- Northern Rock(모기지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300억파운드의 재정지원 및 부채보증에 대해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최종 승인(2009.10.28.)⁹⁾
 - 자본구조 변경(recapitalisation) 조치를 포함한 30억파운드, 유연성조치를 포함한 270억파운드까지 재정지원하고 수십억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를 보증함
 - 지난 2월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Northern Rock의 자본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8) 금융기관 보유 적격증권을 담보로 영란은행 보유 국채를 대여해주고 금융기관은 영란은행의 공개 시장조작에 참여하거나 시장에서 RP방식으로 자금 조달

9) EC http://ec.europa.eu/unitedkingdom/press/press_releases/2009/pr09128_en.htm
 HM Treasury http://www.hm-treasury.gov.uk/press_97_09.htm

나. 재정건전화 정책

- 중기재정 정책목표의 수정 없이 한시적 재정준칙(temporary operating rule)¹⁰⁾ 설정
 - FY1997-FY2006까지 재정정책 목표는 재정준칙을 충족하였으나,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정책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우선적인 경제지원과 동시에 중기적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 명확하고 투명한 장기 재정목표를 유지하되, 적절하고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운용하여 일시적인 재정준칙 이탈을 허용
 - FY2009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방안은 II.2(2009년 예산안)과 IV.4(조세 회피방지) 참고

- 공공부문 운영 효율화를 통해 중기재정계획(CSR 2007) 목표인 350억파운드 지출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2009. 4. 21.)
 - 운영효율화 프로그램(Operational Efficiency Programme)을 통해 15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¹¹⁾
 - 이 중 약 60억파운드가 CSR 2007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90억파운드는 다음 중기재정계획 목표치에 반영됨
 - 이미 Pre-budget 2008에서 CSR 2007 기간의 효율성 목표를 300억파운드에서 35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OEP는 이전 중기재정계획(SR 2004) 기간에는 목표치보다 50억파운드 초과한 265억파운드의 지출절감을 달성함

- FY2009년 채권발행 규모는 총 2,416억파운드로 예측(2009. 4. 22.)¹²⁾
 - 채무감독원(Debt Management Office)은 FY2009년 총 채권발행을 2,416억파운드로

10) 중기재정목표(공공부문 순부채 GDP의 40% 이하로 유지)에 대한 유연화조치로 재정안정화약정(Code for Fiscal Stability)의 연장선에서 한시적 재정준칙(각년도 예산을 주기적으로 조정)을 설정 가능함

11) HM Treasury, Operational Efficiency Programme Final report 참고
http://www.hm-treasury.gov.uk/d/oepp_final_report_210409_pu728.pdf

12) HM Treasury, Debt and reserve management report 2009-10

예상

- FY2009년 중앙정부의 순현금소요액은 2,208억파운드, 순재정요구액은 2,378억파운드로 예측(gilt redemptions 166억파운드, 외환보유고에 추가 20억파운드 소요)

○ 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NS&I)에서 FY2008년에 125억파운드의 순재정요구에 기여했기 때문에 FY2009년 순재정요구에 대한 기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총액기준 139억파운드의 재정기여 예상

□ 정부재정 확보를 위해 2년에 걸쳐 총 160억파운드의 정부자산매각(Government asset sales)을 결정(2009. 10. 12.)

○ FY2009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는 773억파운드로 확대¹³⁾

- FY2008년 상반기 적자(338억파운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 9월 말 순부채는 8,248억파운드로 GDP 대비 59.0%에 달함

○ 1차로 30억파운드의 자산매각 발표¹⁴⁾

- 1차 매각 대상은 CTRL(Channel Tunnel rail link), 우라늄농축건설소시업 유렌코(URENCO)의 정부지분 33% 등이 포함됨
- 현재 토리당은 내년 1,750억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급진적인 공공지출 삭감 요구

□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 의회 제출(2009. 12. 9)

○ 영국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상황이 정상화되는 현 시점이 재정구조(fiscal framework)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재정책임법안을 Pre-Budget 2009와 함께 발표

○ 재정책임법안은 입법을 통한 최초의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 FCP)으로 정부의 재정책임 의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의회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설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명백한 역할 부여

13) 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09)'

14) 영국 총리실 <http://www.number10.gov.uk/Page20941>

의회 <http://news.parliament.uk/subject/Economic-policy/?archive=1> 등

- 시의적절한 FCP를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 등 기업과 개인에 확실성 부여, 장기적 투자 가능 등의 효과를 기대

○ FCP는 FY2009~FY2015까지 적용

- 공공부문의 GDP 대비 순차입 규모는 FY2009년에 최고 전망에서 최대 4년간 절반으로 낮춤(11월까지 8개월 누계 순차입 규모는 1,064억파운드로 GDP의 약 7.6%에 해당), 보조입법을 통해 FY2013년 공공부문 순차입을 GDP의 5.5% 이하로 줄일 계획
- FY2009~FY2015까지 각 연도마다 GDP 대비 차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FY2015년까지 공공부문 순부채의 GDP 비중을 낮추도록 함

4. 기타 정책이슈

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탄소경매 규정을 변경한 2009년 배출가스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발표(2009.04.23)
 - 탄소배출권 경매 방법 및 EU의 ETS Phase II(2008-2012) 경매참가 규정 설정
 - 탄소경매에 비경쟁입찰 포함
 - 2009년 6월 4일 경매부터 경매참가자는 간접입찰자를 대리하여 구매한 각 탄소 허용량에 대해 0.05유로를 받게 됨

-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영국내 풍력 프로젝트에 14억파운드 규모의 신규대출 지원(2009.11.10.)

나. 가계지원정책

- Pre-budget 2008의 경기부양책 후속조치로서 가계에 대한 추가 조세감면 시행(2009.04.06.)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를 추가로 최고 130파운드 확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최고 150파운드 확대
 - 기초국가연금을 최대 5% 인상하여 1주 기준으로 90.70파운드에서 95.25파운드로 인상
 -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의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4.8% 인상
 - 독신자의 경우 124.05파운드에서 130파운드로, 부부의 경우 189.35파운드에서 198.45파운드로 인상

- 50세 이상, 비과세 ISAs 가입한도 3,000파운드 인상(2009.10.06)
 - 2009년 10월 6일부터 총 가입한도를 7,200파운드에서 1만 200파운드로 인상하고, 현금한도도 3,600파운드 이상에서 5,100파운드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010년 4월 6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 연금수급자에 대한 제급여 수급기준 완화(2009.10.06)
 - 2009년 11월부터 연금크레딧, 연금수급자와 관계된 주택급여(Housing Benefit)와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의 자격조건 산출시 면제되는 저축금액 증가
 - 현재 6,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약 50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평균 주 4파운드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음
 - 연금수급자들이 초과 납세한 부분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9년 10월 이후 저축이자에 대해 초과 납세한 340만명의 저·중간소득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계획
 - 과거에 초과 납세한 연금수급자들에게 평균 200파운드 정도의 세금환급이 예상됨
- 2009년 9월부터 어린이신탁펀드(Child Trust Fund; CTF¹⁵)에서 7세가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250파운드 지원(2009. 9. 9)

다. 기업지원정책

- 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납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2009.03.31.)
 - 이미 10만개의 사업체가 NICs, VAT, 법인세 등의 납세기간 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음
- 소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2009.04.29.)
 - EC에서 소득세, 자본이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벤처자본제도(Venture Capital Scheme)를 공식적 국가보조(State Aid)로 승인
 -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벤처자본투자신탁(Venture Capital

15) CTF는 정부가 어린이에게 250파운드를 보조, 펀드가입을 장려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자녀의 경우 250파운드를 정부가 추가로 보조함. 2005년 4월부터 도입됐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어린이 이름으로 가입하여 18세 이후에만 찾을 수 있음. 연간 한도 1,200파운드, 비과세 펀드임.

Trusts), 기업벤처링제도(Corporate Venturing Scheme)

- 국내 지분 50% 규정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기업투자제도 63억 파운드, 벤처자본투자신탁 35억 파운드, 기업벤처링제도 7,400만 파운드 세제지원 확대
 - 변동사항은 Finance Bill 2010에서 법률화할 예정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 완화(2009.08.20.)
-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감면(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혜택을 EC에서 국가보조로 승인함
 - FY2007년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은 2,830개로 총 감면액은 2억 4천만파운드였으나, 2009년 완화된 기준으로 조세감면대상 기업은 9,000개로 확대
 - Finance Bill 2010에서 법률화할 예정

라. 조세회피방지

- 재무장관은 2009년 4월 22일 예산연설에서 조세회피 방지정책 발표
-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연평균 10억파운드의 세수를 확대해 왔으며 향후 3년간 추가로 10억파운드를 확보할 계획
 - 2009년 예산안의 조세회피 방지정책은 아래와 같음¹⁶⁾
 - 외환 조세회피방지(foreign exchange targeted anti-avoidance) 규정 도입, 조작된 해외배당(manufactured overseas dividend) 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¹⁷⁾, 이중조세감면 규정의 명확화, 법인의 무형고정자산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16) HM Treasury의 예산안 보도자료(http://www.hm-treasury.gov.uk/bud_bud09_press03.htm) 참고

17) 위 보도자료 참고. 외국세(foreign tax)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외국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Pre-Budget 2009에서 강화된 조세회피방지 대책 발표
 - (해외탈루 방지) 해외은행에 신규계좌 개설시 국세청(HMRC)에 신고하게 하고, 탈세 적발시 탈세액의 20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
 - (은행 과세지침 마련)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의 통합된 의사결정 및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권고하는 과세지침을 마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강화) 조세회피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강화
 - 이외에도 상속세 회피 차단, 보험프리미엄세(Insurance Premium Tax) 회피 차단¹⁸⁾, 물가연동국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등 포괄적인 조세회피 방지책 추진을 계획

마. 공공서비스 개선

- 재정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Money Guidance pathfinder)에 1,200만파운드 지원(2009.01.13.)

18) 보험사가 보험료 중 '보험운용수수료(administration fee)'를 과세보험료에서 인위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V

프랑스 (FY2009: 2009. 1~2009. 12)

1. 세제개편

가. 감세정책

- 외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2009년 6월 30일)
 - 7월 1일부터 외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종전의 19.6%에서 5.5%로 인하
 - 표면적으로는 14.1%p 인하, 모든 세금을 포함한 초기 가격(initial price)에서는 11.8%p 인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위 감세정책으로 외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식업계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
 - 프랑스 재무부는 향후 2년 동안 40,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전망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제 혜택 증가(2009년 9월 2일)
 - 소득기준 하위 5.5%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8월 중순 이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면제
 -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10억유로의 구매력 증진효과(550만가구에 해당)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업소세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2009년 9월 17일)¹⁹⁾
 - 프랑스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를 부분적으로 폐지할 예정
 - 사업소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납세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당국이 매년 정한 세율을 적용함

19) 자료: <http://www.minefe.gouv.fr/actus/reforme-taxe-professionnelle.html>

- 사업소세 개정내용
 - 사업소세는 지역기여세(CLA) 부문으로 변경되어 부가세(CC)와 함께 지역경제기여세(CET: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로 통합(CET=CLA+CC)
 - 지역기여세(CLA)는 과세대상을 건물 및 토지에 한정, 동산을 포함하는 현재 과세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약 15% 만큼 감소
- 절세 및 세수효과
 - 기업들에게 약 70억유로에 해당하는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2010년 약 120억유로 정도의 세수감소 예상

나. 세제도입

- 탄소세 도입안 발표(2009년 9월 10일)
 - 2010년 1월부터 석유, 석탄, 가스 사용에 대해 CO₂ 1톤당 17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릴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전기에 대해서는 제외
 - 감세 및 세금환급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
 - 2010년에 탄소세입 중 가구 납부금액인 22억유로는 대부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2. 예산 및 결산

가. FY2010 예산

- FY2010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s de Finance pour 2010)의 주요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정책과 경제 및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포함
 - FY2010의 주요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정책과 경제 및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포함
 - 주요 정책내용으로는 고용활성화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투자정책)와 사업소세 개혁(120억유로 세입감소) 및 탄소세(41억유로 세수예상) 도입(조세정책) 등이 있음
 - FY2010 예산법안은 2009년 9월 30일에 의회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음(하원 및 상원에서 제1부문 통과)
 - ※ 프랑스 예산법안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표결: 의회가 제1부문인 총세입, 지출한도 및 재정수지를 먼저 승인한 후 제2부문인 세출을 각 미션에 따라 의결
 - (거시경제전망) 2010년 경제성장률은 0.75%, 물가상승률(연평균)은 1.2%로 전망
 - (재정수지) 2010년 재정적자는 1,160억유로(GDP 대비 8.5%)로 전망
 - 2009년 예산기준, 재정적자는 1,043억유로였으나, 2009년 예산집행액(예측치)은 1,419억유로(GDP의 8.3%)로 증가 전망
 -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세입감소폭이 GDP의 0.3%에 해당, 이를 제외할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8.3%임
 - 2009년 예산집행액(예측치)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재정적자는 2009년에 비해 약 250억유로 정도 감소
 -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GDP 대비 84%임(2009년: GDP 대비 77%)

〈표 2-V-1〉 2010년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2009년 예산법 (수정예산 포함)	2010년 예산안
부채	43,258	42,728
지출	320,015	345,263
총지출	363,273	387,990
경제위기 대응정책	15060	4102
순세입(목적세입 제외)	266,606	267,176
일반회계재정수지	-96,667	-120,814
부속회계 재정수지	0	1
특별회계 재정수지	-7,658	4,779
총수지	-104,351	-116,034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plf2010/chiffres_cles.pdf

□ FY2010 예산법(LFI: Lois de Finances Initiales pour 2010)은 2009년 12월 18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12월 30일에 발표

○ 2010년 예산관련 주요 논의 대상은 사업소세 감면, 탈세방지 및 탄소세 등 세제개편에 초점을 둠

○ 의회의 예산안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Scellier’ 혜택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하여 임대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2010년까지 2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1년부터는 세금감면 혜택이 15%로 줄어들 예정)

- 소규모 기업의 투자액에 대한 부유세 세제혜택 확대

* 부유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로 순재산(자산-부채) 금액이 77만유로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안창남, 2009)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 감소(2010년 이전: 기준 25,000유로 + 과세 소득의 10% → 2010년 이후: 20,000유로+과세소득의 8%)

□ 2010년 1월 20일에 발표된 수정예산안(PLFR 2010: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은 최근 가시화된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350억유로 규모의 미래투자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 및 이와 관련된 재원확보 계획을 포함

○ 350억유로 규모의 미래투자계획 발표, 주요 정책은 1) 고등교육(석·박사 및 전문가 교육)과 연구개발투자(190억유로), 2) 중소기업 및 산업투자(65억유로), 3)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사업(50억유로), 4) 정보통신기반 확대 및 관련 사업 투자(45억유로)

– 이러한 미래투자계획안을 위한 재원 중 220억유로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120억유로는 2008년 금융권에 지원한 융자금 상환으로 충당할 예정

– 위 계획안이 2010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20억~25억유로로 이는 GDP의 0.1%에 해당

○ 2010년 재정적자는 미래투자계획 관련 지출을 포함하여 예산안(PLF 2010)보다 319억 유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GDP 대비 0.75% → 1.4%)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세제 관련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탄소세는 각종 예외조항 및 차별적 세제혜택이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헌법위원회 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 제시

– 금융업 종사자의 2만 7,500유로를 초과하는 보너스에 대해 50% 세율로 과세, 약 3억 6천만유로의 세입 예상

□ FY2010 사회보장부문 예산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0)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부문 예산안은 2009년 10월 1일에 제출되었으며 의회에서 채택(하원: 11월 26일, 상원: 11월 15일), 현재 헌법위원회에서 검토중

○ 2009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노후연대기금(FSV) 제외)은 235억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0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FSV 제외)는 306억유로로 예상

- 실업자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지속하나 의료비 관련 지출은 통제할 예정

〈표 2-V-2〉 2010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단위: 십억유로)

	2009 결산	2010 예산
의료보험 (CNAM)	-11.5	-14.6
산재보험 (CNAM AT/MP)	-0.6	-0.8
법정연금기금 (CNAV)	-8.2	-10.7
가족지원금(CNAF) ¹⁾	-3.1	-4.4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 ²⁾	-23.5	-30.6
노후연대기금(FSV) ³⁾	-3.0	-4.5
총액	-26.5	-35.1

- 주: 1) 가족지원금(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2)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특별제도, 자영업자 제도,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박찬영, 1997)
 3)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임춘식 외 6인, 2005)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091001plfss2010/plfss2010.pdf

나. 추경

- FY2009-FY2012 프로그램예산법(개정안)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도록 세출을 조정하되 엄격한 지출통제 기조는 유지(2009년 2월 11일)
 - 프로그램예산법은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4개년도 예산안으로서 조세와 지출부문은 3개년 계획인 다년도예산(Le budget pluriannuel de l'État)의 내용도 포함
 - 2008년 개헌(헌법34조)에 근거, FY2009-FY2012 프로그램예산법은 균형재정수지라는 큰 목표 내에서 다년도의 재정목표를 설정함
 - 2008년 12월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예산법(2008년 12월)을 수정하였으나, 전체 다년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 경제위기 대응정책들은 대부분 2009년~201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표 2-V-3〉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2009.2)

(단위: GDP 대비 %)

	2008 예산법기준	2009	2010	2011	2012
재정수지	-3.2	-4.4	-3.1	-2.3	-1.5
국가부채	67.0	69.9	70.5	70.0	68.6

주: 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이하,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이하로 규정

2. EU 경제위원회는 2009년 11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낮추는 것을 프랑스에 권고

자료: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236735&dateTexte=vig>

○ FY2009-FY2012 프로그램예산은 2007년 5월 재정개혁 및 정부정책개혁보고서(RGPP: General Revision of Public Policies)를 반영, 엄격한 지출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전년 대비 연간정부지출 증가율(물가상승률 반영, 실질지수개념)을 0.1% 내에서 통제하기로 법제화(2008년 예산법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원칙)
- 위 통제대상에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지출은 제외됨
- 2008년 예산법(LFI: Loi de Finances Initiale) 대비 2009년 정부 총지출(경제위기 대응정책 제외)의 증가율은 명목지수로는 1.6% 상승, 실질지수로는 0.1%로 안정화됨
- 2009년 정부지출은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포함할 경우, 2008년 대비 명목지수로는 5.4% 상승, 실질지수로는 3.9%로 상승 예측
- 2010년 정부지출(경제위기 대응정책 포함)은 2009년 대비 명목지수로는 1.4% 감소, 실질지수로는 3.2% 감소 예측(기준연도 2008년도)

□ FY2009 1차 수정예산법(2009년 2월 4일 통과)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FY2009-FY2010) 총 260억유로를 지출할 예정(GDP 대비 1.3%)

- 12월 발표된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한 수정예산안(PLFR)이 통과되어 예산법으로 채택
- FY2009 재정적자를 191억유로, FY2010 재정적자를 10억유로 증가시킴(아래 표 참조)
-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한 2009년 누적재정적자는 868억유로로 예상

- 2009년 2차 수정예산법(2009년 4월 22일 통과)에서는 1차 수정예산안보다 재정적자의 규모 증가
 - 3월 4일 발표된 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한 수정예산법 발표
 - (누적 재정적자규모)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422억유로였으나 1차 수정예산에서는 재정적자가 868억유로, 2차 수정예산에서는 재정적자를 1,038억유로 (GDP 대비 5.6%)로 전망
 - 세출부문 : 2009년 1월 정책을 반영하여 자동차산업 투자에 69억유로, 설비업체 및 관련하청업체 정부대출보증금으로 26억유로 증가
 - 세입부문 : 감세정책으로 1차 수정예산안보다 약 75억유로에 해당하는 세수감소 (소득세 19억유로, 법인세 4억유로, 유류세 2억유로, 부가가치세 35억유로 등)
 - 국가부채규모 :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해 국가부채는 GDP 대비 73.9%로 가중 (FY 2009 예산: GDP 대비 66.0%)

〈표 2-V-4〉 2008-2011 세출 계획

(단위: 십억유로)

	2008	2009	2010	2011
경제위기 대응정책 제외	340.9	346.5	352.6	358.8
변화율(명목지수, 기준연도 2008)		1.6%	1.75%	1.75%
변화율(실질지수, 기준연도 2008)		0.1%	0.0%	0.0%
물가상승률		1.5%	1.75%	1.75%
경제위기 대응정책 포함	340.9	359.3	354.2	358.8
변화율(명목지수, 기준연도 2008)		5.4%	-1.4%	1.3%
변화율(실질지수, 기준연도 2008)		3.9%	-3.2%	-0.4%

자료: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236735&dateTexte=vig>

다. 결산

- 2008년 일반정부 결산(법)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563억유로를 기록, 전년대비 146억유로만큼 증가(2009년 8월 10일)
 - 경제위기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여 총세입이 크게 감소(예산보

- 다 117억유로 감소)
 - 법인세는 예산전망치(LFI)보다 46억유로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세수자체의 감소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환급확대정책으로 예산전망치보다 52억유로 감소
 - * 부가가치세 환급은 760억유로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760억유로 미만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
- 총세출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지수로는 안정화되었다고 평가받음(예산보다 40억유로 증가)
 - 지방정부 및 EU 보조금 증가와 물가상승률의 급증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출이 실질가치로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 2008년 사회보장부문 결산에 따르면 사회보장재정 적자는 2008년 100억유로, 2009년 약 200억유로로 예측(2009년 6월 15일)
 - 2008년 사회보장재정 적자 100억유로는 예측치인 93억 유로보다 약간 증가한 형태
 - 사회보장 재정부문 세입이 경제위기로 10억유로 감소
 - 지출부문에서는 가구보조금 지출이 2008년 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주택보조금 2억유로, 아동보조금 2억유로 증가하여 해당분야 수지 적자는 1억유로임)
 - 2009년 사회보장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약 200억유로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세입의 주원천인 근로자소득(세입 80억유로 감소효과) 감소 및 세출 증가(퇴직자연금 및 노인연금 증가)에 기인함
- 2008년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예년 대비 성과목표 달성 수준 향상(2009년 5월 29일 제출)
 - 2008년 33개 미션, 133개 프로그램, 147개 성과목표 지수가 평가되었고, 이 지수 중 88%가 성과측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평가받음(비교: 2006년 49%, 2007년 80%)
 - 성과측정에 유용한 지수 88% 중 65%는 성과목표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나머지 28%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2008년 평가체계하에서는 각 세부예산(action)별 성과목표 달성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지 않았으므로, 2010년부터는 이를 보완할 예정

- 사회보장재정 부문(의무지출부문) 성과보고서 제출(2009년 5월 14일)
 - 사회보장재정은 프로그램예산에 의해 지수로 평가됨
 - 총 92개의 프로그램 중 71%가 목표지수에 도달했으며, 14%는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고 나머지 15%는 지수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지 못함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에 따르면 2009~2010년에 걸쳐 총 26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며, 특히 2009년에 집중적인 확장정책을 실시하여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2008년 12월 4일 발표)
 - 향후 2년간 아래 항목들에 총 260억유로 지출 예정(GDP의 1.3%)
 - 기업자금 지원에 116억유로 지출예정: 주로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을 활용(연구비 법인세 면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부가세환급정책, 기업지원 등)
 - 공공부문 투자에 105억유로: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진흥정책 등 중앙정부정책에 40억유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40억유로, 지방정부 활성화(부가가치세 보조기금(FCTVA))에 25억유로 집행예정
 - 경제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건설과 자동차분야에 20억유로 직접투자 예정
 - 고용증진과 가계지원에 20억유로 지출 예정(신규주택구입 대출 및 보증확대, 고용확대지원정책, 사회보장관련 지원금 등)
- 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은 2009년 1~2월에 발표된 자동차산업 지원과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2009년 3월 4일 발표)
 - 자동차 생산기업에 저리용자 제공과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69억유로 지원
 - 고용증진기금(Fonds d'investissement social) 추가지원, 가족복지수당 인상 및 소득세 경감 정책 등 사회안정화 부문에 2억 4천만유로 추가 지원
-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주요내용을 2010년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발표(2009년 10월 27일)
 - 총 70억유로 규모로 주로 R&D 부문 세제혜택,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공공부문투자과 고용안정정책에 사용될 예정
 - R&D 부문 세제혜택(감세 및 환급정책) : 25억유로 비용 예상

- 노후 자동차 지원 보조금 및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정책: 3억 4천만유로
- 공공투자특별예산(교통, 고등교육 및 연구 투자 등) 부문: 14억 5,400만유로
- 경제 및 고용활성화 특별예산(중소기업대출, 자동차산업지원, 고용증진투자 등): 20억 5천만유로
- 주거시설 정비 및 사회연대 책임 특별예산(주거시설 정비 및 재개발, 소외계층 지원): 5억 9,800만유로

나. 재정건전화 정책

-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2009년~2010년에 한시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2008년 12월 4일)
 - 경제위기 대응정책이 2009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190억유로로 매우 크나 2010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10억유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2009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
 - 2012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프로그램예산법(개정전)에서 제시한 재정수지보다 오히려 개선되어 GDP 대비 1.1%로 예측(프로그램예산법에서는 2012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1.2%로 예상)

- 2010년 예산안에서 지출 통제정책을 통해 재정안정화 추구(2009년 10월 20일)
 - (행정부 인력 감축) 2010년에 3만 4천명 인력 감축 계획, 2007년부터 시행된 인력감축으로 약 30억유로 절감
 -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 201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음
 - (정부 운영비용 절감) 모든 정부부처의 구조개혁으로 2009년~2010년에 동안 약 1%에 해당하는 운영비용 절감계획(예: 군기지 수 감소, 민원서비스 통합, 조달처 다각화 등)
 - (지방정부 보조금 통제) 지방정부 보조금은 물가상승률(1.2%)만을 반영하여 그 이상 지급되는 것은 통제됨

〈표 2-V-6〉 경제위기 대응정책 예산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십억유로)

	예산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2009	2010
세입	10.5	9.2	-0.5
연구비 법인세 면제(CIR) ¹⁾	3.8	3.8	-1.0
결손금 소급공제제도(RAD) ²⁾	1.8	1.8	-0.3
부가세환급정책	3.6	3.6	
기타감세정책	0.7		0.7
신규주택구입 대출 및 보증 확대(PTZ)	0.6		0.1
세출	11.5	9.9	1.6
공공투자정책	4.0	2.7	1.4
고용확대지원 및 기업지원정책	2.6	2.6	
건설 및 자동차부문지원	1.9	1.5	1.1
군납품업체 채무변제	0.5	0.5	0.0
부가가치세 보조기금(FCTVA) ³⁾	2.5	-	-
사회보장관련 지출(퇴직금등)	0.1	-	-
공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	4.0	-	-
총액	26.0	19.1	1.0

주: 1) CIR은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인건비, 연구개발 하청 작업, 특허출원 경비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연구관련 지출에서 감세 혜택을 부여(중소기업연구 DB)

2) RAD(Créance de report en arrière de deficits): 결손금소급공제제도로 이월결손금을 이미 이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음

3) FCTVA(Le Fonds de Compensation pour la TVA)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비기금이 투자시 지급한 되찾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복원시키기 위해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투자 지출시에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있음

자료: MISSION PLAN DE RELANCE DE L'ECONOMIE

4. 기타 정책이슈

- 2009년 4월 1일부터 퇴직자 연금 1% 인상 예정(2009년 3월 26일)
 - 퇴직자 연금은 2008년 9월 급격히 증가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미 0.8% 인상하였으나, 2009년 물가상승률(예상치) 0.4%를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에서 연 평균 1.3% 인상

- 세무당국 통합 후 1년 성과발표에 따르면 비용절감 및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2009년 4월 3일)
 - 2008년 4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General Tax Directorate(세금정산 및 부가가치세 징수)와 Public Accounting General Directorate(개인 세금징수)를 DGFiP로 통합
 - 세무행정비용 절감: 세입 대비 행정비용으로 계산한 업무효율성이 2004년 1.34%에서 2009년에는 1.15%(전망치)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납세자에게 단일화된 세제시스템(one stop service)으로 편리함 제공

- 정부부처 통합계획안 성과 발표(2009년 4월 8일)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부처는 380개로 줄일 예정(원 부처 수는 685부처로 약 50% 감축 예정)
 - 현재 계획하였던 정부부처 통합 및 감축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 각 부처 장관에게 5월 말까지 정부부처 통합 및 폐지계획안 제출 지시

- 정부정책개혁보고서(RGPP: Report on General revision of public policies) 결과 각료회의에 제출(2009년 5월 13일)
 - 정부정책개혁보고서의 제안 중 약 95%가 정부나 대통령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75% 정도는 수행되었고 25% 정도만 지연되거나 실행에 문제가 있음
 - 정부정책개혁보고서에 제시되었던 개혁은 이미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국방부를 현대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11개 핵심국방정책 실시
 - 농수산물 관련 부처 통폐합을 통해 농수산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 자동차등록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그린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전기차 개발 부문 투자(2009년 10월 1일)

○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20억유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함

– 이미 2010년 예산안에 전기자동차 사업부문에 1억유로를 배정

– 관련 예산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정부부문의 전기차 구입,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사용될 계획임

□ 미래투자전략특별위원회(la Commission sur les priorités stratégiques d'investissement et l'emprunt national)는 350억유로 규모의 미래성장계획안(Investir pour l'avenir)을 대통령에게 제출, 사르코지 대통령이 12월 14일 최종안 제시²⁰⁾

○ 미래성장계획(Investir pour l'avenir)은 장기정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함

– 미래투자전략특별위원회는 정치인, 기업인 및 각계전문가 20명으로 구성, 8월부터 활동하였으며 최종안은 2009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

○ 미래성장계획안의 핵심 전략은 5개로 다음과 같음

– ① 대학교육과 연구 발전(110억유로), ② 연구부문: 생명공학 및 산업화 가능 연구 지원(80억유로), ③ 중소기업혁신 및 진흥정책(65억유로), ④ 지속가능산업 지원: 원자력 및 환경친화자동차개발정책 등(50억유로), ⑤ 디지털 경제정책(45억유로)

○ 정부부문투자 350억유로와 민간부문투자 250억유로 규모(예상치)로 총 600억유로 규모 투입 예정

– 정부예산 350억유로 중 60%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120억유로는 2008년 금융권에 지원한 용자금 상환으로 충당할 예정

20) <http://www.emprunt-national-2010.fr/>

VI

독일 (FY2009: 2009. 1~2009. 12)

1. 세제개편

가. 세법개정

- 2009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독일 세법을 유럽연합의 세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원 : 2008년 11월 28일, 상원 : 2008년 12월 19일)
 - 2009년 1월 1일부로 배당금 원천과세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외국법인은 원천과세의 40% 환급)
 - 법인의 소유권 변경의 범위 확대 : 소유권 변동이 기업회생을 위한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 독일 거주 납세자는 정보제공 동의 규정에 응한 기타 EU국가로의 부기(bookkeeping) 이전이 가능
 - 2009년부터 외국법인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분류

- 개인 및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2009년 1월)
 - 개인 소득세 공제 범위 확대
 - 부동산 소유권 가족간 이양 시 조건부 비과세 혜택 제공
 -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자산, 농업 및 임업, 주식, 부동산에 대해 상이한 가치 평가 기준을 개정
 - 기업자산의 현재가치는 1년 이내 자산 양도시점에서 세금 납부시점까지로 측정
 - 농업 및 임업의 현재가치는 미래의 수입으로 정함
 - 주식시장 가격은 과세기준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가격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 자산 현재가격 측정 방법 사용

- 부동산의 현재가치 측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하며 비교가치, 수익, 소유물 가치 측정법으로 나누어 측정
 - 기업자산의 상속 변경 시 부분적 비과세 혜택
 - 개정된 세법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
- 유럽연합, 특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합의(2009년 3월 11일)
- 요식업체, 개인 거주지 리노베이션, 오디오북 등 유럽연합 국가 간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2009년 5월 5일, 의회 채택됨)
 - 모든 연방주는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이 현금수취 기준 5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 이자지급액 공제한도를 300만유로로 인상(2009년 6월 19일)
-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용 차감전이익(EBITDA)의 30%까지 공제 가능, 이자 초과액에 대해 기존의 100만유로에서 300만유로로 공제한도 상향 조정(2008, 2009 회계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
 - ※ 신임정부의 출현 후 개정된 세금감면 법안이 11월 9일 내각에서 승인, 이자지급액 공제한도 조정의 법적시한을 없앨 것 등 제의
-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저공해 차량, 중증 장애인 차량, 전기차량에 대한 과세혜택 부여 (2009년 7월 1일)
- 신규로 등록되는 경차 중에서 배기가스 EURO 6²¹⁾ 차량에 대해 2011~2013년까지 연 150유로의 과세 면제
 - 2006년말 이전 허가 승용차는 2006~2009년 저공해 장치 보완하여 배출기준을 준

21) Euro 5 기준 :

디젤 차량 배출량- 일산화탄소 500mg/km, 미세먼지 5mg/km(Euro 4 기준보다 80% 감소), 산화질소 180mg/km(Euro 4 기준보다 20% 감소), 탄화수소와 산화질소의 혼합 양 230mg/km
 가솔린, 천연가스, LPG차량- 일산화탄소 1000mg/km, 메탄이 혼합되지 않은 탄화수소 68mg/km, 총 탄화수소량 100mg/km, 산화질소 60mg/km(Euro 4 기준보다 25% 감소), 미세먼지 5mg/km

Euro 6 기준 :

모든 디젤 차량은 산화질소량을 줄일 것(Euro 5 기준치의 절반으로 줄임)

수하면 330유로까지 면세혜택

- 최초 등록시 배기가스등급 EURO 5에 해당하는 가솔린 차량은 2009년 1월 1일부터 1년간 비과세, 2008년 11월 5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중 최초 등록시 등급 EURO 5 혹은 6 취득 차량은 24개월까지 비과세 혜택(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 전기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 5년 이후부터는 감면세율 적용
 - 1급 장애인에 자동차세 면제, 2급에게는 50% 면제(1인당 한 대)
- 2010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수당 지급 등 혜택 부여 (2009년 12월 22일)
- 성장촉진법에 의해 유자녀 가정은 자녀수당증액 혜택(자녀당 20유로씩 수당 증액)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9%에서 7%로 인하
 - 건강보험 관련한 각종 혜택을 확대 실시하여 연간 100억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며 수혜자는 1,6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나. 조세 전망

- FY2009-FY2012 조세수입 1,520억유로 감소 전망(2009년 5월 14일)
- 정부는 2009~2012년 세수가 3,16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1,52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520억유로 중 970억유로는 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결과
 - 2009년도 세입은 6%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며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규모는 500억유로로 예측
- 11월 현재 재정수입 추정치 30억유로가량 감소(2009년 11월 6일)
- 2009년 재정수입은 지난 5월 예상치보다 30억유로 하락한 5,241억유로로 추정
 - 30억유로의 세수 감소는 주정부에서 20억유로, 지방정부에서 10억유로 발생
 - 시민 부양 정책의 시행 및 기타 법 개정으로 세수 감소

2. 예산 및 결산

가. 2009년도 예산(2009년 1월 30일 발표)

-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독일경제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기업투자 위축, 설비 및 기기 투자 규모 감소,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는 불가피
 - 2008년 4.5%의 성장률을 보인 독일 수출은 2009년 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표 2-VI-1〉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8~2012) - 추경예산 반영 전(2008.8 기준)

(단위: 십억유로)

	2007	2008 (추정치)	2009 (예산안)	Financial Plan		
				2010	2011	2012
I. 재정지출	270.4	283.2	288.4	292.4	295.2	300.6
전년 대비 증가율(%)	3.6	4.7	1.8	1.4	1.0	1.8
II. 재정수입	270.4	283.2	288.4	292.4	295.2	300.6
조세 수입	230.0	238.0	248.7	255.4	266.3	276.0
세외 수입	26.0	33.3	29.2	31.0	28.9	24.6
신규차입	14.3	11.9	10.5	6.0	-	-
III. 투자지출	26.2	24.7	25.9	25.9	25.5	25.3

주: 추경반영 후 수치는 아래 2009.1.27 기사 내용의 표 참조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나. 추경

1) 1차 추경예산안 결정(2009년 1월 27일)

- 2009년도 재정지출은 경기부양책 자금조달로 인해 2,975억유로로 증가, 이에 따른 중기 조세수입 및 투자지출 역시 상승
 - (지출규모) 경제위기에 따른 1, 2차 경기부양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출 상승세는 불가피

- (재정지출) 2009년 1월 발표된 재정지출 규모는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총 2,975억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43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2009년 1월 발표된 조세수입은 2,332억유로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세금 감면정책으로 인해 감소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입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신규차입) 1월 기준 368억유로로 예상됨
- (투자지출) 287억유로로 전년 대비 40억유로 증가

〈표 2-VI-2〉 2009년도 연방정부 추경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09	추경예산	2009년도 합계
I. 재정지출	290.0	7.5	297.5
전년대비 증가율(%)	2.4		5.1
II. 재정수입	290.0	7.5	297.5
조세 수입	244.1	-10.9	233.2
세외 수입	27.4	0.2	27.6
신규차입	18.5	18.3	36.8
III. 투자지출	27.2	1.5	28.7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월

- 2009년 예산의 신규차입은 185억유로, 추경예산 포함시 총 차입금 규모는 368억유로로 2배 가까이 증가
 - 고용 및 경기 안정에 관한 협약(Pact for Employment and Stability)²²⁾에 따른 세금 감면 고려
 - 독일 건강보험제도(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추가 32억유로 배정
 - 통근비 세금면제 혜택 및 고용시장 조건 변경 내용 포함
 - 신규 차입금이 투자지출을 81억유로 상회(신규차입 368억-투자지출 287억)
 - 독일 기본법 115조에 의하면 재정수입 내의 신규차입 금액은 투자지출액을 상회

22) 고용 및 경기안정 협약은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독일 정부가 채택한 정책으로 공공투자, 경제활동의 자금 조달, 고용 및 기술의 지원, 세금 감면, 지속적 재정정책이라는 다섯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 2009년 추경예산과 별도로 고용 및 경기안정 협약을 위해 169억유로 규모 특별 투자 및 상환 펀드 조성
 - 연방정부 투자에 40억유로, 주·지방정부 투자에 100억유로, 자동차 수요 촉진을 위해 15억유로, 중형 산업 지원에 9억유로, 무선통신 지원비로 5억유로 조성

- 추경예산과 투자 및 상환 펀드를 합치면 2009년도 독일정부의 차입 규모는 450억~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독일 정부의 차입금 증가 원인은 크게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현 경기침체의 대응방안으로 독일정부에서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 총 800억 유로에 육박하는 1, 2차 경기부양책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 마련
 - ② 추경예산에 이어 특별투자 및 상환 펀드 조성에 따라 차입금 증가
 - ③ 경제위기시 발생하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가 원인, 세수 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경기침체의 대응방안으로 경기부양책을 마련, 이의 실행을 위한 지출 증가가 불가피

※ 1차 추경예산안 주요 날짜

- 2009년 2월 20일, 상원 1차 추경예산안 통과
- 2009년 3월 16일, 추경예산 시행

2) 독일 내각 2차 추경예산

- 독일 수출 둔화 현상, 실업률 증가(327만명 → 372만명)에 따라 2차 추경예산안 결정 (2009년 5월 27일)
 - 총 차입금 규모는 476억유로이며 특별투자 및 상환기금과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은 제외된 수치

- 독일 내각에서 추경예산안 결정 후 하원 심의 중 신규차입금이 15억유로 증액되어 상원까지 통과(2009년 7월 10일)
 - 차입금은 총 491억유로로 이는 1차 추경예산에서 결정한 총 차입 규모보다 122억유로 증가한 형태
 - 투자 및 상환기금(ITF)과 금융시장안정기금(SoFFin) 추가 시 부채규모 증가
 - 정부는 당초 2009년 예산안에서 지출액으로 2,976억유로를 제시했으나 1, 2차 추경예산 후 지출액은 3,033억유로으로 증가

⇒ 부채 증가 원인 분석

- ①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1/4분기 독일 경제 악화
- ② 독일 GDP의 더딘 성장, 경기 악화의 대응 방안이 필요
- ③ 이 시점에서 증세정책이나 생산량 감소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④ 1차 추경에서 예상한 세입 규모에 비해 현재 91억유로 감소
- ⑤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보조수당 및 Hartz IV²³⁾ 지원액 증가
- ⑥ 정부는 40억유로 상당의 1년 이상 만기 건강분야 대출금 마련

※ 기관별 2차 추경예산안 통과 일자

- 정부-2009년 5월 27일
- 하원-2009년 7월 2일
- 상원-2009년 7월 10일

23) Hartz IV의 내용: Hartz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해 2002년도에 도입된 개념으로 총 4단계로 형성됨. 2005년 1월에 처음 시행된 Hartz IV는 기존의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보조금(Arbeitslosenhilfe)과 사회보조금(Sozialhilfe)의 통합을 가져왔음. 2008년 7월 기준으로 독신가정에 월 351유로와 기본 주택이 제공됨.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둔 경우 추가 수혜 가능. 실업보조금(현재는 Arbeitslosengeld II로 불리움)은 수혜자의 저축예금, 종신보험,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됨. 무직자가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국가에서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줌.

다. 2010년 예산안 및 09~13년도 중기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안(2009년 7월 20일)에 따르면 2010년까지 실업률이 증가할 전망이며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 2009년도 실업자는 370만명, 2010년에는 46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의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육아수당 증액, 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수출은 2010년에 회복 조짐
 - 2011~2013년, 연간 GDP 2%의 성장 기대

〈표 2-VI-3〉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9~2013)

(단위: 십억유로)

	2008	2009 (추정치)	2010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11	2012	2013
I. 재정지출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전년 대비 증가율(%)	4.4	7.4	8.0	-2.0	-0.9	-1.5
II. 재정수입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조세수입	239.2	224.1	213.8	221.9	232.4	240.6
세외수입	31.5	30.2	27.8	27.5	27.2	27.0
자본수입	6.7	2.0	2.3	3.3	3.6	3.6
신규차입	11.5	49.1	86.1	71.7	58.7	45.9
III. 투자지출	24.3	32.8	48.6	43.3	39.1	35.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9 bis 2013, 2009년 7월

- 2010년도 실질차입 규모는 393억유로로 GDP의 약 1.6%에 해당하며 2011년부터 적용될 신규 재정준칙에 따르면 적자규모를 매년 0.2%씩 감소시켜 2016년까지 GDP 대비 0.35%까지 낮춤

〈표 2-VI-4〉 2010년도 신규 재정적자법 수치 산정

(단위: 십억유로)

2010년도 정부 차입규모	86.1
금융 차입	21.0
경기부양을 위한 차입	25.8
실질 차입 (structural net borrowing)	39.3
명목 GDP (2009년 봄 수치)	2,388.0
GDP 대비 실질 차입규모	1.6%
2016년도 0.35% 달성 위한 감소 비율	0.2%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예산안 및 09~13년 중기재정계획」, 2009년 7월

- 정부의 2010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은 2,138억유로로 전망
 - 이는 2009년도 2차 추경의 수입보다 102억유로 감소한 수치로서, 작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추정치보다 416억유로 감소
 - 경기회복과 함께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13년도 조세수입은 2,406억유로로 전망
 -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본수입의 활용으로 소량의 수입을 기대

- 2009년 12월에 발표된 2010년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858억유로의 차입금을 통해 자녀혜택, 교육 및 리서치 분야 지원 증가(2009년 12월 16일)
 - 연방정부의 2010년도 총지출액은 3,254억유로이며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임
 - 조세수입은 2,119억유로로 이는 2006년도 예산과 유사한 규모
 - 연방정부는 2010년에 1.2%의 플러스 성장을 예측
 - 경제위기의 여파로 현재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78%에 육박하며 2010년도 적자규모는 7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족 및 자녀수당 혜택은 32억유로가량 증가
 - 교육, 리서치부문 및 Hartz IV에 대한 지원 금액이 총 50억유로 추가되었으며 정부는 이 중 리서치에 4억유로, 교육에 3억 5천만유로를 투입할 계획

〈표 2-VI-5〉 연방정부 2010년도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08	2009 (2009년2차추경반영)	2009 (2009년11월 조세수입반영)	2010 (예산안)
I. 재정지출	282.3	303.3	294.5	325.4
전년대비 증가율(%)	4.4	7.4	4.3	7.3
II. 재정수입	282.3	303.3	294.5	325.4
조세수입	239.2	224.1	227.0	211.9
세외수입	31.5	30.2	30.0	27.7
자본수입	6.7	2.0	2.0	2.3
신규차입	11.5	49.1	37.5	85.8
III. 투자지출	24.3	32.8	28.5	28.7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2월

라. 결산

1) 2008년도 결산 발표(2009년 6월 10일)

- 2008년도 재정지출은 2,823억유로, 재정수입은 2,705억유로이며 신규차입은 115억유로
 - 총 재정지출은 기존 예상치인 2,832억유로보다 9억유로 하락한 금액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9억유로 증가(증가율 4.4%)
 - 총 재정수입은 2,705억유로로 전년 대비 148억유로 증가(증가율은 5.8%), 조세수입은 2,392억유로이며 세외수입은 312억유로에 해당
 - 적자규모는 118억유로 규모로 이는 전년 대비 19.7% 개선된 상황
 - 신규차입 및 투자지출은 각각 115억유로, 243억유로

〈표 2-VI-6〉 2008년도 결산 내용

(단위: 십억유로, %)

	2008년 예산	2008년 1~12월	2007년 1~12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지출	283.2	282.3	270.4	+11.9	+4.4
재정수입	271.1	270.5	255.7	+14.8	+5.8
조세수입	238.0	239.2	230.1	+9.2	+3.9
세외수입	33.1	31.2	25.7	+5.6	+21.7
적자규모	-12.1	-11.8	-14.7	+2.9	+19.7
신규차입	11.9	11.5	14.3	-2.8	-19.5
Munzeinnahmen	0.2	0.3	0.4	-0.1	-27.3
투자지출	24.7	24.3	26.2	-1.9	-7.2

자료: 독일 재무부, 「2008년도 결산 보고서」, 2009년 6월

2) 2009년도 상반기 보고서 발표²⁴⁾(2009년 8월 20일)

- 2009년 상반기 연방지출은 1,415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1.3% 상승
 - 고용 프로모션 관련 지출이 상반기에 발생하지 않아 지출 증가율이 미미하며 이를 포함하면 지출은 4.1%로 증가
 - 투자지출은 2009년 7월말 기준 105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
- 순차입을 제외한 2009년 상반기 총수입은 1,26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 3억 유로 증가
 - 이 중 세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인 18억유로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위기 대응 정책인 소득세 완화 및 자녀수당 증액의 결과
 - 2008년의 법인세 감면에 이어 2009년도부터 자본소득세는 25%로 일률과세
 - 일률과세 대상은 배당금, 저축예금 이자 등 모든 자본소득세에 적용
- 상반기 재정적자는 147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상승

24) 2009년도 예산 2008년 12월 29일 관보에 게재, 법적 효력 발생
 1차 추경예산 2009년 3월 5일 법적 효력 발생
 2차 추경예산 2009년 7월 31일 법적 효력 발생

-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2013년 중기 재정계획안이 2009년 6월 24일 내각에 의해 제출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증가가 불가피하며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8% 증가 예상
 - 2010년 세입 규모는 2,138억유로로 예상하며 이는 2009년의 2,241억유로보다 감소
 - 내년도 차입 규모는 861억유로로 전망

〈표 2-VI-7〉 2008년 대비 주요 부문별 지출 변화

(단위: 십억유로, %)

	2009년 예산안 (추경포함)	2009년 1~6월	2008년 1~6월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년 대비 지출 증가 항목					
건강보험 관련	7.2	3.7	1.3	2.4	+184.6
철도	5.5	2.4	1.3	1.1	+82.0
국방, 민방위	31	15.2	14.3	0.9	+5.9
연금보험	78.9	44.9	44.4	0.5	+1.1
전년 대비 지출 감소 항목					
노동정책	45.9	17.7	21.2	-3.5	-16.7
이자부문	41.4	18.2	20	-1.8	-8.8
관광업 지원	1.6	1.4	1.9	-0.4	-23.9

자료: 독일 재무부 반기 보고서, 2009년 8월

-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증가
 - 연금은 2008년도 25억유로 규모였으며 2009년 6월까지 40억유로로 증가
 - 제 2차 경기부양책에서 2009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료를 14.9%로 인하하겠다고 명시, 이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건강보험부문 예산이 40억유로 증가하여 총 72억 규모
 - 2010년부터 1,660만명의 시민에게 총 100억유로 규모의 건강보험 관련 혜택 제공
- 철도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철도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민영화에 기인함
- 고용시장 지원에 대한 지출은 약 34억유로 감소

- 이는 작년까지 월 단위로 지출이 발생했던 데 반해 2009년부터는 연말에 한번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

□ 2009년 연방 예산 부문별 지출 내역

(단위:%, 억유로)

부 문	비중	지출 금액	설 명
사회보장	50.4	1,527	
일반 서비스	17.7	536	국방, 민방위, 경제협력, 시민안전 및 질서 등을 포함
교육, 훈련, 과학, 리서치, 문화	4.8	146	
도로, 철도	4.3	129	이는 1차경기부양책에 의해 증액된 금액
경제 활성화 정책	2.4	74	
기타	20.4	507	주택, 건강, 스포츠, 연방정부 부채 이자지급 등을 포함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상반기 보고서, 2009년 8월

□ 2009년 연방예산 수입 내역

- 세입은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241억유로로 전체 수입의 약 81.2%에 해당
- 기타 수입은 298억유로, 순차입은 491억유로에 해당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 5,000억유로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2008년 10월 13일)
 - 구제금융안 발표, 금융시장 안정화펀드를 설립하여 자금 확보 계획
 - 은행 간 거래, 긴급 유동성 장애 극복, 은행 회계규정 완화 조치

- 310억유로 규모의 제1차 경기부양책 발표(2008년 11월 5일)
 - 기업투자 활성화, 에너지 효율적 건물의 건립, 지역 인프라 확충
 - 가계소비 촉진 위해 자동차세 면제,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강화, 실업보조금 수혜 기간 연장 등
 - 이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적용

- 재무부, 500억유로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책 결정(2009년 1월 14일)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2년에 걸쳐 연방, 주, 지방재정에 사용
 - 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누진세 범위 변경, 건강보험료 인하, 자녀수당 제공 등
 - 공공기관에 투자, 에너지 효율 및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제시

- ※ 기관별 2차 경기부양책 통과 일자
 - 하원 - 2009년 2월 13일 통과
 - 상원 - 2009년 2월 20일 통과

- 경기부양을 위해 169억유로 규모의 투자 및 상환 펀드 조성(2009년 2월 3일)
 - 169억유로의 특별기금 관련 사항 및 상환 계획을 법으로 규정
 - 기금은 2009년과 2010년 2년간 지역, 연방투자, 기업 등에 사용

- 1, 2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효과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2009년 9월 22일)
 - 지역투자 활발, 100억유로 투자액 중 절반 이미 배정 : 60억유로는 주, 지방재정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40억유로는 이미 건물개선 등에 사용 확정
 - 연방기금의 약 22%는 공공투자에 지출 : 이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시하는 동 부문 지출 비율인 14%를 8%p 상회

〈표 2-VI-8〉 독일의 제 1,2차 경기부양책 내용

구분	정책 내용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월 1일부터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세금인하, 자녀수당 지급 및 증액 •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세율 14.6%에서 14%로 인하 • 2009년 1월 14일부터 9년 이상 된 차량을 유럽 배기가스 기준(Euro 4)¹⁾ 충족하는 신차로 교체시 인당 2,500유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자동차업계 보조 및 소비 촉진 장려 - 구입 차량은 늦어도 2010년 6월 30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 9월 2일 기준 배정된 예산 50억유로가 모두 소진된 상태이며 현재 15,000명의 신청자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옴 • 에너지 효율 고려한 건물 건립 • 근로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실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정부 소유이자 독일 최대의 특수은행) 자금 조달 및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형 기업에 150억유로 지원 - 대기업에 250억유로 지원 - 추가 750억유로는 배서 및 담보 형태로 기업에 제공 • 기업 R&D 투자에 2009~2010년 2년간 총 9억유로 지원 • 연방정부는 2009~2010년 공공기관 및 R&D 투자를 위해 총 170억유로 지원 • 주 및 지방은 교육 인프라 및 도시, 도로 건설 자금으로 100억배정 • 단기 근로자 계약 조건 개선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중소기업에 투자 • 8월 15일 기준, 2만 여개의 프로젝트에 총 74억유로가 투입됐으며 이 중 2/3 가량이 학교 및 병원 지원금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안정법 제정, 특별기금인 금융시장안정기금(Soffin) 설치

주: 1) EURO 4:

디젤 차량 배출량 - 일산화탄소 1000mg/km, 미세먼지 2.5mg/km, 산화질소 250mg/km, 탄화수소와 산화질소의 혼합 양 300mg/km

가솔린, 천연가스, LPG차량 - 일산화탄소 1000mg/km, 총 탄화수소량 100mg/km, 산화질소 80mg/km

나. 재정건전화 정책

- 독일정부는 2011년부터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 제시(2009년 2월 13일)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반경기정책을 시행중인 독일은 유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규칙에 부응하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GDP 대비 부채비율을 매년 0.25%씩 감소시켜 0.35%를 달성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신규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추진
 -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억유로 지원

4. 기타 정책이슈

□ 독일 연방주의 개혁 2단계 내용발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주요 과제(2009년 7월 13일)

○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 개정안(기본법 제 109조)에 따르면 실질 차입금액이 법이 허용하는 비율 초과시 차액은 통제계정에 보관해야 하며 이 계정의 액수는 전체 GDP의 1.5%를 상회할 수 없음

- 이 법은 2011년부터 효력이 발생,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함
- 재무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 등은 안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건전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매년 발표 및 논의

※ 기관별 계획 통과 일자

내각 - 2009년 3월 11일, 하원 - 2009년 5월 29일, 상원 - 2009년 6월 12일

□ 상원, 독일 탈세방지법안 승인(2009년 7월 10일)

○ 2010년도부터 OECD 국가간 교역 시 OECD의 탈세방지법안 규칙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탈세방지법 적용

- 제3자 거래시 서류 제출 규정 강화
- 세무기관에 업무 위임시(특정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 요구시) 납세자는 반드시 위임권한을 기관에 부여하여야 함
- 외국법인은 주식의 10% 이상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중인 개인에 대해 조회하지 않을 경우, 원천과세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간소득, 투자액, 임대소득 등의 합계 금액이 50만유로를 상회하는 납세자는 6년간 소득 내용을 기록해야 함

※ 탈세방지법안 기관별 승인 일자

내각 - 2009년 4월 22일, 하원 - 2009년 7월 3일, 상원 - 2009년 7월 10일

VII

캐나다 (FY2009-10: 2009. 4~2010. 3)

1. 세제개편

가. 개인과세

- 기초개인공제(The Basic Personal Amount) 및 하위 2단계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08년 기준보다 각각 7.5%씩 인상하여 국민의 세부담 경감
 - 기초개인공제는 '08년 9,600캐나다달러에서 7.5% 상승하여 10,320캐나다달러임
 -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37,885캐나다달러에서 40,726캐나다달러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75,769캐나다달러에서 81,452캐나다달러로 조정

- 국가육아혜택(NCBs: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s) 및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지원 확대
 - 이러한 지원 확대로 2자녀 가정에서 최소 76캐나다달러에서 최대 436캐나다달러의 추가 혜택이 돌아감

- 근로소득세금혜택(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의 확대
 - WITB의 세액공제율(Phase-in rate)을 5%p(20% → 25%) 인상하고 세액공제 상한을 가구구성에 따라 1.5~1.8배로 증액
 - 2009 과세연도 및 이후의 WITB* 관련 예산을 5.8억캐나다달러 증액
 - * WITB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빈곤층이 일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음. 환급형 세액공제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 '09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는 연령세액공제(Age credit) 인상
 - 연령세액공제 1,000캐나다달러만큼 증액(5,408캐나다달러 → 6,408캐나다달러)

-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 주택수리세금환급(HRTC: Home Renovation Tax Credit) 제도를 통해 2009~10년 25억 캐나다달러 투자
 - '09년 1월27일부터 '10년 2월1일까지 1가구 1회에 한하며 주택수리에 비용을 쓴 캐나다 거주자에게 최대 1,350캐나다달러까지 감세혜택
 - 1,000캐나다달러 이상 1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주택수리 혹은 자재구입 비용에 대해 15%의 세금환급을 제공
 - 생애 첫 주택세액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를 통해 첫 주택마련 소비자에게 최대 750캐나다달러 세액공제
 -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구매계획(HBP: Home Buyers' Plan) 제도 개선
 - HBP는 은퇴연금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 RRSP에서 인출하여 다운페이로 쓸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RRSP의 인출한도를 기존 20,000캐나다달러에서 25,000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
 - 출금액은 그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금 2년 후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RRSP로 재적립해야 함

나. 법인과세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소규모사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11%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소득판정 기준을 40만캐나다달러에서 50만캐나다달러로 조정

- 투자촉진을 위해 50% 정액 가속상각법 적용 연장
 - '07년부터 적용되던 제조업 기계설비에 대한 50% 정액 가속상각법을 FY2010~11까지 적용 연장

-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자본투자충당금(Capital Cost Allowance: CCA) 면세혜택을 제공
 - '09년 1월 27일부터 '11년 1월 31일까지 컴퓨터 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율을 100%로 하여 즉시 상각 처리

-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 삭제
 - 캐나다 기업이 외국 자회사에 대여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공제에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캐나다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삭제

다. 세제개편 혜택

-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2,200억캐나다달러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 2,200억캐나다달러 중 개인에게 73%(GST 35%, 개인소득세 38%), 기업에게 27% 혜택이 돌아감

〈표 2-Ⅶ-1〉 Budget 2009에 제안된 조세 경감

(단위: 억캐나다달러,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총계	
							금액	비율
GST ¹⁾	116	115	122	131	138	146	768	35
개인소득세	120	153	131	136	142	149	831	38
법인세	53	71	86	104	138	149	602	27
총계	289	339	339	371	418	444	2,200	100

주: 1) GST(Good & Service Tax: 재화 및 용역세)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Budget 2009 (2009. 01. 27)²⁵⁾

- **(경제전망)** 경제불황으로 인해 '09년 실질 GDP성장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상승 예상
 -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캐나다 경제 또한 위축되어 '09년 실질 GDP성장률은 0.3%(’08년 11월 전망치)에서 -0.8%로 하향 조정
 - '09년 실업률은 7.5%로 전년 대비 1.4%p 상승 예상

- **(재정전망)** FY2009-10 총세입 감소 및 프로그램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전망
 - (총세입) FY2009-10 총세입은 2,249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나 경기회복과 함께 FY2010-11부터 증가할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09-10 프로그램지출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291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FY2010-11부터는 그 증가율이 차츰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FY2009-10 재정수지는 337억캐나다달러, FY2010-11에는 298억캐나다달러 적자가 발생하나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수지도 회복되어 FY2013-14에는 7억캐나다달러 흑자로 돌아설 전망

- **(총부채)** FY2009-10 총부채는 4,924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31.6%로 전망
 -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수준은 선진 7개국(G7)중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FY2011-12부터는 총부채도 서서히 감소하여 FY2013-14에는 2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25) 캐나다 Budget은 보통 1~3월에 발표됨

〈표 2-VII-2〉 Budget 2009의 재정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Actual	전망치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총세입	2,424	2,364	2,249	2,399	2,594	2,764	2,943
프로그램 지출	1,995	2,068	2,291	2,365	2,351	2,445	2,541
이자지출	333	307	295	333	372	392	396
총지출	2,328	2,374	2,586	2,697	2,723	2,837	2,937
재정수지	96	-11	-337	-298	-130	-73	7
부채	4,576	4,587	4,924	5,222	5,352	5,424	5,418
총세입	15.8	14.7	14.4	14.7	15.0	15.0	15.2
프로그램 지출	13.0	12.9	14.7	14.5	13.6	13.3	13.1
이자지출	2.2	1.9	1.9	2.0	2.1	2.1	2.0
총지출	15.2	14.8	16.6	16.6	15.7	15.4	15.2
부채	29.8	28.6	31.6	32.1	30.9	29.5	28.0

□ (예산기조)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을 담은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함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 국민에게 세제 및 일자리 지원 혜택(세제혜택, 고용보험 기술교육지원 확대, 고급인력 지원프로그램, 고용보험 동결 등)
- ③ 주택시장 부양 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나.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09.09)²⁶⁾

- (경제전망) '09년 실질GDP성장률을 -2.3%, 실업률은 8.5%로 조정하여 연초 예산안의 전망에 비해 '09년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향조정했던 '09년 실질 GDP성장률을 다시 1.5%p 하향조정: -0.8%('09년 1월 전망치) → -2.3%
 - 실질GDP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3%, 2010-14년에는 평균 2.9%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09년 연초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7.5%보다 1%p 증가한 8.5%로 수정
 -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은 '09년 8.5%에서 '10년 9.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경기회복과 함께 서서히 감소하여 '15년 6.5%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연초 예산안에 비해 FY2009-10 총세입은 더욱 감소하는 반면 프로그램지출은 더욱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
 - (총세입)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감소로 인하여 FY2009-10 총세입은 연초 예산안에 비해 83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16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로 조정
 - 향후 3년간(FY2010-11~FY2013-14) 세입전망도 연초 예산안에 비해 모두 하향조정
 - (프로그램지출) 경기부양정책으로 FY2009-10 프로그램지출은 연초 예산안에 비해 128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41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8%)로 조정
 - 향후 3년간(FY2010-11~FY2013-14) 프로그램 지출 전망도 연초 예산안 대비 모두 상향조정
 - (재정수지) FY2009-10 재정수지는 연초 예산안에 비해 더욱 악화될 전망
 - 재정적자는 예측치보다 222억캐나다달러 증가한 55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7%)로 전망

26) Fiscal Updates는 Budget 발표 이후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update한 경제·재정보고서로 가을에 발표됨

- (부채) FY2009-10 부채는 5,19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4.0%)로서 연초 예산안에 비해 2.4%p 상향조정
 - 향후 부채 비율도 2~5%p 상향 조정

〈표 2-Ⅶ-3〉 재정전망 조정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세입	2,331	2,166	2,331	2,509	2,687	2,847	2,982
프로그램지출	2,079	2,419	2,447	2,406	2,468	2,539	2,614
이자지출	310	307	337	377	412	421	420
총지출	2,388	2,725	2,784	2,783	2,881	2,960	3,034
재정수지	-58	-559	-453	-274	-194	-112	-52
정부부채	4,637	5,196	5,649	5,923	6,117	6,229	6,281
세입	14.6	14.2	14.7	15.0	15.2	15.3	15.3
프로그램지출	13.0	15.8	15.4	14.4	14.0	13.6	13.4
이자지출	1.9	2.0	2.1	2.3	2.3	2.3	2.1
재정수지	-0.4	-3.7	-2.8	-1.6	-1.1	-0.6	-0.3
정부부채	29.0	34.0	35.5	35.4	34.6	33.5	32.1

다. 추경(Supplementary Estimates²⁷⁾)

- FY2009-10 1차 추경으로 총 590.8억캐나다달러 편성 : Supplementary Estimates(A, 2009.05)
 - 1차 추경편성된 590.8억캐나다달러는 일반예산(Budgetary)²⁸⁾ 65.6억캐나다달러, 투융자예산(Non-Budgetary)²⁹⁾ 525.2억캐나다달러로 구성됨
 - 일반예산 중 의결항목(Voted Appropriations)³⁰⁾에 50.1억캐나다달러, 법정항목

27) 캐나다는 평균 연 2회의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보통 봄(3~5월 중)과 가을(9~11월 중)에 이루어짐

28) 일반예산은 일반적인 정부의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29) 투융자예산은 융자(loan), 투자(investment), 선금금(advances)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

30) 의결항목은 세출예산서(Appropriation bill)를 통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지출항목임

- (Statutory Authorities)³¹⁾에 15.5억캐나다달러 증액
 - 투융자예산 중 의결항목에 2.5억캐나다달러, 법정항목에 522.7억캐나다달러 증액
- FY2009-10 2차 추경으로 총 309.5억캐나다달러 편성 : Supplementary Estimates(B, 2009.11)
 - 2차 추경편성된 309.5억캐나다달러는 일반예산 64.8억캐나다달러, 투융자예산 244.7억캐나다달러로 구성
 - 일반예산은 의결항목에 48.7억캐나다달러, 법정항목에 16.1억캐나다달러 추경예산 편성
 - 투융자예산 중 의결항목에 0.5억캐나다달러, 법정항목에 244.7억캐나다달러 증액
- 본예산 2,361억캐나다달러에서 1차추경 66억캐나다달러, 2차추경 65억캐나다달러 추가 되고 조정과정을 거쳐 총 2,725억캐나다달러로 결정됨

〈표 2-Ⅶ-4〉 본예산과 추경 비교

(단위: 억캐나다달러)

FY2009-10 본예산(A)	2,361
1차 추경(B)	66
2차 추경(C)	65
소계(D=A+B+C)	2,492
조정(E)	233
총계(D+E)	2,725

31) 법정항목은 입법에 의하여 지출이 허가된 법령에 의한 지출항목임

라. 결산 : Annual Financial Report(2009.10.16)³²⁾

- (세입) FY2008-09 세입은 법인세 및 GST 감소 등으로 인해 2,330.9억캐나다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93.3억캐나다달러(3.8%) 감소
-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111.5억캐나다달러(27.4%) 감소한 294.8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GST는 전년 대비 41.8억캐나다달러(14.0%) 감소한 257.4억캐나다달러임
- (프로그램지출) FY2008-09 프로그램지출은 2,078.6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83.6억캐나다달러(4.2%) 증가
- 프로그램지출 증가 원인은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혜택 개선과 도시 및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때문임
 - EI 혜택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여 163.1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캐나다의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은 26.6% 증가하여 9.9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재정수지) FY2007-08에는 96억캐나다달러로 흑자인 반면, FY2008-09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58억캐나다달러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 FY2008-09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임

〈표 2-VII-5〉 FY2009-09의 재정상황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07~08	2008~09
세입	2,424	2,331
프로그램 지출	1,995	2,079
이자지출	333	310
총지출	2,328	2,388
재정수지	96	-58
정부부채	4,576	4,637
세입	15.8	14.6
프로그램 지출	13.0	13.0
이자지출	2.2	1.9
재정수지	0.6	-0.4
정부부채	29.9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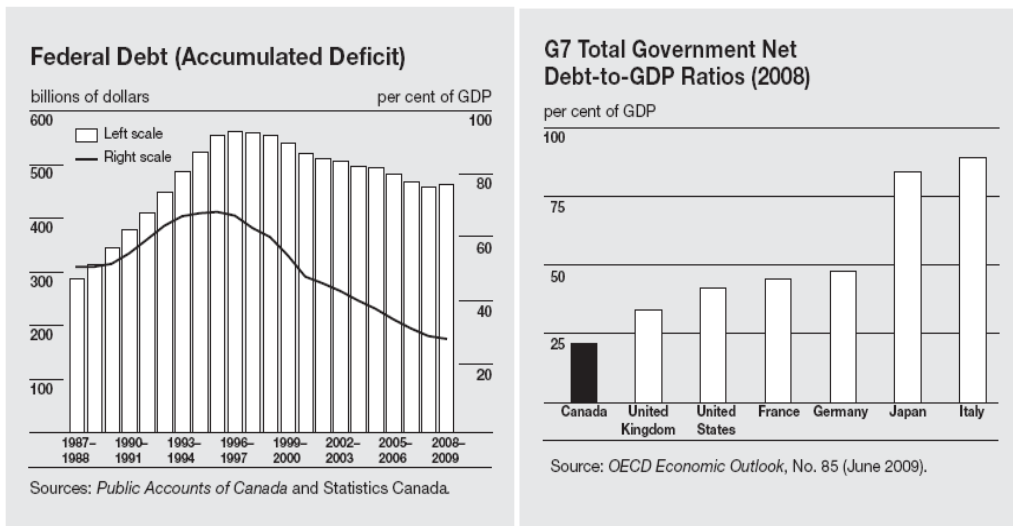
32) Annual Financial Report는 보통 가을(9~11월)에 발표됨

□ (부채) FY2008-09 부채는 전년대비 61억캐나다달러 증가한 4,637억캐나다달러를 기록 (GDP 대비 29%)

○ GDP 대비 부채는 FY1995-96 최고수준인 68.4%를 기록하고 서서히 감소하여 FY2008-09에 이르러 역사상 최저치인 29%까지 감소함

- 이는 2008년 기준 선진 7개국(G7)중 최저 수준임

[그림 2-Ⅶ-1] 정부 부채



3. 경제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1) 캐나다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 2009년 예산안에 포함 (2009.01.27)

- 캐나다 연방정부는 400억캐나다달러 규모(GDP 대비 2.5%)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년간 총 516억캐나다달러 규모(GDP 대비 3.2%)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
 - 캐나다 국민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정책에 128억캐나다달러 지원
 - 주택시장 활성화 78억캐나다달러 투자 → 기대효과 약 15억캐나다달러
 - 기반시설구축 118억캐나다달러 투자 → 기대효과 약 89억캐나다달러
 - 기업 및 커뮤니티 75억캐나다달러 지원 → 기대효과 13억캐나다달러

〈표 2-Ⅶ-6〉 경기부양정책 효과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 분	2009	2010	Total
• 캐나다 국민들에게 혜택 및 지출부양	58.8	69.5	128.3
• 주택시장 활성화	53.7	24.0	77.6
- 기대효과	7.3	7.5	14.8
• 기반시설구축	62.2	56.1	118.3
- 기대효과	45.3	43.7	89.0
•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52.7	22.6	75.3
- 기대효과	13.0	0.0	13.0
총 경기부양 지출	227.4	172.0	399.4
총 경기부양 효과	293.0	223.2	516.1
총 경기부양 지출(GDP 대비 %)	1.5	1.1	2.5
총 경기부양 효과(GDP 대비 %)	1.9	1.4	3.2

2) Canada's Economic Action Plan(4차보고서, 2009.12.02)

- 캐나다 경기부양책 1차보고서(2009.03)는 예산의 90%의 권한을 확정하고, 2차보고서(2009.06)에서는 경기부양 예산의 80%, 3차보고서(2009.09)에서는 90%가 집행되었음을 발표
- (4차보고서) FY2009-10의 경기부양 예산 280억캐나다달러 중 약 97%가 집행되었음
 - 캐나다 국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30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실업자 지원에 29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일자리 창출 85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6%,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17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1%,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에 118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8%를 집행함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을 통해서 12,000개의 프로젝트가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
 - 8,000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FY2010-11까지 4,000개 프로젝트가 새로이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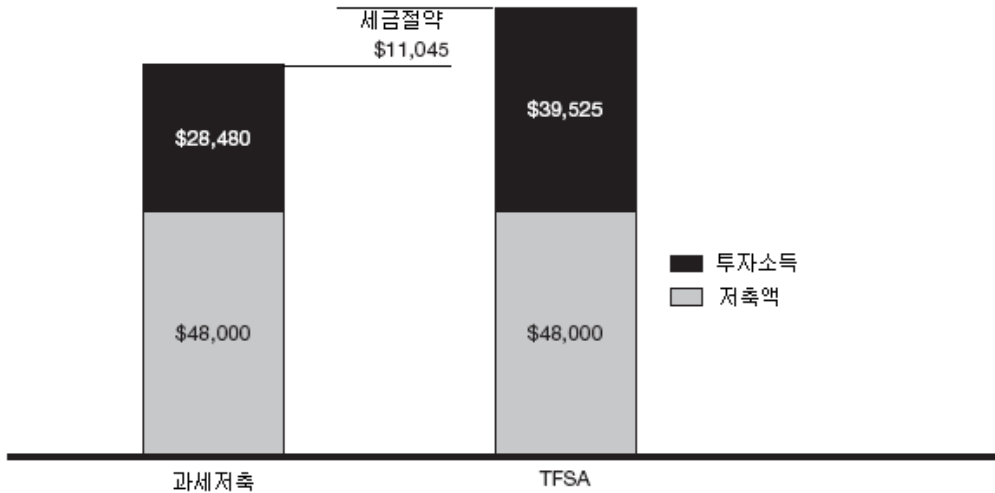
나. 재정건전화 정책

- 특별한 언급사항 없음
 - 캐나다는 정책지출관리제도(79년 도입), 지출통제법(92년 도입), 프로그램검토(94년 도입), 지출관리시스템(95년 도입) 등을 통해 꾸준히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FY1997-98 ~ FY2007-08까지 흑자재정 기록

4. 기타 정책이슈

- 비과세 저축계좌(TFSA: Tax-Free Savings Accounts) 도입('09년 1월부터 적용)
 - 18세 이상 납세자는 TFSA를 통해 연간 최고 5,000캐나다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한도액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음
 - 연간 투자한도는 있지만, 평생 투자한도는 없으며 배우자간의 양도 가능(배우자 사망시 TFSA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넘어감)
 - 매월 200캐나다달러씩 20년간(수익률 5.5% 기준) 투자할 경우 절약하게 되는 세금(연방세, 주정부세 포함)은 11,045캐나다달러임
 - TFSA를 통해 발생한 투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연방정부가 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세금환급 등을 신청할 때 TFSA 투자수익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그림 2-Ⅶ-2] 비과세저축(TFSA)과 과세저축 투자 효과 비교



주: 과세대상저축은 투자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 21% 적용

- 캐나다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납부의무자의 연소득 기준 인상
 - '10년부터 캐나다 연금을 불입해야 하는 근로자 최대 연봉을 올해 46,300캐나다달러에서 내년 47,200캐나다달러로 인상
 - CPP 납부가 면제되는 최소 연봉 3,500캐나다달러에는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CPP요율(각각 4.95%, 9.9%)에도 변동사항 없음

VIII

호주 (FY2009-10: 2009. 7~2010. 6)

1. 세제개편

가. 사업자 세금공제 혜택(small business and general business tax break)
입법 추진 (2009년 2월 25일)

- 소규모 사업체의 자산구입에 50%, 일반 사업체는 30%의 세금공제 혜택 부여(5월 22일 입법 승인)
 - 소규모 사업체(총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가 '08.12.13~'09.12.31일 사이에 자산을 구입하여 '08.12.13~'10.12.31일 사이에 설치할 경우 5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음
 - 일반 사업체(총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이상)는 '08.12.13~'09.6.30일 사이에 자산을 구입하여 '08.12.13~'10.6.30일 사이에 설치할 경우 3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음
 - '08.12.13~'09.6.30일 사이에 자산을 구입하여 '10.7.1~'10.12.31일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09.7.1~'09.12.31일 사이에 자산을 구입하여 '09.7.1~'10.12.31일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 2009-10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tax reform)의 주요내용
(2009년 5월 12일)

-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임
 - 고소득자(25만호주달러 이상)들의 소득에 있어서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 부분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규정 강화
 - (현행) 고소득자가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 소

- (개정)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동 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7억호주달러 수준의 세수가 향후 3년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예측
-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foreign employment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6월 24일 입법 승인)
 - (현행) 원천지 국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 소득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호주정부가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 해외구호활동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과세면제하고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세면제
 -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동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6억 7,500만호주달러에 해당하는 세수가 향후 3년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예측
- 연구개발비(R&D)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2010-11연도부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될 예정(9월 18일 입법 승인)
 - (현행) 당해 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 150%의 소득공제 적용
 - (개정) 매출액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R&D지출액의 4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50%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되고,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은 R&D지출액의 40%에 상당하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33%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
 - 동 제도로 인해 향후 3년에 걸쳐 8억 5,500만호주달러 수준의 세수가 더 견힐 것으로 예측

다. 2009-10년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tax relief) 내용 발표(2009년 6월 30일)

□ 2009-10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조세감면(tax relief)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경기침체 타격을 위해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둠

○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LITO) 폭이 확대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세구간을 상향조정

– LITO 금액을 연간 1,200호주달러에서 1,350호주달러로 상향조정

– 연간소득이 15,000호주달러 미만(현행 면세구간은 14,000호주달러)일 경우 세금 면제

○ 고령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 폭을 넓혀 독신일 경우 연간소득이 29,867호주달러(현행 28,867호주달러), 부부일 경우 1인당 25,680호주달러(현행 24,680호주달러)까지 세금을 면제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소득세 경감 혜택 부여

– 개인소득세 30%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소득기준을 현행 34,001호주달러에서 35,001호주달러로 상향조정

– 40% 소득세율을 38%로 2%p 인하

○ 교육관련 세제환급(education tax refund) 및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의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³³⁾(초등학생은 연간 최대 375호주달러, 중등학생은 최대 750호주달러 지급)

– 승인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녀를 위한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은 주당 6.5호주달러 인상하여 최대 180호주달러까지 지원

–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은 연간 자녀 1인당 278호주달러 인상하여 최대 7,778호주달러로 증액

– 출산수당(baby bonus)은 185호주달러 인상하여 5,000호주달러에서 5,185호주달러로 지원 확대

※ 위의 조세감면 내용은 2008년 5월에 발표한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Working Families Support Package)”의 일환임

33)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는 자녀에 대해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Part A)을 받는 경우 또는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 청구 자격이 주어지며 회계연도 말 소득신고서를 통해 비용의 50%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예산 및 결산

□ (예산안)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지원(Supporting Jobs Now by Investing in Our Future)”이라는 기조아래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2009년 5월 12일)

○ (경제전망)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10년도 경제성장률을 -0.5%로 축소 전망

※ 2009-10년도 성장률 전망 변화:

(2008-09 budget('08.5)) 3% → (MYEFO('08.12))³⁴⁾ 2.25% → (UEFO('09.2))³⁵⁾ 0.75%

- 그러나 2010년 초반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어 2010-11년도 경제성장률은 2.25%로 전망

○ (재정전망) 2009-10년도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³⁶⁾는 576억호주달러(GDP 대비 -4.9%)의 적자를 예상

※ 2009-10년도 예산수지 전망 변화(GDP 대비 %):

(2008-09 budget('08.5)) 1.5% → (MYEFO('08.12)) 0.3% → (UEFO('09.2)) -2.9%

- 이러한 예산수지 적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하며 호주정부의 전략은 2015-16년도에 예산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임

○ (예산기조 및 내용)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을 위해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2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기간시설(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³⁷⁾

- 일자리 지원 및 연금 개혁을 위한 지출 확대

34) MYEFO(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은 반기 경제재정보고서로 1998년 제정된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매년 11~12월 사이 발간되며, 이는 기 수립된 재정전략에 비추어 정부의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재정정보를 제공함

35) UEFO(Updated Economic and Fiscal Outlook)는 심각한 경제적 악화로 인해 경제 및 재정전망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9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UEFO의 재정전략보고서의 형식은 공정예산헌장법 1998에 의거한 기타 재정정책보고서들과 일치함

36) 예산수지는 재정수지(순운영수지(수입-지출)-순자본투자액)에서 Future Fund 수익금을 제외한 것임

37) 세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84억호주달러 지출,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국가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대 430억호주달러 투자(초기 정부투자금액은 47억호주달러), 청정에너지 계획을 위해 36억호주달러 투자, 교육 인프라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해 각각 26억호주달러 및 32억호주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 예산 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어려운 선택과 분명한 전략(Hard choices and a clear strategy) 실천의 의지
- (재정수입) 2009-10연도 재정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7%p 감소한 수준인 2,906억 호주달러(GDP 대비 24.7%)로 전망
 - 세계 경기침체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09년 2월 전망치보다 4%p 감소
- (재정지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수행으로 2009-10년도 재정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p 증가한 3,382억호주달러(GDP 대비 28.7%)로 전망
- (순채무) 2008-09년도에 GDP 대비 -0.4% 수준인 일반정부부문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14연도에는 GDP 대비 13.8%까지 상승하고 2019-20년도에 GDP 대비 3.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표 2-VIII-1〉 FY2009-10 예산안 재정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재정수입 (GDP 대비 비율)	303.7 26.8	295.9 24.7	290.6 24.7	294.8 24.1	320.8 24.7	349.7 25.2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280.1 24.8	324.4 27.1	338.2 28.7	344.5 28.2	356.4 27.4	375.0 27.0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21.0 1.9	-32.9 -2.7	-53.1 -4.5	-56.0 -4.6	-41.8 -3.2	-30.3 -2.2
예산수지 ¹⁾ (GDP 대비 비율)	19.7 1.7	-32.1 -2.7	-57.6 -4.9	-57.1 -4.7	-44.5 -3.4	-28.2 -2.0
순채무 (GDP 대비 비율)	-44.8 -4.0	-4.7 -0.4	53.7 4.6	112.2 9.2	161.7 12.4	188.2 13.6

주: 1)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FY2009-10 Budget

□ (결산) 경기부양책의 긍정적인 영향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부담요인(fiscal challenges)이 반영된 2008-09년도 결산(Final Budget Outcome)³⁸⁾ 발표(2009년 9월 29일)

38) 결산서는 공정예산현장법 1998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발표

- (예산수지) 2008-09년도 일반정부부문 예산수지 적자(underlying cash deficit)는 271억호주달러(GDP대비 2.3%)를 기록
 - 이는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시점 전망치 대비 50억호주달러 감소한 것으로 총 현금지급액(total cash payments)이 22억호주달러 감축되고 현금징수액(cash receipts)은 28억호주달러 증가한 데 기인
 - 예상보다 호전된 결산 수치는 다양한 일회성 요인들과 정부의 경기진작조치의 효과로 인한 결과임
 - (재정수입) 2008-09년도 재정수입은 2,989억호주달러(GDP 대비 24.9%)로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시점 전망치 대비 30억호주달러 증가
 - 이는 조세수입에서 29억호주달러, 세외수입에서 0.9억호주달러 증가한 것에 기인
 - * 광산업과 금융기관의 호전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한 반면 개인소득세는 감소
 - (재정지출) 2008-09년도 재정지출은 3,246억호주달러(GDP 대비 27.0%)로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시점 전망치 대비 2억호주달러 증가
 - 기능별 지출 중 국방 및 교육 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하였고 에너지·연료 및 농림수산 부문에서 지출이 감소
 - *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순채무) 2008-09년도 순채무(net debt)는 -161억호주달러(GDP 대비 1.3%)로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시점 전망치 대비 115억호주달러 개선된 수준임
- (반기 경제재정보고서) 세계 경기 회복과 호주정부의 통화 및 경기부양 효과를 반영하여 예산안보다 향상된 경제전망을 보여 주는 반기 경제재정보고서를 발표(2009년 11월 2일)
- (경제전망) 2009-10예산안 발표 이후 호주경제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은 2009-10년도에 1.5%, 2010-11년도에 2.75% 상승할 것으로 기대
 - * 예산안 발표시 경제성장률은 2009~10년도에 -0.5%, 2010~11년도에 2.25% 전망
 - 실업률 또한 예산안 발표시보다 1.5%p 낮은 6.75%로 전망
 -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가 여전히 호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어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필요한 상황임

- (재정전망) 2009-10년도의 예산수지 적자는 GDP 대비 4.7% 수준이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전략에 따라 2015-16년도에 예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예산안 발표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수준(GDP 대비 10.1%)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 (순채무) 2013-14년도에 GDP 대비 10% 수준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19-20년도에 GDP 대비 2.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표 2-Ⅷ-2〉 FY2009-10 반기 경제재정보고서 재정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재정수입 (GDP 대비 비율)	291.8 24.0	303.9 23.7	335.9 24.7	364.9 25.2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340.2 28.0	245.0 26.9	358.5 26.3	378.1 26.1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54.4 -4.5	-46.5 -3.6	-28.2 -2.1	-18.0 -1.2
예산수지 ¹⁾ (GDP 대비 비율)	-57.7 -4.7	-46.6 -3.6	-31.2 -2.3	-15.9 -1.1
순채무 (GDP 대비 비율)	45.2 3.7	90.4 7.0	121.8 8.9	135.5 9.4

주: 1)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3. 경제위기대응 및 재정건전화 정책

가. 경제위기대응 재정정책

- 미래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호주기업투자협의회(Australian Business Investment Partnership to Support Australian Jobs)에 40억호주달러 투입(2009년 1월 24일)
 - 유동성 위기에 처한 주요 상업용 자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0억호주달러 투입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금번 조치는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춤
 - 투입되는 재원은 정부와 호주 4대은행³⁹⁾에 의해 마련
 - 연방정부가 20억호주달러, 4대은행이 20억호주달러로 총 40억호주달러가 조달되고, 추가적으로 재원 필요시 정부보증채를 발행하여 마련할 계획

- 4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발표(2009년 2월 3일)
 - 급격히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즉각적인 경기 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호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09년~2011년) 약 420억호주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 이는 2008~09년도 경상GDP 대비 3.5% 수준임
 - 동 정책으로 2008-09년도에 0.5%p 및 2009-10년도에 1%p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이같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호주의 흑자재정 기조가 적자(225억호주달러)로 전환될 전망이나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현 위기의 심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39) 호주 4대 은행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Banking Corporation임

〈표 2-Ⅷ-3〉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및 자원배분

(단위: 백만호주달러)

	예산수지에 미치는 효과				
	2008-09	2009-10	2010-11	2011-12	합계
미래 대비 투자					
교육혁신(Education Revolution)을 위한 투자	-987	-8,624	-5,109	0	-14,720
20,000여채의 공공주택건설	-260	-4,274	-1,794	-312	-6,640
에너지 효율주택	-39	-1,540	-1,544	-736	-3,859
소기업 및 일반 사업체 세제 혜택	0	-840	-1,350	-515	-2,705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80	-410	0	0	-890
소계	-1,766	-15,687	-9,797	-1,563	-28,813
일자리 지원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보너스	-6,950	-1,201	0	0	-8,151
1인소득가정 보너스	-1,273	-147	0	0	-1,420
농가지원 보너스	-20	0	0	0	-20
교육비용 환급 보너스	-2,347	-271	0	0	-2,618
훈련 및 교육 보너스	-413	-98	0	0	-511
소계	-11,004	-1,717	0	0	-12,721
총 경기부양 패키지	-12,770	-17,404	-9,797	-1,563	-41,534

자료: Updated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 2

나. 재정건전화 정책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경기회복 시점 이후부터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 (2009년 5월 12일)
 -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 세입원을 확보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19억호주 달러의 예산을 절감
 -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유지
 - * 호주정부는 예산안을 통하여 2011/12~2012/13년도 동안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실행
 - 이러한 출구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5-16년도에는 예산흑자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4. 기타 정책이슈

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 발표 (2009년 5월 12일)

- 330만명의 연금수혜자(노령연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연금 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금 인상조치
 - 2009년 9월 20일부터 독신을 위한 최대 연금요율이 2주 기준으로 65호주달러로 인상
 - 이는 기존 기초연금 인상분 60호주달러에 새로운 연금보조금 5호주달러를 추가한 형태임
 - 부부를 위한 최대 연금요율은 2주 기준으로 20.3호주달러 인상
 - 부분요율 적용 대상 독신인 경우 2주 기준 최소 20.2호주달러의 부분적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연금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간소화
 - 2009년 9월 20일부터 현재 연금과 더불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allowance)과 새로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⁴⁰⁾ 형태로 지급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확립
 - 노령연금(age pension) 수령연령 상향 조정
 -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65.5세로 상향 조정
 - 그 이후 2년마다 수령연령이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에는 67세에 도달

40) 연금보충금이란 일상 가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령자로 소득지원지급금을 받고 있거나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간호인 지급금(Carer Payment), 미망인B연금(Widow B Pension), 아내연금(Wife Pension),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세 보충금(Good and Service Tax Supplement), 공공요금 수당(Uilities Allowance), 전화비 수당(Telephone Allowance), 의약품비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임

- 연금 소득심사(income test)에 적용하는 누진율 변경
 - 2009년 9월 20일부터 소득심사에 적용하는 누진율이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
 - 소득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독신의 경우 초과 소득 1호주달러 당 연금지급금이 50센트씩, 부부의 경우 각각 25센트씩 감소(단, 연금 전액 수혜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2009년 10월 11일)

- 정부는 모기지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형 금융기관에 80억호주달러 추가 지원
 - Wayne Swan 재무장관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관리국(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에 신용도가 높은 'AAA'의 주택담보채권(Australian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매입 지시
 - 정부의 투자 확대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어 있던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

다. 재생에너지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Renewable Energy)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2009년 10월 28일)

- 정부는 45억호주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Energ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5억 6천만호주달러 이상을 투자 지원
 - 재생에너지 실증 프로그램(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 Program)에 3억호주달러,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프로그램(Second Generation Biofuel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에 1억 5천만호주달러, 전력저장기술 프로그램(Advanced Electricity Storage Technologies Program)에 2억호주달러, 풍력에너지 예측가능성 프로그램(Wind Energy Forecasting Capability Program)에 1억 4천만호주달러, 재생에너지 자산펀드(Renewable Energy Equity Fund)에 1억 8천만호주달러, 기타 1억 5천만호주달러 지원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I.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II. 미국(2009년 10월 기준)

III. 일본(2009년 10월 기준)

IV. 영국(2009년 10월 기준)

V. 프랑스(2009년 10월 기준)

VI. 독일(2009년 10월 기준)

VII. 캐나다(2009년 10월 기준)

VIII. 호주(2009년 10월 기준)

I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 OECD Economic Outlook(2009년 11월)

○ 일반정부 총지출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38.3	37.8	38.3	38.2	37.2	36.3	35.2	34.8	35.2	35.9	35.4	34.6	35.1	34.8	34.5	34.2	34.3	37.5	36.6	36.1
오스트리아	53.5	56.3	56.1	56.2	56.1	53.7	54.0	53.7	52.2	51.6	51.0	51.5	54.1	50.1	49.7	48.8	48.9	52.7	52.7	52.8
벨기에	53.8	54.9	52.6	52.1	52.6	51.2	50.4	50.2	49.2	49.2	49.8	51.1	49.5	52.2	48.5	48.4	50.1	54.0	54.1	54.0
캐나다	53.3	52.2	49.7	48.5	46.6	44.3	44.8	42.7	41.1	42.0	41.2	41.2	39.9	39.3	39.4	39.1	39.7	43.6	43.5	42.9
체코	-	-	-	54.0	42.4	43.2	43.1	42.3	41.6	44.1	46.2	47.1	44.8	44.7	43.1	41.7	42.1	45.7	45.9	45.4
덴마크	57.0	60.1	60.0	59.1	58.7	56.4	56.0	55.1	53.3	53.9	54.2	54.7	54.3	52.5	51.3	50.7	51.5	57.7	59.2	58.4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61.9	64.6	63.7	61.4	59.8	56.3	52.6	51.6	48.3	47.9	49.0	50.1	50.2	50.3	48.6	47.4	49.0	56.2	58.4	58.1
프랑스	52.0	55.0	54.2	54.4	54.5	54.1	52.7	52.6	51.6	51.6	52.6	53.2	53.3	53.4	52.7	52.3	52.7	55.5	55.4	54.8
독일	47.3	48.3	47.9	54.8	49.3	48.3	48.1	48.2	45.1	47.5	48.0	48.4	47.3	46.9	45.3	43.6	43.8	47.7	48.4	47.6
그리스	44.2	46.5	44.7	45.7	44.1	45.0	44.4	44.4	46.7	45.3	45.1	44.7	45.4	43.8	42.9	44.4	48.3	51.3	49.9	50.1
헝가리	59.5	59.0	63.2	55.3	50.4	49.4	50.5	48.7	46.9	47.2	51.1	49.4	48.6	50.1	52.0	49.8	49.2	51.5	50.3	48.8
아이슬란드	40.5	40.4	39.9	42.7	42.2	40.7	41.3	42.0	41.9	42.6	44.3	45.6	44.1	42.2	41.7	42.5	57.8	55.9	52.1	49.2
아일랜드	44.8	44.6	43.9	41.1	39.1	36.7	34.5	34.1	31.3	33.2	33.5	33.2	33.5	33.7	34.2	36.2	42.0	45.0	46.5	45.8
이탈리아	55.4	56.4	53.5	52.5	52.5	50.2	49.3	48.2	46.1	48.0	47.4	48.3	47.8	48.1	48.7	47.9	48.7	51.7	51.2	50.6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32.7	34.5	35.0	36.0	36.7	35.7	42.5	38.6	39.0	38.6	38.8	38.4	37.0	38.4	36.2	36.0	37.1	41.6	41.1	42.2
한국	20.9	20.6	20.0	19.8	20.6	21.3	23.5	22.7	22.4	23.9	23.6	28.9	26.1	26.6	27.7	28.7	30.0	33.8	31.3	30.9
룩셈부르크	40.0	39.8	39.0	39.7	41.1	40.7	41.0	39.2	37.6	38.1	41.5	41.8	42.5	41.5	38.3	36.2	37.7	43.2	43.2	41.8
네덜란드	55.7	55.7	53.5	56.4	49.4	47.5	46.7	46.0	44.2	45.4	46.2	47.1	46.1	44.8	45.5	45.5	45.9	50.3	51.6	51.1
뉴질랜드	49.4	45.5	43.1	42.2	41.1	41.7	41.5	41.2	39.2	38.6	37.6	38.5	38.0	39.1	40.1	40.2	41.1	42.4	43.3	43.7
노르웨이	55.7	54.6	53.7	50.9	48.5	46.9	49.2	47.7	42.3	44.2	47.1	48.3	45.6	42.3	40.6	41.0	40.0	44.4	44.7	44.1
폴란드	-	-	-	47.7	51.0	46.4	44.3	42.7	41.1	43.8	44.2	44.6	42.6	43.4	43.9	42.2	43.3	43.8	44.0	42.1
포르투갈	44.5	46.1	44.3	43.4	44.1	43.2	42.8	43.2	43.1	44.4	44.3	45.5	46.5	47.6	46.3	45.8	46.0	51.6	51.1	51.3
슬로바키아	-	-	56.2	48.6	53.7	49.0	45.8	48.1	52.2	44.5	45.0	40.1	37.6	38.0	36.9	34.4	34.7	39.0	38.9	37.4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45.4	49.0	46.7	44.4	43.2	41.6	41.1	39.9	39.1	38.6	38.9	38.4	38.9	38.4	38.4	39.2	41.1	46.3	47.2	46.6
스웨덴	69.8	70.9	68.4	65.3	62.9	60.7	58.5	60.2	57.0	61.2	55.8	56.0	54.4	54.0	52.9	51.3	51.8	56.2	56.0	55.2
스위스	34.2	35.1	35.2	35.0	35.3	35.5	35.8	34.3	35.1	34.8	36.2	36.4	35.9	35.3	33.5	32.2	32.0	33.9	34.2	34.0
영국	45.2	45.3	44.6	44.1	42.2	40.6	39.5	38.8	36.6	39.9	40.9	42.4	43.1	44.1	44.1	44.1	47.5	52.1	53.4	53.2
미국	38.6	38.1	37.1	37.1	36.6	35.4	34.6	34.2	33.9	35.0	35.9	36.3	36.0	36.2	36.0	36.8	38.8	41.5	41.5	40.9
EU	50.6	52.3	51.0	53.2	50.7	49.4	48.6	48.2	46.3	47.3	47.6	48.0	47.6	47.4	46.6	46.0	46.9	50.7	51.0	50.4
OECD 전체	42.3	42.8	41.9	42.7	41.6	40.4	40.6	39.7	38.7	39.8	40.3	40.8	40.2	40.5	39.9	39.9	41.4	44.8	44.8	44.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 2009.11.

○ 일반정부 조세 및 세외수입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32.8	33.4	33.8	34.5	34.9	35.6	36.8	36.9	36.1	35.8	36.7	36.4	36.3	36.5	36.4	36.0	35.3	33.5	33.1	33.5
오스트리아	51.5	51.9	51.2	50.4	51.9	51.7	51.5	51.3	50.3	51.4	50.1	50.0	49.6	48.4	47.9	48.2	48.4	48.4	47.2	47.1
벨기에	45.6	47.4	47.4	47.6	48.5	49.0	49.4	49.5	49.1	49.5	49.7	50.9	49.1	49.3	48.7	48.2	48.9	48.2	48.4	48.8
캐나다	44.2	43.5	43.0	43.2	43.8	44.5	44.9	44.3	44.1	42.6	41.1	41.1	40.7	40.8	41.0	40.7	39.8	38.8	38.3	38.4
체코	-	-	-	40.5	39.1	39.4	38.1	38.5	37.9	38.5	39.4	40.5	41.9	41.1	40.5	41.1	40.0	40.0	40.2	40.3
덴마크	54.5	56.3	56.7	56.2	56.7	55.9	56.0	56.5	55.5	55.0	54.5	54.6	56.1	57.5	56.3	55.1	55.0	55.3	53.8	54.4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56.5	56.3	56.9	55.2	56.3	55.0	54.2	53.2	55.2	52.9	53.1	52.6	52.4	52.9	52.5	52.6	53.4	53.9	53.6	52.9
프랑스	47.4	48.5	48.7	48.9	50.4	50.8	50.1	50.8	50.1	50.0	49.4	49.1	49.6	50.5	50.3	49.6	49.3	47.3	46.7	46.8
독일	44.8	45.3	45.6	45.1	46.0	45.7	45.9	46.7	46.4	44.7	44.4	44.4	43.5	43.6	43.7	43.8	43.8	44.5	43.1	42.9
그리스	33.3	34.6	36.5	36.7	37.4	39.1	40.6	41.3	43.0	40.9	40.3	39.0	38.0	38.5	39.7	40.4	40.6	38.7	40.1	40.1
헝가리	51.3	51.4	50.4	46.6	45.8	43.4	42.6	43.3	43.9	43.1	42.2	42.2	42.2	42.2	42.6	44.8	45.5	47.2	46.2	45.2
아이슬란드	37.7	35.9	35.3	39.8	40.6	40.7	40.9	43.2	43.6	41.9	41.7	42.8	44.1	47.1	48.0	47.9	44.3	40.2	42.0	43.4
아일랜드	41.9	41.9	41.9	39.1	39.0	38.1	36.8	36.7	36.1	34.2	33.2	33.6	34.9	35.4	37.2	36.5	34.9	32.8	34.3	34.3
이탈리아	45.0	46.3	44.4	45.1	45.5	47.6	46.2	46.5	45.3	44.9	44.4	44.7	44.2	43.8	45.3	46.4	46.0	46.2	45.8	45.5
일본	33.3	32.0	31.2	31.2	31.6	31.7	31.3	31.2	31.4	32.2	30.8	30.5	30.9	31.7	34.5	33.5	34.4	34.2	32.9	32.7
한국	22.3	22.9	22.8	23.6	24.0	24.5	25.2	25.4	27.9	28.3	28.7	29.4	28.8	30.0	31.7	33.3	33.3	31.9	31.7	32.0
룩셈부르크	39.8	41.2	41.4	42.1	42.3	44.3	44.4	42.6	43.6	44.2	43.6	42.2	41.5	41.5	39.7	39.9	40.2	40.8	38.9	38.2
네덜란드	51.5	52.9	50.0	47.2	47.5	46.3	45.8	46.4	46.1	45.1	44.1	43.9	44.3	44.5	46.1	45.7	46.6	45.9	45.7	45.7
뉴질랜드	46.4	45.3	46.0	45.0	43.9	43.2	41.9	41.2	41.1	40.4	41.4	42.5	42.1	44.2	46.1	45.2	44.2	41.2	40.0	39.8
노르웨이	53.9	53.2	54.0	54.2	54.8	54.5	52.5	53.7	57.7	57.5	56.3	55.5	56.7	57.3	59.1	58.7	58.8	54.0	54.6	54.9
폴란드	-	-	-	43.3	46.1	41.8	40.1	40.4	38.1	38.6	39.2	38.4	36.9	39.4	40.2	40.3	39.6	37.4	36.2	35.3
포르투갈	40.4	38.6	37.1	38.4	39.7	39.7	39.4	40.5	40.2	40.1	41.4	42.5	43.1	41.6	42.3	43.2	43.2	44.9	43.5	43.5
슬로바키아	-	-	47.3	45.2	43.8	42.6	40.5	40.7	39.9	38.0	36.8	37.4	35.3	35.2	33.4	32.5	32.4	33.1	32.6	32.4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41.4	41.7	40.0	38.0	38.4	38.2	37.8	38.4	38.1	38.0	38.4	38.2	38.5	39.4	40.4	41.1	37.0	36.8	38.8	38.9
스웨덴	60.9	59.8	59.4	58.0	59.6	59.0	59.7	61.4	60.7	62.9	54.3	54.8	55.0	56.0	55.3	55.1	54.3	54.2	52.9	53.2
스위스	31.1	31.6	32.4	33.0	33.5	32.7	33.8	33.8	35.2	34.7	35.0	34.6	34.2	34.6	34.3	33.9	33.6	33.1	33.0	32.7
영국	38.7	37.3	37.8	38.2	38.0	38.4	39.4	39.8	40.3	40.6	39.0	38.7	39.6	40.8	41.4	41.4	42.2	39.5	40.1	40.7
미국	32.8	33.0	33.4	33.8	34.3	34.6	34.9	34.9	35.4	34.4	31.9	31.3	31.6	33.0	33.8	34.0	32.3	30.3	30.8	31.5
EU	45.8	46.5	46.0	45.6	46.4	46.7	46.2	46.7	46.2	45.4	45.0	44.9	44.6	44.8	45.3	45.4	44.9	44.6	44.2	44.2
OECD전체	37.7	37.8	37.7	37.9	38.5	38.6	38.7	38.8	39.0	38.4	37.0	36.8	36.8	37.7	38.6	38.6	37.9	36.7	36.6	36.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 2009.11.

○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5.5	-4.4	-4.5	-3.7	-2.4	-0.7	1.6	2.0	0.9	-0.1	1.3	1.8	1.2	1.7	1.9	1.8	1.0	-4.0	-3.5	-2.6
오스트리아	-2.0	-4.4	-4.9	-5.9	-4.1	-2.0	-2.5	-2.4	-1.9	-0.2	-0.9	-1.6	-4.5	-1.7	-1.7	-0.7	-0.5	-4.3	-5.5	-5.8
벨기에	-8.2	-7.5	-5.2	-4.5	-4.0	-2.3	-1.0	-0.7	-0.1	0.4	-0.2	-0.2	-0.4	-2.8	0.2	-0.2	-1.2	-5.7	-5.6	-5.2
캐나다	-9.1	-8.7	-6.7	-5.3	-2.8	0.2	0.1	1.6	2.9	0.7	-0.1	-0.1	0.9	1.5	1.6	1.6	1.0	-4.8	-5.2	-4.5
체코	-	-	-	-13.4	-3.3	-3.8	-5.0	-3.7	-3.7	-5.6	-6.8	-6.6	-2.9	-3.6	-2.6	-0.7	2.0	-5.7	-5.6	-5.0
덴마크	-2.6	-3.8	-3.3	-2.9	-1.9	-0.5	0.0	1.4	2.3	1.2	0.2	-0.1	1.9	5.0	5.0	4.5	3.4	-2.5	-5.4	-4.0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5.4	-8.3	-6.7	-6.2	-3.5	-1.3	1.6	1.6	6.9	5.0	4.1	2.4	2.2	2.6	3.9	5.2	4.4	-2.3	-4.8	-5.2
프랑스	-4.5	-6.4	-5.5	-5.5	-4.0	-3.3	-2.6	-1.8	-1.5	-1.6	-3.2	-4.1	-3.6	-3.0	-2.3	-2.7	-3.4	-8.2	-8.6	-8.0
독일	-2.5	-3.0	-2.3	-9.7	-3.3	-2.6	-2.2	-1.5	1.3	-2.8	-3.6	-4.0	-3.8	-3.3	-1.6	0.2	0.0	-3.2	-5.3	-4.6
그리스	-10.9	-11.9	-8.3	-9.1	-6.6	-5.9	-3.8	-3.1	-3.7	-4.4	-4.8	-5.7	-7.4	-5.3	-3.2	-4.0	-7.8	-12.7	-9.8	-10.0
헝가리	-8.2	-7.6	-12.8	-8.7	-4.6	-6.1	-7.9	-5.4	-3.0	-4.1	-8.9	-7.2	-6.4	-7.9	-9.4	-5.0	-3.7	-4.3	-4.1	-3.6
아이슬란드	-2.8	-4.5	-4.7	-3.0	-1.6	0.0	-0.4	1.1	1.7	-0.7	-2.6	-2.8	0.0	4.9	6.3	5.4	-13.6	-15.7	-10.1	-5.8
아일랜드	-2.9	-2.7	-2.0	-2.0	-0.1	1.4	2.3	2.6	4.8	0.9	-0.3	0.4	1.4	1.7	3.0	0.2	-7.2	-12.2	-12.2	-11.6
이탈리아	-10.4	-10.1	-9.1	-7.4	-7.0	-2.7	-3.1	-1.8	-0.9	-3.1	-3.0	-3.5	-3.6	-4.4	-3.3	-1.5	-2.7	-5.5	-5.4	-5.1
일본	0.6	-2.5	-3.8	-4.7	-5.1	-4.0	-11.2	-7.4	-7.6	-6.3	-8.0	-7.9	-6.2	-6.7	-1.6	-2.5	-2.7	-7.4	-8.2	-9.4
한국	1.4	2.2	2.9	3.8	3.4	3.3	1.6	2.7	5.4	4.3	5.1	0.5	2.7	3.4	3.9	4.7	3.3	-1.8	0.4	1.1
룩셈부르크	-0.2	1.5	2.5	2.4	1.2	3.7	3.4	3.4	6.0	6.1	2.1	0.5	-1.1	0.0	1.3	3.7	2.5	-2.3	-4.3	-3.6
네덜란드	-4.2	-2.8	-3.5	-9.2	-1.9	-1.2	-0.9	0.4	2.0	-0.3	-2.1	-3.2	-1.8	-0.3	0.5	0.2	0.7	-4.5	-5.9	-5.3
뉴질랜드	-3.0	-0.3	2.9	2.8	2.8	1.4	0.4	0.0	1.9	1.8	3.8	4.0	4.1	5.2	5.9	5.0	3.1	-1.2	-3.3	-3.9
노르웨이	-1.9	-1.4	0.3	3.2	6.3	7.6	3.3	6.0	15.4	13.3	9.2	7.3	11.1	15.1	18.5	17.7	18.8	9.6	9.9	10.8
폴란드	-	-	-	-4.4	-4.9	-4.6	-4.3	-2.3	-3.0	-5.1	-5.0	-6.3	-5.7	-4.1	-3.6	-1.9	-3.7	-6.4	-7.8	-6.8
포르투갈	-4.2	-7.5	-7.2	-5.0	-4.5	-3.5	-3.4	-2.8	-3.0	-4.3	-2.9	-3.0	-3.4	-6.1	-3.9	-2.7	-2.8	-6.7	-7.6	-7.8
슬로바키아	-	-	-8.8	-3.4	-9.9	-6.3	-5.3	-7.4	-12.3	-6.5	-8.2	-2.8	-2.4	-2.8	-3.5	-1.9	-2.3	-5.9	-6.3	-5.0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4.0	-7.3	-6.8	-6.5	-4.9	-3.4	-3.2	-1.4	-1.0	-0.7	-0.5	-0.2	-0.4	1.0	2.0	1.9	-4.1	-9.6	-8.5	-7.7
스웨덴	-8.9	-11.2	-9.1	-7.3	-3.3	-1.6	1.2	1.2	3.7	1.7	-1.4	-1.2	0.6	2.0	2.4	3.8	2.5	-2.0	-3.0	-2.0
스위스	-3.1	-3.5	-2.8	-2.0	-1.8	-2.8	-1.9	-0.5	0.1	-0.1	-1.2	-1.7	-1.8	-0.7	0.8	1.6	1.6	-0.7	-1.3	-1.3
영국	-6.5	-8.0	-6.8	-5.8	-4.2	-2.2	-0.1	0.9	3.7	0.6	-2.0	-3.7	-3.6	-3.3	-2.7	-2.7	-5.3	-12.6	-13.3	-12.5
미국	-5.9	-5.1	-3.7	-3.3	-2.3	-0.9	0.3	0.7	1.5	-0.6	-4.0	-5.0	-4.4	-3.3	-2.2	-2.8	-6.5	-11.2	-10.7	-9.4
EU	-4.7	-5.8	-5.0	-7.6	-4.3	-2.7	-2.3	-1.4	-0.1	-1.9	-2.6	-3.1	-3.0	-2.6	-1.3	-0.6	-2.0	-6.1	-6.7	-6.2
OECD전체	-4.6	-5.0	-4.2	-4.8	-3.1	-1.7	-1.9	-0.8	0.2	-1.3	-3.3	-4.1	-3.4	-2.7	-1.3	-1.3	-3.5	-8.2	-8.3	-7.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 2009.11.

○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27.8	31.1	40.6	42.5	39.6	37.9	32.7	28.4	25.4	22.5	20.5	19.0	17.2	16.9	16.2	15.3	14.3	15.9	20.3	23.4
오스트리아	57.5	62.0	65.3	69.5	70.3	66.7	68.5	71.2	71.1	72.1	73.2	71.3	70.8	70.8	66.4	62.2	66.2	72.9	77.9	82.5
벨기에	136.6	140.8	137.8	135.4	133.4	128.0	123.2	119.6	113.8	112.0	108.4	103.4	98.5	95.9	91.6	88.1	93.5	101.2	105.2	108.5
캐나다	90.2	96.3	98.0	101.6	101.7	96.3	95.2	91.4	82.1	82.7	80.6	76.6	72.6	71.6	69.5	65.0	69.7	82.8	85.7	88.9
체코	-	-	-	-	-	-	-	-	-	-	33.1	34.9	34.8	34.9	34.6	38.0	40.7	46.5	53.1	59.9
덴마크	71.1	85.0	78.9	79.3	76.6	72.1	69.7	64.1	57.1	55.0	55.4	53.6	50.1	42.4	38.3	31.6	39.8	45.3	48.8	52.9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44.3	57.6	60.8	65.2	66.0	64.6	60.9	54.7	52.3	49.9	49.5	51.4	51.5	48.5	45.2	41.5	40.7	43.7	52.3	61.9
프랑스	43.9	51.0	60.2	62.7	66.3	68.8	70.3	66.8	65.6	64.3	67.3	71.4	73.9	75.7	70.9	69.9	75.7	84.5	92.5	99.2
독일	40.9	46.2	46.5	55.7	58.8	60.3	62.2	61.5	60.4	59.7	62.1	65.3	68.7	71.1	69.2	65.3	68.8	77.4	82.0	85.5
그리스	-	-	-	101.1	103.1	100.0	97.7	101.1	114.9	117.7	117.2	112.0	114.2	114.5	107.9	103.9	102.6	114.9	123.3	130.2
헝가리	81.3	92.2	92.0	88.6	75.8	66.4	64.4	66.5	60.9	59.7	60.7	61.7	65.0	68.8	72.1	72.2	77.0	85.2	89.9	91.2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77.3	73.6	72.9	75.0	72.0	71.0	64.5	52.6	57.5	53.6	96.3	117.6	142.5	145.8
이탈리아	106.9	116.2	120.9	122.5	128.9	130.3	132.0	125.8	121.0	120.2	119.4	116.8	117.3	119.9	117.1	112.5	114.4	123.6	127.0	129.7
일본	67.6	73.9	79.0	86.2	93.8	100.5	113.2	127.0	135.4	143.7	152.3	158.0	165.5	175.3	172.1	167.1	172.1	189.3	197.2	204.3
한국	6.1	5.4	5.0	5.2	5.6	7.2	12.6	15.0	15.7	16.6	15.8	17.4	21.3	23.1	26.1	25.7	26.8	33.2	36.8	40.7
룩셈부르크	-	-	-	9.5	10.1	10.2	11.2	10.0	9.2	8.2	8.4	7.9	8.6	7.6	11.3	10.9	16.3	18.2	25.0	31.3
네덜란드	91.9	96.5	86.7	89.6	88.1	82.2	80.8	71.6	63.9	59.4	60.3	61.9	62.2	61.1	54.9	52.1	65.8	71.4	77.1	81.6
뉴질랜드	-	-	57.4	51.3	44.9	42.3	42.2	39.6	37.4	35.4	33.5	31.4	28.6	27.4	27.0	26.2	25.3	27.0	31.0	35.6
노르웨이	32.4	40.8	37.3	40.9	36.6	32.1	30.3	31.0	34.2	33.0	40.6	50.2	52.7	49.1	60.5	58.4	56.0	59.9	59.0	61.2
폴란드	-	-	-	51.6	51.4	48.3	43.8	46.6	45.4	43.8	55.0	55.3	54.6	54.7	55.1	51.7	54.0	58.1	62.8	66.2
포르투갈	-	-	-	68.8	68.4	67.4	65.2	62.1	62.0	63.3	66.5	68.0	70.6	74.0	73.1	71.1	75.2	83.8	90.9	97.2
슬로바키아	-	-	-	38.2	37.7	39.0	41.1	53.5	57.5	57.0	50.1	48.2	46.9	38.4	33.8	32.2	30.8	36.7	43.0	47.7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52.1	65.5	64.3	69.3	76.0	75.0	75.3	69.4	66.5	61.9	60.3	55.3	53.4	50.6	46.2	42.1	47.0	59.3	67.5	74.3
스웨덴	73.3	78.2	82.5	81.0	84.4	83.2	82.5	73.7	64.7	63.3	60.8	60.0	60.1	60.7	53.6	47.9	47.1	52.7	55.2	58.3
스위스	38.4	42.9	45.5	47.7	50.1	52.1	54.9	51.9	52.5	51.3	57.2	57.0	57.9	56.4	50.3	47.2	44.0	44.4	45.0	45.3
영국	39.0	48.7	46.8	51.6	51.2	52.0	52.5	47.4	45.1	40.4	40.8	41.2	43.5	46.1	45.9	46.9	56.8	71.0	83.1	94.1
미국	70.2	71.8	71.0	70.6	69.8	67.3	64.1	60.4	54.4	54.4	56.7	60.1	61.1	61.3	60.8	61.8	70.0	83.9	92.4	99.5
EU	60.6	65.9	69.1	72.3	77.3	79.4	80.0	78.2	75.1	73.7	74.1	75.0	75.8	76.8	74.4	70.9	73.2	81.8	88.3	93.2
OECD전체	62.3	66.4	67.7	69.6	71.5	71.6	72.0	71.2	68.3	68.5	70.5	72.6	74.3	75.9	74.6	73.1	78.4	90.0	97.4	103.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 2009.11.

○ 일반정부 순금융부채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15.7	21.3	25.7	26.3	20.9	21.1	16.0	14.9	8.8	6.3	4.4	2.6	0.6	-0.9	-4.5	-6.6	-7.3	-5.7	-1.3	1.8
오스트리아	296	33.2	35.1	38.6	40.4	36.6	36.8	35.8	34.9	35.6	37.1	36.1	38.0	37.9	33.5	30.7	32.7	38.1	42.9	47.3
벨기에	113.2	115.1	114.5	114.6	115.5	110.9	107.8	103.1	97.6	95.1	93.3	90.4	84.0	82.0	77.3	73.4	74.1	81.3	85.4	86.6
캐나다	59.1	64.2	67.9	70.7	70.0	64.7	60.8	55.8	46.2	44.3	42.6	38.7	35.2	31.0	26.2	23.1	22.4	28.6	32.6	35.7
체코	-	-	-	-	-	-	-	-	-	-	-15.9	-7.2	-9.4	-10.7	-9.9	-8.3	-5.9	-0.3	5.3	10.1
덴마크	28.1	31.1	31.5	36.0	36.2	33.8	36.3	30.6	25.7	21.9	20.4	17.7	12.1	8.6	1.7	-4.1	-6.1	-3.9	1.6	5.5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24.5	-15.9	-16.3	-4.0	-6.7	-7.5	-14.5	-50.1	-31.1	-31.6	-31.5	-39.7	-45.9	-57.9	-67.6	-71.1	-51.1	-52.1	-46.4	-39.5
프랑스	20.0	26.8	29.7	37.5	41.8	42.3	40.6	33.5	35.1	36.7	41.8	44.2	45.3	43.2	37.2	34.0	44.3	53.1	60.7	67.3
독일	15.1	18.5	19.3	30.3	33.2	33.0	36.7	35.2	34.4	36.7	40.8	43.5	47.5	49.8	47.9	42.9	45.0	50.2	54.7	58.1
그리스	-	-	-	81.0	81.4	76.8	72.6	70.2	88.7	92.9	94.7	87.2	87.7	85.3	77.7	70.4	73.9	86.1	94.6	101.2
헝가리	-47.5	-19.4	3.3	24.4	25.2	24.8	31.5	33.7	32.3	32.0	36.6	37.5	41.5	46.2	51.6	52.7	51.9	58.8	62.1	62.7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93.2	100.5	104.5	99.0	104.5	104.7	107.1	100.7	95.7	95.8	95.7	92.7	92.5	93.7	90.6	87.1	89.6	97.4	100.8	103.4
일본	13.8	17.1	19.6	23.8	29.2	34.8	46.2	53.8	60.4	66.3	72.6	76.5	82.7	84.6	84.3	80.4	84.4	96.5	104.6	112.7
한국	-14.1	-14.8	-15.4	-16.7	-18.3	-20.7	-22.1	-23.0	-25.9	-28.7	-30.2	-28.3	-28.1	-31.9	-33.0	-35.8	-37.4	-34.5	-33.4	-32.6
룩셈부르크	-	-	-	-37.8	-41.0	-41.6	-46.8	-47.8	-50.7	-58.2	-55.5	-56.7	-52.2	-48.6	-44.4	-44.2	-44.5	-44.6	-38.1	-32.1
네덜란드	41.0	45.5	44.6	54.1	52.8	49.7	48.2	36.7	34.9	33.0	34.9	36.2	37.6	35.0	31.6	28.0	25.2	30.9	36.5	40.9
뉴질랜드	-	-	44.4	38.0	32.8	30.2	28.1	25.8	23.7	21.4	17.1	11.1	4.9	-1.5	-8.2	-13.4	-16.2	-14.7	-10.9	-6.4
노르웨이	-35.1	-32.0	-30.6	-36.1	-41.1	-48.5	-52.1	-57.5	-67.4	-85.1	-80.6	-95.0	-104.4	-122.4	-136.3	-142.2	-124.6	-140.4	-143.6	-146.0
폴란드	-	-	-	-15.0	-5.7	0.3	6.3	13.4	15.5	18.5	22.1	22.7	20.8	23.5	22.4	17.0	20.3	25.7	32.4	37.5
포르투갈	-	-	-	25.1	27.3	32.1	33.3	30.9	28.5	30.5	34.6	37.2	42.1	45.0	44.0	44.1	47.8	55.6	62.6	68.8
슬로바키아	-	-	-	-30.7	-18.2	-12.1	-3.7	1.2	12.4	10.8	1.7	1.8	6.9	5.0	6.5	-0.8	1.2	7.2	13.3	17.5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35.2	43.5	46.4	51.6	55.5	54.2	53.7	47.7	44.2	41.5	40.3	36.8	34.6	30.2	24.0	18.7	22.8	33.2	41.6	48.9
스웨덴	4.6	10.5	20.7	25.6	26.6	24.7	22.1	12.5	5.5	-2.4	4.0	-0.1	-3.1	-8.3	-20.0	-25.0	-18.2	-16.7	-13.1	-10.5
스위스	-	-	-	-	-	-	-	-	-	-	-	-	-	-	-	-	-	-	-	-
영국	6.7	17.4	19.7	26.3	27.9	30.6	32.6	29.0	26.8	23.2	23.7	23.9	25.9	27.1	27.7	28.8	33.1	46.9	59.0	69.9
미국	52.4	54.8	54.3	53.7	51.8	48.8	45.0	40.3	35.5	34.8	37.4	40.7	42.3	42.7	41.8	42.3	47.2	56.4	65.2	72.2
EU	36.9	40.6	42.9	46.2	51.4	52.9	53.2	50.0	47.1	47.4	49.3	50.3	50.8	50.7	47.5	43.3	44.8	51.7	57.9	62.9
OECD전체	35.7	39.3	40.7	41.6	43.1	42.9	42.8	40.2	37.5	37.4	39.4	41.2	42.5	42.5	40.7	38.8	41.9	50.2	57.6	63.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 2009.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9년 11월)

○ General government balance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4.2	-4.2	-3.2	-2.0	-0.9	0.1	0.3	1.3	1.7	0.8	0.9	1.6	2.1	2.4	1.9	1.5	-0.8	-4.3	-5.3	-
오스트리아	-1.9	-4.2	-4.9	-5.9	-4.1	-2.0	-2.5	-2.4	-1.9	-0.2	-0.9	-1.6	-4.5	-1.7	-1.7	-0.7	-0.5	-4.2	-5.6	-
벨기에	-8.2	-7.5	-5.1	-4.6	-3.9	-2.2	-0.9	-0.6	0.0	0.4	-0.1	-0.1	-0.4	-2.8	0.2	-0.3	-1.2	-5.9	-6.3	-
캐나다	-9.1	-8.7	-6.7	-5.3	-2.8	0.2	0.1	1.6	2.9	0.7	-0.1	-0.1	0.9	1.5	1.6	1.6	0.1	-4.9	-4.1	-2.2
체코	-2.0	2.5	-1.8	-13.4	-3.3	-3.8	-5.0	-3.7	-3.7	-5.7	-6.8	-6.6	-2.9	-3.6	-2.6	-0.6	-1.4	-6.0	-7.0	-
덴마크	-2.6	-3.8	-3.3	-2.9	-1.9	-0.5	0.0	1.4	2.3	1.2	0.2	-0.1	1.9	5.0	5.0	4.5	3.4	-1.3	-3.5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5.2	-8.1	-6.6	-6.2	-3.5	-1.3	1.6	1.6	6.9	5.0	4.1	2.4	2.2	2.6	3.9	5.2	4.4	-2.9	-4.2	-
프랑스	-4.5	-6.4	-5.5	-5.5	-4.0	-3.3	-2.6	-1.8	-1.5	-1.5	-3.1	-4.1	-3.6	-2.9	-2.3	-2.7	-3.4	-7.0	-7.1	-6.7
독일	-2.5	-3.0	-2.4	-3.3	-3.3	-2.7	-2.2	-1.7	1.3	-2.8	-3.7	-4.0	-3.8	-3.3	-1.5	-0.5	-0.1	-4.2	-4.6	-3.6
그리스	-11.5	-12.4	-9.0	-7.0	-6.8	-6.0	-3.9	-3.1	-3.7	-4.5	-4.8	-5.7	-7.5	-5.1	-2.8	-3.6	-5.0	-6.4	-7.1	-
헝가리	-	-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1.9	-4.5	-4.7	-3.0	-1.6	0.0	-0.4	1.1	1.7	-0.7	-2.6	-2.8	0.0	4.9	6.3	5.4	-0.5	-13.9	-10.0	-
아일랜드	-2.9	-2.7	-1.9	-2.1	-0.1	1.4	2.3	2.4	4.8	0.9	-0.3	0.4	1.4	1.6	2.9	0.1	-7.3	-12.1	-13.3	-
이탈리아	-10.4	-10.0	-9.1	-7.4	-7.0	-2.7	-2.8	-1.7	-0.8	-3.1	-2.9	-3.5	-3.5	-4.3	-3.3	-1.5	-2.7	-5.6	-5.6	-5.5
일본	0.8	-2.4	-3.8	-4.7	-5.1	-4.0	-5.6	-7.4	-7.6	-6.3	-8.0	-8.0	-6.2	-5.0	-4.0	-2.5	-5.8	-10.5	-10.2	-8.0
한국	-0.6	0.3	0.1	0.3	0.2	-1.4	-3.7	-2.4	1.1	0.5	2.2	2.5	2.1	1.8	1.7	3.5	1.2	-2.8	-2.7	-
룩셈부르크	-0.8	1.3	2.4	2.4	1.2	3.7	3.4	3.4	6.0	6.1	2.1	0.5	-1.2	-0.1	1.3	3.2	1.4	-3.4	-4.4	-
네덜란드	-4.2	-2.8	-3.5	-4.4	-1.8	-1.1	-0.7	0.6	2.1	-0.3	-2.1	-3.1	-1.8	-0.3	0.6	0.5	0.9	-3.8	-5.7	-
뉴질랜드	-4.0	0.0	2.0	3.2	3.5	2.5	0.4	0.8	2.1	2.6	3.2	4.6	5.5	4.7	3.9	0.4	-2.5	-3.6	-5.2	-
노르웨이	-1.9	-1.4	0.3	3.2	6.3	7.6	3.3	6.0	15.4	13.3	9.2	7.3	11.1	15.1	18.5	17.7	18.8	7.1	11.8	-
폴란드	-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5.2	-8.2	-7.5	-5.2	-4.6	-3.5	-3.4	-2.8	-2.9	-4.3	-2.8	-2.9	-3.4	-6.1	-3.9	-2.6	-2.6	-6.9	-7.3	-
슬로바키아	-9.1	-6.3	-1.2	0.3	-3.1	-4.8	-4.7	-3.7	-7.4	-6.5	-5.7	-2.7	-3.2	-2.8	-3.5	-1.9	-2.5	-5.3	-4.4	-
슬로베니아	1.3	1.2	0.0	0.0	0.3	-1.1	-0.7	-0.6	-1.2	-1.3	-1.5	-1.3	-1.3	-1.0	-0.8	0.3	-0.3	-5.9	-5.6	-
스페인	-3.9	-6.6	-6.0	-6.9	-4.8	-3.4	-3.2	-1.2	-1.0	-0.6	-0.5	-0.2	-0.3	1.0	2.0	2.2	-3.8	-12.3	-12.5	-
스웨덴	-8.9	-11.2	-9.1	-7.3	-3.3	-1.6	1.2	1.4	3.8	1.7	-1.4	-1.2	0.6	2.0	2.4	3.8	2.5	-3.5	-3.9	-
스위스	-3.5	-3.8	-3.0	-2.1	-2.2	-2.7	-0.7	-0.5	2.2	0.0	-0.3	-1.4	-1.3	0.1	1.7	2.2	0.9	-1.5	-1.5	-
영국	-6.3	-7.8	-6.6	-5.7	-4.0	-2.1	-0.1	0.9	1.3	0.6	-1.9	-3.3	-3.3	-3.3	-2.6	-2.6	-5.1	-11.6	-13.2	-11.3
미국	-5.8	-4.9	-3.6	-3.1	-2.2	-0.8	0.4	0.8	1.6	-0.4	-3.7	-4.8	-4.3	-3.2	-2.2	-2.8	-5.9	-12.5	-10.0	-7.6
OECD전체	-4.4	-4.7	-3.8	-3.6	-2.3	-1.3	-1.1	-0.4	0.9	-0.2	-1.1	-1.4	-0.9	-0.1	0.8	1.1	-0.7	-5.7	-5.9	-6.4

○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	-	-	-	-
캐나다	90.2	96.3	98.0	101.6	101.7	96.3	95.2	91.4	82.1	82.7	80.6	76.6	72.6	71.0	68.0	64.2	62.7	78.2	79.3	77.3
체코	-	-	-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39.8	46.2	49.4	55.4	58.0	59.3	59.4	58.8	57.3	56.9	58.8	62.9	65.0	66.4	63.6	63.8	67.5	76.7	82.6	86.6
독일	41.7	45.5	47.7	55.1	57.9	59.1	59.3	59.6	58.7	57.9	59.6	62.8	64.7	66.4	65.9	63.4	67.1	78.7	84.5	87.8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105.2	115.6	121.8	121.6	120.9	118.1	114.9	113.8	109.2	108.8	105.7	104.4	103.8	105.8	106.5	103.5	105.7	115.8	120.1	123.5
일본	72.5	78.5	84.6	92.5	100.3	107.1	120.1	133.8	142.1	151.7	160.9	167.2	178.1	191.6	191.3	187.7	196.6	218.6	227.0	231.9
한국	-	-	-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	-	-	-	-
영국	32.8	37.9	43.0	46.3	48.2	49.3	46.3	43.7	40.9	37.7	37.2	38.5	40.2	42.1	43.2	44.1	52.0	68.7	81.7	89.3
미국	70.6	72.3	71.5	71.0	70.2	67.7	64.5	60.7	54.7	54.7	56.9	60.2	61.2	61.4	60.9	61.9	70.4	84.8	93.6	97.7
OECD전체	-	-	-	-	-	-	-	-	-	-	-	-	-	-	-	-	-	-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9.10.

○ General government net debt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	-	-	-	-
캐나다	59.1	64.2	67.9	70.7	70.0	64.7	60.8	55.8	46.2	44.3	42.6	38.7	35.2	30.6	26.5	23.5	22.2	28.2	31.3	31.8
체코	-	-	-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30.9	35.7	41.4	46.7	49.0	49.6	49.7	49.2	47.6	48.2	49.1	53.2	55.3	56.7	53.9	54.1	57.8	67.0	72.9	76.9
독일	33.4	37.1	39.5	47.4	50.3	51.7	51.8	53.5	51.5	52.1	54.3	57.7	60.0	61.8	60.1	56.9	60.5	70.3	76.2	79.6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99.1	108.9	114.5	114.2	113.7	116.5	113.3	111.9	107.3	107.0	103.8	102.5	102.0	103.8	104.4	101.3	103.6	112.8	117.0	120.3
일본	14.7	18.1	20.7	24.9	29.2	34.8	46.2	53.8	60.4	66.3	72.6	76.5	82.7	84.6	84.3	80.4	88.1	104.6	115.0	122.3
한국	-	-	-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	-	-	-	-
영국	27.3	31.8	36.8	40.6	43.7	44.4	41.5	39.2	33.6	32.2	32.0	33.7	35.5	37.3	38.0	38.3	45.6	62.1	75.1	82.8
미국	52.7	55.2	54.6	54.1	52.2	49.1	45.3	40.6	35.8	35.0	37.5	40.8	42.4	42.7	41.8	42.3	47.9	58.2	66.8	72.3
OECD전체	-	-	-	-	-	-	-	-	-	-	-	-	-	-	-	-	-	-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9.10.

II

미국 (2009년 10월 기준)

1. 재정동향

- '09.2월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악화
 -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는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II-1〉 일반정부 재정

(단위: 명목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¹⁾	33.8	35.8	33.4	34.2	34.5	33.1	31.3	31.5
총지출 ²⁾	37.0	34.2	36.6	36.5	37.4	39.0	41.6	42.8
재정수지	-3.1	1.6	-3.3	-2.2	-2.9	-5.9	-10.2	-11.2
구조적 재정수지 (잠재 GDP 대비 %)	-2.8	1.0	-3.4	-2.6	-3.2	-5.7	-8.3	-8.8
총국가채무	70.7	55.2	62.3	61.7	62.9	71.1	87.4	97.5
순국가채무	53.8	36.0	43.2	42.3	43.0	48.2	59.0	69.3

주: 1) 공기업의 운영수익 제외

2) 공기업의 순운영수익을 지출에 포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5, '09.6월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FY2010 첫 달인 '09.10월 한 달간 재정적자는 1,764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5.6% 감소
 - (재정수입) 경기침체와 경기부양법(ARRA)⁴¹⁾의 세금감면 조치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약 295달러(18%) 감소
 - (재정지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⁴²⁾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 인하여 재정지출은 전년동월 대비 903억달러(22.5%) 감소

〈표 3-II-2〉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²⁾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변동분	%	
총 재정수입	178,175	178,175	164,848	164,848	135,328	135,328	-29,520	-17.9	2,264,362
on-Budget	133,146	133,146	117,999	117,999	88,690	88,690	-29,309	-24.8	1,603,024
off-Budget	45,029	45,029	46,849	46,849	46,638	46,638	-211	-0.5	661,338
총 재정지출	233,733	233,733	402,024	402,024	311,692	311,692	-90,332	-22.5	3,766,012
on-Budget	191,305	191,305	354,567	354,567	258,667	258,667	-95,900	-27.0	3,214,586
off-Budget	42,428	42,428	47,457	47,457	53,025	53,025	5,568	11.7	551,426
재정수지	-55,557	-55,557	-237,177	-237,177	-176,364	-176,364	60,813	-25.6	-1,501,650
on-Budget	-58,159	-58,159	-236,569	-236,569	-169,977	-169,977	66,592	-28.1	-1,611,562
off-Budget	2,601	2,601	-608	-608	-6,387	-6,387	-5,779	950.5	109,912
총 재원조달 규모	55,557	55,557	237,177	237,177	176,364	176,364	-60,813	-25.6	1,501,650
채무	18,877	18,877	494,505	494,505	-60,681	-60,681	-555,186	-112.3	1,719,063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37,280	37,280	-243,350	-243,350	238,549	238,549	481,899	-198.0	-
기타	-600	-600	-13,978	-13,978	-1,504	-1,504	12,474	-89.2	-217,413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09.8월 OMB에서 발표한 FY2010 Mid-Session Review에 근거한 수치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4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42)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09.10월 재정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한 1,353억달러 기록

-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소득세와 지불급여세 payroll tax의 원천징수분 감소 및 경기부양법(ARRA)의 세금감면 조치로 재정수입 감소
- 법인세는 10월 총세입이 78억달러였으나 세금환급분 123억달러로 인해 순세입은 마이너스를 기록

〈표 3-11-3〉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누계기준)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변동분	%
개인소득세	95,563	95,563	86,323	86,323	61,248	61,248	-25,075	-29.0
법인세	5,955	5,955	81	81	-4,505	-4,505	-4,586	-5661.7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Off-budget)	45,029	45,029	46,849	46,849	46,638	46,638	-211	-0.5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On-budget)	14,923	14,923	15,455	15,455	14,914	14,914	-541	-3.5
실업보험	2,137	2,137	2,007	2,007	1,346	1,346	-661	-32.9
기타퇴직연금	325	325	394	394	390	390	-4	-1.0
소비세	4,452	4,452	3,911	3,911	4,347	4,347	436	11.1
유산세 및 증여세	2,413	2,413	2,097	2,097	1,556	1,556	-541	-25.8
관세	2,509	2,509	2,633	2,633	2,159	2,159	-474	-18.0
기타 재정수입	4,870	4,870	5,097	5,097	7,236	7,236	2,139	42.0
총재정수입	178,175	178,175	164,848	164,848	135,328	135,328	-29,520	-17.9
On-budget	133,146	133,146	117,999	117,999	88,690	88,690	-29,309	-24.8
Off-budget	45,029	45,029	46,849	46,849	46,638	46,638	-211	-0.5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다. 세출 동향

- FY2010 첫 달의 재정지출은 전년동월 대비 22.5% 감소한 3,117억달러 기록
 - '08.10월 시작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지출이 330억달러에서 '09.10월 2억달러로 대폭 감소
 -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의 지출이 FY2009에 비해 각각 10.5%, 11.8% 증가
 - (사회보장지출) '09.1월부터 생계비가 인상 적용됨으로써 지출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메디케어) '09.10월에 비해 처방약 관련 보험급여 지출이 39.1% 증가하여 전반적인 메디케어 지출증가에 기여

〈표 3-Ⅱ-4〉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변동분	%
국방	58,409	58,409	68,842	68,842	70,154	70,154	1,312	1.9
외교	1,338	1,338	4,509	4,509	3,926	3,926	-583	-12.9
과학, 우주, 기술 일반	1,521	1,521	3,473	3,473	2,090	2,090	-1,383	-39.8
에너지	-184	-184	31	31	63	63	32	103.2
천연자원 및 환경	2,763	2,763	2,002	2,002	9,259	9,259	7,257	362.5
농업	7,043	7,043	8,033	8,033	1,023	1,023	-7,010	-87.3
상업 및 주택금융	935	935	116,936	116,936	2,375	2,375	-114,561	-98.0
교통	7,380	7,380	8,037	8,037	8,976	8,976	939	11.7
지역개발	2,714	2,714	3,455	3,455	1,949	1,949	-1,506	-43.6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7,318	7,318	8,087	8,087	10,406	10,406	2,319	28.7
보건	23,828	23,828	26,246	26,246	30,337	30,337	4,091	15.6
메디케어	32,804	32,804	47,049	47,049	52,608	52,608	5,559	11.8
소득보장	27,539	27,539	36,928	36,928	45,009	45,009	8,081	21.9
사회보장	49,172	49,172	52,120	52,120	57,604	57,604	5,484	10.5
보훈	6,726	6,726	11,465	11,465	13,292	13,292	1,827	15.9
법무행정	2,939	2,939	4,218	4,218	4,436	4,436	218	5.2
일반행정	2,339	2,339	665	665	769	769	104	15.6
순이자지급	18,196	18,196	18,985	18,985	17,930	17,930	-1,055	-5.6
상계계정수입	-19,048	-19,048	-19,058	-19,058	-20,515	-20,515	-1,457	7.6
합계	233,733	233,733	402,024	402,024	311,692	311,692	-90,332	-22.5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라. 국가채무동향

□ '09.10.31일 기준 공공채무(public debt)*는 전년 10월 대비 12.5% 증가한 11조 8,931억 달러

*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전년동월 대비 18.8% 증가한 7조 4,879억달러 기록

○ (정부부문 소유 채무)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한 4조 4,052억달러 기록

〈표 3-11-5〉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7.10.31			'08.10.31			'09.10.31			전년대비 증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장장:	4,444,884	19,846	4,464,730	5,704,139	25,221	5,729,360	6,924,930	22,703	6,947,633	1,220,791	21.4	-2,518	-10.0	1,218,273	21.3
단기채(T-Bills)	934,092	3,981	938,073	1,904,060	5,675	1,909,736	1,852,331	6,176	1,858,507	-51,729	-2.7	501	8.8	-51,229	-2.7
중기채(T-Notes)	2,480,546	1,568	2,482,114	2,685,691	913	2,686,604	3,816,792	1,432	3,818,224	1,131,101	42.1	519	56.8	1,131,620	42.1
장기채(T-Bonds)	560,937	160	561,098	578,915	3,955	582,870	689,021	2,867	691,888	110,106	19.0	-1,088	-27.5	109,018	18.7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469,310	137	469,446	535,472	678	536,150	566,786	308	567,094	31,314	5.8	-370	-54.6	30,944	5.8
Federal Financing Bank	0	14,000	14,000	0	14,000	14,000	0	11,921	11,921	0	-	-2,079	-14.9	-2,079	-14.9
비시장장:	622,194	3,992,162	4,614,356	598,655	4,246,080	4,844,734	562,957	4,382,501	4,945,458	-35,698	-6.0	136,421	3.2	100,724	2.1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	0	-	0	-
Foreign Series	2,986	0	2,986	3,986	0	3,986	4,386	0	4,386	400	10.0	0	-	400	10.0
R.E.A. Series	1	0	1	1	0	1	1	0	1	0	-	0	-	0	-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297,300	0	297,300	254,564	0	254,564	215,785	0	215,785	-38,779	-15.2	0	-	-38,779	-15.2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6,871	0	196,871	194,236	0	194,236	192,172	0	192,172	-2,064	-1.1	0	-	-2,064	-1.1
Government Account Series	89,213	3,992,162	4,081,375	112,814	4,245,589	4,358,403	119,127	4,382,008	4,501,135	6,313	5.6	136,419	3.2	142,732	3.3
Hope Bonds	-	-	-	0	491	491	0	492	492	0	-	1	0.2	1	0.2
Other	5,828	0	5,828	3,058	0	3,058	1,492	0	1,492	-1,566	-51.2	0	-	-1,566	-51.2
합계	5,067,079	4,012,008	9,079,086	6,302,794	4,271,301	10,574,094	7,487,887	4,405,204	11,893,091	1,185,093	18.8	133,903	3.1	1,318,997	12.5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Ⅲ

일본 (2009년 9월 기준)

1. 재정동향(OECD)

- 2009년부터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
 - 2006년 이후 세입 증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2009년~2010년 지출이 증가하면서(각각 GDP 대비 42.3%, 42.1%) 지난 20년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8년(GDP 대비 4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는 2009년 7.9%, 2010년 8.7%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1998년(11.2%) 이후 최고치임

-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GDP 대비 106.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6년 0.3%p, 2007년 3.9%p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

〈표 3-III-1〉 일반정부¹⁾ 연도별 재정 동향

(단위: 명목 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31.4	31.4	31.7	34.5	33.5	34.4	34.5	33.4
총지출	36.5	39.0	38.4	36.2	36.0	37.1	42.3	42.1
재정수지	-5.1	-7.6	-6.7	-1.6	-2.5	-2.7	-7.8	-8.7
구조적 재정수지	-5.0	-7.1	-6.9	-2.2	-3.5	-3.2	-5.9	-6.4
총국가채무 ²⁾	86.7	135.4	175.3	172.1	167.1	172.1	189.6	199.8
순국가채무 ³⁾	24.1	60.4	84.6	84.3	80.4	84.3	97.1	106.6

주: 1) 주·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2), 3) 1998년 이후 국유철도 청산사업단과 국유임야사업 특별회계 부채 포함

1. 자세한 사항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참고.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자료: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5(6월)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년 4월~9월까지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한 15조 6,200억엔으로 크게 증가
 - 9월까지 누계기준 세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 210억엔(31.3%) 증가하였으나, 지출 역시 9조 8,280억엔(24.9%) 증가함
 - 이미 9월까지의 지출이 FY2009년도 예산지출액(106조 9,840억엔)에 근접함

- 특별회계의 누적 적자규모도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12조 6,870억엔, 295.1%)

〈표 3-III-2〉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9,907	25,923	8,088	25,600	9,095	33,621	8,021	31.3	102,474
재정지출	9,814	39,108	10,004	39,413	10,524	49,241	9,828	24.9	106,984
수지	93	-13,185	-1,916	-13,813	-1,429	-15,620	-1,807	13.1	-4,511
〈특별회계〉									
재정수입	27,125	207,255	35,379	210,738	34,642	191,889	-18,848	-8.9	383,977
재정지출	36,623	215,890	37,069	215,037	40,400	208,876	-6,161	-2.9	380,921
수지	-9,498	-8,636	-1,690	-4,299	-5,757	-16,987	-12,687	295.1	3,055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헤세이 21년, 20년, 19년 각 연도 9월 말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조세 및 인지수입은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정으로 12.6% 감소
 - 2009년 9월까지 조세 및 인지수입은 8,850억엔(12.6%) 감소한 6조 1,350억엔
 - 이 중 소득세(15.5%)와 상속세(15.8%)의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휘발류세는 1,100억엔, 기타수입 2조 6,190억엔 증가

□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9월까지 22조 4,370억엔의 정부채권 발행

〈표 3-III-3〉 과목별 세입 현황(2009년 9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5,007	7,432	4,324	7,020	3,629	6,135	-885	-12.6	46,103
조세	4,913	7,011	4,235	6,613	3,541	5,741	-873	-13.2	45,118
소득세	2,834	4,290	3,073	4,457	2,465	3,768	-689	-15.5	15,572
법인세	243	390	-	124	-	-	-	-	10,544
상속세	107	254	110	256	90	216	-41	-15.8	1,522
소비세	593	593	601	601	540	540	-61	-10.1	10,130
주세	237	258	120	247	114	247	0	0.0	1,420
담배세	129	228	78	216	74	211	-5	-2.1	843
휘발류세	453	471	66	227	106	337	110	48.3	2,628
석유가스세	1	2	1	2	1	2	0	-8.1	13
항공기연료세	14	22	7	21	7	20	-1	-6.2	83
석유석탄세	84	84	13	53	9	53	0	-0.4	510
전원개발촉진세	54	81	27	82	25	76	-6	-7.2	351
자동차종량세	59	111	60	111	47	96	-16	-13.9	646
관세	105	224	78	212	63	172	-40	-19.0	846
톤세	1	3	1	3	1	3	-1	-16.4	10
토지세	0	0	0	0	0	0	0	123.9	-
구세(旧税)	0	0	0	0	0	0	0	131.5	-
인지수입	94	421	89	407	88	395	-12	-3.0	985
국영기업수입	1	8	1	8	1	8	0	-3.6	16
정부자산매각수입	36	157	17	169	7	55	-114	-67.6	263
국유재산매각	18	128	7	69	4	33	-36	-52.7	192
회수금 등 수입	18	29	10	100	4	22	-78	-77.8	71
기타수입	53	3,190	59	2,368	2,157	4,986	2,619	110.6	11,979
국유재산이용수입	4	37	5	40	4	43	3	7.9	70
납부금	24	1,231	24	264	23	223	-42	-15.7	1,046
기타	25	1,923	30	2,063	2,130	4,721	2,657	128.8	10,862
정부채권발행(公債金)	4,810	15,136	-	-	3,300	22,437	-	-	44,113
총계	9,907	25,923	8,088	25,600	9,095	33,621	8,021	31.3	102,474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혜세이 21년, 20년, 19년 각 년도 9월 말

- 2009년 4월~9월까지 특별회계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9% 감소한 191조 8,890억엔
 -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정리기금의 수입은 9월까지 117조 620억엔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조 580억엔(10.0%) 감소
 - 재정투융자 11.1%(2조 2,160억엔), 연금 4.2%(1조 5,370억엔), 노동보험 34.4%(1조 5,560억엔) 감소
 - FY2009년 재정투융자 자금계산에서 4조2천억엔 규모가 일반회계로 이전(국가별 정책동향 참고)

〈표 3-III-4〉 특별회계 수입 현황(2009년 9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3,622	11,859	3,670	12,218	4,067	12,710	492	4.0	52,241
등기	8	98	8	98	7	91	-8	-7.8	179
지진재보험	6	27	7	29	7	29	1	2.4	68
국채정리기금	15,744	132,253	17,033	130,120	20,244	117,062	-13,058	-10.0	183,501
재정투융자 ¹⁾	5,022	19,845	5,996	20,036	7,037	17,820	-2,216	-11.1	45,981
외국환자금	64	455	127	544	87	253	-290	-53.4	3,420
특정국유재산정비	0	184	0	175	0	131	-44	-25.2	123
에너지대책	285	854	10	784	28	714	-70	-9.0	2,524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11	89	13	90	16	106	16	17.4	190
노동보험	1,015	5,224	1,078	4,523	321	2,967	-1,556	-34.4	7,782
선원보험	2	30	10	33	5	32	-1	-3.0	54
연금	611	30,707	6,822	36,902	2,439	35,365	-1,537	-4.2	76,557
식량안정공급	62	343	59	788	46	697	-91	-11.5	3,661
국영토지개발사업 ²⁾	38	181	-	-	-	-	-	-	-
농업공제재보험	42	62	42	59	46	63	4	7.1	119
삼림보험	0	10	0	10	0	9	0	-5.0	11
국유임야사업	7	221	6	193	13	203	10	5.2	495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8	1	8	1	7	0	-5.9	26
무역재보험	3	806	3	168	2	122	-46	-27.3	212
특허	13	193	11	228	9	235	7	3.2	290
사회자본정비사업 ³⁾	564	3,675	477	3,619	262	3,170	-449	-12.4	6,412
자동차안전 ⁴⁾	8	132	5	113	5	101	-12	-10.3	130
계	27,125	207,074	35,379	210,738	34,642	191,889	-18,848	-8.9	383,977

주: 1) 산업투자자 및 재정투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영토지개발사업이 2008년 일반회계화 됨

3) 도로정비, 치수, 항만정비, 공항정비, 도시개발자금융통이 2008년 사회자본정비사업으로 통합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사업, 자동차검사등록은 2008년 자동차안전으로 통합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혜세이 21년, 20년, 19년 각 년도 9월 말

다. 소관별 세출 동향

- FY2009 재정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후생노동성 35.7%, 총무성 28.1%, 재무성 14.7% 등 증가
 -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인상 등 사회보장 관련지출 증가로 후생노동성의 지출이 크게 증가
 - 지출이 감소한 소관은 내각부(9%), 재판소(2.2%), 내각(4.4%), 외무성(0.3%), 회계검사원(2.0%)임
- 특별회계 지출 합계는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한 208조 8,760억엔
 - 이 중 국채정리기금의 지출감소 규모가 5조 7,450억엔(5.3%)으로 가장 크고, 재정투융자 지출이 1조 5,640억엔(8.4%) 감소
 - 연금지출은 1조 370억엔(3.0%) 증가한 35조 7,440억엔임

〈표 3-III-5〉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2009년 9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황실비	0	1	0	1	0	1	0	7.1	7
국회	7	54	7	53	9	53	0	0.3	150
재판소	16	136	17	136	17	133	-3	-2.2	355
회계검사원	1	9	1	7	1	7	0	-2.0	18
내각	7	19	3	17	3	16	-1	-4.4	107
내각부	24	187	32	194	26	177	-17	-9.0	3,213
총무성	3,577	10,220	3,623	11,389	3,989	14,589	3,200	28.1	20,370
법무성	34	279	32	272	37	276	4	1.5	810
외무성	61	306	43	327	30	326	-1	-0.3	775
재무성	4,258	10,555	4,550	9,615	4,540	11,032	1,416	14.7	23,895
문부과학성	171	2,195	180	2,213	168	2,261	48	2.2	6,970
후생노동성	898	9,453	877	9,689	980	13,151	3,462	35.7	28,776
농림수산성	189	867	133	891	145	1,208	317	35.5	4,033
경제산업성	44	232	14	182	34	1,003	821	451.2	2,400
국토교통성	294	2,468	197	2,296	297	2,750	454	19.8	9,566
환경성	7	29	7	32	6	157	124	386.7	462
방위성	226	2,095	288	2,096	242	2,100	4	0.2	5,080
재정지출(합계)	9,814	39,108	10,004	39,413	10,524	49,241	9,828	24.9	106,984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헤세이 21년, 20년, 19년 각 연도 9월 말

〈표 3-III-6〉 특별회계 세출 현황(2009년 9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6,268	45,024	6,216	45,327	5,955	45,593	265	0.6	52,014
등기	9	56	9	54	9	57	2	4.1	176
지진재보험	0	0	0	0	0	0	0	-4.4	68
국채정리기금	23,621	111,030	23,622	108,754	25,843	103,009	-5,745	-5.3	182,681
재정투융자 ¹⁾	4,117	18,074	5,240	18,531	6,570	16,967	-1,564	-8.4	44,649
외국환자금	50	328	58	329	16	108	-221	-67.1	1,643
특정국유재산정비	0	3	9	22	2	9	-13	-58.5	76
에너지대책	57	1,648	25	1,701	32	1,674	-27	-1.6	2,618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15	61	15	59	16	62	4	6.2	207
노동보험	1,018	3,670	274	2,953	324	3,168	215	7.3	7,653
선원보험	4	25	4	25	4	25	0	1.5	54
연금	1,115	33,717	1,266	34,707	1,302	35,744	1,037	3.0	76,439
식량안정공급	23	717	49	1,138	39	891	-248	-21.8	3,660
국영토지개발사업 ²⁾	10	66	-	-	-	-	-	-	-
농업공제재보험	3	18	3	17	3	17	-1	-3.6	109
삼림보험	0	2	0	1	0	0	-1	-63.5	5
국유임야사업	11	213	10	208	13	221	13	6.1	549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6	1	6	1	5	-1	-23.0	16
무역재보험	0	2	0	1	0	6	5	439.1	212
특허	5	38	5	37	6	41	3	9.4	125
사회자본정비사업 ³⁾	290	1,149	259	1,138	265	1,258	120	10.5	7,895
자동차안전 ⁴⁾	6	43	3	28	3	21	-7	-25.3	71
계	36,623	215,890	37,069	215,037	40,400	208,876	-6,161	-2.9	380,921

주: 1) 산업투자자 및 재정투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영토지개발사업이 2008년 일반회계화 됨

3) 도로정비, 치수, 항만정비, 공항정비, 도시개발자금융통이 2008년 사회자본정비사업으로 통합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사업, 자동차검사등록은 2008년 자동차안전으로 통합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헤세이 21년, 20년, 19년 각 연도 9월 말

라. 국가채무동향⁴³⁾

- 2009년 9월 30일 기준 국가채무는 864조 5,226억엔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 경기부양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발행, 국채가 총 14조 412억엔(2.1%) 증가 : 정부채권이 21조 6,079억엔(4.0%) 증가한 반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채권은 9조 622억엔(6.7%) 감소
 - 재정어음은 7조 311억엔(6.6%), 차입금은 1,709억엔(0.3%) 증가함
- 2009년 정부보증채무는 작년 9월에 비해 8,493억엔(1.8%) 감소한 45조 6,133억엔 규모임

〈표 3-III-7〉 중앙정부채무(9월 30일 기준)

(단위: 억엔)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9월	9월	9월	증감액	%
국채	6,746,777	6,802,570	6,942,982	140,412	2.1
정부채권	5,311,491	5,416,451	5,632,530	216,079	4.0
장기(10년 이상)	3,526,931	3,560,265	3,628,511	68,246	1.9
중기(2~5년)	1,502,523	1,573,687	1,679,875	106,188	6.7
단기(1년 미만)	282,037	282,499	324,144	41,645	14.7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401,979	1,357,506	1,266,884	-90,622	-6.7
장기(10년 이상)	875,980	925,637	968,554	42,917	4.6
중기(2~5년)	525,999	431,869	298,330	-133,539	-30.9
교부채권(Subsidy bond)	5,682	5,360	4,594	-766	-14.3
출자채권 등	24,935	22,932	18,221	-4,711	-20.5
기타 채권 ¹⁾	2,689	321	20,754	20,433	6365.4
차입금	569,166	560,327	562,036	1,709	0.3
장기(1년 초과)	220,730	212,201	216,226	4,025	1.9
단기(1년 이하)	348,436	348,126	345,810	-2,316	-0.7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21,040	1,069,897	1,140,208	70,311	6.6
총계	8,336,982	8,432,794	8,645,226	212,432	2.5
정부보증채무	482,180	464,626	456,133	-8,493	-1.8

주: 1) 기타 채권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함. 2008년은 석유채권승계채권, 2009년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 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3. 헤세이 21년(2009년) 12월 말 자료는 헤세이 21년 2월 10일 공표 예정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과 정부보증채무 현황-헤세이 19년, 20년, 21년 각 연도 9.30 기준

43) 재무성 통계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작성. 2009. 9. 30. 기준 작성(11월 10일자 업데이트)

IV 영국 (2009년 10월 기준)

1. 재정동향(OECD)

□ 2008년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0년에는 순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할 전망

- 2008년 말 금융위기 및 경기후퇴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
 -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12.8%, 2010년에는 14.0%로 증가
 - 2009년 총세입은 2002년(GDP 대비 39.0%) 이후 가장 낮은 39.5%, 2010년은 2009년보다 조금 증가한 40.2%로 전망
 - 총지출은 1999~2001년 GDP 대비 40%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52.4%, 2010년 54.1%로 전망
- 2008년 순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33.6%로 전년에 비해 4.8%p 증가한데 이어, 2009년 47.5%, 2010년 61.0%로 크게 증가할 전망
 - 영국 재무부의 월간보고서(나. 최근통계 참고) 10월호에 따르면, 순국가채무가 이미 GDP의 59.2%에 이름

〈표 3-IV-1〉 일반정부¹⁾ 연도별 재정 동향

(단위: 명목 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세입	38.2	40.3	40.8	41.6	41.4	42.6	39.5	40.2
총 지출	44.1	36.6	44.2	44.3	44.1	48.1	52.4	54.1
재정수지	-5.8	3.7	-3.3	-2.7	-2.7	-5.5	-12.8	-14.0
구조적 재정수지	-5.6	1.0	-3.6	-3.1	-3.5	-5.8	-10.5	-10.4
총국가채무	51.6	45.1	46.1	46.0	46.9	57.0	75.3	89.3
순국가채무	26.3	26.8	27.2	27.8	28.8	33.6	47.5	61.0

주: 1) 주·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1. 자세한 사항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참고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자료: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5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공공부문의 FY2009년 4월~10월 누계기준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460억파운드 (207%) 증가한 682억파운드에 달함
 - FY2007, FY2008 10월 재정수지는 모두 흑자였던 반면, 2009년 10월 재정수지는 77억 파운드 적자를 기록함
 - 2009년 10월 기준 GDP 대비 순부채규모는 59.2%에 달하고, 순차입규모 역시 크게 증가

〈표 3-IV-2〉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10월	4~10월	10월	4~10월	10월	4~10월	4~10월 누계기준	%
재정적자	4.3	-8.7	2.2	-22.2	-7.7	-68.2	-46.0	207.2
순차입	2.2	18.6	0.1	33.9	11.4	86.9	53.1	156.8
순부채	607.1		695.1		829.7		134.6	19.4
GDP 대비 순부채	42.7		48.6		59.2		10.6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10)',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 2009년 4월~10월까지 중앙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726억파운드로 전년동기 대비 479억 파운드(194%)의 적자 증가
 - 세입(2,603억파운드)은 전년보다 10.0% 감소한 반면, 지출(3,291억파운드)은 전년 대비 6.0% 증가
 - 순투자규모도 증가하여 10월에 32억파운드, 누계기준 211억파운드임

〈표 3-IV-3〉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10월	4~10월	10월	4~10월	10월	4~10월	4~10월 누계 기준	%
재정수입 ¹⁾	45.8	284.8	45.2	289.4	41.0	260.3	-29.1	-10.0
생산물과세(VAT포함)	15.1	103.9	14.5	103.2	14.2	95.3	-7.8	-7.6
소득세 및 재산세	20.4	110.8	20.2	112.8	16.9	95.1	-17.6	-15.6
기타과세	1.1	7.9	1.2	7.7	1.0	7.2	-0.5	-6.2
사회복지세	7.5	52.4	7.8	55.4	7.6	53.6	-1.8	-3.2
이자 및 배당금	1.0	5.3	0.8	5.7	0.6	4.0	-1.7	-30.2
기타 재정수입	0.6	4.5	0.7	4.6	0.7	5.0	0.4	9.0
재정지출	41.9	294.3	44.1	310.4	48.6	329.1	18.7	6.0
이자	3.0	17.5	3.5	20.0	3.9	15.4	-4.7	-23.4
순사회복지급여	12.0	81.4	12.6	87.3	13.9	96.1	8.8	10.1
기타 재정지출	26.9	195.4	28.0	203.1	30.9	217.7	14.6	7.2
감가상각	-0.5	-3.6	-0.5	-3.6	-0.5	-3.8	-0.1	3.0
재정수지	3.4	-13.1	0.5	-24.7	-8.1	-72.6	-47.9	194.0
투자 ²⁾	1.9	15.3	2.6	22.4	3.8	24.8	2.5	11.0
less Depreciation	0.5	3.6	0.5	3.6	0.5	3.8	0.1	3.0
순투자	1.4	11.7	2.1	18.7	3.2	21.1	2.3	12.5
순차입	-2.0	24.8	1.6	43.4	11.4	93.6	50.2	115.7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자본형성+토지순취득+순투자보조금-자본자산매각

투자 FY2007년은 ONS에 항목 없음. '투자 = 순투자+less Depreciation'으로 산출.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10),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2009년 4월~10월까지 세입 누계는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 재정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

-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감소
 - 경기부양조치의 일환인 법인세 납부연기제도 등의 영향으로 2009년 4월~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31.8%(106억파운드) 감소한 228억파운드임
 - 부가가치세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 인하조치(2008.12.1~2009.12.31)로 전년동기 대비 84억파운드(15.6%) 감소한 456억 파운드 규모

〈표 3-IV-4〉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10월	4~10월	10월	4~10월	10월	4~10월	4~10월 누계기준	%
생산물과세	총세액	15.1	103.9	14.5	103.2	14.2	95.3	-7.8	-7.6
	부가가치세	7.6	52.8	7.3	54.0	6.9	45.6	-8.4	-15.6
소득세 및 재산세	총세액	20.4	110.8	20.2	112.8	16.9	95.1	-17.6	-15.6
	소득세 ¹⁾	10.6	79.3	10.3	79.3	9.6	72.3	-7.0	-8.8
	법인세 등 ²⁾	9.7	31.5	9.9	33.4	7.4	22.8	-10.6	-31.8
기타 과세(tax)		1.1	7.9	1.2	7.7	1.0	7.2	-0.5	-6.2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7.5	52.4	7.8	55.4	7.6	53.6	-1.8	-3.2
이자 및 배당금		1.0	5.3	0.8	5.7	0.6	4.0	-1.7	-30.2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6	4.5	0.7	4.6	0.7	5.0	0.4	9.0
재정수입		45.8	284.8	45.2	289.4	41.0	260.3	-29.1	-10.0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10)';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다. 기능별 세출 동향⁴⁴⁾

- 2009년 재정지출은 4월~10월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187억파운드(6%) 증가한 3,291억 파운드임
 - 이는 2007년 10월 누계와 2008년 10월 누계의 차액(161억파운드, 5.5%)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
 - 사회복지급여 및 기타 재정지출의 10월 누계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 10.1%, 7.2% 증가한 반면, 이자지출은 23.4% 감소

〈표 3-Ⅳ-5〉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10월	4~10월	10월	4~10월	10월	4~10월	4~10월 누계기준	%
이자	3.0	17.5	3.5	20.0	3.9	15.4	-4.7	-23.4
순사회복지급여	12.0	81.4	12.6	87.3	13.9	96.1	8.8	10.1
기타 재정지출	26.9	195.4	28.0	203.1	30.9	217.7	14.6	7.2
재정지출	41.9	294.3	44.1	310.4	48.6	329.1	18.7	6.0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10)';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라. 국가채무동향⁴⁵⁾

- 2009년 10월말 기준 순부채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한 8,297억파운드로 GDP의 59.2%에 달함
 - 지난 4월 말 기준 순부채규모는 GDP 대비 53.7%였으나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순부채는 1,346억파운드(GDP 대비 10.6%p) 증가함

44) 보다 구체적인 기능별 세출은 연간기준으로 제공됨. 매년 7월경 업데이트되는 재무부의 'Public expenditure outturn'(http://www.hm-treasury.gov.uk/d/press_66_09.pdf) 참고

45) 국가채무 통계는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됨. 구체적인 자료는 ONS, 'Government Debt and Deficit under the Maastricht Treaty'(http://www.statistics.gov.uk/pdfdir/maast0909.pdf) 참고

□ 2009년 4월~10월까지 공공부문의 차입금은 869억파운드로 전년동기 대비 156.8%(531억파운드) 크게 증가함

〈표 3-IV-6〉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10월	4~10월	10월	4~10월	10월	4~10월	4~10월 누계기준	%		
재정수지	4.3	-8.7	2.2	-22.2	-7.7	-68.2	-46.0	206.7		
순투자	2.1	9.9	2.3	11.6	3.7	18.7	7.1	61.3		
차입금 내역	공공부문(A+B)		-2.2	18.6	0.1	33.9	11.4	86.9	53.1	156.8
	정부 (A)	중앙정부	-2.0	24.8	1.6	43.4	11.4	93.6	50.2	115.7
		지방정부	0.3	-4.2	0.0	-2.8	0.5	-3.3	-0.5	16.9
		합계	-1.7	20.6	1.6	40.6	11.8	90.4	49.8	122.6
	공기업(B)		-0.5	-2.0	-1.5	-6.8	-0.4	-3.4	3.3	-49.2
순국가채무		607.1		695.1		829.7		134.6	19.4	
GDP 대비 국가채무		42.7		48.6		59.2		10.6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09.10)';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V

프랑스 (2009년 9월 기준)

1. 재정동향(OECD)

- 2009년, 2010년에는 1993년 6.4% 적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전망됨
 - 2005년 이후 세입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출의 증가로, 2009년 적자규모는 GDP 대비 6.7%, 2010년에는 7.9%로 예측
 - 특히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순국가채무 규모는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7년 34.0%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순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49.5%, 2010년에는 57.0%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3-V-1〉 일반정부¹⁾ 연도별 재정 동향

(단위: 명목 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48.9	50.1	50.5	50.3	49.6	49.3	48.7	47.9
총지출	54.4	51.6	53.4	52.7	52.3	52.7	55.4	55.8
재정수지	-5.5	-1.5	-3.0	-2.3	-2.7	-3.4	-6.7	-7.9
구조적 재정수지	-5.0	-2.2	-3.0	-2.6	-3.5	-3.9	-5.0	-5.2
총국가채무	62.1	65.6	75.7	70.9	69.9	76.1	86.4	94.2
순국가채무	37.5	35.1	43.2	37.2	34.0	41.9	49.5	57.0

주: 1) 주·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1. 자세한 사항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참고.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자료: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5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년 1월~9월 누계기준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2007년, 2008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됨
 - 2009년 9월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122.4% 증가한 1,258억유로에 달함
 - 수정예산(2009년 4월22일 통과)의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는 1,038억유로임
 - 일반회계 적자는 174.4%(599억유로), 특별회계 적자는 42.0%(93억유로) 증가
 - 전년 동기에 비해 재정수입은 크게 감소(23.4%)한 반면, 재정지출은 80억유로(3.1%) 증가

〈표 3-V-2〉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Md€))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일반회계	13.6	-27.8	11.7	-34.3	2.2	-94.2	-59.9	174.4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21.3	245.8	25.4	255.9	26.0	263.9	8.0	3.1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34.9	218.0	37.1	221.6	28.1	169.7	-51.9	-23.4
특별회계	-2.0	-24.4	-0.7	-22.2	-0.4	-31.5	-9.3	42.0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1.3	-23.1	-0.3	-22.8	0.4	-25.5	-2.7	11.8
재정수지	11.5	-52.2	11.0	-56.6	1.8	-125.8	-69.2	122.4

주: 9월 수치는(9월 누계 - 8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09.30, 2009.08.31

나. 세목별 세입동향

□ 2009년 9월 누계기준 세입은 전년동기 대비 479억유로(23.4%) 감소하여 1,568억유로 기록

- 이는 2009년 한해 전망치인 2,699억유로의 약 60% 수준임
-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72.6%, 부가가치세는 12.5%, 소득세는 7.4%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임
 -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 인하 및 환급, 8월 중순 이후 저소득 소득세 면제 등에도 영향을 받음

〈표 3-V-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Md€))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2009 전망치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세수	33.4	200.7	35.4	204.7	26.6	156.8	-47.9	-23.4	245.0
소득세	11.0	41.9	12.6	42.6	10.5	39.5	-3.2	-7.4	50.4
법인세	11.2	36.6	11.4	38.8	7.7	10.6	-28.2	-72.6	37.4
TIPP ¹⁾	1.1	12.6	1.4	12.1	1.3	10.9	-1.2	-9.6	15.1
부가가치세	11.2	96.0	11.1	97.7	9.3	85.5	-12.2	-12.5	126.7
기타	-1.0	13.5	-1.0	13.4	-2.2	10.2	-3.2	-23.6	15.4
세외수입	1.3	15.4	1.5	15.0	1.4	11.3	-3.6	-24.3	21.6
소계(PSR ²⁾ 제외)	34.7	216.2	37.0	219.6	27.9	168.1	-51.5	-23.5	266.6
기타 수입	0.1	1.8	0.1	2.0	0.1	1.6	-0.4	-20.3	3.3
총재정수입	34.9	218.0	37.1	221.6	28.0	169.7	-51.9	-23.4	269.9

주: 1)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2) 2007년, 2008년 보고서에는 보조금(Prélèvement sur recettes; PSR)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으나, 2009년부터 지출로 분류되어 2007년, 2008년 소계 값은 PSR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1. 9월 수치는 (9월 누계-8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7~2009 각 연도 8, 9월

다. 기능별 세출동향

□ 2009년 9월까지 누계 세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71억유로, 보조금 지출은 11.3% 증가한 568억유로임

○ 세출 중 국채이자 22.4%, 인건비가 0.4% 감소하였고, 이전비와 운용비가 각각 10.8%, 13.1% 증가함

□ 2009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노후연대기금을 제외하고 235억유로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래 표 중앙정부 재정지출에는 사회보장부문이 포함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2부 국가별 재정동향 참고

〈표 3-V-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 (Md€))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누계기준	%
세출	15.6	196.5	20.0	204.9	20.4	207.1	2.2	1.1
예비비	0.0	0.9	0.0	1.0	0.0	1.0	0.0	1.2
인건비	9.2	88.5	9.7	89.6	9.2	89.3	-0.3	-0.4
운용비	1.6	24.1	1.7	24.7	2.0	28.0	3.2	13.1
국채이자	0.8	26.6	1.6	31.1	1.0	24.1	-7.0	-22.4
투자비	0.7	8.8	1.0	9.4	0.8	10.4	1.0	10.3
이전비 ¹⁾	3.3	47.2	6.0	48.7	7.3	54.0	5.3	10.8
재정운용비용	0.0	0.3	0.0	0.3	0.1	0.3	0.1	23.8
보조금(PSR)	5.7	49.3	5.4	51.0	5.6	56.8	5.7	11.3
지방정부보조금	-	-	4.3	38.4	4.4	43.0	4.6	11.9
EU보조금	-	-	1.1	12.6	1.1	13.8	1.2	9.2
총재정지출	21.3	245.8	25.4	255.9	26.0	263.9	8.0	3.1

주: 1)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1. 표에서 0은 단위 미만 값, -는 데이터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7~2009 각 연도 8, 9월

라. 국가채무

- 2009년 9월 30일 기준 중앙정부국채는 1조 1,340억유로로 작년 9월 말보다 1,460억유로 (14.8%) 증가
 - 국채 중 1년 미만의 단기채권(BTF) 발행이 크게 증가
 - 전년 동기에 비해 930억유로(78.8%) 추가 발행됨

〈표 3-V-5〉 중앙정부 국가채무

(단위: 십억유로 (Md€))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2007.9.30.	2008.9.30.	2009.9.30.	증감액	%
중앙정부국채	933	988	1,134	146	14.8
OAT/장기채권(10~50년)	647	683	715	32	4.7
BTAN/중기채권(2~5년)	197	187	209	22	11.8
BTF/단기채권(1년 미만)	89	118	211	93	78.8
평균 만기기간	7년 14일	6년 352일	6년 229일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No.233) 10월호

VI

독일 (2009년 10월 기준)

1. 재정동향

- 두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으로 FY2009~10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될 전망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공공투자 확대,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 등 독일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의 약 3.75%에 해당
 - 이에따라, FY2009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 FY2010에는 6.2%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이루어진 독일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중장기적인 재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연방정부는 금년 6월 “채무제한(Schuldenbremse)법”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신규부채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

〈표 3-VI-1〉 일반정부 재정

(단위: 명목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45.1	46.4	43.6	43.8	43.9	43.9	44.0	42.4
총지출	54.8	45.1	46.9	45.3	44.1	44.0	47.7	48.6
재정수지	-9.7	1.3	-3.3	-1.5	-0.2	-0.1	-3.7	-6.2
구조적 재정수지 (잠재 GDP 대비 %)	-9.4	-1.7	-2.5	-1.7	-1.2	-1.1	-1.6	-3.2
총국가채무 ¹⁾	55.7	60.4	71.1	69.4	65.5	69.0	78.2	84.1
순국가채무 ²⁾	30.3	34.4	49.8	48.0	43.0	45.1	51.1	56.9

주: 1) 1995년 이후 Inherited Debt Fund의 부채 포함

2) 1995년 이후 Inherited Debt Fund의 부채 포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5, '09.6월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09.10월까지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한 391억유로 발생
 -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지출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악화
 - (재정지출) 전년동기 대비 43억유로 증가한 2,440억유로 기록
 - (재정수입) 전년동기 대비 57억유로 감소한 2,048억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세입은 1,797억유로

〈표 3-VI-2〉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09 (추정)
	10월	누계 ¹⁾	10월	누계 ¹⁾	10월	누계 ¹⁾	변동분	%	
재정지출	21.8	227.7	22.9	239.7	25.4	244.0	4.3	1.8	303.3
재정수입	16.8	199.6	18.3	210.5	16.8	204.8	-5.7	-2.7	253.8
세수	14.8	177.9	16.2	187.3	15.2	179.7	-7.6	-4.1	224.1
재정수지	-4.9	-28	-4.7	-29.2	-8.5	-39.1	-9.9	33.9	-49.5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7.10~11월, 2008.10~11월, 2009.10~11월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FY2009 10월까지의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2,048억유로
 - (세입)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 '09.10월 한달간 법인세는 전년동월 대비 1.5억유로의 세입 증가를 보였으나, 10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65.6%(40억유로) 감소
 -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10월까지의 전반적인 기타수입 항목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251억유로 기록

〈표 3-VI-3〉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09 (추정)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변동분	%	
I. 조세수입	14,747	177,865	16,176	187,264	15,248	179,728	-7,536	-4.0	224,068
공통세:	11,979	145,259	12,354	153,731	11,811	143,936	-9,795	-6.4	180,772
소득세 및 법인세	4,447	68,155	4,551	74,148	3,948	64,949	-9,199	-12.4	85,573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4,208	42,824	4,508	46,310	4,374	44,015	-2,295	-5.0	57,800
소득세(연말정산분)	-90	6,845	68	9,827	-286	7,722	-2,105	-21.4	9,711
소득세(분리과세분)	214	5,975	289	6,849	113	5,621	-1,228	-17.9	7,270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329	4,110	402	5,050	313	4,798	-252	-5.0	5,337
법인세	-213	8,402	-716	6,112	-566	2,100	-4,012	-65.6	5,455
부가가치세	7,372	76,079	7,681	78,734	7,761	78,280	-454	-0.6	95,165
수입부가가치세	159	1,024	122	849	102	707	-142	-16.7	1,164
에너지세	3,645	27,318	3,172	27,217	3,300	28,018	801	2.9	37,835
담배세	1,137	11,289	1,232	10,695	1,227	10,651	-44	-0.4	13,38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631	9,703	679	10,433	614	9,500	-933	-8.9	12,000
보험세	478	8,943	481	9,049	490	9,087	38	0.4	10,450
전기세	329	5,292	525	5,130	514	5,225	95	1.9	6,200
자동차세	-	-	-	-	633	2,540	-	-	3,719
주세	177	1,597	162	1,757	160	1,721	-36	-2.0	2,133
커피세	90	874	88	809	85	807	-2	-0.2	1,000
추가 주정부 교부금	0	-11,262	0	-11,093	0	-10,245	848	-7.6	-13,784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2,541	-12,516	-1,714	-12,166	-2,996	-11,690	476	-3.9	-16,47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654	-3,368	-278	-3,118	-59	-1,578	1,540	-49.4	-2,26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560	-5,592	-557	-5,563	-565	-5,646	-83	1.5	-6,775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	-	0	-2,285	-	-	-4,571
II. 기타 수입	2,102	21,740	2,116	23,240	1,539	25,056	1,816	7.8	29,760
경제활동 수입	10	3,881	7	4,225	9	4,228	3	0.1	4,339
이자수입	93	723	58	642	30	525	-117	-18.2	911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915	6,033	964	4,230	346	3,669	-561	-13.3	4,004
총재정수입	16,849	199,605	18,292	210,504	16,788	204,784	-5,720	-2.7	253,828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7.10~11월, 2008.10~11월, 2009.10~11월

다. 세출 동향

□ '09.10월까지의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2,440억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 교육·과학·연구 및 문화부문과 보건·환경·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출 증가

○ 반면, 실업보험 지출은 10월 누계기준 24억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최대폭인 62.7% 감소

〈표 3-VI-4〉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09 (추정)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3,842	39,376	3,917	40,577	3,817	42,706	2,129	5.2	53,595
경제협력 및 개발	232	3,821	286	4,298	376	4,689	391	9.1	5,717
국방	2,345	22,550	2,384	24,148	2,424	25,471	1,323	5.5	31,019
연방행정	639	6,451	432	4,844	518	5,197	353	7.3	6,357
세무행정	226	2,422	266	2,555	279	2,933	378	14.8	3,783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1,263	9,580	1,494	10,187	1,470	11,255	1,068	10.5	14,606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115	968	131	1,036	117	1,138	102	9.8	1,433
R&D	650	4,952	788	5,441	819	6,100	659	12.1	8,761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11,253	119,243	11,468	121,789	13,854	125,327	3,538	2.9	152,691
사회보장	6,268	68,128	6,252	68,121	6,298	68,816	695	1.0	76,302
실업보험	539	5,390	632	6,320	1,850	2,360	-3,960	-62.7	7,777
기초실업급여	2,994	29,743	3,000	28,758	3,007	29,678	920	3.2	37,810
:실업급여 II	1,851	19,235	1,723	18,291	1,834	18,761	470	2.6	23,500
실업급여 II, 주택 및 난방보조	359	3,610	318	3,254	273	2,924	-330	-10.1	3,700
주거보조	33	803	28	714	78	660	-54	-7.6	591
육아양육비	403	2,919	388	4,113	363	3,783	-330	-8.0	4,424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198	2,238	188	2,035	169	1,851	-184	-9.0	2,083
보건, 환경, 체육	70	625	74	711	100	826	115	16.2	1,274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235	1,277	210	1,168	231	1,241	73	6.3	1,857
주택	181	1,017	162	890	173	986	96	10.8	1,210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288	4,082	311	4,376	363	4,096	-280	-6.4	7,426
공급, 무역, 서비스	78	613	81	599	65	500	-99	-16.5	738
지역발전	-2	1,660	0	1,816	0	1,375	-441	-24.3	1,465
석탄채굴	22	456	29	464	32	418	-46	-9.9	2,400
보증	1,323	8,221	1,326	8,647	1,411	9,267	620	7.2	12,894
교통, 통신	670	4,233	667	4,364	701	4,796	432	9.9	6,787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844	7,109	1,172	12,760	1,335	12,602	-158	-1.2	15,965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416	4,039	374	3,175	428	4,275	1,100	34.6	5,506
연방 철도기금	384	2,787	261	2,310	356	3,095	785	34.0	4,074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금융 일반	2,659	38,144	2,947	39,499	2,792	36,662	-2,837	-7.2	43,000
이자지출	2,610	37,373	2,872	38,433	2,716	35,553	-2,880	-7.5	41,431
총재정지출	21,777	227,658	22,920	239,714	25,375	243,983	4,269	1.8	303,307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7.10~11월, 2008.10~11월, 2009.10~11월

라. 국가채무동향

-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564억유로 기록
 - 연방채권(Federal bonds)*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전년 대비 90억유로 증가하여 6,025억유로 규모
 - *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10년 및 30년 만기)
 - 그 외,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및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 '09.6월 연방정부는 안정 및 성장협약(SGP)의 부채비율 준수를 위해 “채무제한(Schuldenbremse)법”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신규부채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

〈표 3-VI-5〉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07.09.30	'08.09.30	'09.09.30	전년대비 증감	
				변동분	%
Index Linked Bonds	-	22,000	25,000	3,000	13.6
Federal bonds	593,718	593,468	602,454	8,986	1.5
Special federal bonds	170,000	176,000	179,000	3,000	1.7
Federal savings bonds	10,343	9,415	9,450	35	0.4
Federal treasury notes	110,000	108,000	110,000	2,000	1.9
Treasury discount paper	35,480	38,397	113,455	75,058	195.5
Treasury financing paper	2,737	1,968	1,320	-648	-32.9
German government day-bond	-	701	2,746	2,045	291.7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22,864	13,636	12,948	-688	-5.0
Treuhand medium-term notes	205	205	51	-154	-75.1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	-	0	-	-
합 계	0	963,791	1,056,424	92,633	9.6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7.10~11월, 2008.10~11월, 2009.10~11월

VII 캐나다 (2009년 9월 기준)

1. 재정동향

- '09~'10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GDP 대비 5~6%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 '09.1월 연방정부는 경기부양책이 담긴 확장적 기조의 예산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정부도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사업에 자금을 공동지원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 '09~'10년 동안 개인 및 법인세 감면 등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 제공 여지도 남겨놓은 상태

〈표 3-VII-1〉 일반정부 재정

(단위: 명목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43.2	44.1	40.8	41.0	40.7	39.8	38.2	38.2
총지출	48.5	41.1	39.3	39.4	39.1	39.7	43.0	44.1
재정수지	-5.3	2.9	1.5	1.6	1.6	0.1	-4.8	-5.9
구조적 재정수지 (잠재 GDP 대비 %)	-4.6	2.2	1.3	1.2	1.0	0.1	-3.1	-3.6
총국가채무	101.6	82.1	71.0	68.0	64.2	68.4	77.7	82.0
순국가채무	70.7	46.2	30.6	26.5	23.5	21.7	27.3	32.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5, '09.6월

2. 최근 통계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FY2009/10 재정수지는 286억 캐나다달러 (CAD) 적자 기록
 - (재정적자) 286억캐나다달러 중 38.5%(110억캐나다달러) 정도가 경기부양책에 기인
 - (재정수입) 전년동기 대비 148억캐나다달러 감소한 1,015억캐나다달러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연방판매세(GST)의 감소가 재정수입 감소를 견인
 - (프로그램 지출) 고용보험 지출 및 정부간 이전지출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

〈표 3-Ⅶ-2〉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19,655	118,776	18,619	116,350	15,181	101,547	-14,803	-12.7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6,284	-92,540	-16,429	-99,095	-17,892	-115,129	-16,034	16.2
이자지출	-2,707	-16,896	-2,546	-16,451	-2,248	-15,060	1,391	-8.5
재정수지(a)	664	9,340	-356	804	-4,959	-28,642	-29,446	-3662.4
예산외(b)	4,389	4,036	4,031	-16,746	-5,204	-27,034	-10,288	61.4
필요/잉여 자원규모(a+b=c)	5,053	13,376	3,675	-15,942	-10,163	-55,676	-39,734	249.2
순 자원조달 규모(d)	-11,663	-31,428	-5,136	12,464	5,697	30,712	18,248	146.4
순 현금수지 변화분(c+d)	-6,610	-18,052	-1,461	-3,478	-4,466	-24,964	-21,486	617.8
기말 현금수지		3,154		7,765		20,068	12,303	158.4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7.9월, 2008.9월, 2009.9월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09.4~9월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8억캐나다달러(12.7%) 감소한 1,015억캐나다달러

- (개인소득세) 고용부진 및 세금감면의 영향으로 7.5% 감소한 521억캐나다달러 기록
- (법인세) 세금환급으로 인해 39.5% 감소한 96억캐나다달러 기록
- (GST) 소비부진에 기인하여 17.9% 감소한 113억캐나다달러 기록

〈표 3-Ⅶ-3〉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2,423	76,100	12,013	74,857	9,129	64,041	-10,816	-14.4
개인소득세	9,533	56,091	9,567	56,357	8,019	52,130	-4,227	-7.5
법인세	2,411	17,409	2,062	15,831	848	9,581	-6,250	-39.5
비거주자	479	2,600	384	2,669	262	2,330	-339	-12.7
소비세	4,058	22,919	3,928	21,209	3,384	18,139	-3,070	-14.5
GST(Goods and services tax)	2,854	15,799	2,524	13,771	2,252	11,311	-2,460	-17.9
에너지세	-	-	-	-	465	2,502		
수입관세	319	1,951	348	2,070	319	1,831	-239	-11.5
기타 소비세 ¹⁾	885	5,169	1,056	5,368	348	2,495	-2,873	-53.5
총조세수입	16,481	99,019	15,941	96,066	12,513	82,180	-13,886	-14.5
고용보험료	996	8,414	995	8,393	1,012	8,408	15	0.2
기타 수입	2,178	11,343	1,683	11,891	1,656	10,959	-932	-7.8
총재정수입	19,655	118,776	18,619	116,350	15,181	101,547	-14,803	-12.7

주: 1) FY2007/08는 판매 및 소비세(Sales and excise taxes)와 항공여행객안전부과금(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항목을 합산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7.9월, 2008.9월, 2009.9월

다. 세출 동향

□ FY2009/10 상반기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1,302억캐나다달러

- (프로그램 지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5% 증가한 1,151억캐나다달러 기록

- 고용보험 지출 증가 및 정부간 이전지출 확대, 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기인
- (이자지출) 이자부 채무의 실효금리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

〈표 3-Ⅶ-4〉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9월	누계 (4~9월)	변동분	%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645	15,738	2,750	16,275	2,894	17,178	903	5.5
고용보험급여	960	6,668	1,217	7,052	1,598	10,582	3,530	50.1
자녀수당	972	5,993	974	6,017	1,025	6,152	135	2.2
소계	4,577	28,399	4,941	29,344	5,517	33,912	4,568	15.6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1,779	10,674	1,886	11,315	2,165	12,363	1,048	9.3
CST(Canada Social Transfer)	932	4,849	880	5,279	830	5,430	151	2.9
소계	2,711	15,523	2,766	16,594	2,995	17,793	1,199	7.2
재정이전	1,266	7,276	1,236	7,859	1,272	8,351	492	6.3
지역사회	196	582	0	481	0	957	476	99.0
Quebec주 CHT, CST 운영비용 대체 지급 ¹⁾	-261	-1,521	-254	-1,420	-235	-1,378	42	-3.0
소계	3,912	21,860	3,748	23,514	4,032	25,723	2,209	9.4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153	589	276	688	65	628	-60	-8.7
외교·통상	289	1,166	198	1,334	170	1,390	56	4.2
보건	201	1,018	242	1,123	241	1,290	167	14.9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140	811	161	1,085	244	1,484	399	36.8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69	2,415	450	2,456	403	2,553	97	3.9
산업	145	928	143	951	171	1,060	109	11.5
기타	1,009	3,061	784	4,438	1,022	12,333	7,895	177.9
소계	2,306	9,988	2,254	12,075	2,316	20,738	8,663	71.7
이전지출 소계	10,795	60,247	10,943	64,933	11,865	80,373	15,440	23.8
기타 프로그램 지출								
국영기업	543	3,615	611	3,897	743	4,109	212	5.4
국방	1,293	7,829	1,643	8,922	1,719	9,392	470	5.3
부처별 사업비	3,375	20,570	3,633	21,057	3,565	21,255	198	0.9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5,211	32,014	5,887	33,876	6,027	34,756	880	2.6
총프로그램 지출	16,006	92,261	16,830	98,809	17,892	115,129	16,320	16.5
이자지출	2,707	16,896	2,546	16,451	2,248	15,060	-1,391	-8.5
총재정지출	18,713	109,157	19,376	115,260	20,140	130,189	14,929	13.0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7.9월, 2008.9월, 2009.9월

라. 국가채무동향

- '09.9월 연방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4,924억캐나다달러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 규모는 5,534억캐나다달러이며 비금융 자산을 차감한 연방정부의 누적채무는 '09.9월 현재 4,924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4%, 7.8% 증가
 - 재무부가 발표한 4~9월까지의 순재원조달 규모는 307억캐나다달러 기록

〈표 3-Ⅶ-5〉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07.9.30	'08.9.30	'09.9.30	전년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95,994	97,375	92,442	-4,933	-5.1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54,065	251,407	332,257	80,850	32.2
Treasury bills	110,874	133,236	192,975	59,739	44.8
Retail debt	14,778	12,953	12,472	-481	-3.7
기타	1,192	550	456	-94	-17.1
소계	380,909	398,146	538,160	140,014	35.2
외국통화표시 채권	9,641	8,475	8,269	-206	-2.4
이중통화 스왑 재평가 계정	-4,227	-1,774	-781	993	-56.0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6,563	-5,839	-5,014	825	-14.1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3,004	4,153	4,098	-55	-1.3
만기 전 채무 소계	382,764	403,161	544,732	141,571	35.1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6,085	138,597	141,805	3,208	2.3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45,934	49,165	52,050	2,885	5.9
기타 채무	7,060	5,870	5,928	58	1.0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89,079	193,632	199,783	6,151	3.2
이자부 부채 소계	571,843	596,793	744,515	147,722	24.8
총부채	667,837	694,168	836,957	142,789	20.6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67,812	69,618	91,366	21,748	31.2
외국환 계정	39,703	44,236	50,300	6,064	13.7
차관, 투자 및 선금금(순 급여)	45,894	64,862	141,845	76,983	118.7
총 금융자산	153,409	178,716	283,511	104,795	58.6
순채무	514,428	515,452	553,446	37,994	7.4
비금융자산	56,499	58,619	61,094	2,475	4.2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57,929	456,833	492,352	35,519	7.8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7.9월, 2008.9월, 2009.9월

VIII

호주 (2009년 9월 기준)

1. 재정동향(OECD)

- 호주의 재정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2001년 제외 -0.1%), 2009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가 예상되어, 적자규모는 GDP 대비 2009년 4.9%, 2010년 5.0%로 예측
 - 호주정부는 2015~16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국가별 정책동향 참고)

-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순국가채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 중 국가채무가 호주보다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체코, 덴마크임

〈표 3-VIII-1〉 일반정부¹⁾ 연도별 재정 동향

(단위: 명목 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34.5	36.1	36.5	36.4	36.0	35.2	32.5	32.4
총지출	38.2	35.2	34.8	34.5	34.2	34.0	37.4	37.4
재정수지	-3.7	0.9	1.7	1.9	1.8	1.2	-4.9	-5.0
구조적 재정수지	-3.5	0.4	1.6	1.9	1.6	1.3	-3.3	-2.7
총국가채무	42.5	25.4	16.9	16.2	15.3	14.2	16.4	21.5
순국가채무	26.3	8.8	-0.9	-4.5	-6.6	-7.4	-5.3	-0.1

주: 1) 주·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1. 자세한 사항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참고.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자료: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5

2. 최근 통계⁴⁶⁾

가.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년 7월~9월까지 누계 예산수지는 166억호주달러 적자로 FY2007, FY2008에 비해 대폭 악화
 - 예산수지 적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113억호주달러(212.6%) 증가
 - 9월 예산적자 추정치(144억호주달러)와의 차이는 기반영된 배당소득의 상쇄와 보조금(grant) 지급시기에 기인함

- 예산수지에 Future Fund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9월말 누계 124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7.2%(94억호주달러) 증가

〈표 3-Ⅷ-2〉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9월	7~9월	9월	7~9월	9월	7~9월	누계기준	%	FY2009
수입	13,605	65,447	13,767	67,324	13,410	66,431	-893	-1.3	290,612
지출	20,418	66,520	21,398	70,018	25,775	78,646	8,628	12.3	338,213
순운영수지	-6,813	-1,073	-7,631	-2,694	-12,364	-12,215	-9,521	353.4	-47,601
순자본투자	281	293	467	266	-303	136	-130	-48.9	5,545
재정수지 ¹⁾	-7,094	-1,366	-8,098	-2,960	-12,061	-12,350	-9,390	317.2	-53,145
예산수지 ²⁾	-6,946	-3,272	-6,999	-5,324	-13,061	-16,642	-11,318	212.6	-57,593
총자산	-4,572	213,245	-7,173	269,802	-18,071	304,768	34,966	13.0	304,864
총채무	1,881	204,388	3,247	205,649	-2,446	296,332	90,683	44.1	343,541
순부채	7,560	-22,687	7,574	-34,229	13,230	2,592	36,821	-107.6	53,700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수입-지출) - 순자본투자(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의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 각년도(2007~2009) 9월 보고서

46) FY2008년도 9월 값은 9월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8월 보고서를 참고하여 9월 누계와 8월 누계 차를 구함

나. 세목별 세입 동향

- 2009년 7월~9월까지 총세입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664억호주달러로, 배당소득 상쇄로 인해 9월 세입 추정치보다 62억호주달러 적음
- 2009년 7월~9월 누계 조세수입은 전년 9월 누계보다 53억호주달러(8.7%)가 감소한 반면, 배당소득 등 세외수입은 44억호주달러(69.7%) 증가함
 - 전년에 비해 조세수입 중 소득세(특히 개인소득세, 법인세, 국민연금기금)는 감소하고 간접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세외수입 중에서는 배당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44억호주달러, 221.5%)

〈표 3-Ⅷ-3〉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9월	7~9월	9월	7~9월	9월	7~9월	누계기준	%	FY2009
총세입	13,605	65,447	13,767	67,324	13,410	66,431	-893	-1.3	290,612
조세수입	12,382	60,334	11,885	60,984	11,983	55,672	-5,312	-8.7	267,727
소득세	7,725	42,140	7,329	43,167	7,186	36,942	-6,225	-14.4	190,860
개인소득세	7,033	24,596	7,071	24,943	7,340	23,804	-1,139	-4.6	122,710
원천징수	8,772	28,423	9,673	30,274	9,472	29,431	-843	-2.8	119,000
기타 개인소득세	773	5,523	538	5,807	338	7,121	1,314	22.6	28,350
환급	2,511	9,350	3,140	11,138	2,470	12,749	1,611	14.5	24,640
기타소득세	691	17,544	258	18,224	-154	13,138	-5,086	-27.9	68,150
법인세	728	13,374	163	14,118	-143	10,534	-3,584	-25.4	54,980
국민연금기금	-22	2,927	54	2,747	-34	1,549	-1,198	-43.6	7,990
석유세	20	492	86	716	72	286	-430	-60.1	1,720
간접급여세	-35	752	-47	642	-48	769	127	19.8	3,460
간접세	4,657	18,194	4,556	17,817	4,796	18,730	913	5.1	76,867
소비세	1,795	5,626	2,206	5,730	1,807	5,876	146	2.5	23,850
관세	436	1,427	552	1,586	506	1,496	-90	-5.7	5,770
재화·서비스세 ¹⁾					2,169	10,399	-	-	43,630
기타 간접세	2,426	11,140	1800	10,502	315	959	8562)	8.2	3,617
세외수입 ³⁾	1,224	5,113	1,883	6,340	1,428	10,758	4,418	69.7	22,885
재화 및 서비스매출	458	1,352	460	1,423	624	1,842	419	29.4	7,483
이자	379	1,189	442	1,651	364	1,056	-595	-36.0	4,697
배당소득	51	1,597	488	1,996	68	6,418	4,422	221.5	6,413
기타	336	975	493	1,270	372	1,442	172	13.5	4,292

주: 1) 재화·서비스(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기타간접세의 FY2009년도 9월 누계 전년대비 증감 및 비율은 GST를 포함하여 산출함

3)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하였음.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의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각 연도(2007~2009) 9월 보고서

다. 기능별 세출 동향

□ 2009년 7월~9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한 786억호주달러로, 보조금 지출시기로 인해 예산 추정치보다 59억호주달러 적음

○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이 38억호주달러(15.5%), 교육지출이 14억호주달러(26.4%) 증가

○ 기능별로 대부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서비스(17.6%), 교통 및 통신(19%), 기타 경상비(20.3%)에서 지출이 감소함

〈표 3-Ⅷ-4〉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9월	7~9월	9월	7~9월	9월	7~9월	누계기준	%	FY2009
공공서비스	1,485	4,588	2,433	4,999	2,058	6,259	-882	-17.6	17,755
국방비	1,139	3,523	1,394	4,542	1,443	4,969	427	9.4	20,952
공공질서 및 안전	328	935	-75	542	353	847	305	56.3	3,901
교육	1,016	4,707	1,762	5,362	1,518	4,634	1,416	26.4	35,222
의료	3,386	10,683	3,986	11,581	4,001	12,516	935	8.1	51,223
사회보장 및 복지	8,298	23,901	7,438	24,543	8,999	28,347	3,804	15.5	110,994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186	555	58	821	597	1,400	579	70.5	9,089
여가 및 문화	265	681	-278	130	483	951	821	631.5	3,099
연료 및 에너지	419	1,175	394	1,248	503	1,772	524	42	8,403
농업, 산림, 어업	238	756	146	504	236	535	31	6.2	3,407
광업	126	401	63	338	132	460	122	36.1	1,681
교통 및 통신	325	817	689	1,266	421	1,026	-240	-19	5,482
기타 경상비	528	1,623	461	1,559	305	1,243	-317	-20.3	8,183
기타 목적	2,681	12,176	2,930	12,586	4,725	13,686	1,100	8.7	58,822
공공채무 지급이자	294	860	297	925	446	1,330	406	43.9	6,264
연금 지급이자	170	509	176	529	904	1,663	1,133	214.2	6,792
정부간 이전	2,169	10,677	2,454	11,123	3,375	10,601	-521	-4.7	44,086
자연재해 구조비용	39	118	6	7	0	91	84	1,200.0	91
긴급예비비 ¹⁾	9	12	-3	2	0	0	-2	-100.0	1,589
총지출	20,418	66,520	21,398	70,018	25,775	78,646	8,628	12.3	338,213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의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각 연도(2007~2009) 9월 보고서

라. 국가채무동향

- 2009년 9월 30일 기준 순자산은 84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86.9% 크게 감소
 - 일반정부 자산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44.1%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일반정부 순부채는 108% 증가한 26억호주달러를 기록

〈표 3-Ⅷ-5〉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전년대비 증감		전망치 FY2009
	2007.9.30.	2008.9.30.	2009.9.30.	증감액	%	2010.6.30.
자산	213,245	269,802	304,768	34,966	13.0	304,864
금융자산	165,092	180,358	210,908	30,550	16.9	207,572
비금융자산	48,153	89,444	93,860	4,416	4.9	97,292
채무	204,388	205,649	296,332	90,683	44.1	343,541
이자발생부채	65,008	67,813	124,556	56,743	83.7	179,270
예치금	227	334	281	-53	-15.9	339
정부채권	58,782	59,873	111,273	51,400	85.9	169,907
차입	5,614	6,891	12,109	5,218	75.7	8,173
기타	385	716	892	176	24.6	851
의무지급금	139,379 ⁵	137,835	125,562	33,941	24.6	164,271
순자산 ¹⁾	8,858	64,153	8,436	-55,717	-86.9	-38,676
순금융자산 ²⁾	-39,296	-25,291	-85,424	-60,133	237.8	-135,968
순금융채무 ³⁾		46,341	111,805	65,464	141.3	156,145
순부채 ⁴⁾	-22,687	-34,229	2,592	36,821	-107.6	53,700

주: 1) 순자산(net worth) = 자산 - 채무

2)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채무(비금융자산 제외)

3) 순금융채무 = 채무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FY2007년도의 회계자료에는 본 계정금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계정항목이 없음

4) 순부채(net debt)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1. FY2007년도에는 해당 계정이 없이 하위항목 연금 채무, 기타 고용자 과련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항목들의 합계 값을 구하였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의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각 연도(2007~2009) 9월 보고서